생활과학대학 222동
기록관
후문안내소
박물관 70동
국제대학원 → 서울대입구역
(5513번 버스)
브라질문화원
국제지역원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서울대입구역 → 국제대학원
(5513번 버스)
미술대학 52동
미술대학
음대예술관콘서트홀
49동
예술관 50동
행사 장소
(82동 환경대학원)
법과대학
음악대학
3층
출입구
1층
출입구
환경대학원 82동
1층
출입구
낙성대역 → 대학원생활관
(관악 02번 버스)
김밥천국
901
906
902
GS25
법학도서관
72동
예술복합연구동
74동
점심 식사 장소
(74동 예술복합연구동)
G12
자하연식당
109동
우리은행
인문소극장
관악사삼거리 → 낙성대역
(관악 02번 버스)
자하연
인문대학
904
인문대학 1동
사범대학 10동
두산인문관
G7

목차

[세션#1] 경계를 넘는 유라시아의 난민들: 난민 이동과 사회문화적 영향

발표1. 고가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체성 변화:
젠더 역할과 종교 정체성을 중심으로 4

발표2. 최아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국경 너머로 던져놓은 꿈':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 교육 28

발표3. 황의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정체성과 난민 문제: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 50

[세션#2] 이주배경주민의 거주지 이동과 정주, 그리고 대중 인식

발표1. 윤수진(서울대)
이주배경주민의 집거지 이탈현상 및 영향요인 분석:
영등포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60

발표2. 황인혜 · 문은솔 · 김철효(경상국립대)
경상남도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이동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72

발표3. 한기덕(고려대)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영향요인 연구 84

발표4. 백양현 · 전대호(서울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연구: 한국사례의 텍스트마이닝 접근법 108

[세션#3] 이민정책의 동학과 실천 과제: 노동과 건강

발표1. 유하영(이화여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인 분석:
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124

발표2. 이지영(서울대)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실무자의 실천 경험을 통해 본 제도화된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가능성과 그 함의 134

발표3. 김보은(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현황 및 관련 요인 154

[세션#4] 이주와 공간: 이론, 데이타, 사례를 통한 교차 연구 모색

발표1. 정현주(서울대)
이주 연구의 공간적 전환 174

발표2. 이효중(서울대)
이주 배경 주민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 분리 190

발표3. 문경연(광운대)
'하이브리드' 축제 공간 만들기:
창원과 대만 신베이시의 축제 사례를 통해 본 지역성·문화다양성의 연결 204

[세션#5] 경계를 넘는 유라시아의 난민들: 난민 이동과 정치경제적 영향

발표1. 백승훈(한국외대)
아랍의 봄 이후 난민 이동의 경제적 영향 214

발표2. 바딤 슬랩첸코(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 비교 연구: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 분석 226

발표3. 김선희(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폴란드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 238

[세션#6] 이주, 교육, 그리고 정체성: 유학생과 미등록 이주아동

발표1. 김도혜(덕성여대)
한국 대학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의 위치성 246

발표2. 김혜옥 · 이상직 · 구치우옌 · 양샤오시아(경북대)
진입과 퇴장의 괴리:
비수도권 국립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262

발표3.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허가받지 못한 미래: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전환과 이후의 삶 274

[세션#7] 동포와 지역사회: 돌봄과 건강, 그리고 상생

발표1. 남부현 · 박미숙(선문대)
고려인 학부모의 자녀돌봄 경험과 사회적 이슈 290

발표3. 박정용(순천향대)
도시재생사업은 이주민을 위한 것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의 사례 308

[세션#8] 타자를 만드는 난민 서사와 제도적 대응

발표1. 김승아(한국외대)
21세기 독일의 무슬림 난민 혐오, 과거 구동독 이탈 주민 차별의 잔상인가?
: 타자화를 중심으로 320

발표2. 김효진(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분석: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338

발표3. 정유진(한국외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유입과 난민 없는 난민 혐오:
2018년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360

[세션#1]
경계를 넘는 유라시아의 난민들:
난민 이동과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
강윤희(국민대)

발표1. 고가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체성 변화:
젠더 역할과 종교 정체성을 중심으로

발표2. 최아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국경 너머로 던져놓은 꿈':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 교육

발표3. 황의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정체성과 난민 문제: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

토론
백일순(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구기연(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이경수(한국외대)

발표1. 고가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체성 변화: 젠더 역할과 종교 정체성을 중심으로

타지키스탄을 경유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정체성 변화: 젠더 역할과 종교 정체성을 중심으로

고가영*

I. 머리말

유엔난민기구(UNHCR)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 중반 기준으로, 전 세계 1억 2260만 명의 사람들이 박해, 분쟁, 폭력,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원치 않는 피난길에 올랐다. 이들 중 69%는 출신국의 주변 국가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 그중에서도 아프가니스탄은 2023년에 다시 한 번 가장 많은 난민을 발생시킨 나라가 되었는데, 그 수는 약 640만 명이며, 이들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108개의 나라에 체류하고 있다.[2] 2024년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수가 더 증가하여 약 770만 명이 되었다.[3]

이 글에서는 인접국인 타지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비록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과 이란이지만,[4] 타지키스탄을 연구 대상 지역으로 선택한 이유는 타지키스탄이 갖고 있는 합법적인 경유지로서의 특성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오랫동안 대표적인 난민 발생국 중 하나였다. 그 이유는 잘 알려진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영토 내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분쟁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은 19세기 말 자국 영토 내로 군사력을 이끌고 들어온 영국, 20세기 후반 소련, 21세기 초반 미국 등의 의도를 좌절시킴으로써, "제국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었다.[5] 그런데 외국 군대의 아프가니스탄 침략과 그 여파로 발생한 내전과

*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HK 연구교수

1) "Refugee Data Finder", *UNHCR.* (8 October 2024). https://www.unhcr.org/refugee-statistics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2) 2022년과 비교할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741,400명(13%)가 증가했다. "Global Trends report 2023", *UNHCR.*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3 (검색일: 2024년 8월 7일).

3)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for Afghanistan Situation 2024-2025",https://reporting.unhcr.org/afghanistan-regional-refugee-response-plan-summary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4) 이란과 파키스탄 정부의 평가에 의하면, 두 나라에 약 770만 명의 아프간인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2021년에 도착한 사람들만 160만 명이다. 파키스탄에는 약 32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난민과 다른 지위의 사람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이들 중 76%는 여성과 아이들이다. 이란에는 450만 아프간인들이 체류하고 있는데, 71%는 여성과 아이들이며, 2021년 이후 온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란과 파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전체의 90%에 해당된다. "Regional Refugee Response Plan for Afghanistan Situation 2024-2025".
그런데 파키스탄의 경우 2023년 10월 31일에 파키스탄 거주 아프가니스탄 난민 10만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갔다고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파키스탄 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출국 기한을 제시한 마감일이 10월 31일이었기 때문이다. 추방 대상은 약 170만 명이다. 대다수가 1980년대 소련의 아프간 침공 때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사람들이며, 2021년 8월 21일 탈레반 집권 이후 입국한 사람들도 약 60~80만 명에 달한다. 권영은, 「탈레반 피해 목숨 걸고 탈출했는데... 아프간 난민 170만 명, 파키스탄서 추방 위기」, 『한국일보』(2023. 11. 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10112010000314 (검색일: 2024년 8월 21일).

이슬람 근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탈레반의 집권 등의 혼란한 상황들로 인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고통을 겪었으며, 많은 사람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글은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겪게 된 정체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왜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하는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이후 겪게 되는 정체성의 변화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이러한 정체성의 변화는 이동과 관련이 있는가? 정체성 변화는 환경으로 인해 겪게 되는 단지 수동적인 결과인가? 아니면 난민들의 주체적인 선택들도 포함되어 있는가? 등이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이 글에서는 우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동한 아프가니스탄 국내 상황, 이들을 타지키스탄으로 끌어당기는 요인들, 그리고 최종 정착 대상지인 캐나다의 여건 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이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변화를 살펴보되, 젠더 역할의 변화와 종교적 정체성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에 대한 선행연구들 중 탈레반 집권을 전후로 한 아프가니스탄의 여성과 종교를 다룬 글들이 있다.[6] 아울러 캐나다의 난민 정책, 캐나다에 재정착한 난민들의 정신 건강, 사회경제적 도전, 트라우마와 종교적 대처 등을 다룬 글들도 있다.[7]

한편 한국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계기는 탈레반 재집권 시점인 2021년 8월에 한국 정부가 특별기를 보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391명을 한국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다.[8]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정부 주도로 국내에 유입되면서, 언론은 물론 난민 문제와

---

5) 아프가니스탄을 배경으로 벌어진 영국, 러시아, 미국 등의 각 제국의 비극은 제국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정파 간, 부족 간, 국가 간 이익 극대화를 위해 각축한 끝에 빚어진 결과물이었다. 백승훈, 「탈레반 재집권과 아프가니스탄 체제 변혁에 관한 소고」,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33-2(2023), 78쪽.

6) 구기연, 「국제 사회의 여성 인권 규범과 이슬람권 내 페미니즘의 흐름과 동향: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12-1(2022); 엄익란,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아프간 여성의 미래 전망」, 『中東硏究』, 40-2(2021); 무사 술타니, 「탈레반 이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젠더리뷰』, 6(2007); 박현도, 「이슬람 근본주의와 탈레반」, 『기독교사상』, (2021년 11월호); 소윤정, 「로잔운동이 바라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무슬림 여성」, 『선교와 신학』, 56(2022); 신양섭, 「타직-아프간의 종교정책」, 『중동연구』, 19-1(2000); 양혜원, 「여성 인권으로서 평화권과 종교의 자유 -이슬람과 여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종교연구』, 81-3(2021); Elaheh Rostami Povey, "Women in Afghanistan: Passive victims of the borga or active social participants?", *Development in Practice*, 13:2-3(2003). De Leede, Seran, "Afghan women and the Taliban: An exploratory assessment", *International Centre for Counter-Terrorism Policy Brief* (2014). Sima Samar, "Feminism, Peace, and Afghanista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72-2, (2019).

7) 정세정, 「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11(2019); Farah Ahmad, Nasih Othman, Wendy Lou,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cial Support and Coping Among Afghan Refugees in Canada",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6-4(2020); Mahasti Khakpour, Mustafa Koc, Rachel Engler-Stringer, Marwa Farag, Carol Henry, Hassan Vatanparast, "Food Security and Socioeconomic Disparities of Afghan Refugees in Transitory Countries and Canada",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24(2023); Ravi Gokani, Stephanie Wiebe, Hakmatullah Sherzad, Bree Akesson, ""We're Looking for Support from Allah":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rauma and Religious Coping among Afghan Refugees in Canada Following the August 2021 Withdrawal", *Religions,* 14(2023).

8) 한국행 예정자는 본래 427명이었으나, 이 중 36명이 아프가니스탄 잔류 또는 제3국행을 택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391명이 이슬라마바드를 거쳐 인천에 도착했다. 391명은 대사관(21가구 81명), 병원(35가구 199명), 직업훈련원(14가구 74명), 지방재건팀(5가구 33명), 한국국제협력단(1가구 4명) 등에서 근무했던 현지인들과 그 가족들이다. 이 중 61%에 달하는 231명이 미성년자였으며, 여기에는 6세 이하 영유아 110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지원, 조정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제도에 대한 고찰 - 우리 나라 재정착난민 제도 및 미국 특별이민비자(SIV)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 『국제법무』, 16-1(2024),

이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그리고 서아시아·남아시아 지역 전문가들의 관심이 한층 고조되었다.[9] 한국의 특별기여자와 거의 유사한 지위인 특별이민비자제도(SIV)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과 국내 상황을 비교하는 연구들도 있다.[10]

또한 타지키스탄의 이주와 정체성에 관한 연구들이 있는데,[11] 무엇보다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한 연구로는 난민으로 위장하여 국경을 넘어오는 테러리스트들의 이동을 방지해야 한다는 안보 차원에서의 대책을 다룬 것과[12], 1차 탈레반 집권 시기 타지키스탄 국경 지역 난민 캠프에 머물렀던 이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펼쳤던 UNHCR의 활동을 다룬 것, 타지키스탄 UNHCR 도시 난민 정책 시행에 대한 보고서[13] 등이 있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에서 UNHCR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글들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UNHCR의 위임 난민 제도의 한계에 대해 연구한 글도 있다.[14]

그러나 난민들의 경유지로서의 타지키스탄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주로 난민들은 정책의 대상으로서 수동적 존재로만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유지로서 타지키스탄에 주목하고, 그로 인한 난민들의 주체성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경유지인 타지키스탄에서의 정체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보다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2024년 7월 12~19일에 진행한 구술인터뷰 자료를 활용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자는 타지키스탄으로 건너온 아프가니스탄 난민 17가정과 난민들을 돕는 활동가 6명(A,B,C,D,E,F로 표기), 3개의 기관(아프가니스탄 대사관, 타지키스탄 UNHCR, 내무부) 담당자들 7명이다. 기관 담당자들을 제외하고 난민들과 난민 지원 활동가들의 경우, 비록 IRB를 받았지만, 그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표기할 것이다.

인터뷰 대상 선정은 난민 지원 활동가 D가 운영하는 축구와 배구 캠프에 출석하는 청소년과 청년들 가정이 대부분이었다. D는 사전에 SNS 단톡방 공지를 통해 인터뷰 신청을 받았고, 탐방 순서를 정했다. 이렇게 연결된 가정이 14가정이었고, 나머지 2가정은 다른 난민 지원 활동가들(B, C)와 연결된 곳이었으며, 1가정은 우연히 합류하게 되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장소는 1가정만 레스토랑이었으

7쪽

9) 구기연, 백일순, 「환대의 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무슬림 난민: 예멘 난민과 아프간 특별기여자 사례 비교연구」, 『공간과사회』, 33-3(2023); 백일순, 「이동통치의 관점에서 본 난민 담론의 형성과 변화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에 관한 국내 신문 기사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화 역사 지리』, 34-2(2022); 이수정, 「한국 사회의 무슬림 이주 동의와 수용1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울산 교육현장 정착과정과 갈등」, 『디아스포라연구』 16-1(2022); 차유진, 정지수,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의 한국사회 정착 경험에 관한 연구: 부적응 경험과 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33-3(2024).

10) 신지원, 「미국의 아프간 특별이민비자 제도의 절차와 한계」, 『담론 201』, 25-2(2022), 81쪽; 이지원, 조정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제도에 대한 고찰 - 우리 나라 재정착난민 제도 및 미국 특별이민비자(SIV) 제도와의 비교 검토를 포함하여」, 『국제법무』, 16-1(2024).

11) 김성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이주: 현황과 요인」, 『중소연구』, 37-4(2014); 김영진, 「타지키스탄의 노동이주와 송금」, 『슬라브학보』, 28-4(2013); 이애리아, 「중앙아시아 한인연구: 타지키스탄의 민족분쟁과 고려인」, 『社會科學硏究所硏究叢書』, 5(1999); 이채문 「타지키스탄 내전과 고려인 난민이주 및 정착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시베리아연구』, 16-1(2012); 정세진, 「타지키스탄 민족 정체성 연구 - 민족주의와 지역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이슬람학회논총』, 18-1(2008); 최아영, 「공유된 역사, 엇갈린 국경 -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경계 논쟁」, 『숭실사학』, 47(2021).

12) Usmonzoda Kh, "The Afghan Crisis and Treats to Central Asia: A View from Tajikistan", *Global Asia,* 18-4(2023).

13) Indra Overland, "Humanitarian Organizations in Tajikistan and the Coordination of Aid to Displaced Afghans in No Man's Land", *Journal of Refugee Studies,* 18-2(2005); Angela Li Rosi, Marco Formisano, Ljubo Jandrijasevic, "Lives in limbo: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UNHCR's urban refugee policy in Tajikistan",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olicy Developement And Evaluation Service,* 3(2011).

14) Orzuzoda Firuz, "Regulation Gaps of the UNHCR's Mandate Refugees in Tajikista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Aspects", *InterConf*, 66(2021).

며, 나머지 16가정은 모두 난민들의 가정이었다.

〈인터뷰 대상 난민들〉

번호	가족 구성원	도착연도	일시	장소
1	NJBL(54, 아버지) SJ(어머니), JLID(20, 아들), YD(아들)+2 아이.	2020	13(토)	바흐다트
2	LN(49, 어머니), SN(25, 딸), SF(23, 딸), MPS, SM (16, 딸 쌍둥이) + 아버지, 아들	2019		
3	PLD(44, 어머니), SS(24, 딸), SR(21, 딸), IS(20, 아들), YH(19, 딸), SHR(14, 딸) + 아버지	2021		
4	JML(50, 어머니), MRS (29, 딸), MS(19, 딸), MHD(12, 아들)/SHR(10, 손녀), DNO(9, 손자), SNES(5, 손녀), DNS(3, 손자)	2020	15(월)	
5	NRY(62, 어머니), NJY(25, 딸) + 아들	2019		
6	SDY(49, 어머니), ERH(21, 딸), AM(17, 아들), BS(14, 아들) + 아버지	2017		
7	JHR(28, 실질적 가장인 여성), SR(23, 여동생), ADHR(20, 남동생), MLS (여동생 + 아기), IRF(9, 남동생),	2008		
8	AKMJ(아버지), RHM(40, 어머니), BHR(17, 딸), FHM (16, 딸)	2019		
9	OSP(43, 아버지), HSY(33, 어머니), MLRI(17, 딸), JB(14, 아들), KTRN(4, 딸)	2011	16(화)	두샨베
10	AMN(42, 어머니), MKTS(25/30, 딸), DANA(24/27, 딸), MNR(23, 딸), SID(21/23, 딸) + SAR(30, 아들).	2009		루다키
11	SKL(43, 어머니), JKR(19, 아들), NRGS(16, 딸), JH(13, 아들), SH(10, 아들) +아버지	2018		바흐다트
12	SH(45, 아버지), JR(38, 어머니), PRO(20, 딸), KMO(19, 딸), PRUB(18, 딸), PRB(17, 딸), MHMD(16, 아들), ORA(14, 아들), HLN(8, 딸)	2024		
13	DBT(48, 아버지), ADJ(42, 어머니), SMR(21, 딸), MHD(18, 아들), SRY(14, 딸), FTM(12, 딸), ELH(11, 딸), MSTP(9, 아들), MRTJ(5, 아들) – 하자라	2018		
14	SLH(42, 어머니), PRB(27, 딸), NJT(26, 딸), SMR(22, 딸), MTR(21, 딸), MHD(16, 아들), HD(11, 아들) – 투르크멘	2009	17(수)	루다키
15	HPD(37, 어머니), SHL(20), MSTB(19, 아들), JIN(딸), MDH(18, 딸), MLK(16, 딸), + 3명	2019		
16	NDR(34, 어머니) + 4명의 자녀	2012		
17	RTP(35, 어머니), MDN(18, 딸), BSR(15, 딸), MLD(13, 아들), + 2딸(LN 22, RI RM 20) – 하자라	2017	18(목)	두샨베

〈난민 관련 기관 근무자들〉

번호	이름	소속	지위	일시	장소
1	바호도르	대사관	영사	15(월)	두샨베,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2	노지야	소모니언 스쿨	교장		
4	이반 달례예프	UNHCR	대표	18(목)	두샨베, UNHCR 사무국
5	무하마드후자 다블랴토프	UNHCR	홍보관		
6	이스맛 조다 팟히진	내무부	난민담당관	18(목)	두샨베, 내무부 직무실
7	다밧 조다 사이드	내무부	난민담당관		

〈난민 활동가〉

번호	이름	활동분야	비고	일시	국적
1	A	NGO 활동가	1997년부터 두샨베에서 활동	7월 13~19일	한국
2	B	NGO 활동가, 세종학당 임시교사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전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옴	7월 12~18일	
4	C	세종학당 교사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주	7월 14, 16일	미국
5	D	난민을 위한 스포츠(배구, 축구) 교실 운영	다리어-러시아어 통역	7월 13~18일	타지키스탄
6	E	난민 지원 NGO 운영	난민들 전반적인 상황 설명	7월 14일	
7	F	난민 지원 활동가 (개신교 목회자)	타지크들의 아프간 난민에 대한 인식 설명	7월 17일	

이처럼 이글은 난민과 난민 활동가 및 난민 관련 기관 근무자들과의 구술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인터뷰 대상자인 난민들 대부분은 타지크족이었으며, 하자라족, 투르크멘족, 파슈툰족도 있었으나, 이동으로 인해 민족 정체성의 변화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연구에서 민족 정체성 문제도 매우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연구 범주에 종교와 관련된 민족 문제 이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러한 구술 인터뷰 자료 외에도 유엔난민기구(UNHCR), 국제이주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캐나다 이주·난민·시민부(IRCC: Immigration, Refuges, and Citizenship Canada) 등이 발간한 자료들과 이스마일파의 자료도 참조하였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삶을 근거리에서 살펴보는 것은, 난민 연구의 구체적인 사례를 더함으로써, 난민 연구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약한 타지키스탄에 대한 이해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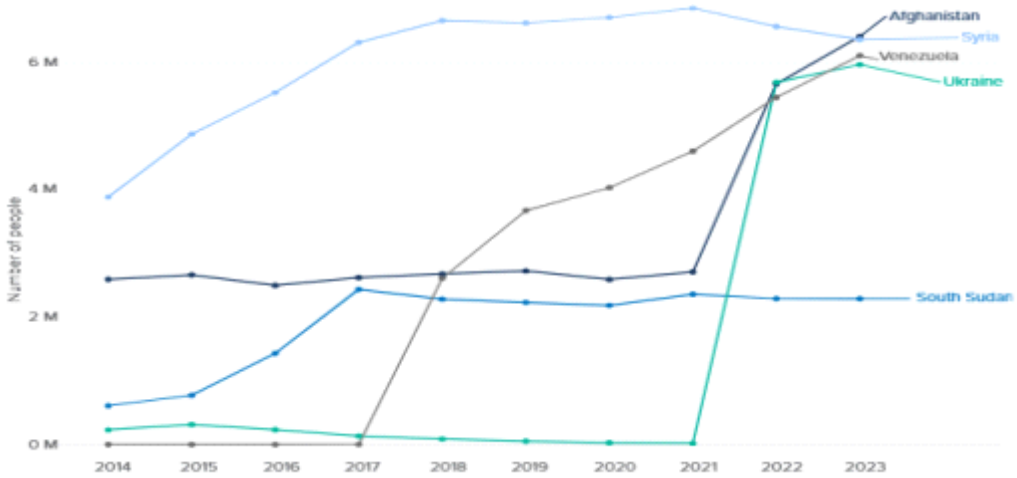
II.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타지키스탄 유입 배경

1.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밀어내는 요인들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발생은 끊임없는 분쟁의 연속이었던 아프가니스탄 현대사에 기인한다. 아프가니스탄은 1970년대에 발생한 두 차례의 쿠데타와 소련과의 전쟁, 그 이후의 내전과 무자헤딘에 이은 탈레반의 1차 집권에 이르기까지 정치적 혼란을 겪었다. 미국은 2001년 9·11이 발생하자 사건의 배후인 빈 라덴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시작했다.[15] 이때 냉전 시기 이슬람 반군 세력을 지원했던 미국의 행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미국은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 막대한 예산과 인적 자원을 쏟아부었다.[1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2021년 8월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으며, 탈레반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분쟁과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을 난민 발생 최상위국의 위치에 올려놓았다. 탈레반과 타협할 수 없는 이들이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긴 여정'에 나섰다.[17]

〈난민, 유사 난민, 국제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출신국 2014-2023〉



출처: UNHCR[18]

15) 이 전쟁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모든 회원국이 참전했고, 다국적군까지 총 136개국이 동참 또는 지원했다. 인남식, 「미국-탈레반 평화 합의의 의미」, 『IFANS FOCUS』, (2020. 05).

16) 미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은 2001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사용한 국방 비용은 8250억 달러였으며, 재건 프로젝트에 약 1,300억 달러가 추가로 지불되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01년~2020년까지 총 비용은 9,550억 달러에 달한다. 브라운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2001년~2022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전쟁 비용은 2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가장 많은 병력을 주둔한 영국과 독일은 전쟁 기간 동안 각각 약 300억 달러와 19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Afghanistan: What has the conflict cost the US and its allies?", *BBC News,* (3 September 2021). https://www.bbc.com/news/world-47391821 (검색일: 2024년 9월 10일).

17) 서경식은 자신의 저서에서 '거주'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는 난민'이라고 규정했다. 서경식, 『난민과 국민사이 - 재일조선인 서경식의 사유와 성찰』, 임성모, 이규수 옮김. 돌베개. 2023, p.32.

18) "Global Trends. Forced Dispacement in 2023 (2024). https://www.unhcr.org/global-trends-report-2023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현대사는 타지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개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다. 타지키스탄에서 처음으로 만났던 난민 가정의 가장인 NJBL(54세)는 4년 전인 2020년에 카불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아내와 4명의 아이와 함께 이주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게 된 원인이 탈레반이 밤에 집 안으로 수류탄을 던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그의 둘째 아들인 2004년생인 JLID는 이로 인해 팔에 부상을 입었다. JLID는 팔에 남은 커다란 흉터를 직접 보여주었다. NJBL는 집을 팔고 가족 모두와 함께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했다. 그의 여동생은 현재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이 집세를 낼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조카(누나의 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나머지 가족들 중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이들은 교사, 공무원 등 전문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모두 직장에서 쫓겨났다. NJBL의 가족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캐나다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왜 탈레반의 공격을 받았냐는 질문에 NJBL는 단지 자신이 여성의 권리를 옹호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면서, 자세한 설명을 회피했다.[19)]

이처럼 NJBL가 자신이 탈레반으로부터 테러를 당한 이유를 여성의 권리를 옹호한 것이 원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미국이 2001년 '영구적 평화'라는 작전명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면서, 그 명분 중 하나로 '탈레반 하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내세웠던 것과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듯하다. 이주의 표면적인 이유로 여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난민들에게도 다른 문제들을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한 근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사례로는 2021년에 타지키스탄으로 온 PRD(44세)에게는 아들 1명과 딸 3명이 있는데, 탈레반이 딸들을 잡아가려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떠났다고 한다. 탈레반들이 거리에서도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그냥 데려가 버리기 때문에 딸들의 안전을 위해 카불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그녀는 설명했다.[20)] 또한 11년 전 남편과 사별한 JML(50세)의 가족은 2020년에 타지키스탄으로 왔다. JML은 이주 이유에 대해 큰딸이 TV 아나운서였는데, 탈레반이 데려가겠다고 해서 도망쳤다고 밝혔다. 함께 타지키스탄으로 왔던 큰딸은 1년 전 튀르키예로 일하러 갔다가, 독일로 건너가 현재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JML은 거리에 여자아이들이 다니면 탈레반이 염산을 뿌리기도 한다며, 생존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났음을 강조했다.[21)]

대부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업주부로 살아왔던 것과는 달리 40년 동안 경찰로 복무한 특이한 경력을 가진 NRY(62세)의 경우, 중매쟁이가 사촌을 자신의 딸 NJY(25세)의 결혼 상대로 추천했다. 그런데 신랑감이 너무 마음에 안들어서 거부하자, 그가 탈레반들에게 딸 NJY의 사진을 건네주었고, 이에 큰 두려움을 느껴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이주 원인을 설명했다. 그녀의 남편은 20년 전에 사망했으며, 두 모녀는 2019년에 카불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했다. 여행 비자를 위한 비용은 1인당 350달러였으며, 3만 소모니를 들고 입국했다.[22)] 이처럼 난민들 대부분은 딸들의 안전을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다고 이야기한다.

19) NJBL & JLID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NJBL 자택(2024. 07. 13).
20) PRD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PRD 자택(2024. 07. 13).
21) JML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JML 자택(2024. 07. 15).
22) NRY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NRY 자택(2024. 07. 15). 3만 소모니는 약 2,750달러이다.

2.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을 선택하는 요인들

타지키스탄에는 UNHCR 사무국이 1993년에 이미 설립되었다. 1992년부터 1997년까지 내전을 겪은 타지키스탄은 내전으로 발생한 국내 난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활동을 필요로 했으며, 이를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의 초청으로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해(1993년)에 타지키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최초로 1951년에 제정된 난민 협정과 1967년의 난민 의정서 가입국이 되었다.[23]

2024년 6월 기준으로 타지키스탄에는 8,259명의 난민(refugees), 2,122명의 비호신청자(asylum-seekers), 3,629명의 무국적자(stateless people)가 있다. 타지키스탄은 공식적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들은 거의 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24]

타지키스탄은 1,425㎞의 국경을 아프가니스탄과 공유하고 있다.[25] 현재 아프가니스탄 내에는 타지키스탄 인구보다 더 많은 타지크 민족(아프가니스탄 인구의 약 27% 정도)이 거주하고 있다.[26] 현재 타지키스탄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내 모든 민족과 정치세력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통합 정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파슈툰족 위주로 구성된 탈레반 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27] 아프가니스탄 내 타지크족의 인구비율과 거점지역과 생업은 다음과 같다.

〈아프가니스탄 민족구성과 분포〉

민족	인구비율(%)	거점	비고
파슈툰	42-45	힌두쿠시 남부	두라니, 길자이 양대 부족
타지크	25-27	동북부, 카불북부	농업생산 위주
하자라	8-9	중부	중국, 몽골계(신장), 시아파
우즈베크	8-9	북부(우즈베키스탄 접경)	파슈툰과 갈등 관계
아이막	4	서부(이란접경)	
투르크멘	3	북부(투르크메니스탄 접경)	
발루치	2	남부(헬만드 주)	아랍 전통 계승
기타	4		

* 출처[28]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우선, 민족적, 언어적 친연성으로 인한 것이다.[29]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다수가 타지크인들이며, 아프가니스탄의 공용

23) Ibid.
24) "Tajikistan", *UNHCR/Central Asia*, https://www.unhcr.org/centralasia/en/tajikistan (검색일: 2024년 9월 10일).
25) 타지키스탄은 우즈베키스탄과는 1,161㎞, 키르기즈와는 970㎞, 중국과 414㎞를 공유하고 있는 내륙국가이다. 타지키스탄은 파키스탄(2,670㎞)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국경이다. 권동석, 「중앙아시아의 샛별 타지키스탄: 한·중앙아시아 협력 기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 『외교』 142(2022.7), pp.96,104.
26) 타지키스탄 전체 인구는 10,394,063(2024)명이고, 아프가니스탄 전체 인구는 39,232,003명(2023)이다.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countries/tajikistan/(검색일: 2024년 9월 20일);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about/archives/2023/countries/afghanistan/#people-and-society (검색일: 2024년 9월 20일).
27) 권동석, 「중앙아시아의 샛별 타지키스탄: 한·중앙아시아 협력 기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다」, 104쪽.
28) 인남식, 「탈레반 집권 후 아프가니스탄 내외 역학관계」,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2021), 2쪽.
29) 2012년 한국으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정확하게는 비호신청자(Asylum seeker)인 나히드의 경우,

어인 다리어와 타지크어는 마치 경기도 방언과 경상도 방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다만 타지키스탄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된 이후 문자표기를 키릴문자로 변경했으며, 러시아어 단어가 언어에 많이 포함되어 학습 언어로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평소 대화 언어로는 언어 장벽이 거의 없다는 점이 강한 유입 요인으로 작동했다.

또 하나 타지키스탄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난민들 거의 대부분은 이구동성으로 타지키스탄의 안전함에 대해 이야기한다. 타지키스탄의 치안은 아프가니스탄과 비교해 안정적이며, 특히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성들에게 안도감을 주기 때문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들을 밀어내는 요인이 되었던 딸들의 안전과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타지키스탄으로 끌어당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타지키스탄은 여성들이 거주하고, 교육받기에 안전한 장소이다. 따라서 난민들은 딸들의 안전을 위해 타지키스탄을 선택했다.

아울러 타지키스탄 정부의 태도 역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안전감을 제공해 준다. 일례로 2021년 6월-7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과 민병대가 탈레반을 피해 국경을 넘어왔을 때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대응은 달랐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들을 심문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려보냈지만, 타지키스탄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수용했다. 부상자는 타지키스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동부지역인 고르노-바다흐샨 최고 책임자인 요드고르 파이조프는 당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최소 5,000명에서 10,000명을 수용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30]

또한 왜 타지키스탄을 선택했는가? 라는 질문에 다수의 난민들이 같은 무슬림 국가여서라고 답하기도 했지만, 인근의 파키스탄이나 이란 역시 무슬림 국가라는 점에서, 이 답은 타지키스탄을 선택한 것에 대한 표면적 이유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종교를 포함한 문화적 친연성, 안전함, 정부의 수용적 태도 등이 타지키스탄을 선택하는 이유에 영향을 미쳤지만, 또 하나의 결정적인 원인은 타지키스탄의 높은 난민 인정률이다. 타지키스탄 내무부의 난민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타지키스탄의 난민 인정률이 100%라고 답했다.[31] 이는 타지키스탄 두샨베에 위치한 UNHCR 대표도 인정한 바이다.[32] 난민 신청자 역시 거의 모두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다. 난민 인정률 100%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난민 인정률이 높은 것은 난민들, 난민 담당 관리들, UNHCR 대표, 난민 지원 활동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을 정착지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유지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타지키스탄을 이주지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선택한 이유는 타지키스탄에서 쉽게 난민 인정을 받은 이후, 제3국, 주로 캐나다로 재이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3]

무엇보다 타지키스탄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일자리가 넉넉하지 않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데 아무런 제약은 없지만, 자영업을 제외하고는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자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을 경유지로 삼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서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사람들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누구냐고 질문했을 때, 중앙아시아 이주민들이라고 대답했다. 나히드는 현재 성균관대학교 역사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압둘 쿠두스 나히드(Abdul Qodos Nahid) 인터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2024. 11. 01).

30) 정세진,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일반 개관·이슬람·국내정치·국제관계』, (서울: 진인진, 2023), 245-246쪽.

31) 이스맛 조다 팟히진, 다밧 조다 사이드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내무부 직무실(2024.07.18).

32) 이반 달례예프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UNHCR 직무실 (2024. 07. 18. UNHCR 대표).

33) 유럽으로 가기를 원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이란과 튀르키예를 경유지로 삼고 있다.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이동하고, 그리스에서 유럽 전역으로 이주하는 경로를 보이고 있다.

되고 있다. 과거에는 유럽으로도 다수가 건너갔으나, 점차 유럽으로의 이동이 어려워졌고, 독일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문제들을 일으켜, 급기야 독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탈레반이 집권하고 있는 카불로 송환하기에 이르렀다.[34] 이는 난민들을 본국으로 송환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 크게 보도되기도 했다.[35] 이러한 상황들이 반영되어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난민들 대부분이 캐나다행을 원하고 있다. 난민 지원 활동가 F는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는 캐나다로 갈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타지크인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라고 평가하기도 한다.[36]

3. 캐나다로 향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캐나다는 2019년을 기준으로, 난민에게 시민권을 부여한 비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이며, 인구 비율로 볼 때 아프가니스탄 재정착 난민 수용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37] 캐나다 정부의 이주·난민·시민권부의 2024년 10월 11일 발표에 의하면, 2021년 8월 이후 캐나다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54,730명이다.[38] 마크 밀러 이주·난민·시민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캐나다 전역에 정착함에 따라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체가 이들의 성공적인 재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캐나다 전역의 180개 이상의 지역 사회에서 난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 필수 의료, 교육, 언어 및 기술 훈련, 사회 서비스 등

---

34) 독일 외국인 등록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독일에 머무르는 난민 수가 역대 최다인 348만 명에 이르렀다. 이 중 1/3 정도인 118만 명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다. 그런데 2024년 5월 31일에 독일 서부 만하임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25세 이민자의 칼에 독일 경찰이 찔려 사망한 사건이 있었으며, 2024년 8월 30일에도 졸링엔이라는 작은 도시의 축제장에서 시리아 난민 청년의 공격으로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사건들이 지속되자 독일 정부는 처음으로 2024년 8월 30일에 24명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아프가니스탄 카불로 강제송환시켰다. 「독일 경찰, 아프간 난민 칼에 찔려 사망」, 『MLBPRK』(2024. 06. 03).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406030093425754&select=&query=&subselect=&subquery=&user=&site=donga.com&reply=&source=&pos=&sig=h6j6GY21hhjRKfX2hfj9Sf-gihlq (검색일: 2024년 10월 16일); 윤태희, 「독일서 '아프간 난민' 흉기에 찔린 경찰관 사망」, 『Nownews』(2024. 06. 03).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40603601011(검색일: 2024년 10월 16일); 「독일 내 난민 수 348만 명으로 역대 최다...우크라 출신 118만」, 『KBS 뉴스』(2024. 09. 2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63324(검색일: 2024년 10월 16일).

35) 2023년에는 포르투갈 리스본의 무슬림센터(이스마일파)에서 아프간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2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에 거주하는 이스마일파는 약 8천명 정도이다. 한혜란, 「포르투갈 무슬림센터서 아프간 난민이 휘두른 흉기에 2명 사망」, 『연합뉴스』(2023. 03. 29). https://www.yna.co.kr/view/AKR20230328173551081 (검색일: 2024년 10월 16일).

36) 난민 지원 활동가 F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레스토랑 (2024. 07. 17).

37) 2018년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11만 4109명에 달하며, 캐나다의 난민 비호 시스템은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권리와 자유에 관한 캐나다 헌법 권리장전, 이민난민보호법(2002), 강제송환금지원칙의무와 같은 법·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으며, 난민 관련 정부기관은 난민보호와 사회적응 등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캐나다 연방 이민부(1994 설립)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주·난민·시민권부, 난민 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이민난민위원회 등이 있다. 정세정, 「캐나다 난민 지원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88-89쪽.

38) "Welcome Afghans",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afghanistan.html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이미 2023년 10월 30일에 마크 밀러 이민 난민 시민부 장관은 캐나다가 2021년 8월 당시 약속했던 4만 명의 난민들을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선포한 바 있다. "Canada meets comitment to welcome 40,000 vulnerable Afhgans", Government of Canada (October 30, 2023).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news/2023/10/canada-meets-commitment-to-welcome-40000-vulnerable-afghans.html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재정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39] 실제로 캐나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위한 재정착 서비스에 약 6억 1,500만 달러(8억 4,430만 캐나다 달러)를 배정했다. 이 금액에는 숙박, 음식 및 의료 비용을 제공하는 12개월 소득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 캐나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영주권 취득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40] 캐나다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에는 캐나다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효과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오는 글로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에이미 포프 IOM 사무총장의 평가도 게재되어 있다.[41]

캐나다의 재정착 난민 프로그램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민간 후원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는 주로 '캐나다 정부를 밀접하게 도운 아프가니스탄 국민과 그 가족'이며, '이전의 프로그램에 따라 캐나다로 온 전직 아프가니스탄 통역사의 확대 가족'도 포함된다. 이들은 한국의 특별기여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 후원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은 여성 지도자, 인권운동가, 박해받는 소수민족 또는 종교적 소수자, LGBTI+ 개인, 언론인 등이다. 캐나다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재정착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42]

캐나다 이주·난민·시민권부는 각 지역별로 3가지 범주 (정부 지원 범주, 그리고 전직 통역사의 확대 가족 범주, 사적 지원 범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파악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2024년 10월 1일 기준, 캐나다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54,730명 중 '캐나다 정부를 지원한 아프가니스탄인을 위한 특별 이민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은 15,445명이며, '전직 통역사 확대 가족'으로서 입국한 사람은 4,060명이고, '인도주의적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들은 25,015명이다. 지역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43]

〈지역별, 지원형태별 아프가니스탄 난민 분포〉

주	정부지원	확대가족구성원	사적 지원	합계
브리티시 컬럼비아	3,490	390	1050	4835
앨버타	4,520	320	2590	7430
서스캐처원	990	-	275	1265
매니토바	580	-	215	795
온타리오 (토론토)	11,190 (4,950)	1,820 (1,060)	7,690 (2,195)	20710 (8,205)
퀘벡	265	1,495	1,230	1495
뉴브런즈윅	590		15	605
노바스코샤	450		85	535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55			55
뉴펀들랜드와 래브라도	1,165		15	1,180

* 출처: 캐나다 이주·난민·시민권부

39) Ibid.
40) Akmal Dawi, "Canada Admits Nearly 40,000 Afghans, Willing to Take More," October 25, 2023, *VOA(Voice of America)* https://www.voanews.com/a/canada-admits-nearly-40-000-afghans-willing-to-take-more-/7326177.html
41) "Canada meets comitment to welcome 40,000 vulnerable Afhgans".
42) Ibid.
43) "Welcome Afghans", Government of Canada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refugees/afghanistan.html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원래 캐나다 정부의 이주·난민·시민권부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세부적인 행정 단위별로 표기되어 있으나, 주별로 합산하여 재구성했다.

이 표를 통해 타지키스탄에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90%가 토론토로 간다고 이야기했던 난민 지원 활동가 E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토에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8,205명이 이미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캐나다 정부의 수용적 태도는 현재 독일과 포르투갈 등 유럽 국가들의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대하는 태도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좀 더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지만, 캐나다의 재정착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역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캐나다로 이주한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의 문맹률이 높고, 취학 연령 어린이의 1/3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해 문해력이 낮으며, 현지어인 영어 학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44] 또한 캐나다에 재정착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발견되고 있고, 이들의 정신건강학적 문제들은 실업과 자아 효능감 저하를 야기한다는 연구들을 통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밝은 면만이 아니라 그 이면의 어려움들도 파악할 수 있다.[45] 또한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주택난 등의 이유로 반난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당초 계획보다 영주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난민 수가 14,400명 감소될 예정이다.[46]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좀 더 나은 삶의 조건을 찾아 거주지를 선택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재정착지가 변동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캐나다가 이상적인 정착지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기여자가 아닌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바로 캐나다로 들어가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을 경유지로 삼고 있다. 타지키스탄을 최종 정착지가 아니라 중간 경유지로 선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III. 경유지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정체성 변화

1. 이동과 젠더 역할의 변화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이동 경로인 타지키스탄에서 난민들은 젠더 역할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여성의 관점에서 근대 아프가니스탄 역사는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국가건설부터 소련침공까지 개혁기(1926년~1989년), 제2기는 무자헤딘과 탈레반 치하 폐쇄기(1989년~2001년), 제3기는 미국 지원 정부 수립기 (2001년~2021년)이며, 이제 제4기 탈레반 재집권 시기(2021~)로 접어들었다.[47]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과 관련된 개혁은 영국, 소련, 러시아 등 주로 외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44) Karli Woods, “Public Policy Brief Through the Federal Government: The Social, Civic, and Cultural Integration of Resettled Refugees in Canada and Germany”, *Federalism-E*, 23 (2022), pp.1-14.

45) Ahmad, Farah, Othman, Nashih, Lou, Wend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cial support and coping among Afghan refugees in Canada”, pp.597-605.

46) Laura Osman, “Canada’s reduced refugee targets ‘wise’ for housing stability: UNHCR”, *Global News* (November 5, 2024).https://globalnews.ca/news/10852133/canadas-reduced-refugee-targets-wise-housing-stability-unhcr/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47) 엄익란,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아프간 여성의 미래 전망」, 90쪽.

런데 개혁 세력이 추진한 여성정책은 종교 세력과 지방 세력의 반대로 모두 실패하였다. 구체적인 실패 원인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지역 사회, 특히 파슈툰 지역에서 깊이 자리 잡은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개혁에 대한 저항 의식, 취약한 중앙정부, 그리고 도시와 지방 간의 갈등 및 구조적 균열이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자헤딘과 탈레반의 1차 집권 당시 여성들의 권리는 현저하게 침해당했다. 1992년 무자헤딘이 카불을 점령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국가(1992년~1996년)로 선포한 후, 이슬람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며 여성에 대한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 1996년에는 탈레반이 카불을 함락하고 집권한 후 아프가니스탄을 '이슬람 토후국(1996년~2001년)'으로 선포했다. 탈레반의 지침에 따라 외출시 부르카 착용은 의무화되었고,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외출시 반드시 남성 보호자가 동행해야 했다.[48)]

무엇보다 여성의 취업을 금지한 것과 교육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 문제였다. 취업금지로 인해 수년간의 전쟁으로 발생한 과부들이 생존을 위해 구걸을 하도록 내몰리게 되었다. 탈레반 집권 당시 카불에만 과부들이 5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탈레반에 의해 어린아이를 포함한 여성을 위한 학교는 폐쇄되었다. 그 결과 탈레반 집권 시기 여성의 문맹률은 약 9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49)] 예를 들어 여성운동가인 파지아 쿠피는 1996년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했을 때 의대 재학 중이었으나, 더 이상 의대에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50)]

이와 같은 탈레반의 여성 억압 정책은 미국이 2001년에 아프가니스탄을 무력으로 침략하면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항구적 자유(Operation Enduring Freedom)'라는 작전 하에 미·영 연합군이 탈레반을 제거하기 위해 주도했던 이 전쟁에서 여성 문제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명분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전쟁 초기부터 탈레반 정권 아래에서 고통받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을 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의제로 제시되었다.[51)]

이제 2021년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이 귀환하자 아프간 여성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 내에서 정상 국가를 추구하고 있는 탈레반이 과거와는 달라진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현재 카불 거리에서 여성들은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고 외출했다는 죄목으로 구타당하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Human Right Watch)의 2021년 11월 1일자 보고서에 의하면, 아프가니스탄 내 여학교의 대부분은 폐쇄되었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에서 여성 교사는 해고되었고, 여성들의 스포츠도 금지되었다.[52)]

2023년 1월 24일 국제 교육의 날을 맞아 UNESCO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여학생과 젊은 여성의 수가 250만 명(80%)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다.[53)] 인터뷰를 수행했던 17가정 중

---

48) 외출 금지로 여성들은 기본적인 의료서비스조차 받기 힘들어졌으며, 예를 들어 탈레반 깃발 색깔인 흰색 양말 착용도 금지되었다. 이러한 규칙에 복종하지 않는 경우 '채찍질',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이기', '처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Sebghatullah Qazi Zada, Mohd Ziaolhaq Qazi Zada, "The Taliban and women's human rights in Afghanistan: the way forward", p.7.

49) Ibid.

50) 스와미나단 나타라잔, 「탈레반과 협상한 아프간 여성」, 『BBC 월드 서비스』, (2020년 2월 23일)https://www.bbc.com/korean/news-51582504 (검색일: 2024년 8월 7일).

51) 엄익란, 「미군 철수 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과 아프간 여성의 미래 전망」, 88쪽.

52) 구기연, 「국제 사회의 여성 인권 규범과 이슬람권 내 페미니즘의 흐름과 동향: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례를 중심으로」, 89쪽.

53) "Real GDP per capita", *The World Factbook* (2023). https://www.cia.gov/the-world-factbook/field/real-gdp-per-capita/country-comparison/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UNESCO dedicates the 2023 International Day of Education to Afghan girls and women", (2023. 01. 19).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문해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반면 딸들은 전부가 다리어를 읽고 쓸 줄 알았다. 이는 2001년 미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수도 카불에서는 그 이전 시대와 달리 여성들이 교육받을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 타지키스탄에 도착한 아프간 난민 여성들은 무엇보다 안전하게 길거리를 다닐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이 타지키스탄에 도착한 이후 겪게 되는 상황적 변화는 타지키스탄에서 대체로 생계를 위해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점이다.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일하는 곳은 봉제 공장, 뷰티 살롱, 음식점, 슈퍼마켓 등이었다.[54] 때로는 집 안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부업의 형태로 아프가니스탄 전통의상을 만들어 제3국으로 떠나는 여성들에게 판매하는 여성을 비롯하여, 재봉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기혼 여성들이 다수 있었다.[55]

학교에 다녀야 하는 나이의 청소년들은 대체로 타지키스탄의 정규 학교에서 수학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였으며, 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봉제 기술과 미용 기술들을 배우고 있었다. 성인 여성들의 경우는 봉제 공장에 취업하여 일하는 여성들도 다수 있었다. RTP의 네 딸은 22, 20, 18, 15세인데 모두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이 다니고 있는 공장은 두니요이 나브(Дунёи Нав, 새로운 세계)라는 이름의 공장인데, 이곳은 주로 러시아에서 군복을 주문받아 러시아로 보내는 곳이었다. 이곳에서는 주간 조와 야간 조로 근무조가 나눠서 운영되고 있는데, 주간 조는 7시~2시, 야간 조는 2시~9시까지 일을 하고, 한 주씩 교대로 주야간 근무를 한다.[56] 아프가니스탄 여성들과 타지키스탄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데, 약 2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다. 월급은 약 1,500소모니(12만원)이다.[57]

또한 미용사로 일하는 경우들도 있다. 3년 4개월 전에 타지키스탄으로 가족 전부가 이주해 온 PRD의 가족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난민증을 받았으며, 아버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했는데, 타지키스탄에서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첫째 딸인 SS는 타지키스탄의 미용실 주인에게 20일 동안 미용기술을 배우는데 800 소모니(약 65$)를 지불하고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임대하여(월 2,100소모니 지불) 미용사로 일하고 있다.[58] 또한 미용실을 임대할 경비가 없는 DAN의 경우와 같이, 집에서 미용일을 하기도 한다.[59] 미용일 중 중요한 부분은 네일아트이다. 17세인 MLRI의 경우도 현재 네일아트를 배우고 있다.[60] 그런데 타지키스탄의 경우, 구매력은 세계 222개국 중 181위(2023년기준)에 해당하며, 1인당 GDP가 1,276$ (2024 기준) 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이다.[61]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다수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이 네일아트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경

---

https://www.unesco.org/en/articles/unesco-dedicates-2023-international-day-education-afghan-girls-and-women#:~:text=Currently%2C%202.5%20million%20(80%25),of%20the%20de%20facto%20authorities. (검색일: 2024년 8월 7일).

54) 남성들은 자동차 정비, 건설 현장, 자영업(식당이나 키오스크) 등의 일을 했다.

55) SJ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SJ 자택(2024. 07. 13).

56) RTP, MDN, BSR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레스토랑(2024. 07. 18).

57) 1500 소모니 중 500소모니는 교통비로 나가고, 500소모니는 점심값으로 지출되고 나면 500 소모니를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힐튼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는데, 힐튼 호텔에서는 월급을 500소모니 밖에 주지 않아서, 교통비 외에는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어서 단기간 밖에 일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글로벌 기업들의 고용의 다층적인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SN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SN 자택(2024. 07. 13).

58) PRD & SS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PRD 자택(2024. 07. 13).

59) DAN 인터뷰: 타지키스탄, 루다키, DAN 자택(2024. 07. 16).

60) MLRI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MLRI 자택(2024. 07. 16).

61)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October 2024).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weo-database/2024/October/weo-report?c=923,&s=NGDPDPC,&sy=2024&ey=2024&ssm=0&scsm=1&scc=0&ssd=1&ssc=0&sic=0&sort=country&ds=.&br=1 (검색일: 2024년 11월 9일).

유지인 타지키스탄에서의 경제활동 자체보다 최종 정착지로 여기고 있는 캐나다에서의 경제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지키스탄 현지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타지키스탄 NGO 대표인 E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는 길에서 책이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는 젊은 여성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의 젊은 여성들과 비교할 때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훨씬 높다고 그는 평가하고 있다.[62] 이들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제약들이 있었지만, 타지키스탄에서는 제약들이 거의 없고, 캐나다로 이주할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적극적으로 영어를 배우고, 기술을 습득하면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오히려 남성 청소년들이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싸우게 되면 바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당하는 사례들로 인해 주눅 들어 있고, 가급적이면 외출을 삼가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가능해 진 것의 여파 중 하나로는 철저한 가부장적인 가족 문화가 느슨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들의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웠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남성 가장들이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가족을 책임지는 견고한 의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여성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이후에는 가족들을 모두 버리고 타지로 떠나버리는 무책임한 남성들도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젠더 역할의 변화를 짐작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 2020년에 타지키스탄으로 온 JMR(50세)의 둘째 딸인 MRS(29세)는 10, 9, 5, 3세인 2남 2녀 네 아이를 키우고 있다. 그녀의 남편은 모스크바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고 떠난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가 독일로 이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 MRS는 현재 미용사로 일하고 있으며, 이 가정은 캐나다 이주를 준비 중인데, 캐나다의 스폰서쉽을 구했다. 캐나다 교회들이 32,000달러의 예치금을 준비해 주었다. 이제 면접을 앞두고 있다.[63]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온 가족이 2019년에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HRD(37세)의 경우를 들 수 있다. HRD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는데, 타지키스탄으로 온 직후 그녀의 남편이 타지키스탄 여성과 바람이 나서 함께 독일로 이주해 버렸다. 5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연락조차 없으며,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녀의 두 딸, 19세의 MSTB와 18세의 MDH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터뷰 당시에도 손과 팔에 자상과 화상을 입고 있었다.[64] 매우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리고 비록 타의에 의해서이지만, 타지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자립의 기회들을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부장적인 의무를 벗어던지는 남성들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딸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몹시 안타까워하는 아버지도 있었다. DBT는 하자르족이라는 이유로 파슈툰족인 탈레반들에게 동족들이 학살당하는 경험과 개인적 차별의 경험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으로 왔다. 그는 왜 내 딸들이 한참 공부해야 할 나이에, 이렇게 돈 벌러 다녀야 하냐고 안타까워하며 반문했다. 이처럼 여성들의 경제활동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62) 난민 지원 활동가 E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직무실(2024. 07.14).
63) JML, MRS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JML 자택(2024. 07. 15).
64) HRD, MSTB, MDH 인터뷰: 타지키스탄, 루다키, HRD, MSTB, MDH 자택(2024. 07. 17).

로 여성들 자신은 미래를 계획하며 희망에 차 있었다. 캐나다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주로 파일럿, 기업가,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조혼 풍습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분위기 속에서 25세의 NJY는 결혼은 생각도 없으며, 기업가가 되겠다는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녀의 어머니 NRY는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할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이후 딸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65]

한편으로 PRB는 나와 내 가족들이 이란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타지키스탄으로 이동하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인권운동가가 될 것이며, 직업으로는 의사가 되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라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PRB의 여동생 NJT(26세)는 지금은 RCVC(Refugees, Children and Vulnerable Citizens)에서 미용과 재봉기술을 배우고 있지만[66],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으며, MTR(21세)는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고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67] 또한 기독교 선교사가 되고 싶고, 이를 위해 한국의 신학교로 진학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 SID와 같은 여성도 있었다.[68]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난민들을 돕는 타지키스탄 현지인인 활동가 D는 매주 금요일은 남자 축구 캠프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에는 여자 축구, 일요일에는 배구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D는 일생동안 바깥에서 스포츠를 해 본 적이 없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 특히 어머니들이 감격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전하고 있다.[69] 정규 학교 교육을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청소년들이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스포츠 캠프 운영은 매우 의미 있는 지원 활동이었다. 이처럼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마주했던 삶 속에서의 다양한 한계들을 이동 과정에서 뛰어 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2. 경유지에서의 종교 정체성 변화

타지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경우 현재는 거의 대부분이 타지키스탄을 경유지로 삼아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2015년 시리아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하기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은 독일 등 유럽으로 이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가족들이 유럽에 거주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은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럽으로 가는 것은 점점 어려워졌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재정착 가능성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이다.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과, 이들을 돕고 있는 NGO 활동가들과 타지키스탄 UNHCR 근무자들과 내무부 난민 담당관들의 구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프가니스탄 난민 한 가구가

65) NRY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NRY 자택(2024. 07. 15).
66) Refugees, Children and Vulnerable Citizens (RCVC)는 타지키스탄에서 1996년 1월 2일에 만들어진 비영리기구로서, UN과 세계 여러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기구이며, 난민, 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물질적 지원, 교육, 보건 등의 도움을 주고 있다. 주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두샨베와 바흐다트에서 컴퓨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바흐다트에서는 사회 센터와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To provide social and material assistance to refugees and Tajikistan’s most vulnerable citizens”, https://rcvc.tj/ (검색일: 2024년 8월 7일). 아프가니스탄 난민 여성들은 주로 이곳에서 미용과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다.
67) 그런가 하면, 아버지의 자동차 정비 일을 도와주고 있는 남자 형제인 MHD(16세)는 택시운전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PRB(27세), NJT(26세), MTR(21세), MHD(16세): 타지키스탄, 루다키, 자택(2024. 07. 17).
68) SID 인터뷰: 타지키스탄, 루다키, SID 자택(2024. 07. 16).
69) 난민지원 활동가 D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바흐다트 (2024. 07. 13~18).

캐나다로 이주하는 과정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 그 첫 단계로는 캐나다 내부에 스폰서쉽을 제공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캐나다 교회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난민 한 가구당 32,000달러의 보증금이 든 재정보증 예치금을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다음 과정은 캐나다에서 담당자를 파견하여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인터뷰를 시행한다. 담당자는 주로 IOM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이 인터뷰에 통과하면, 캐나다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건강상의 이상이 없다는 증명을 받게 되면, 캐나다로부터 항공권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캐나다로 이주하게 된다.

이러한 캐나다로의 재이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보다는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 인터뷰를 진행했던 17가정 중 첫 방문지인 가정에 들어섰을 때, 통성명을 하기도 전에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와 아들은 기타를 들고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그곳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장소인 것을 알게 되었다. 첫 인터뷰 대상이었던 NJBL는 서로 이름을 이야기하자마자 길게 자신이 어떻게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70]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고 싶다고 한 이후에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물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에는 무슬림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대체로 SH처럼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한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들이었다. 유독 이 가정에서만, 어린 딸들이 히잡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 가정을 제외한 다른 가정들에서는 나이든 여성들은 히잡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만, 젊은 여성들, 청소년들은 히잡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미 가족 전부가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에는 가정 내 여성들 모두가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

인터뷰에 응했던 17가정 중 16가정이 타지키스탄 정부가 발급한 붉은색 난민증(타직어, 구례자, Red card)을 소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OSP의 가정은 UNHCR에서 발급한 흰색 난민증(White card)을 소유하고 있다. 타지키스탄 정부가 발행한 붉은색 난민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수도인 두샨베에 거주할 수 없고, 두샨베 근교 도시인 루다키와 바흐다트에 거주 허가를 받는 반면, UNHCR에서 발급한 흰색 난민증을 소유하면 두샨베에 거주할 수 있다. 2000년부터 타지키스탄 정부는 난민들을 수도에 거주할 수 없도록 난민의 이동 및 거주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로 인해 2000년 이후에 도착한 모든 난민과 망명 신청자는 수도 두샨베를 포함한 타지키스탄의 주요 도시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중 다수는 두샨베에서 약 15㎞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흐다트'에 수용되었다.[71] 바흐다트에 난민들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두샨베에서 26년 동안 교육 및 도시 재건 분야에서 NGO 활동을 지속해 온 A씨는 1992~1997년까지 벌어졌던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 바흐다트는 반군들의 활동 거점지역이었기 때문에, 내전이 종식된 이후 특히 바흐다트에 공권력이 많이 배치되어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지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타지키스탄 정부가 통제하기 수월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바흐다트를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허가했다는 것이다.[72]

---

70) NJBL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NJBL 자택(2024. 07. 13).
71) 정세진, 『중앙아시아 국가 타지키스탄. 일반 개관·이슬람·국내정치·국제관계』, p.218.
72) 난민 지원 활동가 A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A의 이웃집 거실(2024. 07. 15).

이러한 타지키스탄 정부의 난민 거주 제한 정책에 대해 UNHCR은 난민이 도시와 마을을 포함하여 선택한 장소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1951년에 체결된 유엔 난민협약과 UNHCR의 도시 난민 정책과 직접적으로 모순되는, 수정되어야만 할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73] 이 규정으로 인해 UNHCR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에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뷰를 수행했던 17가정 중 흰색 난민증을 소유한 OSP 가족만 두샨베 시내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두샨베 산동네 꼭대기에 매우 열악한 주거 공간이었다. 오히려 임대료가 바흐다트의 일반적인 난민들이 거주하는 곳보다 더 저렴했다. 이 집을 방문하기 전에는 수도인 두샨베에 위치한 집 임대료가 더 낮다는 사실이 의아했지만, OSP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주거환경은 좋지 않았다.

또한 붉은색 난민증(타지키스탄 정부 발급)으로 취업이 가능한 것과 달리, 흰색 난민증(UNHCR 발급)은 취업을 할 수 없다.[74] 이러한 이유로 초기에는 유럽으로 이주하는데 유리한 흰색 난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75] 흰색 난민증의 경우는 연장을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붉은색 난민증의 경우, 처음 발급받는 비용도 높지만 (약 350달러), 3년이 지나면 1년에 한 번씩 연장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타지키스탄 내무부의 난민 담당 관리의 설명에 의하면, 연장할 때 국가에서 책정한 공식 비용은 약 10달러 정도(72 소모니)이다.[76] 그러나 인터뷰에서 만났던 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1인당 100불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한다. 몇몇 가정에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일하러 나가는 사람만 난민증을 유지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난민증 없이 거주하기도 한다.[77]

그런데 두샨베 산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던 OSP의 경우 UNHCR에서 발급하는 흰색 난민증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적인 박해를 받은 것을 UNHCR로부터 인정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탈레반에 의해 기독교인이라는 종교적인 이유로 남동생이 살해당하자, OSP의 일가족 모두, 총 19명이 2011년에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했다. OSP는 남동생이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탈레반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아내에게 숨겼다. 타지키스탄에 도착할 때까지 그의 아내인 HSY는 자신의 남편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다만 남편인 OSP가 나마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열정이 없는 무슬림이라고만 생각했다. 결혼 전에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타지키스탄으로 이주할 때에도 단지 외국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매우 신났다고 회고한다. 그녀는 타지키스탄에 도착한 이후에야 왜 가족 모두가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왔는지를 알 수 있었으며, 자신이 난민이 되었다는 점을 알고는 기가 막혔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에서 그녀는 남편의 종교를 받아들였으며, 큰 딸인 MLRI도 미국인 선교사에게 교육을 받았다. 2024년 7월 당시에는 가족 모두가 캐나다로부터 이주 허가를 취득하여 캐나다로 떠날

---

73) Angela Li Rosi, Marco Formisano, Ljubo Jandrijasevic, “Lives in limbo: A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of UNHCR's urban refugee policy in Tajikistan”, pp.1-2.

74) 드물게 흰색 난민증을 소유하고 있는 OSP의 경우 노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불법으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다. OSP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OSP 자택(2024. 07. 16).

75) 초기에는 흰색 난민증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내보냈다. 8년 전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 가족 8명이 튀르키예를 통해 독일로 건너가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남아 있던 형과 남동생의 가족은 재작년에 캐나다로 갔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OSP의 가족이 캐나다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76) 이스맛 조다 팟히진, 다밧 조다 사이드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내무부 직무실(2024.07.18).

77) 대표적인 가정이 두샨베 근교인 루다키에 거주하고 있는 AMN(42세)의 가족이었다. 가족 구성원 중 일자리가 있는 어머니와 큰 딸과 둘째 딸만 난민증을 소유하고, 세종학당에서 언어를 배우고 있는 막내 딸 SID의 경우 연장 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난민증을 소유하지 않았다. AMN 가족 인터뷰: 타지키스탄, 루다키, AMN 자택(2024. 07. 16).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란에서 출생하여 이란에서 자라고 이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남편인 OSP의 경우는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할 때에도 이미 기독교인이었기에, 단지 종교적 박해가 이동의 원인이 되었지만, 종교적 정체성이 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에서 기독교를 수용한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이동으로 인해 종교 정체성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78)]

경유지인 타지키스탄에서 종교 정체성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례는 DBT(48세)였다. 하자라족인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시아파라는 소수 종파의 소수 민족으로서 특별히 고초를 겪었다. 그는 해발 약 2,200미터의 고원지대인 가즈니 지역이 고향이며, 그곳에서 살고 있었는데, 카르자이 당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카불에서도 종족 차별 없이 일하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약속한 것을 믿고 카불로 이주했다. 그러나 카불에서 모스크를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고, 병원을 가는 것과 같은 일상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겪었다. 집 가까운 학교로 아이들을 전학시키려 했으나, 자리가 없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웃의 딸이 죽임을 당했고, 카불의 하자라족 아이들이 공부하는 곳을 탈레반이 공격하여 80명의 아이들이 학살당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고, 희망이 없었다는 생각으로 2018년 10월 타지키스탄으로 왔다.

처음 1년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프가니스탄의 집을 판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며, 이후에는 택시 운전수로 일하다가, 지금은 건물을 짓는 건설 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타지키스탄이 너무 일자리가 없어서 1달에 15일 정도만 일할 수 있는데, 교통비와 집세로 1,500소모니가 들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결정적으로 그는 타지키스탄으로 온 지 2년 후인 4년 전에 기독교로 개종했다.[79)]

또한 다수가 캐나다로 향하는 흐름과는 달리 한국의 종교 NGO와 연결되어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례들도 있다. AMN 가정의 장자인 S의 경우, 현재 한국의 백석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다. 그의 여동생 SID도 유사한 경로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세종학당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준비 중이었다. SID는 한국의 백석대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며, 그 이후 선교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강조했다. 그녀는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 친구들 여러 가정을 교회로 인도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80)]

한편 공교육 기관에서 이슬람 종교 정체성이 약화되는 사례도 목도할 수 있었다. 두샨베 시내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내부에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소모니언 스쿨(Somoniyon School)이 있다. 2024년 7월 현재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은 탈레반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탈레반 재집권 이전에는 소모니언 스쿨의 졸업장이 정식으로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공식적으로 학력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에서는 관행적으로 소모니언 스쿨의 학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교장인 노지라 선생님은 설명한다.[81)] 소모니언 스쿨은 타지키스탄에서 유일하게 아프가니스탄의 커리큘럼을 다리어로 가르치는 학교였으며, 아프가니스탄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기금이 끊어져서 폐교 위기에 처했었다.[82)] 이에 2021년 11월부터 미국의 NGO 단체

78) OSP는 이주노동자로 이란으로 갔던 아버지로 인해 이란에서 출생하고 자랐다. 이란에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아프가니스탄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6년을 거주하고 결혼을 했다. OSP, HSY, MLRI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OSP 자택(2024. 07. 16).
79) DBT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DBT 자택(2024. 07. 16).
80) SID 인터뷰: 타지키스탄, 루다키, SID 자택(2024. 07. 16).
81) 노지라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주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24. 07. 15).
82) “U.S. Embassy Partners with Spirit of America to Preserve Afgan Somoniyon School in Dushanbe,” (2 December 2021). https://tj.usembassy.gov/u-s-embassy-partners-with-spirit-of-america-to-preserve-afghan-som

인 '미국의 정신(Spirit of America)이 주타지키스탄 미국 대사관과의 협업을 통해 소모니언 스쿨을 재정적으로 지원했다.[83] 2021-2022학년도 임대료, 교통, 인터넷 등 긴급 지원으로 83,000달러를 제공했다. 이러한 지원은 2023년까지 지속되었다.[84] 그러나 2024년 7월 인터뷰를 위해 대사관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학교 건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사관 안으로 학교를 이전했다고 노지라 교장이 설명했다. 노지라는 탈레반 재집권 이전에는 학교의 커리큘럼에 이슬람에 대해 배우는 종교교육 시간이 있었지만, 탈레반 재집권 이후에는 커리큘럼에 더 이상 종교교육을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85] 탈레반 집권 이전에는 아프가니스탄 정부로부터 운영 자금들을 받았으나, 탈레반은 이 학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학교의 운영조차 미국 NGO의 도움의 손길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슬람 교육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타지키스탄에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도 종교 정체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SKL 집에 걸린 아가칸 4세 사진〉

또 하나 난민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는 이스마일파였다. 이스마일파는 이슬람 시아파의 한 분파로 7대 이맘인 이스마일 이븐 자프르를 중심으로 형성된 분파로서, 시아파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스마일파 내의 니자리파의 지도자가 아가 칸이다. 전 세계에 이스마일파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지도자인 아가 칸 4세는 1957년에 할아버지인 아가 칸 3세의 뒤를 이어 이스마일파의 49대 이맘으로 추대되었다. 1967년에 만들어진 아가 칸 개발 네트워크(the Aga Khan Development Network (AKDN))는 교육, 의료, 문화 보존, 경제 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대 민간 개발 조직 중 하나이다. 이 네트워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학교, 병원, 문화재 보존, 기후 변화 대응 등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86] 아가 칸 4세는 1983년에 아가 칸 대학(AGA KHAN UNIVERSITY)과 같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기도 했다. 2000년에는 아가 칸 대학이 케냐, 탄자니아, 아프가니스탄, 영국 등으로 확장되었다.[87] 아가 칸은 세계적으로 1,200만~1,500만 명의 신도들의 정신적 지도자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88]

---

oniyon-school-in-dushanbe/ (검색일: 2024년 9월 10일).

83) "Culinary Diplomacy: Supporting Afgan Refugees in Tajikistan", *Spirit of America.* https://spiritofamerica.org/supporting-afghan-refugees-in-tajikistan (검색일: 2024년 9월 10일).

84) 2021년 4월에 '미국의 정신 Spirit of America' 기구가 2023년까지 학교 임대료를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므로, 2023년까지 지원이 지속된 것으로 짐작된다.

85) 노지라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주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대사관(2024. 07. 15).

86) AKDN은 캐나다, 미국, 프랑스, 포르투갈, 스위스, 영국, 케냐,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르완다, 탄자니아, 우간다, 부키나 파소, 코테 디부아르, 말리, 세네갈, 이집트, 시리아, 아랍에밀레이트,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 공화국, 타지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 조직되어 있다. https://the.akdn/en/home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87) "The Aga Khan University", https://www.aku.edu/about/Pages/home.aspx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88) 2012~2017년까지 이 박물관의 총책임자는 한인 2세 헨리 김 박사였다. 「토론토서 숨쉬는 이슬람 예술」, 『한국일보』(2017. 12. 28). https://koreatimes.net/ArticleViewer/Article/106853 (검색일: 2024년 8월 7일). 그는 현재 캐나다 역사 박물관의 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왕길환, 「한인 2세 헨리 김씨, '캐나다 역사 박물관' 관장에 발탁」, 『연합뉴스』(2021. 07. 29).

아프가니스탄의 AKDN은 1996년 아프가니스탄 내전 중 식량 원조를 제공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2002년 이후 약 10억 달러 이상의 개발 지원을 했다.[89] AKDN은 타지키스탄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특히 파미르고원 지역에는 집집마다 아가 칸 4세의 사진이 걸려있다. 아가 칸 재단은 타지키스탄 내전 당시 고립되었던 파미르 사람들에게 헬기로 식량을 공급했다.[90] 두샨베 시내에도 아가 칸 재단 건물이 있으며, 캐나다로 이주하기 원하는 SKL의 가정의 벽면에도 아가 칸 4세의 사진이 걸려있었다. SKL의 큰아들인 JKR는 두샨베 시내에 위치한 아가 칸 재단으로 영어를 배우러 다니고 있었다.[91] 아가 칸 재단은 1995년부터 2018년 사이에 10억 달러를 타지키스탄에 지원했으며, 연간 50만 명의 사람들이 아가 칸의 도움을 받고 있다.[92] 아가 칸 재단의 국제적 네트워크 역시 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아가 칸 재단은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 캐나다의 아가 칸 재단은 1980년에 설립되었으며 토론토에서는 아가 칸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93] 2014년에 설립된 이 박물관은 9세기부터 21세기까지의 고대 이슬람 문명의 필사본, 과학 도구, 그림, 도자기, 직물 등 1,2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94] 박물관에서는 교육과 공연프로그램도 운영된다.[95] 이처럼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선택하는 또 하나의 종교는 이스마일파이다.

이처럼 캐나다로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기독교와 이스마일파와 같은 종교가 활용되기도 한다. 기독교 또는 이스마일파를 받아들임으로써 다양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요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경유지에서 종교적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맺음말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아프간 난민들의 이동 경로 중 하나는 타지키스탄을 경유지로 삼아 캐나다로 재정착하는 것이다. 점차 유럽으로 이주하는 길은 막혔지만, 캐나다로의 이주의 길은 아직도 열려있다. 독일이 소수의 인원을, 파키스탄은 대규모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강제 귀환시키고 있지만, 타지키스탄은 여전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에게 거의 100% 난민 신분을 부여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경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으로 들어오는 난민들도 아프가니스탄 난민 외에는 거의 없으며, 타지키스탄이 경유지로서 커다란 매력이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으로 회귀를 원하지 않는, 제3국으로 재정착 난민의 길을 선택한 이들이 들어오고 있다. 물론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원하는 대부분의 정착지는 캐나다이다.

내무부 난민 담당 관리들과 UNHCR 대표가 단언한 것처럼 타지키스탄의 난민 인정률이 100%에 가까운 이유는 난민들의 대부분은 타지키스탄을 거쳐 제3국으로 가기 때문에, 타지키스탄으로서는 사회적 부담이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96]

---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8070200371 (검색일: 2024년 8월 7일).
89) https://the.akdn/en/where-we-work/central-asia/afghanistan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90) 정효정, 「한니발·나폴레옹의 업적, 이 남자에 비하면...」, 『오마이 뉴스』(2015. 04. 25).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1367 (검색일: 2024년 8월 7일).
91) SKL & JKR 인터뷰: 타지키스탄, 바흐다트, SKL & JKR 자택(2024. 07. 16).
92) https://the.akdn/en/where-we-work/central-asia/tajikistan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93) https://the.akdn/en/where-we-work/north-america/canada (검색일: 2024년 10월 28일)
94) https://agakhanmuseum.org/(검색일: 2024년 8월 7일).
95) Ibid.

무엇보다 젠더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며, 이동 과정에서 젠더 역할은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는 사회적 여건이 다른 경유지 타지키스탄에서 여성들은, 생계를 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좀 더 주체적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경우 무슬림 정체성을 고수하는 것보다 기독교로 개종할 경우 캐나다로 이주하는데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경유지 타지키스탄에서 종교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즉 모빌리티가 종교 정체성 변화를 촉진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독교와 더불어 난민들의 이동에 윤활유가 되어줄 수 있는 종교로는 이슬람의 한 분파인 이스마일파도 있다. 캐나다에서도 이스마일파의 수장인 아가 칸이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타지키스탄에서도 이동을 위한 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처럼 난민들의 이동 경로와 환경들은 비록 각 국가의 제도와 정책의 영향 아래 놓여 있지만, 난민들은 단순히 수동적인 존재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재정착하기 위해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이는 경유지에서의 젠더 역할의 변화와 종교 정체성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이 연구에서 난민들을 밀어내는 요인, 끌어당기는 요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경유지에 주목함으로써 난민들의 모빌리티를 좀 더 다층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96) 우즈베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난민 유입으로 이슬람 극단주의가 유입되거나, 마약 유통 등 안전의 위협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반 달례예프 인터뷰: 타지키스탄, 두샨베, UNHCR 직무실 (2024. 07. 18).

발표2. 최아영(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국경 너머로 던져놓은 꿈':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 교육

한국이민학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공동주최 학술대회(2024. 12. 13)

‘국경 너머로 던져 놓은 꿈’:

타지키스탄에 거주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 교육

최아영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 들어가는 글: 타지키스탄의 아프가니스탄 난민 현황
2. 타지키스탄 난민 법과 난민아동교육 관련 제도
3. 타지키스탄 학교 현황과 아프간 난민 아동 청소년 교육 형태
4. 타지키스탄 거주 아프간 난민 아동 청소년 교육이 경험하는 도전
5. 맺는 글

연구질문

- **난민의 이주 전략과 난민 아동 교육의 관계: 최초 정착국(경유국)에서의 난민 자녀 교육은 재정착국에서의 교육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가?**
- **난민 아동, 청소년들이 제3국 이주를 위해 타지키스탄과 같은 저소득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도전은 무엇인가?**

- 타지키스탄 정부가 실현하는 난민아동교육의 자국 교육 시스템 수용 정책은 "배제- 장기적 통합가능성을 배제한 일시적 수용 – 통합"의 모델(Dryden-Peterson et al., 2019) 중 어느 지점에 속하는가?
- 타지키스탄에서 난민 아동들은 어떠한 형태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 아프간 난민이 공교육 시스템에 소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가?
- 타지키스탄 정부가 난민 아동 교육 포함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아프간 난민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주도하는 주체는 무엇인가?

연구의 필요성

- 그동안 주로 난민들의 최종 정착국인 북미, 유럽 지역에서 난민 아동의 교육, 사회통합을 다루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다수
- 그러나 **선진국에 재정착하는 난민은 0.3%** (UNHCR, 2023)
- 대다수의 난민 아동들은 재정착하기 이전 최초 정착국에서 거주하며 로컬 교육 경험
- 이 시기의 난민 아동의 교육 경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음
- 최초 정착국에서의 교육경험은 이후 시기의 교육과 연결되는 중요한 고리
- 최초 정착국에서의 교육경험은 열려지지 않은 '블랙박스' (Dryden-Peterson, 2016)

연구방법_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난민 및 기관 인터뷰

- 기간: 2024. 7. 13. ~ 7. 17.
- 장소: 타지키스탄 두샨베, 바흐다트, 루다키
- 대상: 아프가니스탄 난민(16가정)

  소모니온 학교(두샨베 소재 아프가니스탄 학교) 교장, 교사
  타지키스탄 UNHCR, NGO(Central Asian Partnership),

  내무부 관계자
- 활동: 가정방문 인터뷰, 기관 방문 면담

전세계 난민과 난민 아동 청소년 현황

- 전 세계 강제 실향민 수: 1억2천260만명(UNHCR, 2023)
- 0-17세의 아동·청소년은 4700만명으로 전체의 **약 40%**
- 난민 아동의 **35%**가 초등학교 입학하지 않고, **75%**가 중고등학교에 다니지 않음 (UNHCR Education Report. 2023에 인용된 2018년 자료)
- 난민의 **69%**는 난민들은 출신국의 **인접국**에 체류
- 난민이 체류하는 국가의 **71%**가 **저소득 국가, 중-저소득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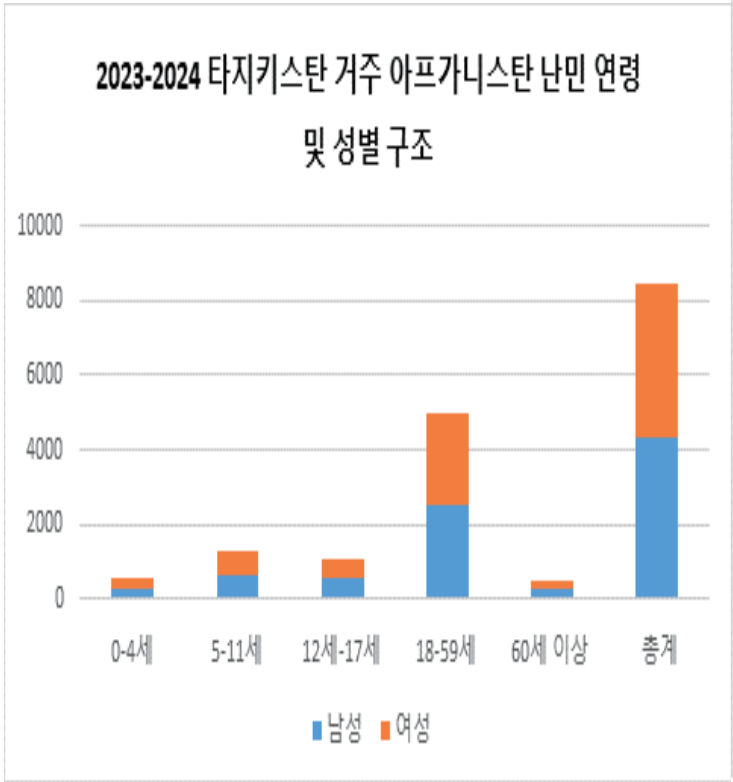
아프가니스탄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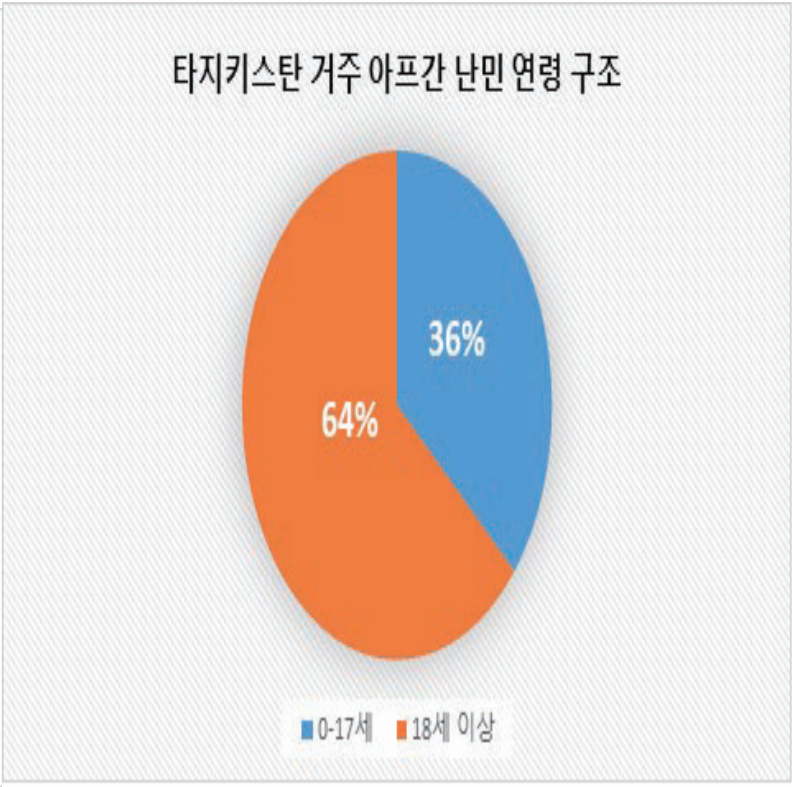
전세계 아프간 난민 현황

- 아프가니스탄 난민은 **640만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기화된 난민 (UNHCR, Global Trends Report 2023)
- 이란,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등 인접국에 피난한 아프간 난민은 **582만명**으로 추정(UNHCR, 2024)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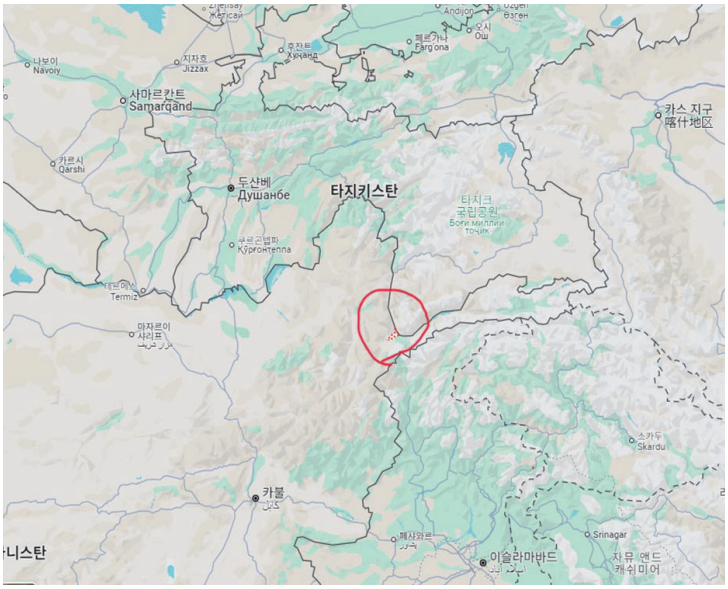
- 타지키스탄에 아프간 난민 **8483명** 거주, (UNHCR, 2024년 1월 기준)
- 중앙아시아 최대규모
- 아프간 난민 중 약 54%가 타지크족, 약 25%는 하자라족
- 성인 여성 31%, 성인 남성 29%, **아동과 청소년 40%** (EUAA, 2022)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공식 검문소

Panj River 사이에 둔 남서부 Sherkhan-Bandar(아프간),Panj-e-Payon(타직)/ Eskashem (남동부)



타지키스탄 난민 관련 법과 제도

- 1993년 발발한 내전으로 IDP 관련 지원을 요청하여 UNHCR 업무 시작
- **1993년 타지키스탄 난민협약 가입**, 1967년 난민의정서 가입
- 2002. 5. 10. **타지키스탄 공화국 난민법**(National Law on Refugees) 제정
- 상기 법 제12조에 따라 **난민은 초등,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 있음
- 상기 법 제12조는 **난민 거주지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

타지키스탄 난민 체류 현황_Mobility

- 출신국으로의 자발적 **귀환** : 최근 증가추세 (UNHCR, Annual Results Report 2023, Tajikistan, 2024)

* 출신국으로 추방당하는 경우 발생: 85건(2022), 15건(2023)

- 선진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 대다수가 원하지만 기회가 많지 않고 절차 지연

* 캐나다 정부가 탈레반 정권 이후 탈출한 4만명 아프간 난민 수용 약속

- 보충적 난민 유입 경로(complementary pathways): Economic Mobility Pathway Pilot(EMPP)
- 가족, 커뮤니티 초청 Private Sponsorship of Refugees (PSR) Program

- 타지키스탄에서 **통합**: 대다수의 아프간 난민이 원치 않음
- 국적 취득 사실상 불가 → **임시 체류의 장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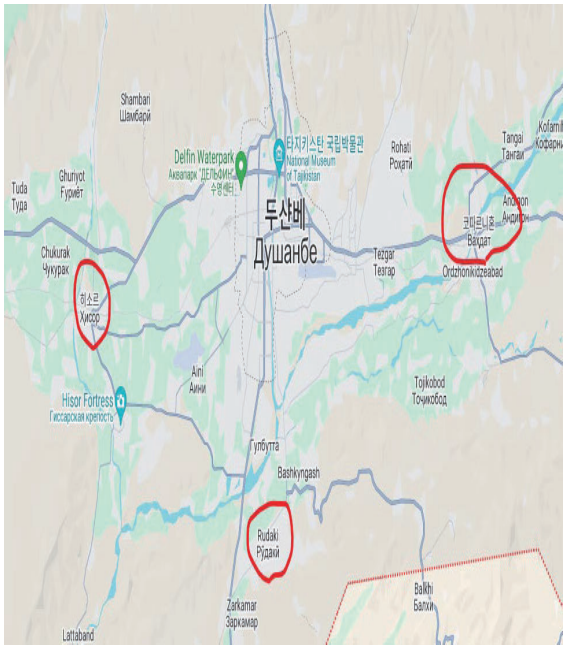
타지키스탄 난민 체류현황_법적 지위

- 제3국에서 발급받은 비자 소지자에게만 심사 후 난민지위 부여
-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자에게 타지키스탄 정부가 난민 신분증인 "**꼬르띠 구레자"(Корти Гуреза**) 발급
- 꼬르띠 구레자는 1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함
- **100%에 가까운 난민 지위 인정률**

- "어차피 이들은 정착하지 않고 제3국 이주할 것임"
(타지키스탄 UNHCR 대표 인터뷰, 2024. 7)

- 명목상으로는 자국인과 동일한 취업, 의료 혜택 보장
- 그러나 국가사회보장시스템에 들어가지 못함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PESEL 편입 의무화)

타지키스탄 난민 체류현황_거주지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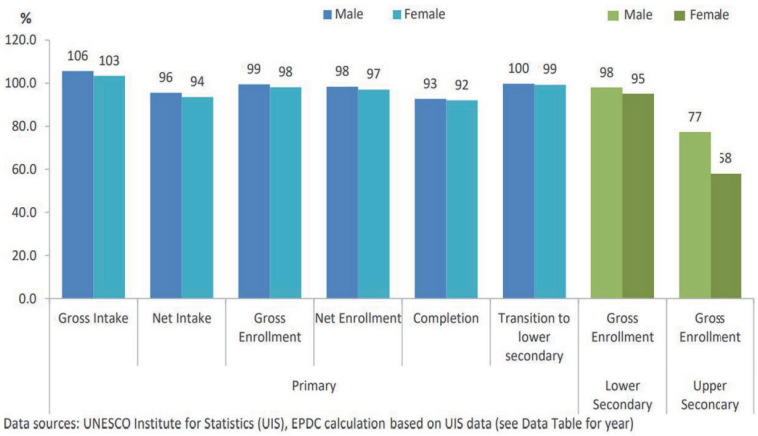


-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난민이 살아서는 안된다"**
- 2000년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령 제 325호에 따라 난민, 비호 신청자들은 타지키스탄의 수도, 국경 인근 지역 거주 불가
- 타지키스탄 난민법 제 12조 "난민은 난민 지위가 인정된 기간 동안 **타지키스탄 공화국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명시함
- 두샨베의 위성도시인 **바흐다트(70%거주), 루다키, 히소르(기사르)**
- 2000. 4. 26 이전에 유입된 아프간 난민들만 두샨베 거주 가능
- 거주지 제한은 아프간 난민 거주 지역의 과밀화 초래
- 주택, 고용, 교육 상황 악화

타지키스탄의 교육 제도_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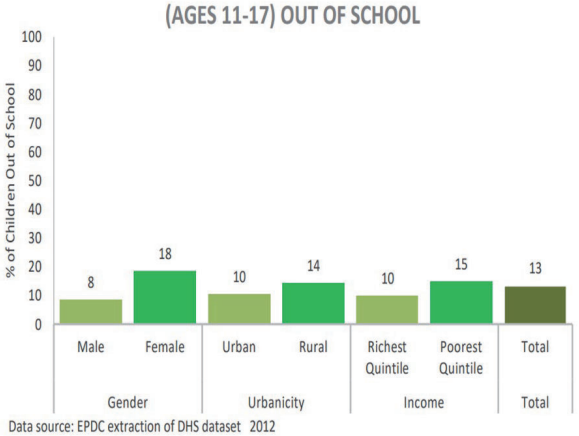
- 11학년제: 초등학교 4년, 중등학교 5년/ 고등학교 2년 or 직업전문학교
- 초등학교 입학률은 높으나 고등학교 입학률 감소(여학생의 경우 감소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FIG 6. STUDENT INTAKE AND FLOW FROM PRIMARY TO SECONDARY SCHOOLS



Data sources: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EPDC calculation based on UIS data (see Data Table for year)

FIG 5. PERCENTAGE OF CHILDREN OF SECONDARY SCHOOL AGE (AGES 11-17) OUT OF SCHOOL



Data source: EPDC extraction of DHS dataset 2012

아프가니스탄 난민·아동 청소년 교육 관련 정부 정책

- 2030 국가 교육 발전 전략(National Strategy for Education Development) 수립
-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대안적 교육 필요"

- 이주 이후 귀국한 아동 청소년
- **'언어 장벽이 있는 난민 아동'**
- 무국적자 아동
- 학교 밖 아동, 청소년

- 난민 아동 청소년에 대한 실제적 지원 사례 찾지 못함

이주 동기_ 자녀의 교육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떠난 경우가 다수

"카불이 위험해서 딸들이 배울 수도 일할 수도 없어서 왔어요. 대학도 못 다니고 자식들 교육 위해 이주 결정했어요."(47세 여. 2024. 7. 13)

"탈레반 때문에 딸 아이도 공부할 수 없고 문제가 많아서 여기로 떠나 왔어요" (43세 여, 2024. 7. 16)

"하자라 소수민족으로 카불에 살기 어려워요. 하자라인은 모스크 가는 것도, 병원가는 것도 어려워요. 아이를 집 가까이에 있던 학교에 보냈는데 하자라인이라고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48세 남. 2024. 7.16.)

"여기 와서도 내 아들, 내 딸이 공부도 못하고 일만 하는게 너무 속상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48세 남. 2024. 7. 16)

"바흐다트에서 비닐 백을 들고 다니는 젊은 여자들은 전부 공부하러 다니는 아프간 여자들이다"

- 2021년부터 아프간에 탈레반이 집권하며 여성 아동 청소년은 6학년 이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고 여성들의 대학교육도 금지
- 아프간 난민 중 남녀 성비는 거의 비슷함
- 남성의 취업 비율이 높으나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이 다수**
- 여자아이들은 지금은 네일 아트 배우고 있지만 거의 모두 의사가 되고 싶어함
- 외출 시 꼭 히잡 쓰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편안함 언급
- 그러나 남녀 합반 시스템은 힘들어 하는 경우도 있었음

: 타직 학교에서 아프간 학교로 전학 가는 경우는 주로 여자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기 원하기 때문 (5학년부터는 남녀가 구분되어 수업)

타지키스탄 거주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청소년 교육 형태

***일반적인 난민 아동 교육 형태:**

난민 캠프에 설치된 학교/로컬학교/난민이 세운 비공식학교

1. 타지키스탄 공립 학교 (2022년 현재 871명 재학)
- 타직 학교 중퇴 후 학원
- 타직 학교 졸업(9학년)

2. 두샨베 소재 아프간 학교(소모니온 학교)
- 아프간 소모니온 학교 중퇴 후 학원
- 아프간 소모니온 학교 중퇴 후 타직 학교
- 아프간 소모니온 학교 졸업

3. 난민들이 세운 학원

4. 홈스쿨링 (미국, 캐나다 학제)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타지키스탄 학교

- **경제적인 이유**

"소모니온 학교에 보내고 싶지만 비싸고, 학원 보내는 것도 돈이 들기 때문에 타직학교에 보낸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49세 여성, 2024. 7. 15)

- **자녀가 다리어를 읽고 쓸 줄 아는 경우**
- "아이가 아프간학교에 다니다가 이곳에 와서 다리어를 읽고 쓸줄 안다. 아이들 세 명 모두 다리어 읽고 쓸 줄 안다." (49세 여성, 2024. 7.15)
- **러시아어 학습 기회**

" 타직학교에서는 3,4학년부터 러시아어 배운다. 가족이 우크라이나로 갈 가능성도 있어서 러시아어 학원에서 러시아어 과외를 시켰다."(49세 여성, 2024. 7.15)

- **종교적 이유**

"소모니온 학교에 자녀를 보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니 '호피르'(배신자) 라고 놀림 받았다. 그래서 타직 학교로 보냈다."(33세 여성, 2024. 7. 15.)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소모니온 학교

- 2000년에 아프가니스탄 이주민들을 위해 세워진 사립학교
- 경영난으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 건물로 이전(탈레반을 인정하지 않는 대사관)
- 아프가니스탄 교육부 학제(탈레반 이전)로 운영되는 유일한 아프간 학교
- 2024년 7월 현재 1-12학년 220명 재학. 교사 19명
- 탈레반 집권 이후는 아프간 교육부 지원 전무(후원금, 미국 대사관 지원금으로 운영)
- 교사들도 탈레반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서 제3국 이주 도모
- 타직 학교와의 교류, 타직 정부 지원 전무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소모니온 학교

- **명맥을 잃어가며 학생 수 감소**

- 예전에는 난민 집거지역에 위치했으나 현재 난민이 거주할 수 없는 수도 두샨베로 이전하여 접근성 떨어짐
- 수업료와 교통비 추가 지출 필요
- 탈레반 집권 이후 이 학교 교육 이수 경력을 탈레반 정부가 승인하지 않으므로 졸업장이 인정되지 않아 상급학교 진학 불가
- 여학생의 중고등 교육을 금지하는 탈레반의 위협 상존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소모니온 학교

- "10학년 때 이곳에 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맘대로 다닐 수 없는데 여기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난 소모니온 학교에 다니고 싶었어요. 학교 졸업하면 아프가니스탄 학력 인정도 되니까요."(19세 남성, 2024. 7. 13)
- "아프간 아이들이 타직 학교에서 맞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소모니온 학교에 보냈어요" (29세 여성. 2024. 7.15)
- "돈이 들어도 소모니온 학교 보내요. 아이가 다리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니까요. 다리어 가르치는 수업이 있어서 보내요". (29세 여성. 2024. 7. 15)
- "소모니온 학교는 두샨베에 있어서 학비 외에도 교통비가 들어가니 비싸서 아이들을 보내지 못해요. 학비도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해요" (44세 여성, 2024. 7. 13)

타지키스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학원

"아프간 사람들은 사는 곳 어디서나 영어학원을 열어요"

-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모두 난민집거지 바흐다트 위치하여 접근성 좋음
- 타지키스탄에 이주한 후 오직 학원만 다니는 경우 다수
- 타직 초중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하는 경우 선택하는 대안
- 소모니온 학교보다 저렴한 수강료
- 난민 집거지역에 위치한 3개의 학원: 아리아나, 이스칸다르(ITCC), ACCESS
- 미국대사관, UNHCR 등 국제기구 지원 받고 있음

아리아나 센터 (Ariana Learning Center, Ориёно)

- 2020년, 귀화한 아프간인이 세운 아프간 난민 단체
- 인터뷰 대상자 대다수의 자녀들이 아리아나 센터에 다니고 있음
- 저렴한 수강료 때문에 자녀가 많은 아프간 난민들이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음
- 영어, 러시아어 교육으로 시작하여 컴퓨터, 수학, 메이크업 등 직업교육 코스 개설

이스칸다르 센터 (ITCC)
«Центр соврем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коммуникаций»

- 2016년 아프가니스탄 이스칸다르라는 아프간 이주민이 세운 영어학원으로 시작
- 미국 대사관이 건물 수리해주고 부분적으로 교사 임금 지원
- 외국어 6개(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등), 컴퓨터, 수학, 음악, 미술

The English Access Scholarship Program (Ac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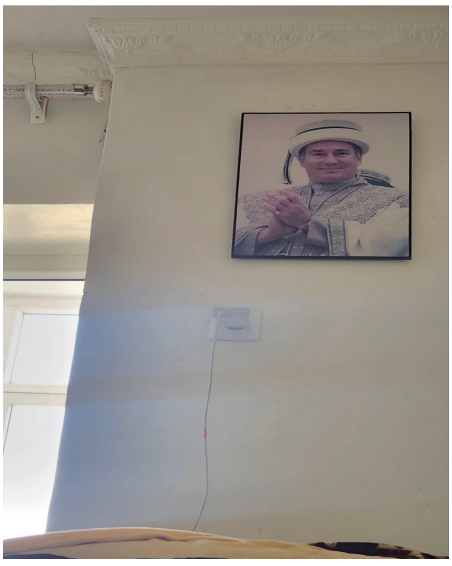
- 미국 대사관 문화원에서 하는 영어학습 프로그램(2년)
- 영어만 배울 수 있음
- 일주일에 3회 한번에 2-4시간

타지키스탄 난민 아동의 교육 형태_학원

- "여기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아요. 아리아나학원에서 영어 수업만 받고 있어요. 영어만 배우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캐나다 가면 영어 점수에 따라 입학할 수 있으니까 배워야해요."(16세 여성, 2024. 7. 13)
- "딸아이가 아프간에서 5학년 마치고 여기로 왔어요. 타직학교 5학년에 들어가서 9학년까지 다녔어요. 그 다음엔 ACCESS 프로그램 하며 영어만 배우고 있어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4-5시 1시간씩 영어 배우고 와요. ACCESS는 영어 통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느 나라에 가도 인정 받을 수 있거든요"(43세 여, 2024. 7. 16)
- "어느 나라로 갈지 모르니까 정규 코스보다는 아이가 영어 배우도록 하는게 나아요." (43세 여, 2024. 7. 15)

종교단체 (Shia Islam 이스마일파, Aga Khan)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 이슬람 난민 커뮤니티는 이슬람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코란 학교를 만드는데 타지키스탄에서 이슬람 종교교육이 활발하지 않음.
  무슬림이 국민의 절대다수여도 세속주의를 지향하는 정부는 이슬람 종교 교육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
- AKDN(Aga Khan Development Network)을 통해 교육, 금융, 보건, 개발 등 모든 분야를 장악하고 있음
- 특히 파미르 지역 (시아 이슬람 이스마일파 집거지)에서 영향력 지대함
- 아프간 하자라인 자녀들이 주로 캠프에서 교육 받음
- 최근 타지키스탄 정부가 AKDN 활동 제한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정규교육 중단

- 낮은 현지 학교 등록률 (=정규 교육 중단)과 높은 중퇴율

	타지키스탄 국민 (%, 2018)	난민과 비호신청자 (%, 2023)
초등학교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1-4학년)	97.5%	59.15%
중등학교에 등록된 아동·청소년 (5-9학년)	96.5%	30.22%

*출처: EPDC_Tajikistan, 2018; **UNHCR,** ***Annual Results Report 2023,*** **Tajikistan. 2024.**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정규교육 중단

- "아프간에서 넷째 딸아이가 1학년에 들어가 2개월 다니다가 타직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못 다녔어요. 우리는 두샨베에서 살면 안되니까 소모니온 학교도 못 보내요. 그래서 학교에 안 보내고 학원만 보내고 있어요" (47세 여. 2024. 7. 13)
- "딸은 타직 학교 9학년 마치고 전문학교 (테흐니쿰) 다니는데 집에 돈이 없어서 학교를 보내줄 수 없다고 하니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었어요. 아직 18세가 안되어 RCVC가서 직업 교육도 못 받아요" (43세 여, 2024. 7. 16)
- 타직학교 9학년 마치고 키오스크에서 여동생과 핫도그 만들어 장사하며 생계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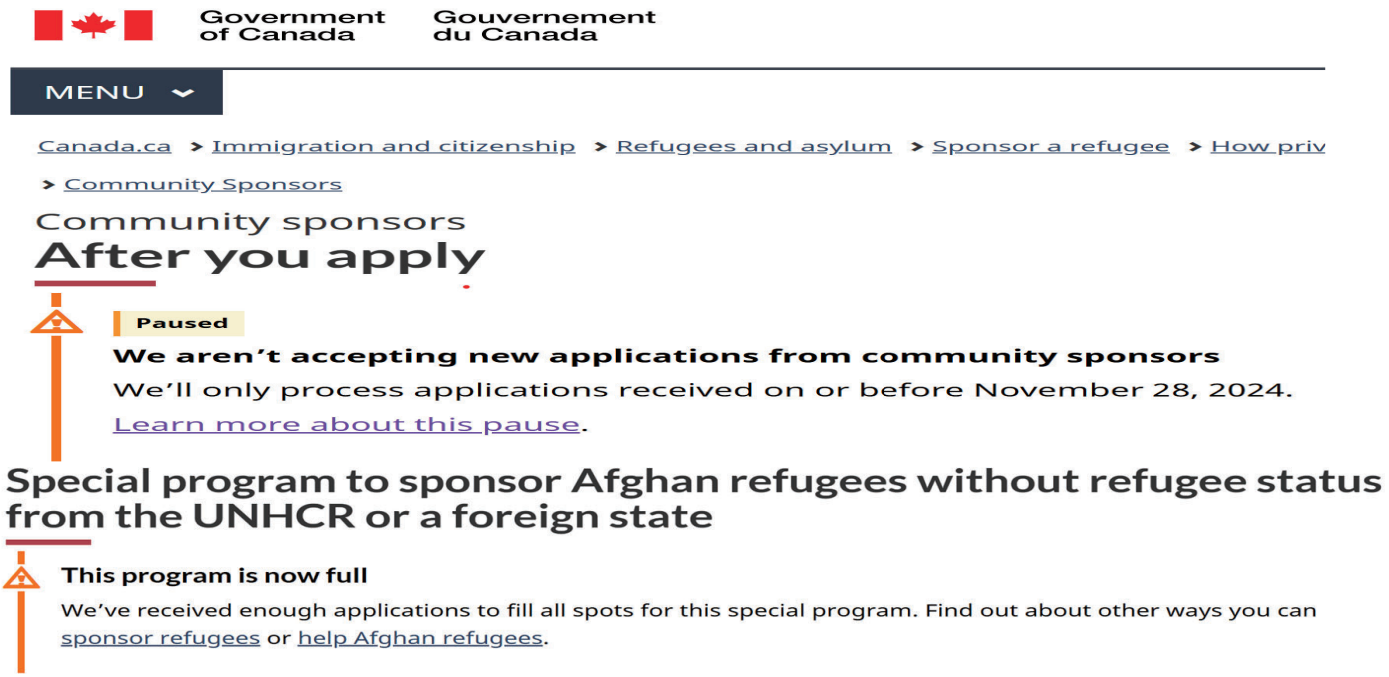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편중된 교육

- 인터뷰한 대다수의 아이들이 학교 대신 바흐다트 소재 학원에 다님
- 대다수가 캐나다를 최종 정착지로 원함
- 가족이나 스폰서가 있는 경우 캐나다로 이주 가능

→ 의무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캐나다, 미국으로의 재정착을 염두에 두고 영어 교육만 받는 경우가 다수

- 문제는 재정착의 기회가 적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최초 정착국에서의 체류기간이 장기화된다는 것

캐나다의 아프간 난민 수용 프로그램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언어장벽

- 다리어와 타지크어는 음성언어의 차이는 적지만, 문자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 타지크어는 키릴문자 사용

"타직어로 말하고 듣기는 어렵지 않은데 문자가 달라서 읽기가 어려워요"

- 학교에서 난민 학생을 위한 타지크어 수업이 따로 개설되어 있지 않음

"학교에서 따로 타직어를 배우는 보충수업은 없었어요. 이웃 타직사람이 키릴 알파벳을 가르쳐줘서 배웠어요."(23세 여성, 2024. 7.15.)

- 러시아어 교육도 받아야 하는 경우 발생

"레스토랑에서 일하려면 러시아어를 할 줄 알아야 한대요 "

- 타지키스탄에 와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러시아어를 알아야 한다는 것
- 러시아어가 공용어는 아니지만 교육, 경제, 서비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됨
- 러시아에 약 100만명의 타지크인 이주노동자 존재 (2022년 기준)
- 키릴문자 습득 어려움
- 아리아나 센터에서 러시아어 가르치는 경우 있음
- 러시아 공공기관이 타직 아프간 난민에게 러시아어 교습 프로그램 운영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열악한 교육환경

- 타지키스탄 1인당 실질 GDP(2023): **181위** / 아프가니스탄(**208위)**
- 실업률(2023**): 6.98%** / 청년 실업률 **16.9%**
- 노동이주자의 **해외 송금이 GDP의 34%**(2022년)
- 지속적인 인구증가: 2024년 기준 인구성장율 2.13%/ 세계 평균 0.86%
- **학교 과밀화** 현상 : 2-3교대 수업, 수업시간 단축 → **교육의 질 저하**
- 열악한 학교 시설, 교사 부족

"아이를 타직 학교 보내려 하니 학교에 책상과 의자가 없다고 안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직접 책상, 의자 만들어 학교에 가져갔어요. 그리고 우리 애들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당시 의자 10개 만들어서 2개는 우리 애들 앉히고 나머지는 학교에 주고 왔어요"(43세 남. 2024. 7.16)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차별과 문화적 차이

- "어딜 가나 아이를 '구레자(난민)' 라고 놀려요. 소문으로 듣기는 타직 학교 선생님이 '너는 구레자니까 바닥에 앉아서 공부해'라고 했대요. 그래서 무서워서 타직 학교에 안 보냈어요"(40세 여성, 2024. 7. 15)
- "딸이 타직 학교 5학년에 다니다가 지금은 안 다녀요. 타직학교에서는 '구레자'(난민)라면서 돈을 더 내라고 하기 때문이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돈을 더 내야 해요."(40세 여성, 2024. 7. 15)
- 남자 아동, 청소년들이 타직 학교에서 아이들과 싸우게 되면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당할지 모른다는 염려 존재
- 타직정부**, 2022년 아프간인 85명, 2023년 15명 본국으로 강제 추방**

타지키스탄 아프간 난민 아동이 교육을 받으며 경험하는 도전 _차별과 문화적 차이

- "처음에는 딸 아이가 타직 학교는 남자 여자가 같은 반에서 공부해서 힘들어했어요. 남자아이들이 있는 반에 가기 싫다고 했어요." (23세 여성, 2024. 7.15)
- "나는 여기 사는 타직인을 같은 동족이라 생각하는데 난 또 '구레자' 이기도 해요. 여기는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예요"(40세 여성, 2024. 7. 15)

맺는 글

1. 타지키스탄 거주 아프가니스탄 난민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통한 통합 가능성은 매우 낮음

- 2012년부터 UNHCR은 난민아동교육을 위한 병렬적 교육시스템을 추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현지 교육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
- 그러나 현재 타지키스탄에서 난민 아동 교육을 위한 통합 프로그램, 지원 부재

→ Dryden-Peterson 의 난민 교육의 거주국 교육 시스템 수용 모델 중 "**장기적 통합 가능성을 배제한 일시적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난민 교육을 제도적으로 분리하지 않으나 같은 무슬림, 타직민족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통합은 시도하지 않기 때문임

- 난민 수용국 폴란드의 경우 난민 아동의 폴란드 학교 입학과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강력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가동
- 인구가 감소하여 노동력이 부족한 폴란드의 경우 같은 슬라브문화권이며 교육수준이 높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매력적인 노동력으로 인식하기 때문
- 그러나 타지키스탄의 경우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구의 절반이 22세 미만(중위연령 22세)이므로, **난민은 일자리 경쟁자**가 될 수도 있음
- 아프간 난민도 열악하고 과밀한 타직 학교 현실, 차별로 인해 **현지 학교교육을 선호하지 않음**

2. 난민의 이주 전략이 난민 아동 교육의 형태를 결정함: "국경 너머로 던져놓은 꿈"

- 아프간 난민은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타지키스탄 정착과 통합을 선택하지 않는 경향
- 난민인정률은 100%이지만 국적취득은 사실상 불가
- 아프간 난민 스스로도 **제3국(선진국)으로의 재정착**을 원하고 있음
- 선진국 재정착이 유일한 대안이기에 **현지 정규교육 편입 비선호, 현지학교 중퇴 다수**
- 아프간 난민이 타지키스탄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현실
- 캐나다, 미국으로의 이주를 염두에 두는 영어 편중 교육,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기술 직업교육 편중 경향
- 그러나 제3국으로의 재정착 기회가 감소하고 있고, 선진국의 이주 허가 과정 지체

→ 난민 아동과 청소년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육공백이 발생한 상태로 임시 체류의 장기화 추세**

발표3. 황의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정체성과 난민 문제: 이라크와 시리아의 사례

정체성과 난민 문제: 이라크와 시리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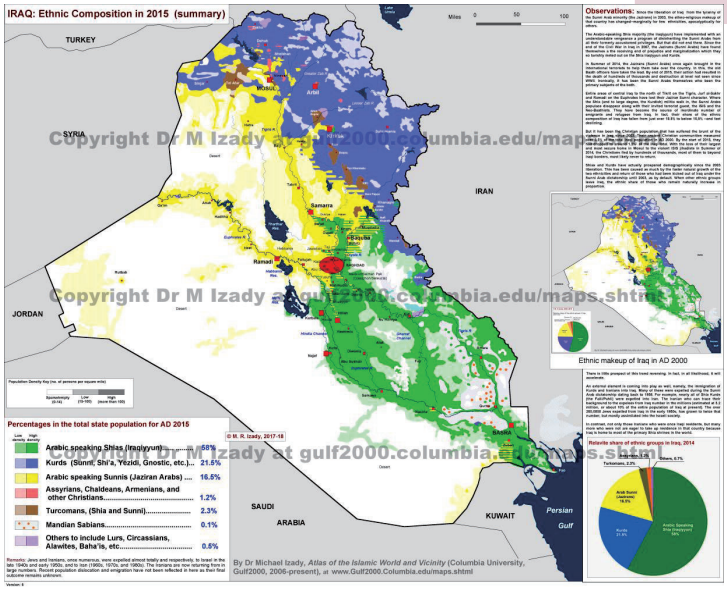
황의현(아시아연구소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 위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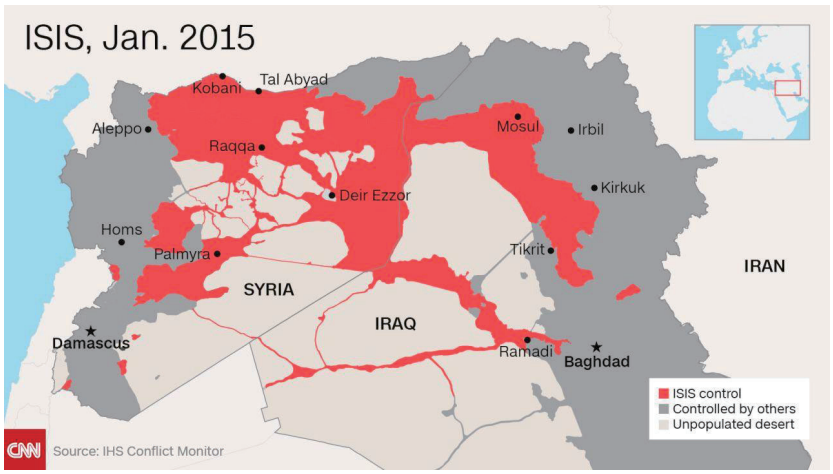
- 시리아 – 튀르키예, 요르단, 레바논 등에 약 500만 명, 시리아 국내의 국내피난민(IDP)는 약 680만 명
- 이라크 – 2014년 IS 위기로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국내피난민이 발생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여전히 약 114만 명이 귀환하지 못한 상황
- **IS 위기가 끝난 지 약 10년이 지났고, 시리아 내전에서 아사드 정권이 우세를 차지한 현재에도 국내피난민 문제가 장기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시리어와 이라크 사회의 다양한 정체성과 난민 문제의 관계

이라크: 다민족, 다종파, 다종교 사회

- 민족적으로 인구 대다수는 아랍인이며 북부 지역은 쿠르드인
- 종교적으로는 시아파 무슬림이 최대 집단(쿠르드인 대다수는 수니파)
- 무슬림 외에 기독교도와 야지디인 등 소수 종교 공동체가 주로 북부에 거주



IS 위기와 이라크 국내피난민 문제



IS가 점령한 북부 지역은 전통적으로 기독교도와 야지디인 거주 지역

IS 위기와 이라크 국내피난민 문제

- 2014년 1월~2015년 3월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를 떠난 국내피난민 100만 명 중 약 80만 명이 기독교도와 야지디인(20~40만 명)
- IS의 야지디인 학살과 노예화
- 2019년 기준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지역에 머무르는 난민 중 60%가 기독교도와 야지디인
- 이라크 전체 인구 중 극소수(5% 미만)를 차지하지만, 전체 국내피난민 중에서는 20% 이상

IS 위기 이후: 소수 종교 집단의 두려움 심화

- 2019년 국제이주기구(IOM) 조사에 따르면 야지디인과 기독교도 국내피난민 중 5% 미만만이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면, 90% 가량이 해외이주 희망
- 무슬림 국내피난민은 귀환에 적극적이나 비무슬림 국내피난민은 해외이주 선호
- **새로운 이슬람 극단주의의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 – 무슬림은 IS와 같은 새로운 극단주의 조직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기독교도는 극단주의 조직의 재등장에 대해 더 크게 우려
- 기독교도 내에서 무슬림과 IS 동일시하는 시각 성장
- 아랍 수니파에 대한 야지디인의 불신, 배신, 적의
- **치안 불안과 이라크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 비무슬림 국내피난민이 귀환 대신 해외이주를 선택하는 주요 동기

IS 위기 이후: 야지디 정체성 문제

- 야지디인은 쿠르드인인가? – 야지디인이 거주하는 신자르(Sinjar) 지역에 대한 소유권 주장하려는 쿠르디스탄 자치정부, 야지디인이 쿠르드인이며 야지디교는 이슬람 이전 쿠르드인의 본래 신앙이라고 주장
- IS 사태에서 쿠르디스탄 자치정부가 보여준 무력함에 실망한 야지디인, 쿠르드인과 구별되는 야지디인 정체성 강화 – 야지디인 무장조직과 야지디인 정당 등장
- 쿠르디스탄 자치정부와 협력 또는 독자성을 유지를 두고 야지디인 내부의 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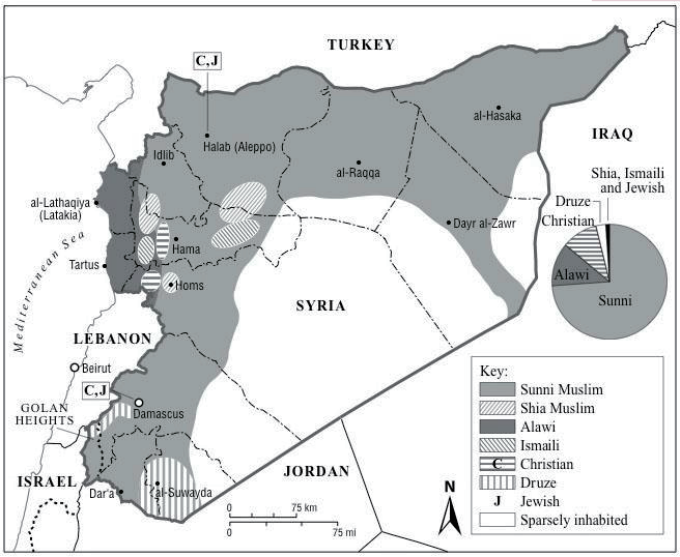
Economist.com

IS 위기 이후: 피해자에서 새로운 가해자(?)로

- 2020년 기준 수니파 아랍인 약 100만 명이 국내피난민
- 수니파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시아파와 비무슬림을 대상으로 폭력을 자행한 IS와 일부 수니파 아랍인의 IS 동조 – 수니파 아랍인과 IS, 이슬람 극단주의 동일시하는 시각 형성
- 야지디인 무장조직, 수니파 아랍인의 신자르 귀환 방해 – 수니파 아랍인 귀환자 납치, 살해, 주택 파괴 등 보복 폭력
- 쿠르드인 페쉬메르가(Peshmerga), 시아파 주도 국민동원군(PMF) 또한 수니파 아랍인에 대한 폭력 동참 사례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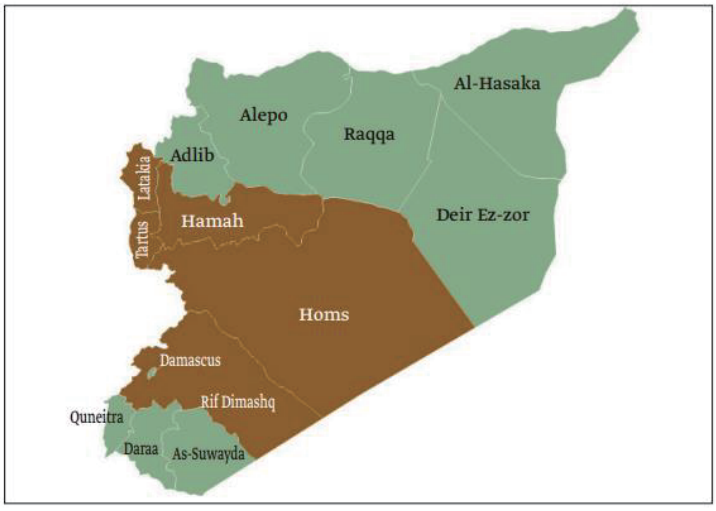
시리아: 다수를 지배하는 소수

- 인구 대다수는 아랍 수니파 무슬림이며, 지중해 해안 지역에 이슬람 소수 종파인 알라위파 거주
- 기독교도, 드루즈파 등 소수 종교 집단
- 동부 내륙 지역은 쿠르드인 다수
- 현재 집권 중인 아사드 정권은 알라위파로, 아사드 정권의 핵심 지지층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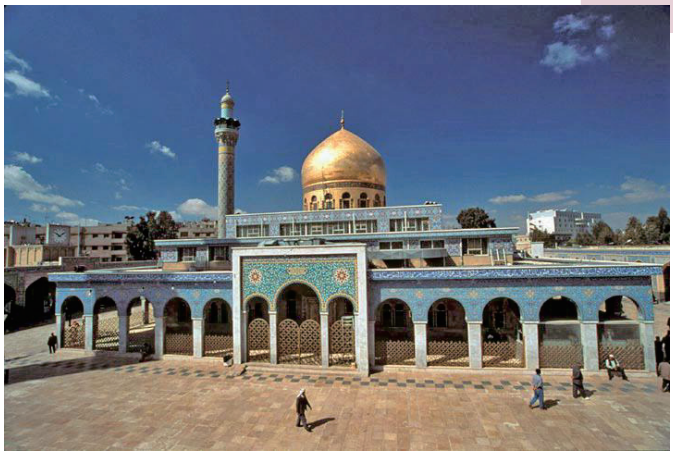
시리아 난민 문제: '쓸모 있는 시리아'

- **'쓸모 있는 시리아(useful Syria)'** – 다마스쿠스, 리프 디마슈크, 홈스, 하마, 라타키야, 타르투스(시리아 전체 영토의 40%, 시리아 전체 인구의 46%)
- 이 지역에서 아사드 정권이 인구 구성을 유리하게 바꾸려는 수단으로서 난민 통제
- 인구 교환 – 수니파 주민 강제 추방과 귀환 방해, 쫓아낸 자리에 반정부 세력이 장악한 지역의 알라위파/시아파 주민 이주



시리아와 인구 구성과 난민 문제

- 도시를 포위하고 수도, 전기, 식량 반입을 차단해 민간인 이주 압박 – 반정부 지역으로 이송
- 주택과 기반시설 파괴, 난민 보유 주택과 토지 몰수, 난민의 부동산 등기서류 파기, 귀환 난민에 대한 구금과 체포,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난민만 수용
- 반정부 세력을 중심으로 시리아의 '시아화'에 대한 의혹 제기 – 시아파 선교 활동, 시아파 신학교 설립, 시아파와 이란/페르시아어 과목 추가, 이란인과 아프간인 등 해외 시아파에게 국적 부여 의혹



결론

-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는 더 건강하고 동질적인 사회가 되었다"(2017)
- **난민 문제의 정치화**
- 이라크에서는 지역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인구 구성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난민 이동과 귀환, 정착 통제
- 시리아에서는 아사드 정부가 국가 재건과 사회 통합 회복이 아닌 정부를 지지하는 동질적인 사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으로 난민 정책 추진
- **다종파-다종교 사회에서의 난민 문제가 미치는 사회정치적 영향 – 종파 정체성에 따른 '우리'와 '타자' 경계 심화, 소수 집단의 정체정 재발견과 각성, 다수 집단과의 괴리와 단절**

[세션#2]
이주배경주민의 거주지 이동과 정주, 그리고 대중 인식

사회
조영희(이민정책연구원)

발표1. 윤수진(서울대)
이주배경주민의 집거지 이탈현상 및 영향요인 분석:
영등포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발표2. 황인혜 · 문은솔 · 김철효(경상국립대)
경상남도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이동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발표3. 한기덕(고려대)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영향요인 연구

발표4. 백양현 · 전대호(서울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연구: 한국사례의 텍스트마이닝 접근법

토론
임성숙(충남대)
고재훈(전북대)

발표1. 윤수진(서울대)

이주배경주민의 집거지 이탈현상 및 영향요인 분석: 영등포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이주배경주민의 집거지 이탈현상 및 영향요인 분석
영등포구 대림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 전공 석사과정 윤수진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

2. 인터뷰
인터뷰 개요
결과 종합

3. 이론적 검토
이론적 배경
분석 종합

4. 결론
잠정적 결론
향후 계획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천·시흥 新차이나타운 되나..대림동 떠난 중국동포 몰려, 왜?

세계일보

입력 : 2024-01-10 09:46:19 | 수정 : 2024-01-10 09:46:18

[르포]"월300만원 준다 해도 사람이 없다"…대림동 떠나 부천·시흥 가는 중국동포

이서희 기자

입력 2024.01.10 07:00 수정 2024.01.10 14:08

아시아경제

중국 동포 40% 증발…코로나 끝난 서울 차이나타운은 '위기 진행형'

뉴스1

구로·대림 인구 올해까지 감소세 지속…서울이 제일 '심각'
높은 집값·조선족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변화 시작됐다"

박기현 기자

업데이트 2022.11.14 오전 08:54

서울 대림동 상가공실 속출...시흥 정왕동 임대매물 실종

이광식 기자

입력 2023.10.25 18:27 수정 2023.10.31 19:44

한경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천·시흥 新차이나타운 되나..대림동 떠난 중국동포 몰려, 왜?

세계일보

입력 : 2024-01-10 09:46:19 | 수정 : 2024-01-10 09:46:18

[르포]"월300만원 준다 해도 사람이 없다"…대림동 떠나 부천·시흥 가는 중국동포

이서희 기자

입력 2024.01.10 07:00 수정 2024.01.10 14:08

아시아경제

중국 동포 40% 증발…코로나 끝난 서울 차이나타운은 '위기 진행형'

뉴스1

구로·대림 인구 올해까지 감소세 지속…서울이 제일 '심각'
높은 집값·조선족 인구구조 변화 등 요인…"변화 시작됐다"

박기현 기자

업데이트 2022.11.14 오전 08:54

서울 대림동 상가공실 속출...시흥 정왕동 임대매물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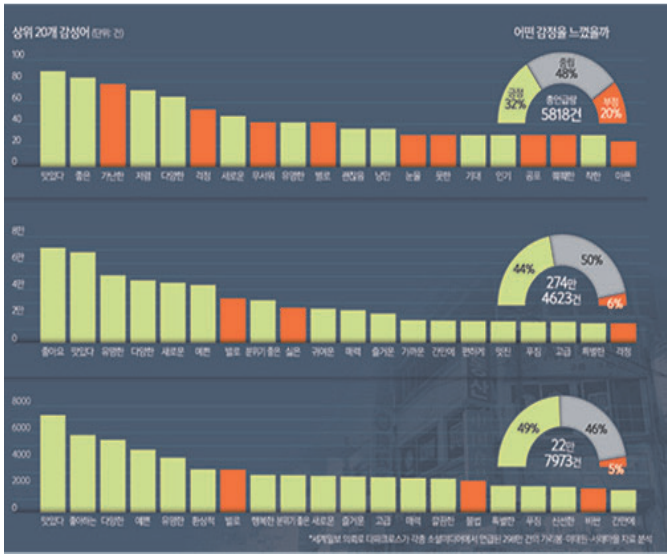
이광식 기자

입력 2023.10.25 18:27 수정 2023.10.31 19:44

한경

왜 이들은 대림동을 떠나는가? (자발적)
무엇이 이들을 떠나게 했는가? (비자발적)

"가리봉선 밤길 조심·서래마을은 맛집 천국"…
외국인 거주지역 두 갈래 시선



세계일보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집거지 이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연구 배경 및 목적

1. 대림동에서 한국계 중국인 유출 정황 확인

등록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대림동의 한국계 중국인 등록 외국인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림2동의 경우 2014년 약 9,900명에서 2023년에는 5,800명으로 40%수준 급감했다.

동별	항목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계
대림1동	계	3,566	3,607	3,441	3,233	3,705	3,447	2,881	2,542	2,348	2,433
대림2동	계	9,897	9,952	9,287	8,701	9,453	8,697	7,367	6,250	5,668	5,819
대림3동	계	4,587	4,788	4,746	4,521	5,042	4,908	4,059	3,591	3,327	3,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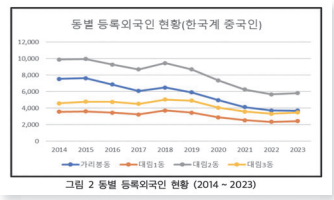


그림 2 동별 등록외국인 현황 (2014 ~ 2023)

"대림동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은 대림동을 초기 정착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한 곳으로 인식하며, 정착 이후에는 대림동을 떠나 자양동, 신촌, 홍대 등지로 진출하고 있다" (고민정, 2019)
"젊은 세대들이 떠난 자리에 새로운 이주민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림동 내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임영상·김용선, 2019)

2. 중국 동포들에게 가해지는 이탈 압력?

이주배경주민의 집중 거주지로부터의 이탈은 기존의 네트워크가 주는 이점을 포기하는 상당히 비용이 높은(costly) 행위라는 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임대료 상승과 낙후된 주거 환경, 한국 내의 배타적인 사회 분위기와 차별 경험 등은 그들이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찾아 이동하게 만드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초기가설)

이탈 현상

대림동 거주 이주배경주민(한국계 중국인)들이 그곳을 떠나고 있는가?

등록외국인 지역별 현황 통계 • 이해관계자 인터뷰

영향 요인

이주배경주민을 떠나게끔 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문헌 검토 •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상 분석

본 현상을 인종 • 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 이론과의 접목

연구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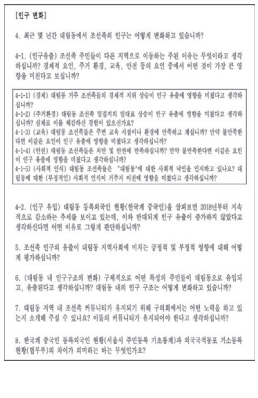
2024년 7월~ 2024년 8월

연구 장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 1, 2, 3동 일대 및 영등포구의회

연구 단위

대림중앙시장 일대 부동산 공인중개사 (3인)
영등포구의원 (1인)
대림중앙시장 일대 상인 (6인)
대림동의 부동산시장과 인구 현황



【인구 변화】

4. 최근 몇 년간 대림동에서 조선족의 인구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4-1. (인구총수) 조선족 주민들이 타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 요인, 주거 환경, 교육, 인권 등의 요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4-1-1) (경제) 대림동 거주 조선족들의 경제적 지위 상승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4-1-2) (주거환경) 대림동 조선족 밀집지의 임대료 상승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칠만요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이를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4-1-3) (교육) 대림동 조선족들은 주변 교육 시설이나 환경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만약 불만족한다면 어떤을 조선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4-1-4) (안전) 대림동 조선족들은 치안 및 인권에 만족하십니까? 만약 불만족한다면 이같은 요인이 인구 유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4-1-5) (사회적 인식) 대림동 조선족들은 "대림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인지하고 있나요?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거주지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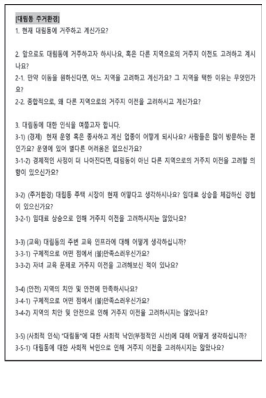
4-2. (인구 추입) 대림동 등록외국인 현황(한국계 중국인)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와 반대되게 인구 유출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5. 조선족 인구의 유출이 대림동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6. (대림동 내 인구구조의 변화)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의 주민들이 대림동으로 유입되고, 유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림동 내의 인구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7. 대림동 지역 내 조선족 커뮤니티가 유지되기 위해 구체화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들의 커뮤니티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 한국계 중국인 등록외국인 현황(서울시 주민등록 기초통계)과 외국국적동포 기초등록 현황(법무부)의 차이가 크다고 하는데, 이는 무엇인가요?



【대림동 주거환경】

1. 현재 대림동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2. 앞으로도 대림동에 거주하고자 하시나요, 혹은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도 고려하고 계시나요?
2-1. 만약 이동을 원하신다면, 어느 지역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그 지역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종합적으로, 왜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시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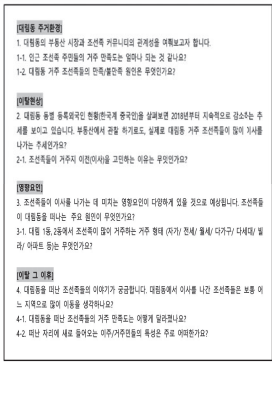
3. 대림동에 대한 인식을 여쭙고자 합니다.
3-1) (경제) 현재 운영 혹은 종사하고 계신 업종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람들은 많이 방문하는 편인가요? 운영에 있어 별다른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3-1-2) 결제적인 시점이 더 나아진다면, 대림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지 이전을 고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3-2) (주거환경) 대림동 주택 시장이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임대료 상승을 체감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3-2-1)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시지는 않았나요?

3-3) (교육) 대림동의 주변 교육 인프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3-1)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우신가요?
3-3-2) 자녀 교육 문제로 거주지 이전을 고려해보신 적이 있나요?

3-4) (안전) 지역의 치안 및 안전에 만족하시나요?
3-4-1)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불)만족스러우신가요?
3-4-2) 지역의 치안 및 안전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시지는 않았나요?

3-5) (사회적 인식) "대림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부정적인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5-1) 대림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거주지 이전을 고려하시지는 않았나요?



【대림동 주거환경】

1. 대림동의 부동산 시장과 조선족 커뮤니티의 관계성을 어떻보고자 합니다.
1-1. 인근 조선족 주민들의 거주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 것 같나요?
1-2. 대림동 거주 조선족들의 만족/불만족 원인은 무엇인가요?

【이탈현상】

2. 대림동 등별 등록외국인 현황(한국계 중국인)을 살펴보면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관찰 하기로도, 실제로 대림동 거주 조선족들이 많이 지사를 나가는 주세인가요?
2-1. 조선족들이 거주지 이전(이사)을 고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영향요인】

3. 조선족들이 이사를 나가는 데 미치는 영향요인이 다양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족들이 대림동을 떠나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3-1. 대림 1동, 2동에서 조선족이 많이 거주하는 거주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다가구/ 다세대/ 빌라/ 아파트 등)는 무엇인가요?

【이탈 그 이후】

4. 대림동을 떠난 조선족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대림동에서 이사를 나간 조선족들은 보통 어느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생각하나요?
4-1. 대림동을 떠난 조선족들의 거주 만족도는 이명겨 달라졌나요?
4-2. 떠난 자리에 새로 들어오는 이주/거주민들의 특성은 주로 어떠한가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부동산 공인중개사, 구의원

A 부동산 (대림2동)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고 현재는 남아있는 동포들이 대부분, **인구 유출에 대해서는 그다지 체감하지 못한다.**
LH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조선족에게 공급되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감소하는 경향
대림동은 음식 진입장벽이 낮고, 중국인 커뮤니티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입국해 적응하기에 가장 수월한 공간이다.
어느 정도 적응 한 동포들은 부천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대림동에 대한 수요는 높은 것으로 보인다."

B 부동산 (대림2동)

"**한국계 중국인 인구가 실제로 감소하고 있는 곳으로 보인다.**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부천으로 이동해 '내 집 마련(매매)'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탈한 사람들의 빈 자리는 지방에서 온 사람들, 즉 국내에서 이동하는 동포들이 채운다.
지방으로 갔다가 일자리를 찾아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경우가 꽤 있으나, 최근에는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중국에서 더 들어오지는 않는 상황이다.
초기 입국자들은 많지 않으며, 이곳을 빠져 나가기 위해 여러 해 거주하며 자산을 축적해야 나갈 수 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알려지고 난 뒤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다."

C 부동산 (대림2동)

"**한국계 중국인 인구가 많이 유출되고 있음을 체감한다.** 가능하면 대림동에서 살고 싶으나, 경제적인 까닭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대림동 집 값이 많이 상승해서 비교적 저렴한 시흥, 부천, 온수, 안산으로 많이 이동한다. 대림동 원룸 가격이 이들 지역의 투•쓰리룸 가격이다.
전에는 생활 터전과 거주 지역이 대림동이었지만 현재의 대림동은 그저 특별한 날 모이는 친목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주 거래 고객도 중국 동포들이었으나, 최근 경기 악화에 따라 대림동에서 공인중개업이 침체기를 겪고 있다.
근방 매입임대주택이 많이 늘었으며 2-3년 전부터 구옥 단독주택 기준으로 100가구 정도가 사라졌다. 터전이 사라진 사람들은 대림동 밖으로 나가는 것 같다."

영등포구의원

"한국계 중국인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공통적인 입장인 것 같다. 주된 도착지는 부천, 광진구 자양동이다.
첫째, 임대료가 너무 높다. 서울에서도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금전적 여유가 없다면 대림동에서 굳이 살지 않는다.
둘째,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싸게 살만한 고급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물이 많이 없다. 빌라나 단독주택을 같은 가격으로 입주할 바에, 개발된 곳의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에 살겠다는 생각이다.
결론적으로, 돈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저렴한 곳을 찾고, 많으신 분은 그들대로 좋은 환경을 찾아가 유출이 된다.
한국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동포들은 이미 다 들어온 것 같다. 1950-60년대 사람들이 정착을 한 거고, 청년층은 들어오고 싶어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해관계자 인터뷰
대림중앙시장 상인

철물점 상인 A씨(한국인)·지인 B씨(동포)

"중국 동포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단속이 나와서 이제 6월 말까지는 그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많이 보냈어."
"(불법체류자 단속) 우리가 물건 이렇게 지금처럼 파는데 경찰이 입구에서 잡는 거야. 시장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

"건설 쪽에 일이 없어. 새 일이 없으면 여기 집세 내고 물가도 비싼데 있을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많이 (돌아)가는 거야."
*"**이제 돈 버는 사람은 이제 부평 쪽 이런 데 오피스텔 이런 데 가지.** 자기가 이제는 (집)살려고 대출도 받아가고 해서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
"식당들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 사람 직원들 월급은 줘야 되고 가게 세는 줘야 되고 그렇다고 직원들을 자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옛날에 대림동에 사람 많았어요. 지금 대림동에 사람이 없어**"*

"나이 든 사람들은 뭐 일도 못하면은 중국 가는 사람 사람도 있고, 우리 골목길만 해도 그냥 여기서 십 몇 년 살다가 그냥 정리하고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나 내일 집(중국)에 가요 그러더라고. 한복집 그 집도 갔지, 그 앞에 사진 집도 갔지. 아예 다 갔잖아."

코스메틱점 근로자 C씨(동포)

*"**그냥 세대(나이)에 상관없이 많이(나)가세요.**"*
"한국에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나의 집은 중국이고 여기는 잠깐 그냥 거쳐갔다 가는 곳이라고 생각…"
*"(인구 유출을 체감한지는) 한참 됐어요. 매출은 코로나 때부터 많이 빠졌고. **이사는 보통 부천이나 인천 쪽으로…**"*

정육점 상인 D씨 (동포)

"정말 솔직하게 알고 싶어요? 여기 절반은 불법체류자예요. 그런 건(길고 강력한 단속) 이번에 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이번 단속에 많은 공을 들여서 엄청 심하게 잡았잖아요. 6월에 공식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많이 잡아갔어요. 그거(단속)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많이 갔어요."
"여기가 언어도 잘 통하고 하니 나가기(이탈하기) 싫으나, 이런 일(단속)이 발생하면 불안감을 느껴서 나갈(이탈) 수도 있겠죠?"

*"(대림동 거주에 대해) 딱히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차피 부평에 집이 있거든요."***
"임대료는 진작에 올라갔죠. 사람들 빠져나가고 빈 집이 생기니까.. 모든 가게 매출이 다 줄어들었을 거예요."

이해관계자 인터뷰 종합

1.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대림동 내 중국동포 인구 유출이 실제로 진행중이라고 답했다.
2. 대림동을 떠난 동포들은 인천(부평), 경기도(시흥·안산·평택), 부천(온수·개봉·중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림동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나 선호도는 현재 주민들의 유입 및 이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통계로 잡히지 않았지만 6월 진행된 대규모의 불법 체류자 단속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과

- 이해관계자 인터뷰를 **대림동 내에서 중국 동포 인구가 실제로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기존에 예상했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축출" 외, **경제적 지위 상승으로 인한 이탈, 매입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축출, 불법체류자 단속으로 인한 추방,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의 요인이 존재했다.
- 연구범위 확장 (**대림동을 떠난 한국계 중국인 주민들, 부천/시흥/안산/평택의 공인중개사, 청년층**) 가능성

발전 방향

- 대림동 내 불법체류자의 권리보장 문제와 이주민 축출
-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계 중국인 이탈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변화 (경제 구조, 주민 커뮤니티, 인구구조)
- 대림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신경 쓰지 않는 현상 - '차별에 대한 내재화' 혹은 '세대별 차이' 탐구

이론적 배경

이주민의 공간적 분리

- 주거지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은 **특정 소수 민족이나 인종의 거주 패턴이 공간적으로 집중 및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간적 분리는 경제·사회·문화적 분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짐(하성규 외, 2011).
- 주거지 분리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유럽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데, 이러한 상이성은 **지역별 상황과 이민자 구성에 따라 공간적 분리의 원인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함(하성규 외, 2011).
  - Zorlu and Mulder(2010)
    - 미국 사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소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선호(preferences)와 주류 집단으로부터의 차별이 주거지 분리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가장 흔하게 언급되고 있음
    - 반면, 유럽 도시를 다루는 사례 연구들에서는 소수 그룹이 받는 차별이 크게 부각 되지않았으며, 인종간 문화적 차이와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린 이민자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이 주거지 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음
- 이주외국인으로 이루어진 소수집단은 공간적으로 분리-집중된 밀집 주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현상은 이주국에 동화되기 위한 일부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됨에 따라 점차 완화되는 것으로 알려짐(Jun et al., 2013).
- 이주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돼 그들만의 거주지를 형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주국에서의 정착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임(하성규 외, 2011).
- 외국인 주거지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이미 형성된 밀집지역에 새로운 외국인이 유입되는 현상에서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강조함 (김희철·안건혁, 2011; 이진영·남진, 2012; Jun et al., 2013).
-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한 주거지 분리는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하고, 주류사회로부터의 차별을 방어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설명되기도 함(Pacione, 2001).
-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는 사회자본 형성·구성원 간 유대 강화·주류사회의 편입을 돕는 긍정적 기능을 함과 동시에, 주류 집단과의 갈등을 야기해 이주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하는 부정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하성규 외,2011).

이주민의 공간적 분리

주거지 분리가 자발적(voluntary)인지 비자발적(involuntary)인지 고려해 볼 필요성
-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주로 소득, 취향(선호), 주택 관련 정보의 영향, 특정 집단 혹은 인종(ethnic)에 대한 편견과 차별, 종교 등의 영향인지 규명해야 함(하성규 외, 2011).

- 대표적인 예로서 '조정'(steering), '지역지위 강등'(blockbusting), '특정경계지역 지정'(redlining) 등의 차별적·배타적 행위와 관행에 의해 주거지 분리가 나타남(하성규 외,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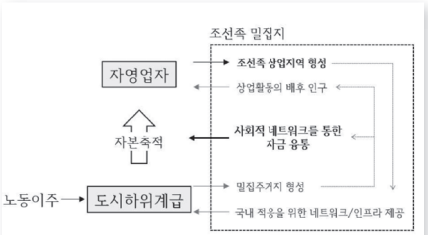
- 주거지의 분리현상이 부정적 기능뿐만 아니라 긍정적 기제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논증하는 연구 결과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하성규 외, 2011).
  - 소수민족의 주거지 분리현상은 사회적 소수자가 생존하는 방식으로서 고립된 자신들의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류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Krivo, 1995).
  - 주거지의 분리는 고용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소수민족에게 이점이 있으며(Bayer et al., 2006),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하성규 외, 2011).

- Massey and Denton(1988)의 공간적 분리 측정:
  - 특정 집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균등성(evenness)**
  - 다른 집단과의 접촉 용이성에 관한 지표인 **노출성(exposure)**
  - 상대적 공간 점유 비중을 나타내는 **집중성(concentration)**
  - 유사한 집단이 어느 정도 모여 있는지에 대한 **군집성(clustering)**
  - 상이지수: 분리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속성들 중 균등성을 가장 충실히 반영한 지표로, 특정 집단이 비교집단의 분포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측정

대림동이라는 공간

- 외국인 밀집지(ethnic cluster)란 **공간상에서 이민자 그룹의 지리적 집중을 표현하는 포괄적 용어**(Pamuk, 2004).
  - '외국인이 거주국의 주류사회에 편입되지 않고 상호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발전된 공간으로, 공간적으로 특정지역에 동일 국가 출신자들이 밀집해 거주하면서, 음식점, 상가 등 연관 인프라가 형성되고 사교활동과 정보교환의 중심지로 기능하는 지역'을 의미함(이갑호, 2007: 이석준·김경민, 2014에서 재인용)

- 이석준·김경민(2014): 서울시 내 각 밀집지 간의 비교분석을 시행, 행정동을 밀집지의 경계로 삼아 연구 진행함
  - 주거측면에서는 조선족들의 입지시기 및 배경, 거주자 특성차이, 인구밀도 및 분포특성, 주거 환경을 비교 항목으로 설정
  - 대림2동의 동포들은 주로 한국인 주인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의 반지하나 옥탑방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음
  - 한국계 중국인 밀집지의 성장을 평가하는데 있어 서는 '음식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 밀집지에 대한 도시·경제·사회적 맥락을 간과한 채 조선족 밀집지가 입지한 도시 내 낙후·쇠퇴지역에 철거 재개발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역이 가진 가능성을 상실함과 더불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그림 6〉 조선족 음식점 개업과 조선족 밀집지의 관계

이석준·김경민 (2014)

- 대림2동은 구로공단 인근에 위치해 주변 제조업 노동 수요가 있었으며, 대림역과 구로디지털단지역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을 통해 강남을 비롯한 서울 전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해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임. 또한, 저층 주거지의 반지하 방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확보가 가능했음(이석준·김경민, 2014).
  - 대림동의 경우 가리봉동에서 확장된 경우로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조선족의 이동이 있었으며, 가리봉동이 자양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시하위계층 집적지적 성격이 더 강함.

- 서남권 지역이 처한 위협 요인 중 하나는 한국인 선주민의 이탈로 인한 지역주민의 감소임(오정은, 2016).
  - 서남권 지역은 서울시 타 지역에 비교해서 인구이탈로 인한 인구감소가 빠른 곳이지만, 중국동포의 유입이 다른 지역보다 많아서 그나마 인구감소의 속도를 늦추고 있는 실정임. 선주민의 이탈은 이 지역이 외국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게토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갖고 있음.
  - 전통적으로 공단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쪽방과 같은 열악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중국 동포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내국인이 방문하기에 치안이 불안하거나 낯선 환경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존재함.

- 노동시장의 변화나 국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외국인 주거의 공간적 분포도 변화될 수 있음. 노동시장의 분화나 교육기회의 차별화가 이주민 국적과 맞물려 사회통합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하성규 외, 2011).

한국계 중국인 (동포)

- 생산연령인구가 아닌 유소년 및 고령인구의 국내 이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한국이민정책연구원, 2019).
  - 중국으로부터의 인구유입 현상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됨.
  - 특히 유소년과 고령인구의 유입에 대비하는 정책적인 준비(학교 환경과 교육시스템 정비, 병원 시스템 확충)가 이루어져야 함.

- 중국동포가 대림2동에 집중 거주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부동산 서비스' 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이정현·정수열, 2015).
  - 대림2동의 부동산소개소들은 중국동포에게 저렴한 월세, 전세 및 자가주택을 안내하면서 정착을 유도함.
  - 동포들이 저렴한 거주공간을 찾을 수 있고, 가족과의 생활도 가능했기 때문에 동포들의 유입이 계속되어 최대의 중국동포 밀집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

- 서남권 거주 중국 동포들은 자신들의 거주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도시계획 정책이 미흡하거나, 사업 시행 좌절에 대한 패배감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떨어진다고 주장함(오정은, 2016).
  - 20대 동포 여성은 지역에 노후된 건물들이 재개발되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한편, 재개발이 되면 임대료가 인상되어 지역을 떠나야 될지 모른다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임.

- 중국동포단체 임원 집단 인터뷰 결과, 이들은 **주류사회로의 진출 및 통합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신분상승의 욕구가 강한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면 대림동과 가리봉동을 떠나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있음(오정은, 2016).
  - 신분상승에 실패하고 거주이전을 하지 못한 중국동포들은 밀집지역에 남아 주류사회와 고립된 커뮤니티를 만들 가능성도 있음.
  -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한 인식과 거주지 이동의 가능성은 중국동포의 계층에 따라 상이한 패턴을 띠는 것으로 보임.

- 하성규 외(2011): 읍면동 단위에 통계자료에 기초해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 패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함. 특히 구 내 전체 외국인 거주자 중 특정국적의 외국인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가 국적별로 다른 특성이 있음을 보임.
  - 서울 서남부 지역(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에서 한국계 중국인의 상대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외국인 국적과 체류자격에 매우 긴밀한 상관성이 있음 - 서남부지역의 경우 단순 비전문인력의 경우 고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서울시 내 외국인 주거지 분리정도가 0.5 이상인 곳이 많이 있었으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해당함.

거주지 분화 이론 정수열 (2008)

동화론 (spatial assimilation framework)	층화론 (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	민족성론 (resurgent ethnicity framework)
❍ 시카고 도시생태학에 뿌리를 두는 지리적 동화론은 거주지 분화가 소수민족집단이 주류사회에 동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본다(Massey, 1985).	❍ Logan and Molotch(1987)가 주장한 층화론은 거주지 분화가 주택시장에서 인종·민족적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차별적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 향상된 여건에도 불구하고 왜 거주지 분화는 여전히 유지되는가? 이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 '민족성론'이다. 민족성론은 거주지 분화의 주된 원인이 거주지 선택에 있어 인종·민족적 선호라고 주장한다.
❍ 동화는 이주국에서 소득이나 교육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적 지위에 의해 측정되는 '구조적 동화'와 이주국 언어 습득정도와 체류기간으로 측정되는 '문화적 동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Gordon, 1964).	❍ '조정(steering)','지역 지위 강등(blockbusting)','특정 경계지역 지정(redlining)'과 같은 차별적 관행들은 인종·민족적 편견에 기반해 주택시장을 분절시키고 해당 집단들을 특정장소에 한정되어 거주하게끔 한다.	❍ 민족성론은 혼주가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과 주택시장에서 차별적 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종·민족적 선호가 거주지 분화를 존속시킨다고 주장한다.
❍ 동화론은 한 집단의 거주지 분화의 정도는 구조적·문화적 동화의 정도와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그 집단이 이주국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하고, 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 부를 쌓으면 다수민족집단과 혼주(residential integration)하게 될 것이라 본다(Massey and Denton, 1985).	❍ 결과적으로 차별받는 소수민족집단은 전체 시장에서 질이 낮은 주택들만을 소비하게 되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나아지더라도 다수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보다 나은 주거지로 이동하지 못한다. 층화론은 구조적 제약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소수민족집단 혹은 그 구성원의 선택에 집중한 동화론과 대비된다.	❍ 거주지 선택에 있어 자기민족에 매력을 느끼는 반면 특정 타민족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데, 이들이 결합되어 자신의 거주지의 인종·민족 구성에 대한 특별한 선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 최근 주거환경이 좋은 교외로 떠나는 소수민족집단의 이주를 동화의 지리적 결과물로 해석한다. 나아가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는 종국적으로 소멸하고 소득별 거주지 분화만 남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한다(Farley and Frey, 1994; Hwang and Murdock, 1998).	❍ Galster(1987)는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소수민족집단이 주택을 구매 혹은 임대함에 있어 가격/융자, 매물정보획득, 자격심사에서 차별당하고 있음을 보였다.	❍ 교외 집단거주지는 낮은 사회경제적지위 때문에 강요된 전통적 개념의 이민자 집단거주지(immigrant enclave)라기 보다는, 동일 민족 선호에 따른 지역공동체(ethnic community)라 할 수 있다.
❍ 한편, 소수민족집단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이 필연적으로 다수민족집단과 혼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Darden and Kamel, 2000).	❍ 부동산중개업자가 차별적 관행을 행하는 근원적 이유로 사회에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혼주에 대한 거부감을 들 수 있다. 주택판매자는 그러한 사회적 공감대에 순응해 동일 민족 구매자를 찾으려 하고, 소수민족 주택 구매자는 그러한 관행을 뛰어넘지 못하고 동일민족 집단 거주지를 선호하게 된다.	❍ 민족성론이 함의하는 공간적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새로운 이민자로 도심의 전통적 집단거 주지가 포화상태가 되어 지리적으로 팽창하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이다(Allen and Turner, 1996a, 153) 둘째, 새로운 이민자가 지인 곁으로 정착하는 연쇄이민(chain migration) 셋째, 새로운 이민자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분에 도심의 전통적인 집단거주지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교외에 정착할 수 있다(Allen and Turner, 1996a, 152; Allen and Turner, 1996b).
❍ 전통적 지리적 동화론을 수정한 '분절된 동화론(segmented assimilation)'에서는 한 소수민족이나 그 구성원의 동화에는 다음의세 가지 다른 경로가 있다고 주장한다(Portes 1995; Portes and Rumbaut 1996; Zhou 1997). 첫째는 주류사회의 가치를 받아들여 중산층으로 편입되는 것이며, 둘째는 동화에 실패하여 하층민으로 전락하는 것이고, 셋째는 동일민족집단 사람들과 유대를 지속하며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켜가는 것이다(Wright and Ellis, 2000).	❍ 차별 관행과 거주지 분화는 근린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그 정도에 차이가 난다(Farley and Frey, 1994; Wilkes and Iceland, 2004). ❍ 주택융자업자에 의한 특정 경계지역 지정은 특정 경계지역 지정은 모기지 대부 여부가 지원자 개인의 신용이 아닌 구매하려는 주택이 속한 근린의 사회경제적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칭하며, 이는 특정 지역에 저투자를 낳아 급속한 주거 환경의 쇠락을 초래한다.	❍ 이상의 과정은 두 종류의 양극화된 집단거주지가 한 도시에 공존할 수 있음을 뜻하는데, 도심에는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가진 이민자를 흡수하고 팽창하는 전통적 의미의 쇠락한 집단거주지(enclave)와 교외에는 이민 후 사회경제적성공을 이룬 사람과 본국에서부터 높은 경제적 지위를 가진 새로운 이민자가 거주하는 신 집단거주지가 있을 수 있다.

이론적 배경

거주지 분화 이론

동화론 (spatial assimilation framework)	층화론 (place stratification framework)	민족성론 (resurgent ethnicity framework)
계급 X 문화	계급 < 문화	계급 X 문화
행위주체 > 구조	행위주체 < 구조	행위주체 > 구조

잠정적 결론

2018년 이후 대림동에서 관측된 이주배경주민(한국계 중국인)의 인구 감소

자발적 요인

- 경제적 지위 상승
- 더 나은 주거환경
- 주류 사회로의 편입

비자발적 요인

- LH 매입임대주택
- 불법체류자 단속
- 일용직 일자리 감소
- 코로나19
- 임대료 상승
- 정치적 긴장

동화론 | **층화론** | **민족성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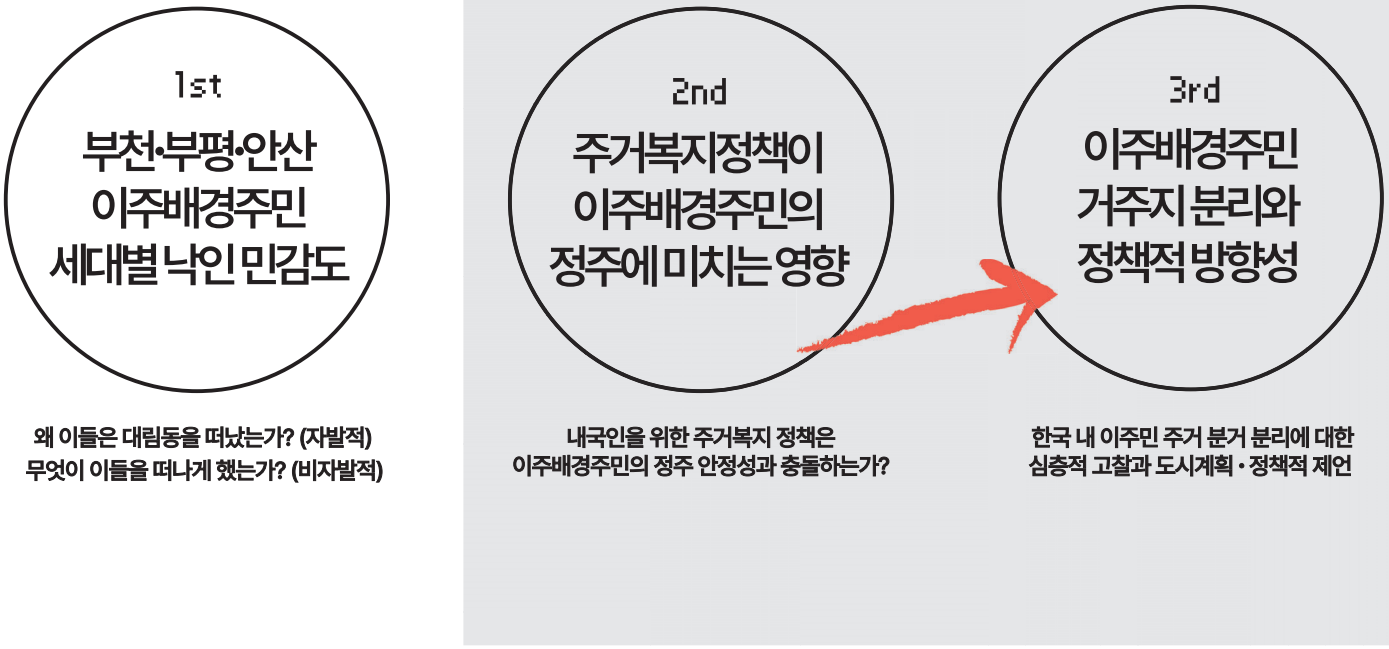
'행위주체의 지위 상승' AND '이주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내몰림'의 이중 작용

향후 계획

불법체류자 단속
건설경기 악화
LH 매입임대주택
부평·부천·본토
코로나19
임대료 상승
일용직 일자리 감소
생활인구
주중/주말 차이
한-중관계
체류비자
열악한 주거환경
편리한 교통
사회적 인식

향후 계획

향후 계획



참고문헌

- 김용선, 임영상. (2018). 서울 서남권 중국동포타운과 동포단체. 재외한인연구, 45, 153 - 186.
- 박경숙, 이창원, 강미선. (2019). 중국동포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이민정책연구원 정책보고서, 19(4).
- 박윤환. (2011). 빈곤층과 외국인 주민 거주지분리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연구. 서울도시연구, 12(4), 103-122.
- 백일순. (2018). 외국인 주택 시장과 초국가적 주택 여과 과정: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1(4), 370-392.
- 윤진희, 권오규, 마강래. (2014). 서울시 중국국적외국인의 주거지 분포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6(2), 39-54.
- 이석준, 김경민. (2014). 서울시 조선족 밀집지 간 특성 분석과 정책적 함의. 서울도시연구, 15(4), 1-16.
- 정수열. (2008). 인종·민족별 거주지 분화 이론에 대한 고찰과 평가 -미국 시카고 아시아인을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3(4), 511-525.
- 정수열, 이정현. (2014). "이주 경로를 통해 살펴본 출신국가별 외국인 집중주거지의 발달 과정: 서울시 대림동 소재 중국 국적 이주민을 사례로-. 국토지리학회지, 48(1), 93-107.
- 진현경. (2022).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의 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중국 동포와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5(1), 115-146.
- 최병두. (2010). 외국인 이주자의 지역사회 적응과 지리적 지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3(1), 39-63.
- 한성미, 임승빈. (2009). 소수민족집단체류지역(Ethnic Enclave)으로서의 옌볜거리의 장소성 형성 요인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6(6), 81-90.
- 하성규, 마강래 and 안아림. (2011). 서울시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적 분리패턴에 관한 연구. 서울도시연구, 12(3), 91-105.

발표2. 황인혜 · 문은솔 · 김철효(경상국립대)

경상남도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이동 경험에 관한 사례연구

경상남도 한부모가정 결혼이주여성의 국내이동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이민학회

발표자: 황인혜

경상국립대학교 김철효, 서보경, 문은솔, 백지인, 황인혜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 이온유

CONTENTS

(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2) 연구 참여자 소개

(3) 선행연구 검토

(4) 개념 및 관점 정립

(5) 연구참여자의 취약 경험

(6) 국내 정착 경험의 단계

(7) 이동경로의 발생원인별 유형
원인별 유형 / 지역 특징별 유형

(8) 결론 및 요약

p. 1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 기존 연구의 한계

- 국가 주도의 '사회통합' 또는 일방적 동화, 사회복지 수혜의 대상으로만 논의
- 자유로운 이동의 주체로 인식 x
-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는 국내에서의 이동성에 대한 논의 저조
- 이주경험을 출신국에서 도착국으로의 국제적 이동으로 한정지음으로써 전체 이주 경험을 축소

1. 이주여성이 국내에서 이동성을 띄는가?
2. 만약 그렇다면 이주여성은 어떤 이유로 국내에서 이동하는가?

p. 2

연구 목적 및 연구 질문

- 연구 과정: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경험에 대한 구술에서 시작

→ 국내 이동 경로가 이들의 취약성·불안정성 경험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으로 발전

- 연구 방법: 참여연구 패러다임 (2024년 6월~11월, 7명의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 및 구술 자료 채록)

이주는 그 자체만으로 이동 역량(capability)과 열망(aspiration)을 담은 표현

→ **이주 맥락 전반**을 고려하고자 질적연구로 진행

그중에서도 그들이 가진 **주체성**까지도 곡해 없이 받아들이고자 참여연구 패러다임 채택

p. 3

연구 참여자 소개

연구 참여자	출신	연령대	결혼-이혼연도 (혼인 유지 기간)	결혼 과정	혼인 상태 (동거 가족)	취약 경험
A	베트남	30대	2013~2019 (6년)	결혼중개업	이혼 1회 (자녀 3명)	폭력, 폭언
B	필리핀	40대	2004~2018 (14년)	교회	이혼 1회 (자녀 2명)	폭력, 폭언, 무관심, 통제, 전 배우자가 집 찾아옴
C	베트남	30대	2011~2018 (7년)	결혼중개업	이혼 2회 (자녀 3명)	폭력, 폭언, 성폭력, 젠더 권력 기반 강압, 인종차별
D	베트남	30대	2010~2015 (5년)	결혼중개업	이혼 1회 (자녀 2명)	폭력, 국적 취득 반대, 쉼터 찾아와 폭력, 젠더 권력 기반 강압,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자립 고민
E	중국	40대	2002~2021 (19년)	지인 소개	이혼 1회 (자녀 2명)	(경제, 문화, 생활) 통제, 배제, 폭력, 폭언, 협박, 이혼 후 스토킹
F	태국	30대	2016~2020 (4년)	연애결혼	이혼 1회 (자녀 1명)	방치
G	베트남	30대	2012~2019 (7년)	결혼중개업	이혼 1회 (자녀 1명)	방치, 고립

p. 4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자가 **국제이동과 국내이동** 중 어디에 주안점을 두는가에 따른 분류

- 국제이동에 초점: 다양한 국제이주 실천 사례를 통해 역동적인 이주 현상을 주목 / 박경환 외(2023), 박준영(2023)
- 국내이동에 초점: 주로 로컬리티와 연결 짓는 케이스 多 / 문재원 외(2011), 이득재(2011)

2) **이동성(mobility)**을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른 분류

- 긍정적 역량: 이주민들의 이동성을 주체성이나 실천성과 연관 / 정수열 외(2021), 박준영(2020)
- 취약성과 연관: 이동성을 취약성과 연관 / 정은주(2017), 최강화(2023)

p. 5

개념 및 관점 정립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불안정성(precariousness)과 취약성(vunlerability) (Butler 2004)

- '취약 경험이 이주여성의 국내 이동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가?'를 분석

유발-데이비스(Yuval-Davis) : 상황적 교차성(sitated intersectionality) (Yuval-Davis 2015)

- 이주여성이 본질적으로(essentialism) 취약한 계층이라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함.

이혼 ≠ 취약성

- 이혼이라는 해방적 선택이 적극성과 주체성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p. 6

연구참여자의 취약 경험

- 가정 내 남성중심적인 권력 구조
- 물리적 폭력, 폭언, (경제, 문화, 생활 측면) 통제, 성폭력, 방치, 고립, 인종차별, 경제적 착취, 젠더 권력 기반 강압, 가정 소홀 등 다양한 취약성과 불안정성 존재

→ 물리적 폭력, 폭언, 성폭력, 인종차별, 통제, 방치, 고립, 경제적 착취로 유형화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보고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발간한 책 참고)

p. 7

국내 정착 경험의 단계

1. 남편이 살던 집: 첫 국내지역 정착

1. 첫 국내지역 정착: 기존에 남편이 살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경우

1) 남편과 둘이 살면서 바로 아이를 낳아 키우며 시작한 경우 (연구참여자 A, B, C, E, G)

2)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연구참여자 F, D)

연구참여자 C: 배우자와 둘이 생활했기에 주변에 아이를 맡길 수 없는 환경 → 경제활동에 지장

연구참여자 D: 치매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아이를 임신했고, 배우자로부터 폭력까지 경험

연구참여자 G: 처음 살았던 집은 결혼 전부터 남편이 혼자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살기에는 한계

p. 8

국내 정착 경험의 단계

2. 여성쉼터 및 지인의 집: 폭력 피해 경험 후 임시 정착 / 3. 자립: 진정한 정착

2. 여성쉼터: 폭력

-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에서 이혼 소송 관련 도움 + 이혼 이후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

3. 자립: 진정한 정착

- 자신 소유의 집에서 오는 안정감 / 혼자 나가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이동경로의 원인별 유형

연구 참여자	이동 경로
A	**진주시 문산읍 (여성쉼터 → 투룸 → 여성쉼터 → LH빌라 원룸)**
	결혼 전부터 남편이 농사하며 살던 거주지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쉼터로 이동, 쉼터에서 가정 유지를 위한 노력 → 원래 살던 집으로 재이동 → 폭력 재발생으로 쉼터 재방문 후 이혼 → 자립, 현재 다른 집을 알아보는 중
B	**충청남도 천안시 → 진주시 상대동**
	배우자의 직장 근처, 결혼 전부터 남편이 살던 거주지 →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센터가 있는 진주로 이동
C	**진주시 하대동(아파트) → 진주시 금산면(아파트) → 진주시 하대동(아파트)**
	배우자의 직장 근처, 결혼 전부터 남편이 살던 거주지 →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집 파손, 경제적 이유로 이사 선택 → 자녀의 학교를 위해 이사

연구 참여자	이동 경로
D	**하동군 하동읍(아파트) → 하동군 하동읍(원룸)→ 진주시 문산읍(여성쉼터)**
	치매 시어머니와 함께 생활 → 남편의 폭력을 피해 이동 → 남편의 폭력을 피해 타지역 이동을 결심, 쉼터가 있는 진주로 이동 → 쉼터에서 자립
E	**경기도 고양시(주택-월세) → 진주시 장재동(주택) → 진주시 하대동(아파트)**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살던 거주지 → 이혼 조건으로 시댁이 있는 진주로의 이동 요구 → 독립 후 자녀 양육
F	**진주시 옥봉동(빌라-자가) → 진주시 금산면(여성쉼터) → 진주시 상대동(지하 원룸) → 진주시 상대동(빌라 원룸)**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배우자의 거주지 → 이혼 재판기간 동안 쉼터에서 거주 → 지하 원룸을 저렴히 구함(자녀 어린이집 원장선생님 집 지하) → 자녀에게 문제 발생(아토피)
G	**서울 구로구(원룸) → 대구 남구 대명동(주택)→ 진주시 상대동(주택) → 진주 상대동(빌라)**
	결혼 전부터 배우자가 살던 거주지 → 이혼 직전 1년 정도 지인 집에 거주 → 이혼 후, 부모님의 하우스와 지인이 거주하는 진주로 이동

이동경로의 원인별 유형

1. 결혼 생활 중 배우자 폭력 경험과 이동 2. 적극적 선택과 의지에 따른 이동

1. 배우자 폭력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연구참여자 A, B, D, E, F)

1) **개인적인 힘**으로 집을 구해 이동하는 유형

1.1) **같은 행정구역** 안이더라도 배우자와 다른 공간에서 살기 위해서 다른 집을 구해 이동하는 유형

1.2) 이주여성이 개인적으로 가진 이주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다른 지역**으로 벗어나는 유형 (연구참여자 D, E, G).

2) **보호시설**의 힘을 빌려 이동하는 유형

2.1) 여성쉼터에 도움을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며 거주지 이동 (연구참여자 A, D, F)

2.2) 아이들을 배우자의 폭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폭력센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 (연구참여자 B)

이동경로의 원인별 유형

1. 결혼 생활 중 배우자 폭력 경험과 이동 **2. 적극적 선택과 의지에 따른 이동**

2. 적극적 선택과 의지에 따른 이동

1) 전 배우자에게 현재의 거주지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D)

2) 배우자의 위협을 피해서 다른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A, B, E, D, F)

3)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인프라 부족을 체감하여 더 나은 생활터를 찾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C)

4) 거주지의 형태가 지하 원룸이라 자녀에게 아토피 등의 문제가 생겨 더 나은 집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구참여자 F)

이동경로의 **지역적 특징 유형**

1. 광역 이동 2. 행정구역 내 이동

1. 광역 이동 (전국지도 기준 연구참여자 이동 경로)

1) 서울-대구-진주 (참여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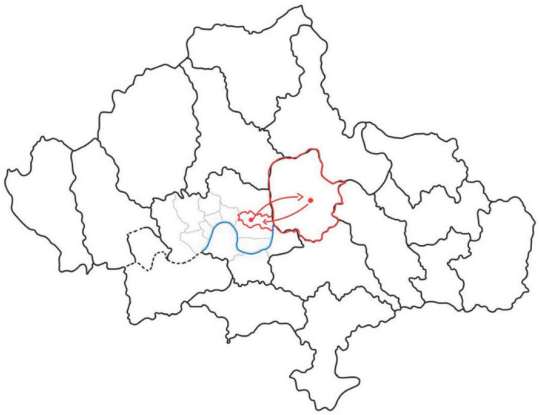
2) 천안-진주 (연구참여자 B)

이동경로의 **지역적 특징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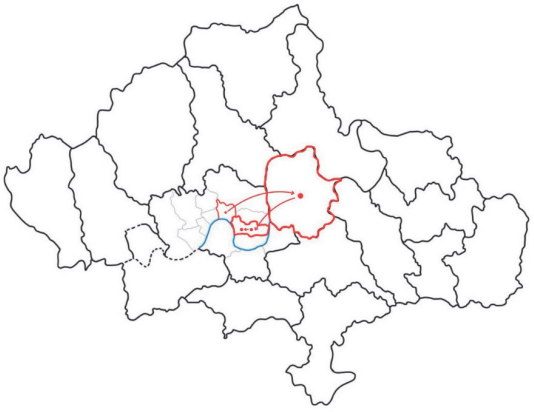
1. 광역 이동 **2. 행정구역 내 이동**

2. 행정구역 내 이동 (진주시 기준 연구참여자 이동 경로)

1) 진주시 하대동-금산면-하대동 (연구참여자 C)



2) 진주시 옥봉동-금산면-상대동-상대동 (연구참여자 F)



결론 및 요약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

1) 배우자 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는
2) 한부모 이주여성으로서
3)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4) 국내 이동 경험이 있는 자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

1) 배우자 폭력의 피해가 가족 해체로 직결
2) 해당 과정에서 여러 차례 국내 이주 발생

1) 연구참여자들의 이동성을 단순하게 박해를 피하기 위한 강제 이동으로 설명할 수 없음
2) 역량과 열망, 기회의 추구를 위해 행동하는 행위 주체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음
3) 이동성에서 회복탄력성을 읽어낼 수 있음

이주여성의 **이동성**이 **취약성**과 **주체성** 사이의 양가적인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음

참고문헌

- 이장미. 2023. 「국내 아프리카 대륙 출신 이주민의 이주와 정착과정에서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 그레이스 정. 2020. 『한국가정과 다문화가정 내 배우자 폭력의 유형 및 특성 비교 연구』. 집문당

- 문재원, 박배균, 박영균, 윤인진, 이현석, 장세룡, 차철욱, 문재원. 2011. 「이동성(mobility)과 로컬리티」. 《로컬리티 인문학》, (6), pp.3-44.

- 박경환, 이재열. 2023. 「기후-이주연계에 관한 비판적 고찰: 기후난민, 적응전략으로서의 기후이주, 그리고 기후 모빌리티까지」.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9(4), pp.428-447.

- 박준영. 2020. 「재외 한인 이주 사회 여성 주체의 등장: 인도네시아 한인 여성 활동가 모빌리티 차별, 네트워크 자본 배제 극복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10(2), pp.107-141.

- 이득재. 2011. 「공간, 계급, 그리고 로컬리티의 문화」. 《로컬리티 인문학》, (6), pp.205-244.

- 정수열, 정연형. 2021.「국내 북한이탈주민의 모빌리티 역량과 이주 실천」.《대한지리학회지》, 56(6), pp.567-584.

- 정은주. 2017.「이주 공간 연구와 이주민 행위주체성(agency)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비교문화연구》, 23(2), pp.145-185.

- 최강화. 2023.「이주민의 순이동률 변동에 대한 국가취약지수의 영향 분석」.《HOMO MIGRANS》, 28, pp.76-95.

- Butler, Judith. 2004a. Precarious life: The powers of mourning and violence. London: Verso. 양효실 역(2008).《불확실한 삶》,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Hein de Haas, Stephen Castles, Mark J. Miller. 2020.『The Age of Migration』. RED GLOBE PRESS.

- Isabelle Bertaux-Wiame.「The Life history approach to the study of internal migration 」. 1979,《ORAL HISTORY SOCIETY》, 7(1), pp.26-32.

- Jane Freedman, Nina Sahraoui, Evangelia Tastsoglou. 2022.『Gender-Based Violence in Migration: Interdisciplinary, Feminist and Intersectional Approaches』. Palgrave macmillan.

- Yuval-Davis, N. 2015. Situated Intersectionality and Social Inequality. Raisons politiques, N° 58(2), 91-100. https://doi.org/10.3917/rai.058.0091.

한국이민학회

감사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혜, 김철효, 이온유, 서보경, 문은솔, 백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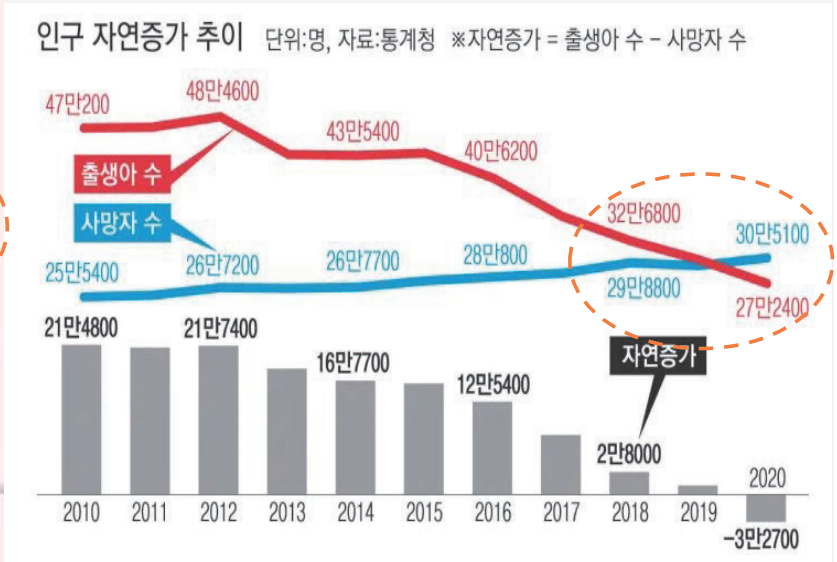
발표3. 한기덕(고려대)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영향요인 연구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한 탐색적 연구

한 기 덕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01 서론



- 인구구조변화 ⇨ 노동력 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지역불균형, 지방소멸 ····

I. 서론
연구 배경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지자체 '행정통합' 바람 거세진다

입력 2020-08-18 17:26:54 수정 2020.08.18 17:26:54 손성락 기자

출산율 감소 따른 소멸위험 막고
정책효율 제고·행정력 낭비 방지
군위군의회, 대구로 편입 동의
목포-신안은 내달 실무위 꾸려
대구·경북도 공론화 과정 착수

행정통합 추진·검토 중인 지방자치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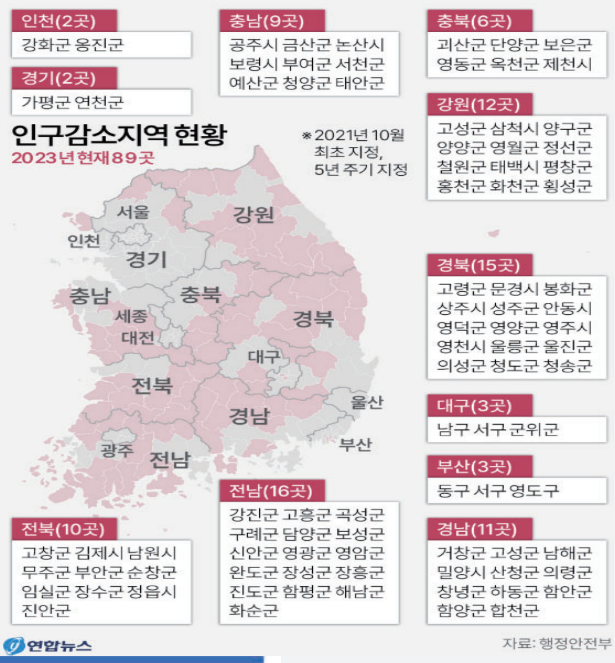
대구시·경북 군위군 군위군의회, 대구 편입 위한 관할구역 변경 의견 청취안 통과

대구시·경북도 내달 대경연구원에 공동사무국 설치, 통합에 대한 공론화 과정 진행

전남 목포시·신안군 양 단체장 통합 합의, 내달 실무위 구성해 통합 준비 착수

대전·세종시 허태정 대전시장 통합 제안, 세종시는 '논의가치 없다' 는 입장

자료: 각 지자체



군위가 대구 편입에 적극적인 것은 소멸위험 때문이다. 지난해 말 한국고용정보원 집계에서 군위의 소멸위험지수는 0.143으로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소멸 위험이 가장 높았다

자연적 인구감소(출생&사망) / 사회적 인구 감소(인구유출)

국가수준에서의 인구구조변화는 출생과 사망으로 비롯된 '자연적 인구감소'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치나,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지역간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적 인구감소'가 매우 결정적인 영향(이상호, 2018: 10)

지역 인구 확보 방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3), 지방소멸대응기금(2019) ····

I. 서론
연구 배경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제4차 인구정책 TF」, 「제4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2023-2027)」

- 여성 / 고령층 / **외국인 인력**

⇨ 인구감소·지역소멸지역으로의 적극적인 이주배경주민(이주민) 유치 및 현재 거주 중인 단기 체류유형의 이민자들을 장기 정주화 방안 등 적극적 이민정책이 중요 이슈로 부상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숙련기능인력 추천제도, 계절근로자 제도 등)

⇨ 출생, 사망과 함께 이민은 지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기여하는 3대 요소, 다수의 이민자수용국가에서 자국의 인구의 양과 질을 조절하는 중요 수단 (오정은, 2021:96)

⇨ 1) 지역사회의 평균 보다 낮은 연령, 2) 지역의 정책적 수요에 따라 유입 규모 조절 가능, 3)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 ····

⇨ 캐나다, 호주, 영국 등 선발 이민국가에서 특정 지역 내 정주 이민정책 시도 (박민정 외, 2022)

9월부터 외국인노동자, 지역이동 제한

E-9 입국자, 최초 근무지역 내 사업장 변경 가능
타 지역 인력유출 방지책…공공기숙사 제공 지자체엔 고용한도 상향 혜택

TIN뉴스 | 기사입력 2023/07/06 [08:16]

9월부터 비전문직 취업비자(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일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타 지역으로의 인력 유출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 **이주민의 장기적 정주 경로 확대와 더불어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 내 인구 유지에 개입하는 이민정책 시도**

I. 서론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연구 배경

'이주민의 인구감소·지역소멸지역 내 장기 정주 가능한가?'
≒ 이주민이 특정 지역 내 지속적 정주하게 만드는 (예측)요인?

기존 연구?

- 국가 수준 지속 체류(비자연장, 영주, 귀국) 관련 연구만 수행되었고 특정 지역 정주 관련 연구 부재
- 지속 정주양상은 개인적 수준 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특성도 고려되어야 하나 주로 개인적 요인이나 몇몇 변수로 한정하여 설명 시도

  ⇨ **지역사회 증거기반 이민정책의 추진 근거와 함의를 도출하는 데 미흡**

- 주로 회귀분석을 통한 변수들간의 이론적 인과관계에 기초한 모수적 추론 통계가 이용하여 많은 변수를 투입한 분석시 다중공선성 등의 문제로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 **머신러닝 기법은 사전적 지식 없이 데이터에 담긴 정보를 추출하여 목표 변수를 예측하는 귀납적 방법으로 일반화 가능성을 높인 탐색적 연구에 적합(도유록, 2021:62)**

연구 목표 & 질문

-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을 활용한
  이주배경주민의 지역사회 내 지속 정주의향 예측모형 구축

1) 경상북도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을 예측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2) 경상북도 거주 이주배경주민의 체류자격(취업, 유학, 재외동포)별
   지속 정주의향 예측 변인은 무엇인가?

02
이론적 배경

1) 정주 의향

● **정주(定住, settlement)**

-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것
- 자신이 거주하던 집 또는 지역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것
(김용진·김성희, 2016:406; 김화연·이대응, 2022:263)

● **정주의향 (≒ '정주의식', '정주의사', '지속(또는 계속)거주의사')**

- **정주의식:**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비물리적 자산에 대한 애착과 심리적 만족감으로, 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 (이미애, 이승종, 2016)

- **정주의사:** 개인이 거주하고 있는 한 지역이나 도시의 정주환경하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정착 의지, 또는 정주하고자하는 심적 의사(이희창 외, 2004; 강종구, 문국경, 2021, 김화연, 이대웅, 2022; 민소영, 신서우, 2022).

- **지속거주의향:** 자신이 거주하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에서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지(이경영 외, 2018)

개념
II. 이론적 배경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1) 정주 의향

● **정주의향**

⇨ '개인적 특성 요인과 심리적이고 주관적인 평가, 거주지 환경에 대한 물리적, 비물리적 환경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개인이 특정 지역적 범위 내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의사'로 정의

⇨ **정주의향이 높다는 것은**, 거주 지역 환경에 대한 높은 물질적, 심리적 만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정주의향이 낮다는 것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의 불리하거나 불만족한 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유리한 환경으로 이주하려는 의도나 열망을 의미함

2) 이론적 토대

● 배출-흡입모델(Push-Pull Model)

✓ 특정 지역 또는 국가에서 사람들을 밀어내는 '배출 요인(push factor)과 다른 지역 또는 국가에서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흡입 요인(pull factor)의 크기에 의해 지역 간 인구이동의 방향이 결정

✓ 주요 요인(예시): 인구증가, 토지소유권, 빈곤, 종교적·정치적·인종적 억압, 전쟁, 교육·문화·보건시설 미비, 자연재해 등 지역 환경적 요소, 고용기회, 임금, 실업률, 경기침체와 같은 경제적 요소 등(이남철, 2020:110; 마이클 세머스, 2013:98)

이론
II. 이론적 배경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2) 이론적 토대

● 노동시장분절론(Labor market segmentation theory)

✓ 세계, 국가 및 지역수준에서 노동시장이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 분절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틈새시장을 국제이주민이 메꾸는 방식으로 발생 (윤인진, 2013: 26)

✓ 주요 요인(예시): 산업화된 국가의 노동시장에서 이주자들은 **고국의 임금 및 지위 기준**에 맞춰 이를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평가하므로 저숙련-저임금의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노동력 제공(임금, 고국 경제상황/지위 등)

2) 이론적 토대

- 동화모델(Assimilation-Model)

✓ 이민자가 기존의 행동양식을 변화시켜 수용국 주류사회에 얼마나 적응하고 통합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점진적으로 주류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지속 정주 가능

✓ 주요 요인(예시): 주류사회의 생활양식, 언어, 관습, 규범, 가치, 문화, 지역사회 소속감, 정체성, 주민과의 교류 등(Berry, 1997; Zhou, 1997; 김도원 외, 2022)

2) 이론적 토대

- 티부모델(Tiebout model)

✓ 국가/지역 차원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양, 질적 수준, 접근성에 따라 거주민의 만족도가 상이하며, 지역 간 격차에 의해 지속적인 정주나, 인구이동(흡입-배출) 발생

✓ 주요 요인(예시): 정부/지자체의 지원정책(프로그램)과 같은 공적 재화의 유무 및 접근성. 출산장려정책 또는 지역특화비자제도, 의료/사회적 지원 프로그램 등

2) 이론적 토대

- 행태주의적 접근(Behavioral Approach)

✓ 특정 지역으로의 이주 혹은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것은, 개개인의 거주지 환경에 대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인지를 토대로 의사결정한 결과. 이주민은 최적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아닌, 주거환경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을 고려한 심리적인 효용이 높은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러한 장소를 찾아 이주(정주)(마이클 새머스, 2013: 104-105)

✓ 주요 요인(예시): (지역)거주환경만족도, 지역 애착, 소속감 등 심리적 자원

3) 선행연구 고찰

- **해외 이주배경주민 대상 지역수준 지속 정주 연구**

✓ 지방에서의 정주는, 더 나은 취업 기회와 낮은 주거비용으로 정착 용이(Hugo, 2008)

✓ 건강상태가 긍정적일수록 특정 시 내 장기 정착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남 (Xu, 2022)

✓ 포르투갈의 인구 감소 지역 장기 거주 이주민은 안정적이고 적절한 고용, 주택, 낮은 생활비(임대료, 출근 비용), 삶의 질(안전, 미래전망), 인적 자본, 교육, 의료서비스접근성, 더 나은 삶을 위한 정부나 지역에서의 서비스 및 자원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꼽힘 (Diogo, 2024a; 2024b)

✓ 호주 숙련 이민자의 지역주도이민제도와 특정지역이민프로그램제도 참여자에게서 이주의향이 낮음 (Taylor et al., 2014:15).

✓ 호주의 소규모 지역사회의 이주민 정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연구에서는 공공 및 지역사회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의 주관적 만족도와 같은 심리적인 부분을 강조 (Griffiths et al., 2010)

3) 선행연구 고찰

- **국내 이주배경주민 대상 국가수준 지속 체류 연구**

✓ 서울-경인지역 제조업체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여 장기 기대 체류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월급, 송금액, 작업조건 만족도가** 장기 체류에 유의미한 영향 (이정환, 석현호, 2001)

✓ 서울시 거주 여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 정착의지 영향요인을 밝힌 연구에서는 한국생활만족감, 한국인 정체성 지각 정도, 한국 문화적응 정도, 한국 정부의 관심 및 정책적 지원 인식이 높을수록 한국 정착의지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 (김도형, 박진아, 황인석, 2016)

✓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를 통해 남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영주권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에서는 출신국의 경제적 상황(GDP), 가족, 사회활동(모임), 차별경험, 임금 등이 유의하게 나타남 (남춘호, 문장순, 2018)

✓ 「2018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통계청)의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체류연장의사와 영주 또는 한국국적 취득과 같은 영구정착 의사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된 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교육수준, 소득, 결혼 상태, 친인척 연결망, 체류기간, 한국어 능력이 주요 변인으로 나타남 (최인지, 신형진, 2019)

선행연구
II. 이론적 배경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3) 선행연구 고찰

- 국내 일반 주민 대상 지역수준 지속 체류 연구

✓ 경상남도 내 시군(중소도시)단위 거주 거주민을 대상으로, '도내 계속 거주 의사'를 확인한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 거주기간, 혼인상태, 교육수준, 자가여부, 소득 및 지출 수준이 영향을 미쳤음 (조준혁, 김민재, 2023)

✓ 생활인프라(경제활동·일자리, 주거, 교육·돌봄, 기초생활, 문화여가·생활체육, 교통, 안전, 보건·의료, 자연환경) 만족도를 통해 청년의 지방 정주의사 수준을 분석한 연구(김화연, 이대응, 2022)

✓ 인구소멸지역에서는 임금수준, 고용기회, 주거비용, 생활비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함께, 낮은 수준의 교육, 의료서비스, 문화시설, 쾌적한 생활환경과 같은 지역환경에 대한 만족도 요인이 주된 흡입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연구(이희연, 2008)

범주	변수(비이주배경주민 관련 선행연구 기울임 표시)	
일반적 특성	성별	이정환, 석현호, 2001; 최인지, 신형진, 2019; *진혜민, 2021*
	연령	이정환, 석현호, 2001; 최인지, 신형진, 2019; Steiner, 2019
	가족 구조	Steiner, 2019; *조준혁 외, 2023*
	혼인 상태	최인지, 신형진, 2019; *이지은 외, 2020; 조준혁 외, 2023*
	교육수준	최인지, 신형진, 2019; 김도원 외 2022; Steiner, 2019
	언어 능력	최인지, 신형진, 2019; 김도원 외 2022; Steiner, 2019; Drolet & Teixeira, 2022
	건강 상태	Xu, 2022; *김수이아, 김태일, 2023*
	거주형태/주거비용	김도원 외 2022; Hugo, 2008; *이지은 외, 2020*
	거주지역(규모)	*이지은 외, 2020*
	거주(체류)기간	최인지, 신형진, 2019; 김도원 외 2022; Steiner, 2019; *문경주, 장수지, 2020*
	(가구)소득/지출(송금 등)	이정환, 석현호, 2001; 남춘호, 문장순, 2018; Diogo, 2024a; 2024b; Griffiths et al., 2010
	취업(경제활동)	김도원 외 2022; Steiner, 2019; Hugo, 2008; *김화연, 이대응, 2022*
	출신국 경제(GDP/물가)	남춘호, 문장순, 2018
	동포여부	김도원 외, 2022
심리적 요인	지역 소속감	Bachrach & Zautra, 1985; *이지은 · 이경은, 2020*
	(환경/지역사회서비스) 만족도	김도형 외 2016; Griffiths et al., 2010; *이희연, 2008; 민소영, 신서우, 2022*
	지역안전감/위험	Diogo, 2024a; 2024b; *이성우, 2001; 이지은, 2020*
	지역사회프로그램(서비스)참여	남춘호, 문장순, 2018; Drolet & Teixeira, 2022
	차별	남춘호, 문장순, 2018; 이정화, 2023; Drolet & Teixeira, 2022
	주관적 계층인식	*문경주, 장수지, 2020*
제도적 요인	지역이민제도	Taylor et al., 2014
	정책지원 수준 및 효과	김도형 외 2016; Diogo, 2024a; 2024b; *최일진, 남황우, 2015*

03
연구방법

1) 연구 자료

-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2023)

✓ 지역적 범위: 경상북도

: 경상북도는 시도 수준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도내 전체 22개 시군 중 19개 지자체(약 86.4%)가 소멸위험지역 지정

2) 연구 대상

- 모집단: 국내 91일 이상 체류자 중 경상북도에 거주 중인 20세 이상 75세 이하 이주배경주민
- 조사기간: 2023년 8월 1일 ~ 9월 30일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방문면접조사(부득이한 경우 이메일 조사 병행)
- 표본: 총 크기는 1,000명이나, 불성실 응답 등 제외, 최종 993명

구분		전체
전체		993(100.0)
성별	남자	519(52.3)
	여자	474(47.7)
연령대	20대	431(43.6)
	30대	366(37.0)
	40대	122(12.3)
	50대	40(4.0)
	60대 이상	29(2.9)
학력	중졸 이하	177(17.9)
	고등학교 졸업	433(43.8)
	대학교 졸업	322(32.6)
	대학원 졸업	57(5.8)
체류자격	유학 (D2, D4-1, D4-7, D10)	269(27.1)
	전문인력 (E1 ~ E7)	41(4.1)
	계절근로 (E8)	35(3.5)
	비전문취업 (E9)	284(28.6)
	선원취업 (E10)	24(2.4)
	방문취업 (H2)	19(1.9)
	거주 (F2)	20(2.0)
	재외동포 (F4)	114(11.5)
	영주 (F5)	47(4.7)
	결혼이민 (F6)	140(14.1)

1) 종속변수

- 경상북도 지속 정주의향:
  - ✓ '앞으로도 경상북도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으십니까?'
  - ✓ 본래 측정도구는 5점 척도(1=전혀그렇지 않다-5=매우그렇다)이나, 1~3점을 묶어, <낮은 정주의향>, 4~5점을 묶어 <높은 정주의향>으로 구분
  - ✓ 낮음: 249(25.1%) / 높음: 727(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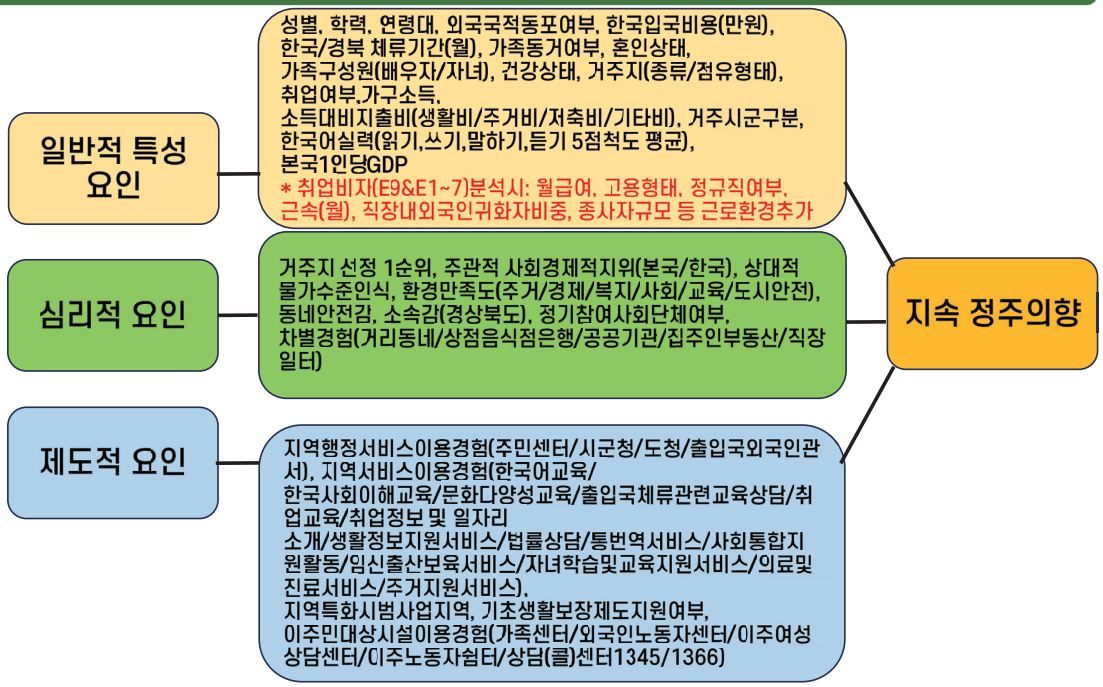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전혀 그렇지 않다	6	.6	.6	.6
	그렇지 않다	36	3.6	3.7	4.3
	보통이다	207	20.8	21.2	25.5
	그렇다	482	48.5	49.4	74.9
	매우 그렇다	245	24.7	25.1	100.0
	전체	976	98.3	100.0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유효	낮음	249	25.1	25.5	25.5
	높음	727	73.2	74.5	100.0
	전체	976	98.3	100.0	

* 자기기입식 설문으로, 결측(무응답)값 존재

Ⅲ. 연구방법
변수구성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2) 예측변수



의사결정나무분석

- 특정 지역 내 지속 정주의향을 설명하는 가장 효율적인 예측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특별한 통계적 가정이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마이닝 분석방법인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탐색적 분석 수행

-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나무'구조를 활용하여 특정한 규칙 또는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방대한 자료(변수)속에서 표본(소집단)으로 분류해나가면서 가장 예측 성능이 좋은 경로를 찾는 기계학습 알고리즘

- 나무모형에 따른 추론 형태로 시각화되어 그 과정을 이해하기 쉽고, 투입된 변인간 상호작용을 모두 고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군을 도출할 수 있어 정책의 근거자료와 문제해결 접근에 유용하게 사용(정인호, 이대웅, 권기헌, 2018:156)

연구방법
Ⅲ. 연구방법
이주배경주민의 지속정주의향예측요인연구

의사결정나무분석

- 본 연구의 의사결정나무 형성을 위한 분석 알고리즘은 CRT(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를 사용

✓ CART 방법은 종속/예측변수로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모두 투입할 수 있고, 지니계수에 따라 부모마디에서 자식마디를 두 개로만 분리하는 이지분리(Binary split)를 수행하는 방법(최종후 외,1998)

- 정지규칙(stoping rule)로 상위노드(부모마디)의 최소케이스 수는 10으로, 하위노드(자식마디)의 최소 케이스수는 5으로 설정, 나무 깊이는 4수준으로 설정

  ⇨ 단, 체류자격별 분석시 나무 깊이는 3수준으로 설정(응답자 수/과적합 고려)

- SPSS 25.0 프로그램 활용하여 수행

04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 위험도표

관측분류	예측분류		
	낮은 정주의향(n)	높은 정주의향(n)	정확도 퍼센트(%)
낮은 정주의향(n)	109	140	43.8
높은 정주의향(n)	55	672	92.4
전체(%)	16.8	83.2	80.0
위험도 추정값(표준화오류)		.200(0.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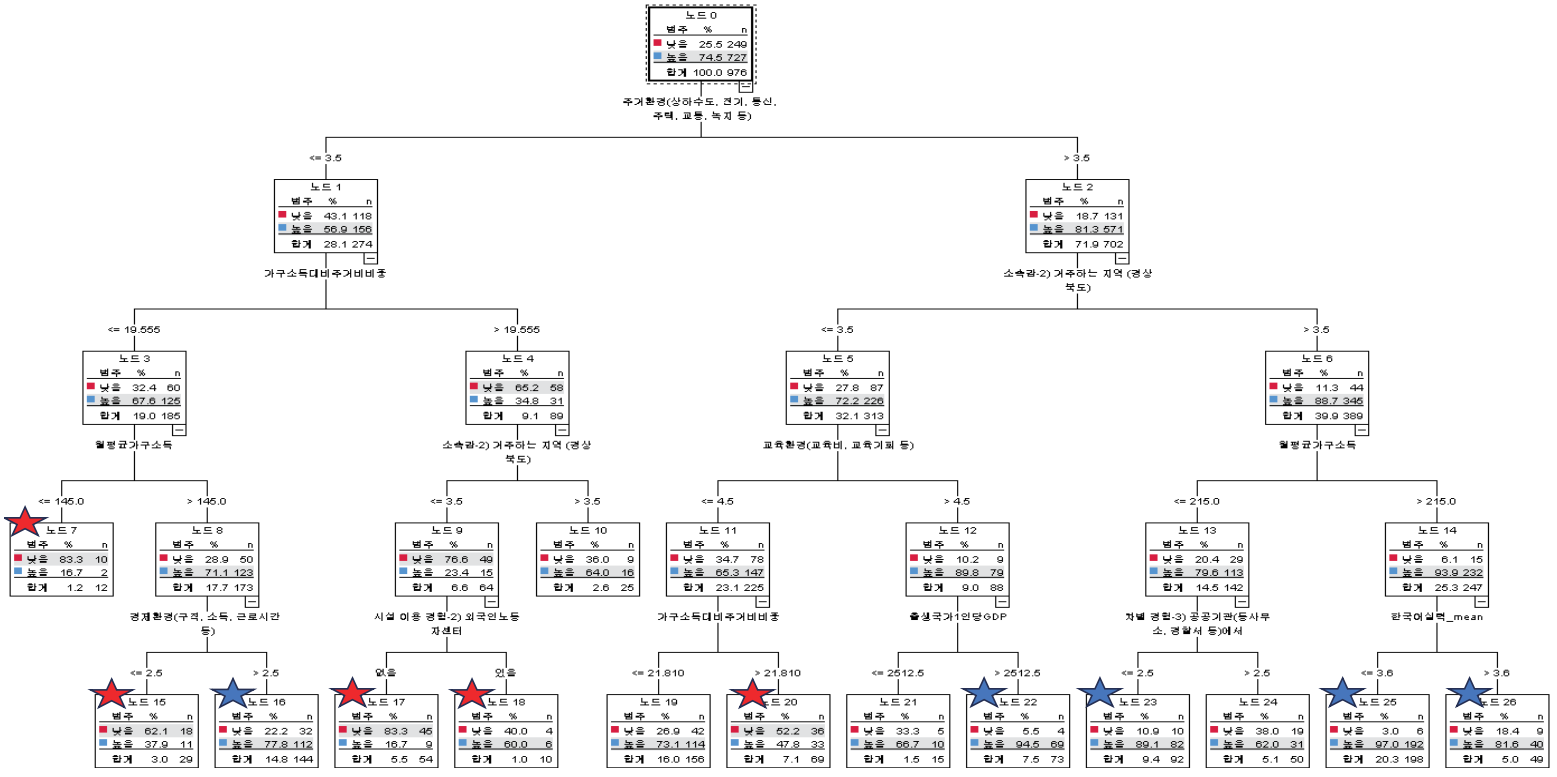
전체 응답자 이익도표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17	54	5.5%	45	18.1%	83.3%	326.6%	25	198	20.3%	192	26.4%	97.0%	130.2%
7	12	1.2%	10	4.0%	83.3%	326.6%	22	73	7.5%	69	9.5%	94.5%	126.9%
15	29	3.0%	18	7.2%	62.1%	243.3%	23	92	9.4%	82	11.3%	89.1%	119.7%
20	69	7.1%	36	14.5%	52.2%	204.5%	26	49	5.0%	40	5.5%	81.6%	109.6%
18	10	1.0%	4	1.6%	40.0%	156.8%	16	144	14.8%	112	15.4%	77.8%	104.4%
24	50	5.1%	19	7.6%	38.0%	148.9%	19	156	16.0%	114	15.7%	73.1%	98.1%
10	25	2.6%	9	3.6%	36.0%	141.1%	21	15	1.5%	10	1.4%	66.7%	89.5%
21	15	1.5%	5	2.0%	33.3%	130.7%	10	25	2.6%	16	2.2%	64.0%	85.9%
19	156	16.0%	42	16.9%	26.9%	105.5%	24	50	5.1%	31	4.3%	62.0%	83.2%
16	144	14.8%	32	12.9%	22.2%	87.1%	18	10	1.0%	6	0.8%	60.0%	80.6%
26	49	5.0%	9	3.6%	18.4%	72.0%	20	69	7.1%	33	4.5%	47.8%	64.2%
23	92	9.4%	10	4.0%	10.9%	42.6%	15	29	3.0%	11	1.5%	37.9%	50.9%
22	73	7.5%	4	1.6%	5.5%	21.5%	17	54	5.5%	9	1.2%	16.7%	22.4%
25	198	20.3%	6	2.4%	3.0%	11.9%	7	12	1.2%	2	0.3%	16.7%	22.4%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낮음**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높음**

의사결정나무 도표



관측분류	예측분류		
	낮은 정주의향(n)	높은 정주의향(n)	정확도 퍼센트(%)
낮은 정주의향(n)	93	27	77.5
높은 정주의향(n)	36	111	75.5
전체(%)	48.3	51.7	76.4
위험도 추정값(표준화오류)		.236(0.026)	

유학(D2/D4/D10)
위험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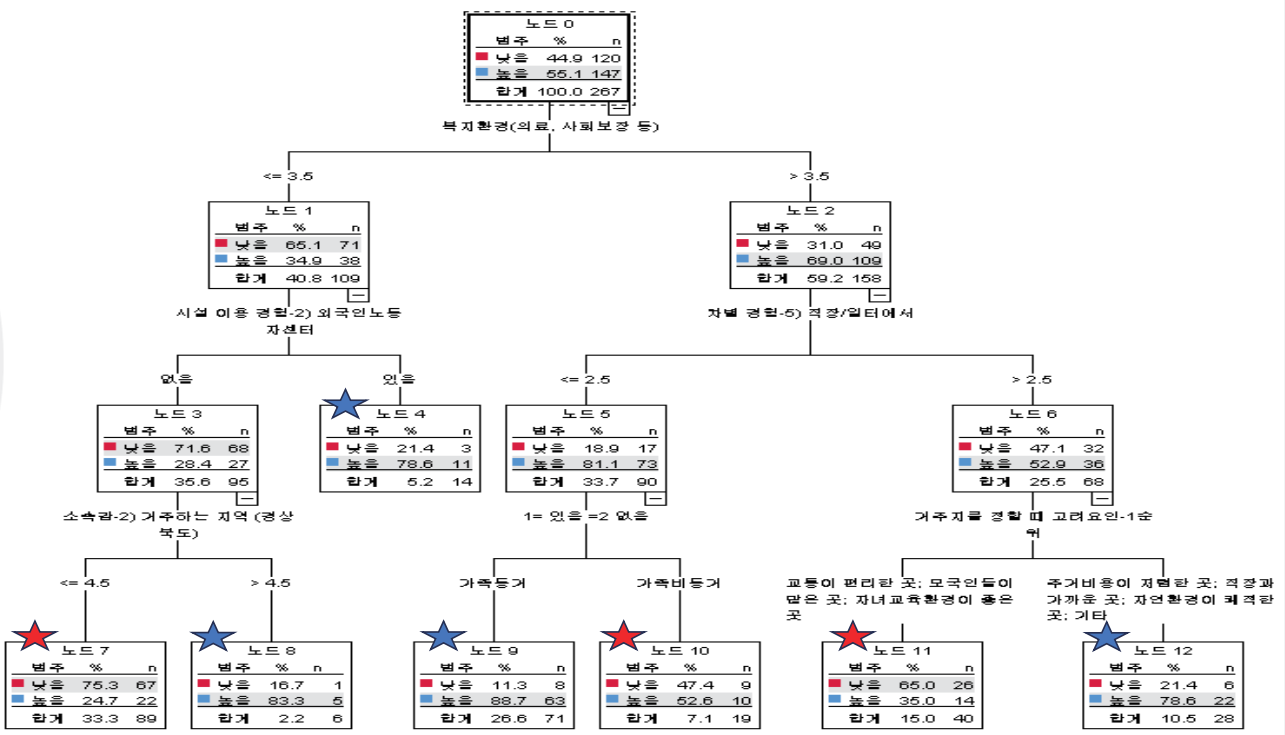
Ⅳ. 분석결과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7	89	33.3%	67	55.8%	75.3%	167.5%	9	71	26.6%	63	42.9%	88.7%	161.2%
11	40	15.0%	26	21.7%	65.0%	144.6%	8	6	2.2%	5	3.4%	83.3%	151.4%
10	19	7.1%	9	7.5%	47.4%	105.4%	12	28	10.5%	22	15.0%	78.6%	142.7%
12	28	10.5%	6	5.0%	21.4%	47.7%	4	14	5.2%	11	7.5%	78.6%	142.7%
4	14	5.2%	3	2.5%	21.4%	47.7%	10	19	7.1%	10	6.8%	52.6%	95.6%
8	6	2.2%	1	0.8%	16.7%	37.1%	11	40	15.0%	14	9.5%	35.0%	63.6%
9	71	26.6%	8	6.7%	11.3%	25.1%	7	89	33.3%	22	15.0%	24.7%	44.9%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낮음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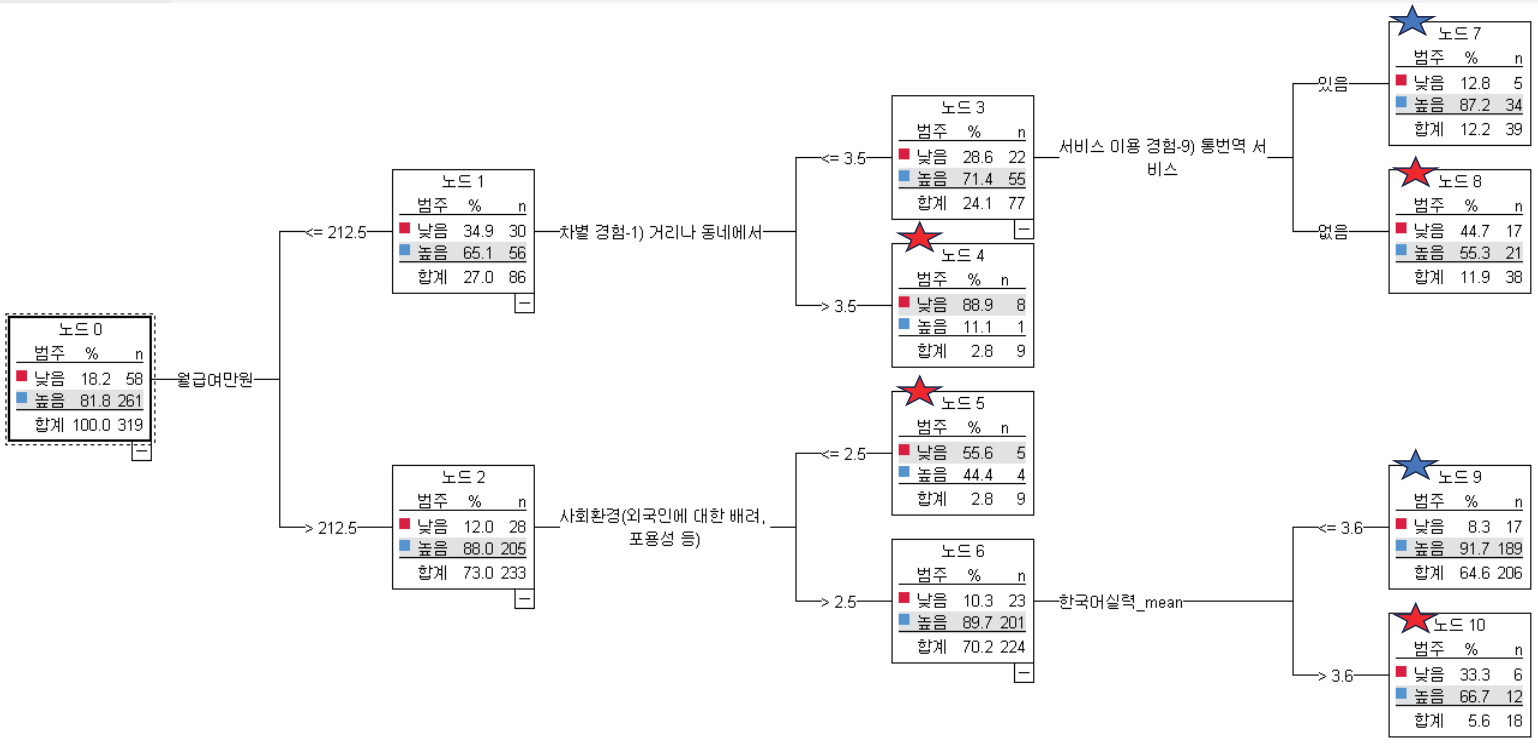


관측분류	예측분류		
	낮은 정주의향(n)	높은 정주의향(n)	정확도 퍼센트(%)
낮은 정주의향(n)	13	45	22.4
높은 정주의향(n)	5	256	98.1
전체(%)	5.6	94.4	84.3
위험도 추정값(표준화오류)	.157(0.02)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4	9	2.8%	8	13.8%	88.9%	488.9%	9	206	64.6%	189	72.4%	91.7%	112.1%
5	9	2.8%	5	8.6%	55.6%	305.6%	7	39	12.2%	34	13.0%	87.2%	106.6%
8	38	11.9%	17	29.3%	44.7%	246.1%	10	18	5.6%	12	4.6%	66.7%	81.5%
10	18	5.6%	6	10.3%	33.3%	183.3%	8	38	11.9%	21	8.0%	55.3%	67.5%
7	39	12.2%	5	8.6%	12.8%	70.5%	5	9	2.8%	4	1.5%	44.4%	54.3%
9	206	64.6%	17	29.3%	8.3%	45.4%	4	9	2.8%	1	0.4%	11.1%	13.6%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낮음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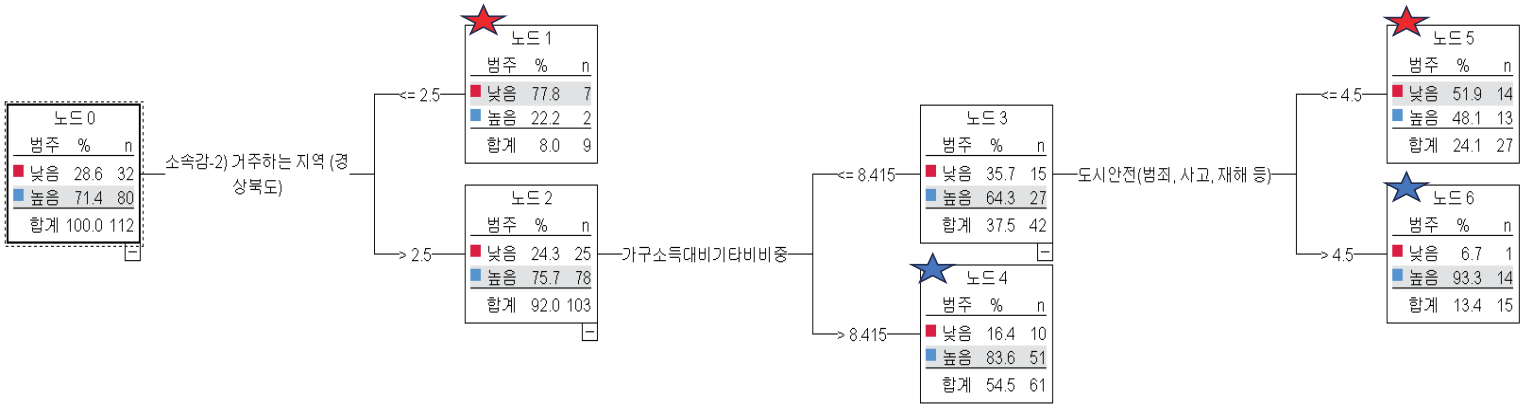
관측분류	예측분류		
	낮은 정주의향(n)	높은 정주의향(n)	정확도 퍼센트(%)
낮은 정주의향(n)	21	11	65.6
높은 정주의향(n)	15	65	81.3
전체(%)	32.1	67.9	76.8
위험도 추정값(표준화오류)		.232(0.04)	

Ⅳ. 분석결과
재외동포(F4) 위험도표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노드	노드		이득		반응	지수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N	퍼센트		
1	9	8.0	7	21.9	77.8	272.2	6	15	13.4	14	17.5	93.3	130.7
5	27	24.1	14	43.8	51.9	181.5	4	61	54.5	51	63.8	83.6	117.0
4	61	54.5	10	31.3	16.4	57.4	5	27	24.1	13	16.3	48.1	67.4
6	15	13.4	1	3.1	6.7	23.3	1	9	8.0	2	2.5	22.2	31.1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낮음

성장방법: CART
목표범주: 경상북도 지속 거주의향 높음


노드 0
범주 % n
낮음 28.6 32
높음 71.4 80
합계 100.0 112
소속감-2) 거주하는 지역 (경상북도)
<= 2.5
> 2.5
노드 1
범주 % n
낮음 77.8 7
높음 22.2 2
합계 8.0 9
노드 2
범주 % n
낮음 24.3 25
높음 75.7 78
합계 92.0 103
가구소득대비기타비비중
<= 8.415
> 8.415
노드 3
범주 % n
낮음 35.7 15
높음 64.3 27
합계 37.5 42
노드 4
범주 % n
낮음 16.4 10
높음 83.6 51
합계 54.5 61
도시안전(범죄, 사고, 재해 등)
<= 4.5
> 4.5
노드 5
범주 % n
낮음 51.9 14
높음 48.1 13
합계 24.1 27
노드 6
범주 % n
낮음 6.7 1
높음 93.3 14
합계 13.4 15

05
결론 및 제언

요약

전체

- 전체 응답자 중, 경상북도 지속 정주의향이 높은 집단(그렇다+매우그렇다)은 74.5%
- 지속 정주의향 예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주거환경(81.3%) 요인, 그외에 경상북도 소속감, 가구소득/주거비/경제-교육환경/차별경험/GDP 등 주요 예측요인
- 가장 상위 노드 <25번 노드> ⇨ 만족스런 주거환경, 경상북도 소속감이 크고(88.7%), 월평균가구소득이 215만원 이상(93.9%)이며, 한국어능력이 그다지 잘하는 수준은 아닌(97.0%) 조합에서 1.3배 높은 지속 정주의향 예측
- 반면, 주거환경이 불만족스럽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낮은 경상북도 소속감, 외국인노동자센터와 같은 지원시설 이용 경험이 없는 집단에서 타 응답자 집단에 비해 3.26배 높게 지속정주의향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됨

유학생

- 유학생의 경우 경상북도 지속 정주의향이 높은 집단(그렇다+매우그렇다)은 55.1%로 타체류자격에 비해 낮은 수준
- 지속 정주의향 예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복지환경(69%) 요인이며, 외국인노동자센터이용여부/경상북도 소속감/차별경험/가족동거/거주지선택요인 주요 예측요인
- 가장 상위 노드 <9번 노드> ⇨ 만족스런 복지환경, 낮은 차별경험(81.1%), 가족동거자가 있는 경우(88.7%)에서 1.61배 높은 지속 정주의향 예측됨
- 반면, 외국인지원기관(노동자센터)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상북도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크지 않은 경우에, 이주의향이 증가

V. 결론 및 제언
이주배경주민의 지속 정주의향 예측요인 연구

요약

취업

- 취업체류자격자 응답 중, 경상북도 지속 정주의향이 높은 집단(그렇다+매우그렇다)의 비중은 81.8%로 여타 집단에 비해 가장 높은 정주의향을 보임
- 지속 정주의향 예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월급여수준이며, 212.5만원 이상이고 (88%), 외국인에 대한 긍정적인사회환경이라고 인식하는 경우(89.7%), 한국어 실력이 적절하거나 낮은 수준일 때(91.7%) 가장 높은 지속 정주의향을 보임
- 반면, 낮은 임금수준, 차별경험이 높을 때 같은 약 5배 가량 이주의향 커짐

재외동포

- 재외동포 체류자격 응답자의 경상북도 지속 정주의향이 높은 집단(그렇다+매우그렇다)은 71.4%
- 지속 정주의향 예측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상북도 소속감이며, 보통수준이상에서(75.7%), 가구소득대비 기타비비중이 높을수록(83.6%), 거주지 안전이 매우 높을 경우(93.3%) 점차 정주의향이 높아짐

V. 결론 및 제언

주요 예측요인

일반적 특성/제도적 요인에 비해, 거주환경 만족도(주거/교육/경제/복지/사회/도시안전)와 소속감, 차별과 같은 심리적 요인 강한 예측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와 관련한 물질적, 심리적 자원을 개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프로그램 우선적으로 필요

소득/지출/노동

경제적 사유(주거비용/월급여/가구소득)가 이주/정주의향에 큰 영향을 줌. 특히 가구소득 구분점이 215만원 이하 최저임금수준으로, 저소득이주민의 주거비용의 분담이 커 주거지원필요. 또한 취업연계, 교육훈련,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센터이용이 정주의향에 긍정적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훈련, 교육비, 교육기회를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역사회 경제활동인력 확보하는 정책적 노력 필요

체류자격별 맞춤 지원

유학생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연령, 저숙련, 비정규, 저소득 등 취약. 특히 가족(자녀)동거시 의료를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니즈가 매우 큼. 한편, 단기순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나, 상관없이 정주의향도 높음.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크고 장기적으로 사회통합 및 체류자격 변경에 언어능력이 보다 중요해지므로 언어학습서비스 지원 필요. 이외 체류자격이나 정착주기, 가족동거여부 등 이주배경주민의 니즈파악 및 대응 요구됨.

감사합니다.

발표4. 백양현 · 전대호(서울대)

정량적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연구: 한국사례의 텍스트마이닝 접근법

정량적 분석을 통한 이민정책연구 : 한국 사례의 텍스트마이닝 접근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도시 및 지역계획학 전공
백양현 전대호

목차

1. 서론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2. 이론적 배경
텍스트마이닝 정의
한국 이민정책(법무부)
한국 이민정책의 텍스트마이닝 적용

3. 연구방법
데이터수집
데이터전처리
텍스트마이닝 사례1: 대구광역시 이슬람사원
텍스트마이닝 사례2: 필리핀 가사관리사
텍스트마이닝 사례3: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4.시사점
질적 이민연구와의 비교 및 차별점
텍스트마이닝 기반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향

5. 결론
연구요약 및 후속연구 제안

참고문헌

1. 서론_연구배경 및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적 영향(한국경제연구원, 2015)
-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잠재성장률 하락을 예상하며,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 확대 검토
- 2060년까지 잠재성장률 1% 높이기 위해, 누적기준으로 약 1,722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

✓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이민정책연구원, 2021)
-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이민정책의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함

✓ 이민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평가를 위해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이수정, 2020)

✓ 현재 이민연구에서는 양적연구보다 질적연구가 많은 상황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이주 · 이민이란 키워드의 국내학술논문과 학위논문은 질적연구가 대부분인 상황
- 텍스트마이닝 사용(다문화 포함)
  ① 국내학술논문 : 이수정 외(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서보영 외(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이주관련 연구동향 분석), 김이현 외(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이주배경 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연구동향 분석), 강진구 외(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 동향 분석), 김진형 외(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언론 기사의 핵심 이슈 및 논조 분석 :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강진구(2024, 텍스트마이닝으로 본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 유투브댓글을 중심으로), 강진구(2019,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본 〈다문화콘텐츠연구〉의 연구 경향 분석), **하재빈 외(2021,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② 석사 학위논문 : 김유리지(2019,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한 다문화 상담 동향분석)

구분	전체 논문 수(개)	텍스트마이닝 방법 사용(개)	비고
국내학술논문	825	8	KCI 기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740	1	사회과학

1. 서론_연구목적

✓ **이민연구에서 텍스트마이닝의 필요성 제시**
- 이민관련 데이터(언론 기사, 보고서 등)를 다루기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이 왜 필요한지 설명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의 체계적인 분석방법 제시**
- 기존 질적연구의 한계(개인적 경험과 특정 사례에 집중)를 넘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함으로 한국사회의 이민연구에서 공통된 패턴과 트렌드 도출가능
- 주요 키워드, 주제, 사회적 반응을 객관적으로 파악

✓ **텍스트마이닝의 이민연구 적용 가능성 제시**
-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이민연구에 적용할 수 있음
- 학문적 방향성을 정량적 데이터로 뒷받침

✓ **텍스트마이닝 접근의 의의**
- 방대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해 숨겨진 패턴, 트렌드, 의미를 추출할 수 있음
  ① 질적연구에서 다루기 어려운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분석 가능
  ② 키워드분석에서 나아가 감성 분석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 경향을 평가할 수 있음
  ③ 질적연구와 함께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연구진행이 가능함
  ④ 사회적 담론(외국인 노동자, 불법체류 등)의 변화와 트렌드를 분석하여 담론에 대한 변화와 쟁점을 이해할 수 있음

2. 이론적 배경_텍스트마이닝 정의

✓ **텍스트마이닝**

- 조태호(2001) :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 간의 암묵적인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정의
- IBM(2003) : 텍스트마이닝과 텍스트 분석은 머신런닝, 통계학, 언어학을 적용하여 비정형 데이터에 담긴 텍스트 패턴 및 추세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

- 주요 구성 요소
  ① 텍스트 전처리 :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정제 및 변환 작업을 수행함(불용어 제거, 형태소 분석 등)
  ② 특징 추출 : 텍스트에서 중요한 정보를 숫자로 변환
  ③ 분석기법 : 키워드 분석(텍스트에서 빈도가 높은 단어를 추출하여 주요 주제를 파악), 감정 분석(텍스트의 긍정, 부정, 중립적 의미를 분석), 주제 모델링(LDA 등 알고리즘을 통해 문서의 주요 주제를 자동으로 도출), 군집 분석(유사한 내용을 가진 문서를 그룹화)
  ④ 시각화 : 분석결과를 시각화하여 직관적 이해를 제공(워드 클라우드, 네트워킹 그래프 등)

- 활용 사례
  ① 정책 연구 : 정책 문서나 사회적 담론에서 키워드를 추출하고 변화 양상을 분석
  ② 마케팅 : 고객 리뷰나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나 고객 감정을 파악
  ③ 학문적 연구 : 대규모 학술 논문이나 문헌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 트렌드와 주제를 파악
  ④ 여론 분석 : 언론과 SNS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논쟁과 여론의 반응 및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음

2. 이론적 배경_한국 이민정책(법무부)

✓ **외국인 체류관리**

- 노동시장의 수요를 고려한 외국인 유입정책
  ①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 및 시행 중
  ② 1차 산업 및 기초 2차 산업의 비숙련 부문 등 인력부족을 겪는 분야에서 외국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비자정책 시행(고용허가제)
  ③ 계절근로자 제도 : 계절의 수요에 따라 일손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번기 및 어번기에 외국인을 단기간 탄력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
  ① 중소 제조업 등 인력난을 겪는 산업분야에서 숙련기능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를 도입
  ②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방문취업(H-2)자격으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이외 점수요건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특정활동(E-7-4)자격으로 변경
- 해외 우수인재 유치
  ① 우수인재 대상 신속한 비자발급, 석학 초빙 지원사업 등 우수인재에 대한 구직비자 확대
  ② 전문인력 전자고용추천제 도입, 구직비자 점수제(D-10)시행 등
- 외국인 유학생 정책
- 투자이민 유치 : 투자기준금액은 일반 투자이민이 15억원 이상, 고액투자이민자는 30억원 이상으로 구분
- 재외동포 고용정책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복수비자 제도 확대

2. 이론적 배경_한국 이민정책의 텍스트마이닝 적용

➢ **하재빈 · 이도은(2021) :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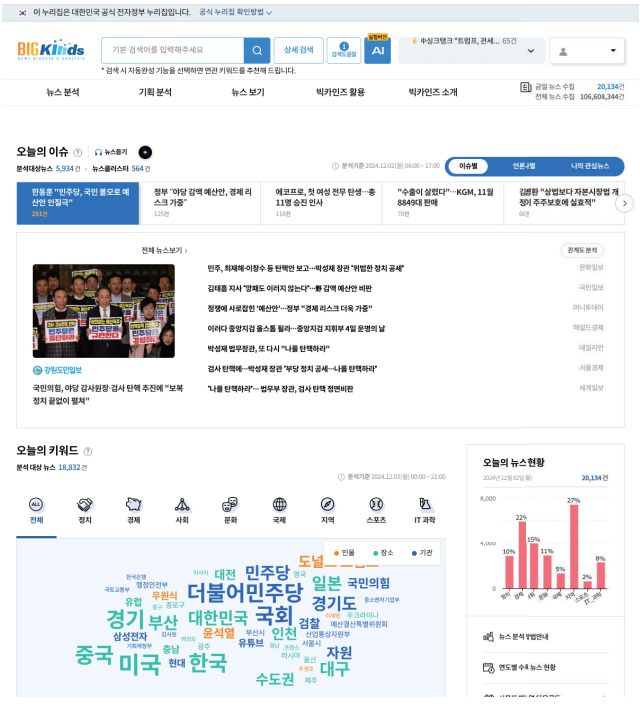
✓ 텍스트마이닝 적용방법

- 데이터수집
  - ① 텍스톰(Textom)이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해 2020.01.-2020.12.까지의 국내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뉴스 등에서 데이터 수집(6,217개 문서, 1,453,272 데이터 추출
  - ② 데이터정제 :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 불필요한 단어 삭제 및 줄임말 수정 등
  - ③ 분석기법
    - 단어 빈도 분석(Word Frequency Analysis) : 상위 키워드(일자리, 정부, 외국인근로자, 기업) 도출
    - TF-IDF(Tea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 특정 단어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정책적 이슈와 관련된 키워드 우선순위 파악(이주노동자, 정책, 사업장)
    - 연결중심성 분석(Degree Centrality Analysis) : 단어 간의 연결 관계를 측정(산업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관련 키워드들이 의미 구조 형성)
- 소셜네트워크 분석
  - ① 의미연결망 분석(Semantic Network Analysis) : 키워드 간 의미적 연결을 파악해 정책적 맥락 이해(고용정책,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등으로 구분)
  - ② CONCOR(Convergence of Correlations) 분석 : 유사성이 높은 키워드들을 군집화하여 주요 인식(고용정책)과 주변 인식(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등)을 도출
- 결과
  - ① 국민들은 고용허가제를 일자리 문제, 정책적 중요성,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인식하고 있음
  - ② 기업 관점에서는 법률 이슈와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 ③ 국제적 맥락에서는 송출국과의 협력, 경제적 효과 등이 강조됨

3. 연구방법_데이터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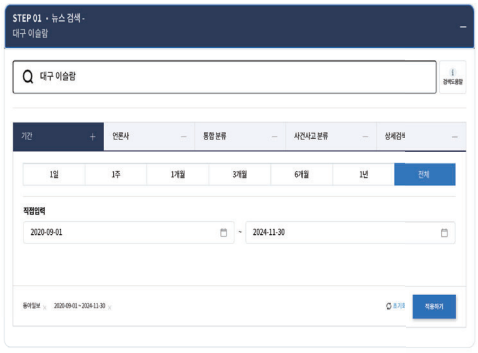
✓ **플랫폼 소개**

- 빅카인즈(BIG Kinds, bigkinds.or.kr)
-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 1990년 이후 축적된 약 1억 건 이상의 뉴스 데이터 기반.
- 뉴스 콘텐츠의 검색, 분석, 시각화 기능 제공.



3. 연구방법_데이터수집

✓ **대구광역시 이슬람 사원 키워드 분석 :** Local scale 신문사 기사(80개) vs National scale 신문사(177개)



기간 설정

2020.09.01. – 2024.11.30.

신문사 선택 및 검색 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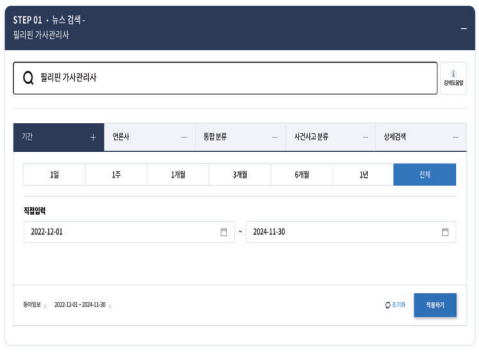
조선일보(30)+중앙일보(39)+동아일보(11),
대구신문(124)+대구일보(53)

분석 결과 시각화 데이터 다운로드

뉴스 기사 정보 엑셀 파일

3. 연구방법_데이터수집

✓ **필리핀 가사관리사 키워드 분석**: 보수 신문사 기사(94개) vs 진보 신문사 기사(85개)



기간 설정

2022.12.01. – 2024.11.30.

신문사 선택 및 검색 결과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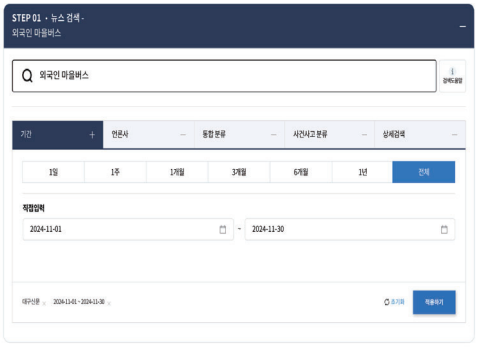
조선일보(23)+중앙일보(33)+동아일보(35),
한겨레신문(33)+경향신문(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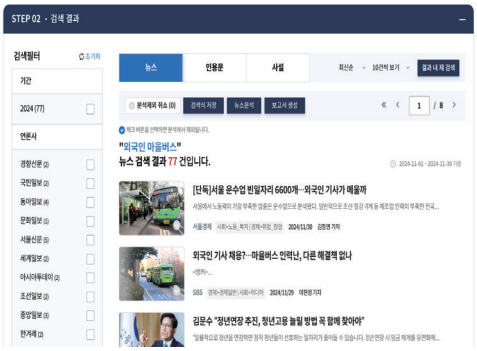
분석 결과 시각화 데이터 다운로드

뉴스 기사 정보 엑셀 파일

3. 연구방법_데이터수집

✓ **외국인 마을버스기사 키워드 분석 :** 모든 신문사 기사(75개, 이슈화 기간이 짧음)





기간 설정

2024.11.01. – 2024.11.30.

신문사 선택 및 검색 결과 확인

전체 신문사(75)

분석 결과 시각화 데이터 다운로드

뉴스 기사 정보 엑셀 파일

3. 연구방법_데이터 전처리(Google Colab 활용)

✓ **셀레니움**

```
[ ] !pip install selenium
    !apt-get update

    !apt install chromium-chromedriver
    !cp /usr/lib/chromium-browser/chromedriver '/content/drive/MyDrive/Colab Notebooks'
    !pip install chromedriver-autoinstaller
```

숨겨진 출력 표시

```
[ ] !python --version
    import selenium
    print(selenium.__version__)
    from selenium import webdriver
    from selenium.webdriver.support.ui import WebDriverWait
    from selenium.webdriver.support import expected_conditions as EC
    from selenium.webdriver.common.by import By
    import sys
    from selenium.webdriver.common.keys import Keys
    import urllib.request
    import os
    from urllib.request import urlretrieve
    import time
    import pandas as pd
    import chromedriver_autoinstaller
```

숨겨진 출력 표시

```
[ ] chrome_path = "/content/drive/MyDrive/Colab Notebooks/chromedriver"
    sys.path.insert(0,chrome_path)
    chrome_options = webdriver.ChromeOptions()
    chrome_options.add_argument('--headless')
    chrome_options.add_argument('--no-sandbox')
    chrome_options.add_argument('--disable-dev-shm-usage')
    chrome_options.add_argument('lang=ko_KR') # 한국어

    chromedriver_autoinstaller.install() # set the target URL

[ ] driver = webdriver.Chrome(options=chrome_options)
```

웹 테스트 자동화 프레임워크

웹드라이버를 통하여 실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게 작동

✓ **자연어 처리**

```
[ ] !curl -s https://raw.githubusercontent.com/teddylee777/machine-learning/master/99-Misc/01-Colab/mecab-colab.sh | bash

    from konlpy.tag import Hannanum, Kkma, Komoran, Okt

    hannanum = Hannanum()
    kkma = Kkma()
    komoran = Komoran()
    okt = Okt()
```

자연어 처리를 위한 형태소 분석기

일정한 의미가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단어 추출을 위한 도구

✓ **메인 코드**

```
[ ]
    import pandas as pd
    from konlpy.tag import Okt
    from collections import Counter
    from google.colab import files

    # Google Drive 마운트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drive.mount('/content/drive', force_remount=True)

    # 파일 경로 설정
    file_path = '/content/drive/MyDrive/Migration/News_excel/.xlsx'
    output_path = '/content/drive/MyDrive/Migration/New_excel/_top_100_keywords.xlsx'    #결과물을 저장할 경로 지정

    # Excel 파일 읽기
    data = pd.read_excel(file_path)

    # '본문' 열에서 텍스트 추출
    if '본문' in data.columns:
        text_data = data['본문'].dropna().tolist()
    else:
        raise ValueError("'본문' 열을 찾을 수 없습니다.")

    # 명사 추출 및 빈도 분석
    okt = Okt()
    all_nouns = []

    for text in text_data:
        nouns = okt.nouns(text)
        all_nouns.extend(nouns)

    # 명사 빈도수 계산
    noun_counts = Counter(all_nouns)

    # 빈도수 높은 순으로 정렬 후 상위 100개 추출
    top_100_keywords = noun_counts.most_common(100)

    # 결과를 데이터프레임으로 변환
    keywords_df = pd.DataFrame(top_100_keywords, columns=['Keyword', 'Frequency'])

    !pip install openpyxl
    !pip install --upgrade pandas
    from google.colab import drive
    import pandas as pd
```

3. 연구방법_텍스트마이닝 사례 1: 대구광역시 이슬람사원

✓ Google colab상에서의 코딩결과와 키워드 및 빈도수

```
                                                위치 \
0                                영종도,중구,대구,무산,한국,인천,북구,운북동,인천시,대현동
1                                   영종도,중동,중구,아산,영종역,대구,인천,운북동,인천시
2  중구,아산,인도네시아,홍대,한국,운북동,대현동,아람,중남아시아,말레이시아,대구,인천,북구
3                                운서,영종도,아람,중구,영종초,대구,한국,인천,북구,운북동,대현동
4                                                서운,대구,북구,대현동

                                                기관 \
0                                영종도,이슬람,무슬림,이슬람 사원,유튜브,이슬람사원,경북대,유튜버,팟캐스트
1                                                이슬람교,이슬람,무슬림,이슬람 사원,유럽,JTBC,유튜버
2                  이슬람,무슬림,유튜브,검찰,이슬람사원,천주교,한국,이슬람교 신자,경북대,유튜버,마스지드
3  기도처,다마,한국,유튜버,이슬람,무슬림,이슬람 사원,유튜브,이슬람사원,하늘고,중구청...
4                  형사2부(부장검사 이슬람,무슬림,이슬람 사원,검찰,경찰,청구,경북대,북구,법원,대구지검

                                                키워드 \
0  인천,모스크,유튜버,무산,결국,계획,토지매매계약,해지,유튜버,한국인,무슬림,인천,영...
1  종교,존중,인천,이슬람,사원,건립,유튜버,입장,인천,이슬람,사원,반발,구독자,유튜버...
2  성범죄,의혹,왈라,회개,모스크,제조명,유튜버,과거,구독자,보유,무슬림,유튜버,인천,...
3  550만,인천,한국인,유튜버,공개,이슬람,사원,명문서,구독자,보유,무슬림,유튜버,인...
4  예정지,이슬람,사원,돼지머리,주인,대구,북구,대현동,경북대,서운,인근,이슬람,사원,...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
0  다우드,이슬람,무슬림,계약금,주인들,인천,유튜버,영종도,부동산,구독자,운북동,외국인...
1  다우드림,이슬람,영종도,모스크,종교집회장,인천,무슬림,유튜버,이슬람교,주택가,중구,...
2  무슬림,다우드,구독자,유튜버,인천,성범죄,유튜브,외국인,이슬람사원,이슬람,재조명,모...
3  인천,이슬람,무슬림,유튜버,다우드,한국인,주민들,계약서,모스크,마스지드,명문서,대구...
4  대현동,무슬림,모스크,a씨,이슬람,돼지머리,대구,대구지검,주민들,건축주,건물주,부정...

                                                본문 \
0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 영종도의 부지를 매입해 이슬람 사원 건립 계획을 밝혀 ...
1  인천에 이슬람 사원을 짓겠다고 전해 일부 반발을 산 '552만 구독자' 유튜버가 "...
2  구독자 550만명을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사원(모스크)을 건립하기 위...
3  552만 구독자를 보유한 무슬림 유튜버가 인천에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립을 추진하...
4  대구 북구 대현동 경북대 서문 인근 이슬람 사원(모스크) 건설 현장 앞에 돼지머리를...
```

	A	B	C
1	Keyword	Frequency	
2	이슬람	428	
3	사원	401	
4	주민	312	
5	건축	271	
6	공사	206	
7	대구	197	
8	것	181	
9	고	174	
10	등	144	
11	이	140	
12	건립	134	
13	종교	131	
14	반대	130	
15	북구	125	
16	갈등	115	
17	허가	113	
18	북구청	112	
19	무슬림	109	
20	대	109	
21	대현동	104	
22	수	97	
23	경북	96	
24	모스크	94	
25	주	84	
26	알	83	
27	돼지	76	
28	인근	73	
29	곳	71	
30	들	69	
31	지난	66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취합 TOP 100 키워드

- 키워드 : 대구 이슬람
- 주의점 :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 불용어 제거 작업 필요
- TOP 10 키워드 : 이슬람, 사원, 주민, 건축, 공사, 대구, 것, 고, 등, 이

✓ Google colab상에서의 코딩결과와 키워드 및 빈도수

```
0  호산,중국,달서,염색산업단지,와룡시장,남문,서구,서대구산업공단,달서구,한국,베트남,...
1                                현장관리인,대구,한국,북구,대현동
2                                                대구,대현동
3                  사기동대,성서,와룡시장,태곡,대구,호산공원,달서구,한국,캄보디아,베트남,필리핀
4                                대구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당하,대구,북구

                                                기관 \
0  외룡시장,서구,달서구,계명대학교,신당동,이슬람,허세호,통계,법무부,대구,성서산업단지...
1  비상대책위원회,북부경찰서,이슬람,주민자치회,시공사,검찰,경찰,이슬람사원,비대위,대구...
2                  비상대책위원회,북부경찰서,이슬람,주민자치회,대우,경찰,이슬람사원,비대위,북구청
3  내달 호산공원서 집회,성서공단,경찰,국가권익위원회,대구경찰청,성서경찰서,서부경찰서,...
4  이슬람공동체,금속노조대구지부,자국민보호연대,이슬람사원,민주노총,경북대,성서공단지역지...

                                                키워드 \
0  외국인,지역,슬림,기숙,공단,달서,서구,체류자,다수,수도권,이주,아이,전학,학교,기...
1  무슬림,보호,대현동,주민,경찰,법원,규탄,이슬람,사원,불트,설치,누락,외국인,무슬림...
2  대구,이슬람,사원,반대,주민,건축주,고발,처분,비상대책위원회,대구,이슬람,사원,건축...
3  이주민,폭력,불법체포,총선,후보,처벌,단체,대구,이주,노동자,집회,내달,호산,공원서...
4  무슬림,이주노동자,인종,차별,철폐,대구,인권,단체,기자회견,이슬람,사원,평화,건립,...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
0  외국인,달서구,대구,슬림화,일자리,계명대학교,다문화,한국어,달서,와룡시장,반입,아이...
1  무슬림,외국인,건축법,이슬람,대현동,대구,주민들,현장관리,시공자,북부경찰서,관리인,...
2  건축주,이슬람,대구,주민들,북구청,관계자,대현동,시공업자,대우,서재원,림프카,경찰서...
3  대구,이주민,네거리,노동자,불법체포,대구경찰청,경찰서,a씨,자국민,피해자,성서경찰서...
4  대구,무슬림,노동자,이슬람,이주민,북구청,이주노동자,인종차별,관계자,김용철,서창호,...

                                                본문 \
0  공단 낀 달서·서구 체류자 다수 일하러 왔다 수도권으로 이주 아이들 전학에 학교 문...
1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무슬림만 보호한다"며 경찰과...
2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대현동 주민자치회는 3일 북부경...
3  대구 이주노동자 단체 내달 호산공원서 집회\n민간인의 폭력적인 불법 체포에 고통을 ...
4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 시민단체가 이주민에 대한 혐오 차별을 반대하고...
```

	A	B	C
1	Keyword	Frequency	
2	이슬람	721	
3	사원	686	
4	주민	490	
5	건축	450	
6	대구	407	
7	공사	376	
8	북구청	343	
9	등	288	
10	것	284	
11	대현동	267	
12	고	224	
13	갈등	209	
14	북구	196	
15	반대	190	
16	경북	177	
17	이	170	
18	종교	154	
19	문제	153	
20	주	153	
21	대한	150	
22	지난	145	
23	무슬림	142	
24	건립	139	
25	지역	132	
26	알	130	
27	대구시	129	
28	해결	126	
29	수	124	
30	명	122	
31	위	108	

대구신문, 대구일보, TOP 100 키워드

- 키워드 : 대구 이슬람
- 주의점 :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 불용어 제거 작업 필요
- TOP 10 키워드 : 이슬람, 사원, 주민, 건축, 대구, 공사, 북구청, 등, 것, 대현동

3. 연구방법_텍스트마이닝 사례 1: 대구광역시 이슬람사원

✓ 데이터 결측치 처리 및 이상치 처리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1	이슬람(428)	11	갈등(115)	21	문화(54)
2	사원(401)	12	허가(113)	22	주장(53)
3	주민(312)	13	북구청(112)	23	현장(52)
4	건축(271)	14	무슬림(109)	24	주택가(49)
5	공사(206)	15	대현동(103)	25	민원(45)
6	대구(197)	16	모스크(94)	26	중지(45)
7	건립(134)	17	돼지(76)	27	침해(45)
8	종교(131)	18	인근(73)	28	유학생(43)
9	반대(130)	19	문제(59)	29	혐오(42)
10	북구(125)	20	처분(55)	30	집회(41)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대구 이슬람' 키워드 TOP 30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1	이슬람(721)	11	종교(154)	21	혐오(87)
2	사원(686)	12	문제(153)	22	기자회견(85)
3	주민(490)	13	무슬림(142)	23	위원회(82)
4	건축(45)	14	건립(139)	24	차별(75)
5	대구(407)	15	해결(126)	25	허가(70)
6	공사(376)	16	중지(107)	26	문화(67)
7	북구청(343)	17	인권(100)	27	유학생(63)
8	대현동(267)	18	시장(99)	28	행정(60)
9	갈등(209)	19	할랄(97)	29	경찰(58)
10	반대(190)	20	돼지(93)	30	집회(58)

대구신문, 대구일보 '대구 이슬람' TOP 30 키워드

✓ Local scale vs National scale 기사 키워드 비교분석

- 두 데이터 모두 이슬람 사원건축과 관련된 주민 반응과 건축 이슈에 집중
- 주요 키워드 : 이슬람, 사원, 주민, 건축, 대구
- 시사점
  - ① 지역사회에서의 이슬람 커뮤니티 통합이 어려운 현실을 보여줌
  - ② 다문화 수용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민감성 간의 갈등주목
  - ③ 공공 정책 및 소통의 부재가 논란을 심화시킨 사례로 분석

3. 연구방법_텍스트마이닝 사례 2: 필리핀 가사관리사

✓ Google colab상에서의 코딩결과와 키워드 및 빈도수

```
위치 \
0                                                  가사관리사,한국,필리핀
1                                                  서울 지역,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인도네시아 가사관리사,필리핀
2                                                  가사관리사,인도네시아,캄보디아,가사관리사 출신국 확대,동남아,서울시,베트남,필리핀
3                                                  사관리사,서울,타보이,부산,전국운수서비스산업노조,서대문구,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한국...
4                                                  사관리사,가사관리사,서울,부산,통금,한국,필리핀,연재구

기관 \
0                                                  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국회,법무부,국무조정실,한국이민정책학회장,서울시
1                                                  고용노동부,서울시
2                                                  가사관리사,고용노동부,모니,서울시
3                                                  택시운수과,택시노,서울 택시,유튜브,교대,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부산본부,서울연구원,서울시
4                                                  사관리사,정부,대사관,가사관리사,브로커,고용노동부,법무부,서울시,노동부

키워드 \
0  버스,기사,급식,근로자,업종,외국인,근무,정착,지원,정책,총괄,컨트롤,국회,이민청,...
1  베트남,인도네시아,가사관리사,검토,필리핀,추진,확대,필리핀,관리사,외국인,가사,필리...
2  나라,검토,외국인,가사,관리,대상국,확대,고용노동부,서울시,외국인,가사,관리사,출신...
3  은전대,가사들,택시,절반,전국,기사님,전국,기사,골머리,가방끈,남자,여자,은전,던디...
4  숙소,무단이탈,출국,필리핀,가사,관리사,강제,숙소,추석,연휴,기간,서울,이탈,부산,...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
0  외국인,이민청,한국,자자체,근로자,인력난,활성화,법무부,서울시,관리사,고용노동부,외...
1  필리핀,외국인,고용노동부,관리사,관계자,인도네시아,캄보디아,면담,노동부,서울시,보험...
2  외국인,가사관리사,서울시,관리사,고용노동부,필리핀,캄보디아,오세훈,대상국,출신국,고...
3  법인택시,부산시,외국인,서울시,부산,연구원,부스,필리핀,김태훈,임채웅,사무국장,1인...
4  필리핀,관리사,부산,가사관리사,서울,황공기,2명,노동부,서울시,출입국,연재구

본문 \
0  "정책 총괄할 컨트롤 타워 없어… 국회서 막힌 이민청 신설 시급"한국 정부의 현재 ...
1  필리핀 외 국가 확대 추진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필리핀 외 다른 국가에서도 들여...
2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출신 국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  전국 곳곳 '가사님 모시기' 골머리 "가방끈 짧아도 되고 남자·여자도 안 따집니다....
4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숙소를 무단 이탈해 부산으로 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

	A	B	C
1	Keyword	Frequency	
2	가사	746	
3	관리사	596	
4	외국인	404	
5	등	395	
6	필리핀	364	
7	것	333	
8	수	326	
9	가정	298	
10	서울시	263	
11	이	232	
12	사업	230	
13	고	207	
14	서비스	192	
15	명	187	
16	시범	174	
17	최저임금	154	
18	이용	149	
19	말	134	
20	고용	131	
21	적용	128	
22	업무	123	
23	한국	120	
24	신청	113	
25	문제	109	
26	임금	104	
27	정부	101	
28	달	101	
29	일	100	
30	며	96	
31	고용노동부	95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취합 TOP 100 키워드

- 키워드 : 필리핀 가사관리사
- 주의점 :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 불용어 제거 작업 필요
- TOP 10 키워드 : 가사, 관리사, 외국인, 등, 필리핀, 것, 수, 가정, 서울시, 이

✓ Google colab상에서의 코딩결과와 키워드 및 빈도수

```
위치 \
0                                                  가사관리사,외국인 가사노동자제도,필리핀
1                                                  사관리사,가사관리사,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서울시,성동구,필리핀
2                                                  사관리사,가사관리사,필리핀
3                                                  사관리사,가사관리사,서울,경기지역마을버스노동조합,서울시,성동구,필리핀
4                                                  사관리사,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가사관리사,경북매일,전북일보,서울시,필리핀

기관 \
0                                                  가사관리사,한국신문윤리위원회,고용노동부,국립국어원,환경미화원
1                                                  서울마을버스조합,서울시버스노동조합,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국무조정실,서울시,성동구
2                                                  가사관리사,한국신문윤리위원회,고용노동부,국립국어원,환경미화원
3                                                  서울마을버스조합,서울시버스노동조합,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국무조정실,서울시,성동구
4  조선일보,중앙일보,신문윤리위,이데일리,이투데이,문화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윤리위...

키워드 \
0  외국인,가사,노동자,플랫,성인,남성,호칭,사장님,선생님,여성들,사모님,여사님,마련,...
1  마을버스,외국인,노동자,서울시,서울시,외국인,마을버스,운전기사,채용,방안,추진,고질...
2  호칭,필리핀,가사,관리사,성인,남성,호칭,사장님,선생님,여성들,사모님,여사님,마련,...
3  서울시,마을버스,외국인,가사,추진,외국인,노동자,만능,뉴스분석,서울시,외국인,마을버...
4  기사,필리핀,이모,표현,차별,신문사,11곳,주의,조치,9월,서울시,외국인,가사,관리...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
0  관리사,외국인,필리핀,이모님,노동자,가사관리사,고정관념,사장님,사모님,시범사업,고용...
1  마을버스,외국인,서울시,서울,운전기사,시내버스,성동구,내국인,가사관리사,운수업,지자...
2  관리사,필리핀,이모님,가사관리사,노동자,외국인,고정관념,사장님,사모님,고용노동부,미...
3  마을버스,외국인,서울시,희저임금,서울,운전기사,처우개선,노동자,가사관리사,시내버스,...
4  필리핀,신문윤리위,외국인,경북매일,신문사,가사관리사,노동자,딥페이크,성착취,조선일보...

본문 \
0  <※이 기사는 2024년 11월 18일자 경향신문 '[여적]필리핀 가사관리사 '호칭...
1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
2  성인 남성을 부를 호칭이 마땅지 않을 때 흔히 쓰는 낱말 '사상님'이나 '선생님'이...
3  서울시가 외국인을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질적인 채용난에 ...
4  지난 9월부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리핀 가사관리사들...
```

	A	B	C
1	Keyword	Frequency	
2	가사	709	
3	관리사	532	
4	것	341	
5	외국인	335	
6	필리핀	320	
7	등	286	
8	사업	282	
9	수	276	
10	서울시	243	
11	이	240	
12	서비스	218	
13	시범	216	
14	노동자	214	
15	고	191	
16	가정	189	
17	명	171	
18	최저임금	170	
19	말	153	
20	정부	145	
21	일	142	
22	업무	133	
23	적용	132	
24	임금	131	
25	노동	124	
26	교육	120	
27	문제	118	
28	한국	116	
29	이탈	109	
30	며	106	
31	고용	104	

대구신문, 대구일보, TOP 100 키워드

- 키워드 : 필리핀 가사관리사
- 주의점 :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 불용어 제거 작업 필요
- TOP 10 키워드 : 가사, 관리사, 것, 외국인, 필리핀, 등, 사업, 수, 서울시, 이

3. 연구방법_텍스트마이닝 사례 2: 필리핀 가사관리사

✓ 데이터 결측치 처리 및 이상치 처리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1	가사(746)	11	적용(128)	21	인력(89)
2	관리사(596)	12	신청(113)	22	숙소(89)
3	외국인(404)	13	문제(109)	23	홍콩(75)
4	필리핀(364)	14	임금(104)	24	입국(72)
5	가정(298)	15	정부(101)	25	비자(71)
6	서울시(263)	16	고용노동(95)	26	부담(70)
7	서비스(192)	17	이탈(95)	27	계약(65)
8	시범(174)	18	시간(93)	28	제공(62)
9	최저임금(154)	19	비용(92)	29	시작(60)
10	고용(131)	20	교육(91)	30	제도(58)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필리핀 가사관리사' 키워드 TOP 30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1	가사(709)	11	정부(145)	21	인력(69)
2	관리사(532)	12	업무(133)	22	범위(64)
3	외국인(335)	13	적용(132)	23	사람(63)
4	필리핀(320)	14	임금(131)	24	사회(63)
5	사업(282)	15	노동(124)	25	지급(61)
6	서비스(218)	16	교육(120)	26	도입(60)
7	시범(216)	17	문제(118)	27	신청(57)
8	**노동자(214)**	18	이탈(109)	28	이주(57)
9	가정(189)	19	고용(104)	29	비용(55)
10	최저임금(17)	20	가구(70)	30	추진(52)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필리핀 가사관리사' TOP 30 키워드

✓ **보수 vs 진보 기사 키워드 비교분석**

- 외국인 가사노동자도입과 관련된 이슈를 반영
- 주요 키워드 : 가사, 관리사, 외국인, 필리핀 / 노동자 키워드 유무
- 시사점
  - ①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서 가사 서비스의 수요 증가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
  - ②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경제적 필요와 윤리적 문제(노동 조건, 차별 등)을 제시
  - ③ 관련된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

3. 연구방법_텍스트마이닝 사례 3: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 Google colab상에서의 코딩결과와 키워드 및 빈도수

```
   사건/사고 분류1 사건/사고 분류2 사건/사고 분류3          인물                                  위치  \
0         NaN         NaN         NaN         NaN                                        NaN
1         NaN         NaN         NaN         NaN                                        NaN
2         NaN         NaN         NaN  김문수,유용하                                      청산
3         NaN         NaN         NaN         김하균          세종시,대전,공주,서종,천안,청주,계룡,월정
4         NaN         NaN         NaN  김문수,유용하  사관리사,대안,송곡,청산,한국,경제자유구역특별법,필리핀

                                                 기관  \
0                                                 NaN
1                                                 NaN
2                국세청,중앙일보,한국노동연구원,통계청,고용노동부,국회,국무조정실,서울시
3                                  세종시,적극행정위원회,이응패스
4  국세청,규정부,중앙일보,한국노동연구원,경제사회노동위원회,고용노동부,국회,교육부,서울...

                                                 키워드  \
0                                                 NaN
1                                                 NaN
2  추진,김문수,정년,연장,청년고용,방법,일률적,정년,연장,정작,청년,신호,일자리,체계...
3  세종시,이응패스,적극,행정,사례,선정,2024년,적극,행정,우수,사례,우수공무원,선...
4  청년채용,김문수,정년,연장,청년,채용,연동,반도체,시간,예외,일률적,정년,연장,정작...

                                          특성추출(가중치순 상위 50개)  \
0                                                 NaN
1                                                 NaN
2  근로자,일자리,반도체,김문수,마을버스,만큼,사업장,고용허가제,근로시간,대기업,청년들...
3  대중교통,이응패스,적극행정,인공지능,국가산단,세종시,시민들,공무원,우수공무원,외국인...
4  반도체,근로자,일자리,근로시간,김문수,마을버스,계약서,사업장,만큼,필리핀,서울시,특...

                                                 본문  \
0  서울 가장 심한 빈일자리 업종은 운수업 서울에서 노동력이 가장 부족한 업종은 운수업...
1  서울시가 얼마 전, 가사관리사처럼 마을버스 기사도 외국인을 쓰자고 정부에 건의했단 ...
2  "일률적으로 청년을 연장하면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3  세종시가 올해 처음 시행해 시민들로부터 호응받고 있는 대중교통월정액권 '이응패스'를...
4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작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A	B	C
1	Keyword	Frequency	
2	버스	654	
3	마을	512	
4	외국인	495	
5	것	345	
6	서울시	317	
7	기사	303	
8	등	265	
9	비자	263	
10	운전기사	238	
11	취업	223	
12	수	214	
13	인력	193	
14	명	176	
15	문제	163	
16	발급	150	
17	고	145	
18	도입	138	
19	건의	134	
20	이	134	
21	대상	128	
22	운수업	126	
23	서울	112	
24	전문	111	
25	비	105	
26	검토	105	
27	채용	98	
28	포함	97	
29	임금	93	
30	안	93	
31	현재	90	

전체 기사 취합 TOP 100 키워드

- 키워드 : 외국인 마을버스
- 주의점 :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 불용어 제거 작업 필요
- TOP 10 키워드 : 버스, 마을, 외국인, 것, 서울시, 기사, 등, 비자, 운전기사, 취업

✓ 데이터 결측치 처리 및 이상치 처리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NO	키워드(빈도수)
1	버스(654)	11	도입(138)	21	고령화(60)
2	마을(512)	12	건의(134)	22	부족(59)
3	외국인(495)	13	운수업(126)	23	기준(57)
4	서울시(317)	14	검토(105)	24	시범(56)
5	기사(303)	15	채용(98)	25	노동(55)
6	비자(263)	16	임금(93)	26	교통(54)
7	취업(223)	17	추진(75)	27	인원(54)
8	인력(193)	18	처우(72)	28	운행(47)
9	문제(163)	19	개선(71)	29	운영(45)
10	발급(150)	20	업계(67)	30	정책(45)

전체 기사 '외국인 마을버스' 키워드 TOP 30

최근 이슈화된 키워드 분석

- 서울시의 외국인 버스기사 고용과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 주요 키워드 : 버스, 마을, 외국인, 서울시
- 시사점
  ① 특정 직업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확대되고 있음
  ② 사회적 일자리부족과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
  ③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줌

4. 시사점_질적 이민연구와의 비교 및 차별점

✓ **데이터 기반의 객관성 확보**

- 인터뷰, 참여관찰, 사례분석 등을 통해 적은 사례를 깊이있게 탐구하는 질적연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음
- 대규모 데이터를 분석하여, 연구자의 개입이 적은 데이터 기반 연구를 제공 -> 재현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음

✓ **대규모 데이터 분석 가능**

- 소규모 데이터를 깊이있는 분석을 하는 질적연구는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전반적인 사회적 담론과, 정책에 대한 반응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이민연구에서의 트렌드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음

✓ **시간과 비용 효율성을 증대**

- 질적연구는 심층 인터뷰와 사례 연구같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직접적인 연구 개입이 필요함
- 데이터 수집과 분석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음

✓ **트렌드 분석과 예측 가능성**

- 질적연구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패턴을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민연구에서 사용할 이민정책과 이민담론의 트렌드 파악을 용이하게 해주고 예측할 수 있음

✓ **주제의 다양성**

- 텍스트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주제나 숨겨진 연관성을 도출할 수 있음

4. 시사점_텍스트마이닝 기반 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향

✓ **텍스트데이터의 질적 문제**

- 입력 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이터, 오타, 편향된 자료는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잃을 수 있음

✓ **비정형 데이터의 복잡함, 감정 분석의 한계**

- 자연어는 중의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므로, 단순한 코딩만으로는 데이터의 맥락과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기 어려움 -〉 수동적인 개입이 필요
-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가 긍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부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식별하기 어려움

✓ **비구조화된 텍스트의 정보 손실**

-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원문의 세부적인 정보와 맥락 손실가능성
- 중요한 텍스트와 비정형적 표현이 제거될 가능성이 있음

✓ **개선방향**

- 데이터품질관리 : 데이터수집 단계에서 중복된 텍스트 제거, 편향 데이터 제거 등을 통해 품질 개선
- 다양한 분석기법 활용 : 감정 분석, 주제 모델링, 키워드 분석 등 다양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결합. 질적 분석을 통해 맥락 보완 등
- Deep Learning 도입 : 자연어 처리(NLP)를 강화하기 위해 최신의 Deep Learning 기술을 도입하여 텍스트의 맥락과 의미를 분석(한국어에 특화된 기술 도입)
- 시각화 도구 활용 : 네트워크 그래프, 워드 클라우드 등을 활용

5. 결론_연구요약 및 후속연구 제안

✓ **연구목적 및 중요성**

-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 한국의 이민정책 및 이민담론 분석에서 기존 질적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양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

✓ **핵심 결과**

-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여 주요 키워드와 트렌드를 도출함으로써 이민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
- Local scale-National scale, 보수-진보의 기사를 분석함으로 키워드 도출을 통해 기사 별 차이 여부를 제시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해 앞으로 이민연구에서 다양한 관점(지역사회, 경제적 효과, 이슈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제시

✓ **후속연구**

- 다양한 데이터 출처 활용 : 현재 제시한 사례는 '빅카인즈 뉴스'만 분석한 상태. 이외 모든 뉴스 기사, 블로그, 카페 등으로 데이터 범위를 확장하여 연구의 깊이와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정서 및 담론 분석 : 텍스트의 감정 분석을 다루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이민 관련한 담론에 대해 긍정요인과 부정요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기술 발전과의 연계 : 최신 Deep Learning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텍스트마이닝의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한국어 특화 모델 개발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 : 텍스트마이닝 결과를 기반으로 질적 사례 연구들과 병합함으로써 융합적 연구 접근 방식을 모색함

참고문헌

[논문]

- 강진구(2024), 텍스트마이닝으로 본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 유투브 댓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Vol.-No.47, pp.7-31
- 강진구(2019),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통해 본 〈다문화콘텐츠연구〉의 연구 경향 분석,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2, pp.331-356
- 강진구 · 김현철 · 모희수 · 안기수(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다문화 연구동향 분석,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5, pp.45-69
- 김진형(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언론 기사의 핵심 이슈 및 논조 분석 : 국내 이주노동자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지능정보연구 Vol.30 No.1, pp.257-275
- 김이현 · 오인수 · 반지윤(2024),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이주배경 구성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연구동향 분석,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Vol.44 No.2, pp.295-327
- 서보영 · 박현재(2021),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이주관련 연구동향 분석,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12 Vol.12 No.4, pp.2323-2336
- 이수정 · 최두영(2020), 사회과학을 위한 양적 텍스트 마이닝 : 이주, 이민 키워드 논문 및 언론기사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Vol.20, no.5, pp. 118-127
- 조태호(2001), 텍스트마이닝의 개념과 응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식정보인프라 제5권, pp. 76-85
- 하재빈(2021),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융합학회, 융합정보논문지 Vol.11 No.9, pp.17-27

[단행본]

- 이민정책연구원(2021),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이민정책 방향 : 수용가능이민과 지역기반의 이민행정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연구원(2015),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이민정책의 세계적 흐름과 과제

[홈페이지]

- 빅카인즈 홈페이지, https://www.bigkinds.or.kr/, 최종열람 2024.11.30.
- Google Drive 홈페이지, https://drive.google.com/, 최종열람 2024.12.01.
- Google Colab 홈페이지, https://colab.research.google.com/, 최종열람 2024.12.03.
- IBM 홈페이지, https://www.ibm.com/, 최종열람 2024.12.03.
- 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s://www.riss.kr/, 최종열람 2024.12.03.

감사합니다

[세션#3]
이민정책의 동학과 실천 과제: 노동과 건강

사회
이충훈(전북대)

발표1. 유하영(이화여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인 분석:
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2. 이지영(서울대)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실무자의 실천 경험을 통해 본 제도화된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가능성과 그 함의

발표3. 김보은(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현황 및 관련 요인

토론
한준성(강릉원주대)
이기호(서울노동권익센터)
이서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발표1. 유하영(이화여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인 분석: 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요인 분석
– 이주노동자 정책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 유하영

문제제기

- ✓ “MENA 역설(MENA paradox)”: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여성들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World Bank, 2013). cf. 인적자본이론(Becker, 1981)
- ✓ 왜 MENA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가? 지리적·문화적으로 유사한 역권에서 FLFP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일까?
- ✓ 같은 이슬람문화권, GCC, 그리고 GDP per capita in MENA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비교.
- ➔ 이주노동자정책과 여성정책 간의 관계 분석.

선행연구검토

- ✓ Norris & Inglehart(2003), Huntington(1993)의 '문명의 충돌(clash of civilization)' 개념을 활용하여 서구와 이슬람 문화의 균열이 서구 여성과 무슬림 여성의 지위 차이로 이어진다고 주장.
- ✓ Ross(2008)는 Oil and gas rents per capita와 FLFP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Ross는 이를 네덜란드병*의 영향이라고 설명.
- ➔ 2020년 이후에는 Oil production 혹은 Oil rents per capita와 FLFP 사이에 뚜렷한 상관관계를 관찰할 수 없음. Oil production이 증가할 수록 산업부문에서 FLFP가 감소하긴 하지만, 오히려 서비스부문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보임(Mavisakalyan, et al., 2019).

* 천연자원에 의존해 급성장한 국가가 산업 경쟁력 제고를 등한시해 결국 경제가 뒷걸음질하고 국민 삶의 질도 하락하는 현상을 뜻한다. '자원의 저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선행연구검토

- ✓ 공공부문 일자리가 FLFP에 영향을 미침(Assaad, et al, 2020).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쉬운 공공부문을 선호.
- ✓ MENA의 공공부문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 고용률은 이를 대체할 만큼 커지고 있지 않음(Assaad, 2019). MENA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게 된 이유는 권위주의 정권이 민주화를 억제하는 대신 복지비용을 늘리고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보장하던 거래, 즉 "권위주의적 협상(authoritarian-bargaining)"(Desai, et al., 2009)이 막을 내렸기 때문.
- ✓ 열악한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채우고 있는 존재는 이주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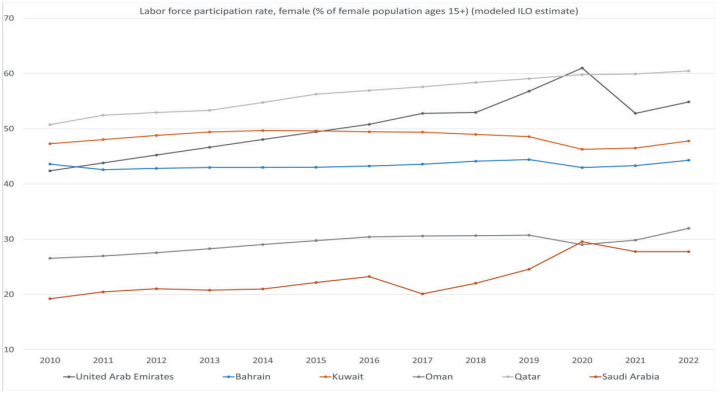
선행연구검토

- ✓ 아랍 국가에서 이주노동자가 전체 노동력의 80% 가까이되며, 그 대부분은 남성(ILO, 2021). GCC* 이민노동력 비중은 카타르 95%, 쿠웨이트 86%, 오만 78%, 바레인 74%, 사우디아라비아 57%, 전체 이주노동자 중 남성이 88%(GCC-STAT, 2020).
- ✓ 공공부문이 여성화되고 민간부문에 남성이 많이 고용된다면, 남성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민노동력이 늘어날수록 FLFP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됨. 하지만 오히려 GCC에서는 이주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FLFP가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됨.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 회원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선행연구검토

- ✓ GCC에서 FLFP가 가장 낮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가장 높은 카타르를 연구대상으로 선정. 같은 이슬람 문화권이고, 같은 지역협력기구에 속하며, 1인당 GDP 및 그중 석유로 인한 이윤도 MENA에서 상위권에 자리함.



〈표 1〉 GCC 국가별 FLFP 변동률 (2010-2022년), 자료: World Bank

분석 틀: 노동시장 분절이론

- 정의: 근대적 노동시장은 시장 경쟁의 원리가 균질적으로 작동하는 단일 시장이 아니라, 안정적 고용과 임금이 관료제적 규칙에 의해 보호되는 일차 노동시장과 그 경계 밖에 있으면서 젠더화, 인종화된 이차 노동시장으로 분절된 시장 (Doeringer and Piore, 1985).
- 자본가들이 분절노동시장을 활용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고임금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배제하거나 저임금 노동 분야에만 한정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 자본가들은 고임금 노동자의 통제를 통해 이민자와 소수인종집단의 저임금 노동자를 활용하고자 함.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중의 차별을 경험(Bonacich, 1972).
- MENA에서 공공부문은 일차 노동시장이고 민간부문은 이차 노동시장.

GCC 이주노동자 현황

- 김재희(2021)는 걸프 내 이주노동자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배경을 석유자원과 걸프국가의 개발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설명. 이들은 주로 동남아시아와 인도 출신, 월급의 90%를 본국으로 송금. 유가하락 및 경제성장 둔화로 몇 국가는 실업문제를 해결, 걸프사회의 정체성 수호를 위해 현지화 정책 추진.
- '후견인(Kafala)'제도는 고용주가 이주노동자들을 해외에서 데려오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듦(Pattisson, 2013).

사우디아라비아 이주노동자정책

- 사우디는 Saudization을 의미하는 Nitaqat(니따까트)를 시행해 민간부문에서 자국민 고용 촉진. 현지노동력을 건설 분야에는 6%, 기타 금융서비스 분야에는 30%, 석유 분야에는 50%를 할당(김재희, 2021).
- Vision 2030에 따라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업구조에서 벗어나고자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부양가족 수수료를 도입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민간부문에 세금을 더 부과하며, 불법체류자 추방캠페인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대규모 추방 정책을 펼치고, 특정 소매업에는 자국인을 고용하는 정책을 수립(Aref, 2021). 서비스업에 이주노동자 고용 금지 조치 시행→여성노동력으로 대체(김재욱, 2023).

사우디아라비아 이주노동자정책

-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여성노동자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임.
- 육체노동이나 서비스업 종사를 기피하는 사우디의 정서는 정부의 외국인 고용 억제 정책이 실패한 가장 큰 요인. 아직도 가정부나 운전기사 등 가계부문 직접고용 일자리의 경우 100% 이주노동력이 담당.
- 니따까트의 목적은 사우디 시민들이 좋은 조건의 공공부문 일자리만을 찾으며 민간부문 일자리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는 것. 수출부문에서 일하는 자국노동자가 늘어나긴 했지만,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치러야 했으며 경제 전반의 경쟁력도 감소(Cortés, et al., 2023).

카타르 이주노동자정책

- FIFA 월드컵이 결정된 2010년부터 대규모 이민노동력 흡수 및 사건·사고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응하여 카타르 정부는 법 개정을 포함해 블루칼라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개혁조치 시행.
- 임금 보호 체계를 제약하는 '2015 법률 제 21호' 개정을 통해 고용주의 허락 없이도 이직 허용. '2018 법률 제 13호'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는 고용인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 기간 안에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국가를 떠날 수 있으며, 영주권 부여 기준 역시 완화됨.
- 무려 80국에 본국으로의 무비자 입국 허용(Aref, 2021).

카타르 이주노동자정책

- 시민사회의 노력: 팬데믹 이후 격화된 외국인 혐오를 잠재우기 위해, 2021년 카타르의 가장 큰 공공운수인 모와살랏(Mowasalat)의 공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응집력을 높이고 더 나아가 자국민과 외국인 사이의 노동정책 격차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표명(Aboueldahab, 2021).
- 이주노동자 인권문제를 좌시하지 않는 카타르. Social and Economic Survey Research Institute(SESRI)는 카타르의 이주노동자복지지수(GWWI)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Diop, et al., 2020).

이주노동자정책과 여성정책

- 사우디는 MENA 역설의 대표적인 사례.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FLFP는 점점 감소. 반면, 카타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2010년 이후 쭉 남성을 상회하고 FLFP도 증가.
- 카타르도 사우디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선호하며 민간부문의 열악한 일자리는 외국인노동자가 종사하는 구조(Parvez, 2021). 반면, 카타르 정부는 남성을 능가하는 여성의 인적자본을 활용하겠다는 Quatarnization Plan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그 범위를 민간부문까지 넓히고자 함. 여성이 다양한 부문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

한계 및 함의

- 두 국가의 인구수를 통제하지 못함. 카타르 인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현저히 적음. 이주노동자 유입 초기 이주민과 자국민의 비율 격차는 이에 기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의 비율과 FLFP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왜 이러한 상관관계가 관찰되는지 탐구. 본 연구는 외국인노동자정책과 여성정책을 이중노동시장 이론을 중심으로 분석.
-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노동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를 여성노동자로 대체하려고만 하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동기가 저해됨.
- 낭비되는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결하는 것이 중요. 여성과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가 과제.

참고문헌

- 김재희. (2021). 아랍언론 속 걸프 내 이주노동자들의 현황과 전망 연구. 통합유럽연구, 12(1), 201-238.
- 엄익란. (2018). 3장. 사우디 비전 2030과 여성. 연간정책보고서, 2018, 45-66.
- 정재욱. (2023).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 경제참여 확대 정책의 경제적 효과. 한국중동학회, 43(3), 83-120.
- Aboueldahab, N. (2021). *Social protection, not just legal protection: Migrant laborers in the Gulf*. Brookings.
- Aref, A. (2021). Social inclusion and exclusion in GCC labour policy transformations: Evidence from Qatar and Saudi Arabia. *J. Pol. & L.*, 14, 124.
- Assaad, R., Barsoum, G. (2019). *Public Employment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ZA World of Labor.
- Assaad, R., Hendy, R., Lassassi, M., and Yassin, S. (2020). Explaining the MENA paradox: Rising educational attainment, yet stagnant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Demographic Research*, 43, 817.
- Becker, G. S. (1981). *A Tretise on the Family*. Harvard Uiversity Press.
- Bonacich, E. (1972). A Theory of Ethnic Antagonism: The Split Labor Marke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7(5), 547-555.
- Cortés, P., Kasoolu, S., & Pan, C. (2023). Labor Market Nationalization Policies and Exporting Firm Outcomes: Evidence from Saudi Arabi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71(4), 1397-1426.
- Desai, R. M., Olofsgård, A., and Yousef, T. M. (2009). The Logic of Authoritarian Bargains. *Economics & Politics*, 21(1), 93-125.
- Diop, A., Al-Ali Mustafa, S., Ewers, M., & Le, T. K. (2020). Welfare index of migrant workers in the Gulf: The case of Qatar. *International Migration*, 58(4), 140-153.
- Doeringer, P. B. & Piore, M. J. (1985). *Internal Labo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ME Sharpe.
- GCC-STAT. (2020). *Quarterly Report on labour Statistics in the GCC Countries- First Quarter of 2020*.
- Huntington, S. P. (1993). The clash of civilizations?. *Foreign Affairs*, 72(3), 22-49.
- ILO. (2021). *ILO global estimates on international migrant workers* -Results and methodology- Third edition.
- Mavisakalyan, Astghik, and Yashar Tarverdi. (2019). Oil and women: A re-examination. *Energy Economics*, 82, 191-200.
- Norris, P., and Inglehart, R. (2003). Islamic culture and democracy: Testing the 'clash of civilizations' thesis. *In Human values and social change*, 5-33.
- Parvez, Z. (2021). *Women Workforce Participation in Qatar: Oil, Culture and Demographic Trends. Contemporary Qatar: Examining State and Society*. Springer Singapore.
- Pattisson, P. (2013). Revealed: Qatar's world cup 'slaves'. *The Guardian*, 25.
- Ross, M. L. (2008). Oil, Islam, and wome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102(1), 107-123.

발표2. 이지영(서울대)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실무자의 실천 경험을 통해 본 제도화된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가능성과 그 함의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및 한계와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쟁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수료 이지영
leejee@snu.ac.kr

목 차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3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와 특성
4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과 한계
5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쟁점
6 결론 및 제언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이주노동자 초빙 정책의 확대와 이주노동자의 증가**
  - 한국은 근래 인구위기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동이주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정부는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정주화를 허용하는 추세
  - 특히 노동력이 부족한 4D업종의 '비전문'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인구 증가

- **이주노동자의 체류지원 필요성**
  - **이주민으로서의 취약성 : 한국어 의사소통의 어려움, 인종차별과 타자화, 제한적 정치권**
  - **4D업종 노동자의 취약성 : '위험의 이주화'**
    - 농업, 어업, 제조업 등 4D업종 중심의 이주노동자 초빙 정책
    - 지속적인 기본권과 노동권의 침해 문제 제기 : 산재, 임금체불, 사업장 내 폭력, 주거권 등
  - **사회통합의 과제 : 지역사회 주민이자,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노동자**
    - 일반고용허가제 노동자(E-9)의 경우, 약 5-10년에 달하는 기간동안 중장기 체류
    - 체류 중 갖는 다양한 욕구(needs)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확충 필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비전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배제**
  - ‘비정주, 단기체류’를 전제하는 순환이주 정책인 비전문 이주노동자 초빙 정책
  - 국내 외국인 정책은 전문인력(E-1~E-7)과 ‘다문화가정’ 위주의 정책적 포섭(정동재, 2020)
  - 비전문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 정책은 상대적 공백 : ‘차별적 배제’라는 다수 선행연구의 비판

- **이주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지자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 확대**
  - 이주정책의 전환점 - 근래 정주화 허용을 중심으로 한 이주정책의 대폭 개편
  - 최근 경기, 전북, 전남, 충남, 충북, 경북, 울산 등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을 설립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체계를 위한 초석 마련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한편, 1990년대 이래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립, 운영**
  - 민간 이주노동자 지원단체(NGO), 지자체 산하 지원단체, 중앙정부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중앙 상담센터 등

- **노동이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시민사회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역할 : 선행연구는 주로 시민사회-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민간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초점**
  - 외노협 등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연대체는 한국 노동이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 수행
  - 또한, 국제적으로 시민사회는 노동이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로 주목됨(Piper, 2017)
  - 이에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민간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과 역할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옴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

- **시민사회의 영역에 속하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증가**
  -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수행
  - 근래 활발히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산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도 대개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속함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의와 초점적 탐색의 공백**
  - 민관협력 지원기관은 '공공' 으로 여겨지거나, '정부 주도 거버넌스'의 일부로 논해지는 등 합의된 정의 부재
  - 선행연구는 정부 지원을 받는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한 탐색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은 시민사회와 정부 사이의 중위적 성격 가지는 '민관협치'의 사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 목적

- 이주노동자에 대한 체류지원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요한 서비스 전달체계인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의와 기관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대한 정의 및 특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3장), 실무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 현장의 현황과 한계**를 탐색하고자 함(4장)
- 또한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에 있어 검토되어야 할 쟁점**을 제시하고(5장), 앞선 논의를 기반으로 **실천적,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함(6장)

2. 연구 방법

2.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 **일반적 질적 연구**
  - **자료 수집: 심층 인터뷰**
    - **연구 참여자 모집**
      - 주요 정보제공자의 추천을 통해 지원 경험이 풍부한 지원가를 눈덩이 표집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모집 공고 발송, 연구 참여자 모집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 7인
      - 주로 서울, 경기 소재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실무자 참여
      - 1.5-3시간 가량의 줌 또는 대면 인터뷰 실시
  - **자료 분석**
    - 주제분석 (thematic analysis)

3.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와 특성

3-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와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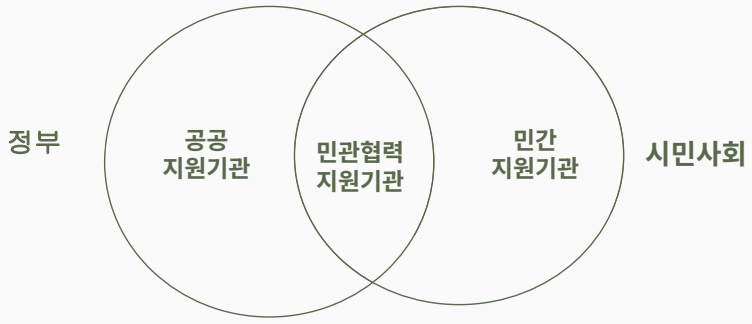
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

- **국제적 정의**
  - **MRCs (Migrant worker resource centers) (ILO, 2024)**
    - 이주노동자가 이주 전 과정(출국 전, 도착 후, 귀환 및 재통합)에서 정확한 정보와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공정한 고용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 수용국과 송출국의 시민사회, 정부, 노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단독 또는 협력 운영하는 지원기관을 통칭하는 광범위한 정의
- **국내 정의**
  - 합의된 정의는 부재하나, 시민사회의 맥락에서는 이주노동자의 권익 옹호 및 삶의 조건 향상을 목표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 (박경태, 2005)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주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
  - 선행연구는 대개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을 엄밀히 유형화하지 않거나 '공공' '민간' 등으로 구분

3-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와 유형

2)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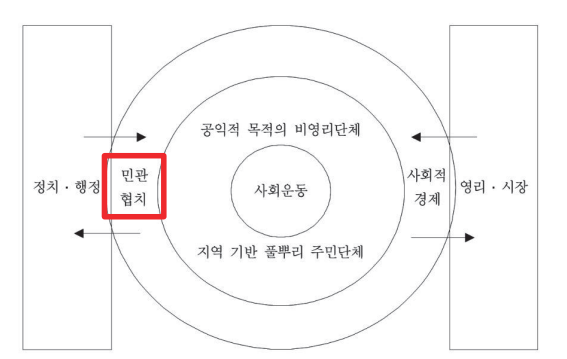
- **국내의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은 크게 공공, 민관협력, 민간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이란 시민사회가 민간위탁 등을 통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기관을 지칭함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유형

3-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정의와 유형

2)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유형



〔그림 2〕 시민사회 · 국가 · 시장의 제도적 논리의 관점에서 본 시민사회의 내적 구성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은 시민사회와 국가의 접경지대에 있는 "민관협치"의 일례 (신진욱, 정보영, 2020)

3-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도입과 변천

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제도화와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확산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외국인고용법 제정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제도화
    - 제21조 - 정부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외국인력상담센터) 관련 규정
    - 제24조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관련 규정

-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지원사업을 통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확충**
  - 2004년 12월 한국이주노동자지원센터 개소 → 2023년까지 9개 거점 및 30여 소지역 기관 운영
  - 권리 침해 구제, 종합적 지원 서비스 제공 -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기능

- **지자체 차원의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과 지자체별 지원체계 점증**
  - 경기도, 서울시 등 지자체 -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고용법 제24조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도입과 변천

2) 2024- :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폐지와 지원기관 운영 책임 지자체 이양

- **2023년 지원기관 지원사업 예산 전액 삭감 통보 - 기존 거점 및 소지역 지원기관 규모 축소 또는 폐쇄**
- 이후 기존 사업을 감액 및 한국어 교육, 지방고용관서 통역 상담원 배치,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개편 (고용노동부, 2024.4.30)
  - 지방고용관서의 경직된 '지원'으로 인해 실효성에 대한 비판
- 2024년 1월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발표 - 기존 9개 거점기관 중 6개 기관 재개관, 부산, 전북에 지원센터가 새로 개관, 광주는 운영기관 교체
- 기관 소속 지자체로 변경, 부분적 예산 지원하며 **지원기관 운영 책임의 지자체 이양**

표 3. 고용노동부 산하 거점 및 소지역 지원기관 추이 (2014-2024)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거점	8	8	8	8	9	9	9	9	9	9	공모사업 전환
소지역	30	31	31	29	34	34	35	36	31	35	사업 중단
쉼터 보유 (소지역)	-	14	16	16	18	18	코로나 사업 일시 중단	17	16	14	사업 중단

출처: 고용노동부, 워크인코리아 웹사이트 재구성

3-3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주요 사업

유형	주요 사업
상담 지원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사업장 변경, 출입국 문제, 법률, 건강, 가정 문제 등
교육 지원	한국어, 기술 및 직업, 자격증 교육
의료 지원	무료 진료, 기초 진료, 건강 검진, 백신 접종
문화 지원	문화 행사 및 체험 지원, 문화 교류 증진 활동
지역사회 조직	자원 활동, 지역사회 교류, 인권 교육
커뮤니티 지원	국가별 커뮤니티, 자조모임
쉼터 운영	거처가 필요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임시 거주 공간

4-1.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4-1.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1) 지원 대상

- 대개 한국어 의사소통 및 체계에 익숙하지 않고 그 수가 많은 **일반 고용허가제(E9) 이주노동자가 주 지원 대상**
- **기관 소재 지역의 이주민 구성에 따라 주요 지원 대상이 상이**
  - 지역 특성에 따라 결혼이주민, 동포 지원이 주가 되기도
    - *단, 참여자 대부분이 서울, 경기 소재 지원기관 실무자임을 고려할 필요 있음
- **미등록 이주노동자 지원 여부는 기관별로 상이**
  - 기관의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
  - 외부 자원 연계를 통한 지원- 시민사회 단체와의 협력
- **위탁 주체에 따른 지원 대상의 차이: 고용노동부 - 지자체**
  - 과거 고용노동부 산하 지원기관의 경우, 고용허가제 노동자(E-9.H-2)만을 지원 대상으로 상정
  - 지자체의 경우, 보다 느슨한 지원 대상 규정

4-1.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2) 지원의 내용과 방식

- **상담 + 서비스 제공을 통한 종합적 지원**
  - **상담 :** 노동, 체류, 생활 상담 전반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지원
    - 노동상담: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등 노동이주 정책 및 노동권 관련 상담 및 지원
    - 체류상담: 체류자격 등 관련 상담 및 지원
    - 생활상담: 생활 전반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상담 및 지원

    → 노동상담, 체류상담: 실무자에게 축적된 '노하우'를 통한 상담 제공 - 기관에 따라 상담 역량 상이
  - **서비스:** 한국어 교육, 자기개발 교육, 취미 및 커뮤니티 사업 등
    - 교육, 문화 등의 범주는 하달, 기관 차원에서 서비스 기획 및 전달

4-1.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3) 지자체, 기관별 차이

- **상담, 교육, 문화 등의 기본적 사업 틀은 유사**
- **상담 역량의 기관별 편차**
  - 노동, 체류 전문 상담 역량의 기관별 편차 존재
  - 기관 규모 및 상담 역량에 따라 서비스에 주력하는 기관과 상담,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기관이 나뉨
- **지자체별 예산 편차**
  - 지자체의 이주민 인구 및 이주민 지원 관심도에 따른 예산 편차

4-1.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현황

4) 지원의 변화

- **이주정책의 변화에 따라 지원기관의 지원 대상 및 내용도 변화함**
- **최근 정주화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 대상/목적/기조의 변화**
  - 사례 1) 센터 A: 이주노동자 자녀 보육 지원, 이주배경 청소년 등 동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실시
  - 사례 2) 센터 B: 귀환 후 재정착을 염두에 둔 서비스 제공 → 자기계발 및 자기개발을 위한 서비스 제공

"이주와 관련된 흐름의 변천사라는 게 있잖아. 거기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성도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외국인 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가야 돼." (D)

4-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4-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1) 위·수탁 관계에서 기인하는 한계

- 행정에 매몰된 실천
- 수직적, 관리적 관계
- 현장 목소리 반영 없는 일방적 사업 하달
- 경직된 사업 내용

2)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모호한 성격과 근거

- 기관의 운영 목적 및 원칙에 대한 정립된 방침 부재
- 제한적인 외국인고용법상 지원의 목적
- 지자체별 이주노동자 지원 조례 도입 여부 상이
- 사회복지사업법상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미포함
- 지원 범위와 기관의 권한 사이 격차

4-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3) 열악한 실무자 처우

- 열악한 실무자 처우로 인한 낮은 근속연수와 숙련 실무자 이탈
- 이직 시 사회복지사 경력 불인정 또는 부분 인정 (사회복지사업법 미포함)
- 이주민 상담사의 열악한 처우

4) 실무자 교육 및 정보 제공 체계 미비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실무자 교육체계 부재
-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체계 부재
- 지자체 내 이주민 지원 네트워크 정보 부족

4-2.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한계

5) 이주민 정책의 한계

- 고용허가제의 한계
- 분절된 체류 자격
- 제한적인 이주민 복지 자원
- 공적 이주노동자 지원의 딜레마 - 노동이주정책의 구조적 문제 고착

5.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쟁점

5.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쟁점

-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 vs 지자체
- 이주노동자 지원의 목적?
- '이주노동자'의 범위?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역할과 지원 범위?
- 이주노동자 지원의 원칙?
- 이주노동자 지원의 방식?
- 이주노동자 체류지원의 근본적 한계?

6. 결론 및 제언

6. 결론 및 제언

- 노동이주 정책의 양가성 - 착취 vs 개발(development) (Lenard, Straehle, 2010)
- 국가의 강한 통제를 통해 시장 개입의 폐단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상찬받은 고용허가제
- 동시에, “효율적이지만 착취적인 단기체류 이주노동 관리 양식”(김영현, 정현주, 2018)
- 노동이주 정책은 정말 필연적 선택인가?
  - 점검할 필요 있으나, 1980년대 말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

    ➡ 세계화의 조건 하에서, 제도가 부재한 상태에서도 이주노동자는 증가하였음
- 노동이주 정책이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라면,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 착취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이주민의 권리를 증대하는 방향으로의 시지프스적 추구

➡ 체류, 노동이라는 이주노동자의 핵심적 삶의 조건과 직결된 노동이주 정책의 개선 +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

\+ 이주민의 기본권 보장은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함

6. 결론 및 제언

- 국민국가의 한계와 이주정책의 통치성 앞에서 이주노동자의 권리 옹호해온 시민사회 지원기관
-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제도화가 이주노동자 지원운동에 미친 영향?
  - 박경태 (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운동 vs 복지 이분법적 구분 불가
    - 이주민 운동의 차원에서도, 양질의 공적 이주민 지원체계 구축은 지향할 지점
    - 공적 이주민 지원체계의 확립 = 이주민 운동 핵심인 '경계의 확장'

- 시민사회 - 정부 사이 연결의 가능성을 담지한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 그러나 이주정책의 통치성에 포섭된 실천, 제한적 여건, 모호한 역할과 권한 등의 한계
- 갈림길에 선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서비스 전달 기관과 가치 실현을 위한 재원 활용 사이의 경계에 위치

6. 결론 및 제언

- 포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정부 및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역할
- 국가의 역할
  - 이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비전 수립
  - 중앙정부, 지자체, 시민사회 역할 분담 및 협력을 바탕으로 권리기반 이주민 지원체계 확립
  - 노동이주 정책 및 사업장의 개선과 공적 이주민 지원체계 확충의 동시 추구
  - 이주노동자 지원 현장에서의 경험을 노동이주 정책에 반영하는 순환적인 체계 도입
- 민관협력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역할
  - 이주민의 권리, 욕구에 기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지향
  - 정부 - 시민사회 지원기관 사이 위치의 전략적 활용
  - 경계 확장 실천
- 최소한의 기준: 이주에 대한 권리중심 접근 (Rights-based approach to migration)

6. 결론 및 제언

1. 이주노동자 지원기관의 역할 및 운영 원칙 확립
2. 운영 매뉴얼 구축 및 지속 업데이트
3. 이주노동자 실무자를 위한 교육 체계 마련
4. 지역사회 내 이주민 분포 및 특성에 맞는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치 및 사업 운영
5. 시도별 이주민 인권센터 설립
6. 이주노동자 욕구 기반의 사업 실시
7. 이용자 수에 입각한 정량적 평가 방식의 변화
8.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포함 가능성 검토
9. 실무자 및 통역 상담사 처우 개선
10. 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사업 대상 확대 및 사업 내용의 다각화
11. 체류자격에 따른 지원 사각지대 검토와 대안 마련
12. 중앙정부 - 지자체 - 시민사회 협력을 통한 권리중심 이주 거버넌스 구축

연구의 한계와 보완 방향

- 탐색적 연구
- 참여자들이 주로 서울, 경기 지역에 분포
- 내용 보완 및 인터뷰이 추가 모집 요망

감사합니다.

연구 관련 문의 및 피드백: leejee@snu.ac.kr

발표3. 김보은(국립정신건강센터)

한국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현황 및 관련 요인

한국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현황 및 관련 요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김보은 연구원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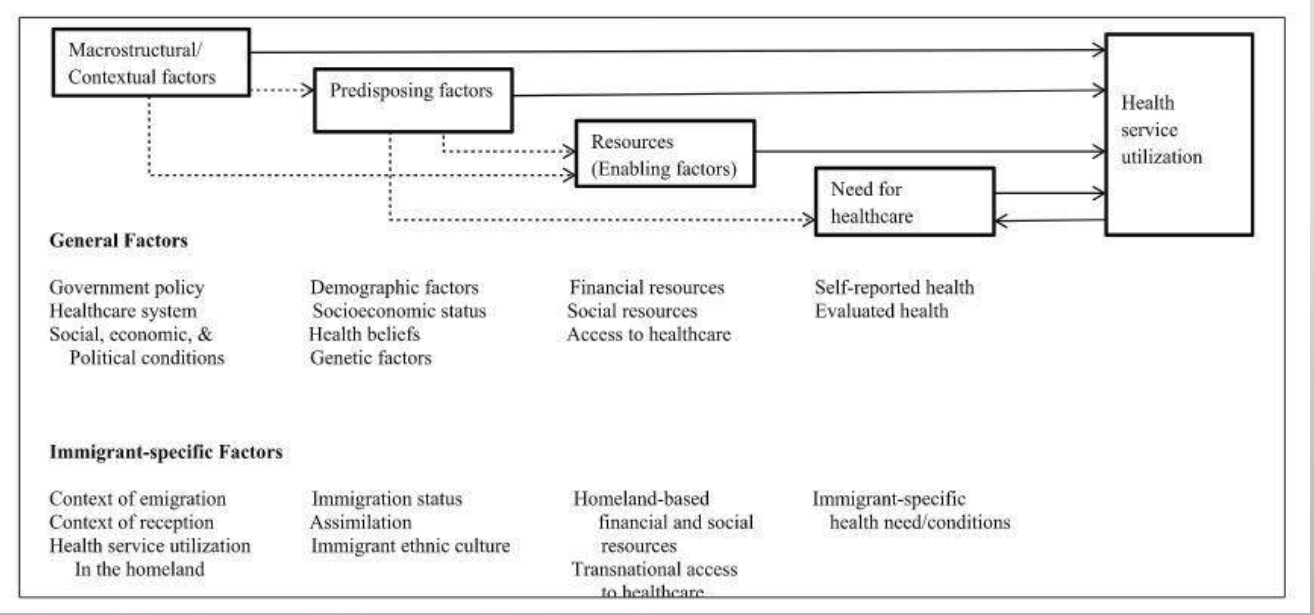
-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3번 목표는 “건강한 삶의 보장과 모든 세대의 복지 증진 "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난민을 포함한 이민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임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 한국은 2023년 기준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약 246만 명으로, 총인구의 4.8%를 차지하였음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4).
- 체류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질적으로 외국인을 한국 사회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이주민 통합정책평가 시 가장 많아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인 MIPEX(이주민통합정책지수)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 중 56점이었으며, 52개국 중 13위였음. 그러나, 8개 분야 중 ‘보건 ' 은 40점으로 가장 낮았음. 또한, 한국에 이주민 건강보험 자격 강화를 권고하기도 했음.

배경

- 한국은 전국민 의무가입의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외국인도 조건에 따라 가입해야 함.
- 그러나 단기 체류자나 미등록 이주민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함.
-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의료 이용 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이 보고되었음
- 언어 장벽,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 차별 등 (Lee, Oh, & Lee, 2011; Kim, Ahn, Kim, & Kim, 2014)
- 이주민이 가진 비자 유형은 의료 접근 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F비자 소지자는 체류 안정성을 가지므로 한국인과 비슷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G-1 비자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이 어려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주저할 수 있음.

배경

- 이주민 의료 서비스 이용 프레임워크 (Yang & Hwang, 2016)



목적

- 본 연구는 난민,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한국 거주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현황을 파악하고, Yang & Hwang 모형을 이용하여 비자 유형 등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방법 - 자료

- 한국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된 "2020년 이주민 건강권 실태조사 및 의료보장제도 개선" 자료를 분석했음.
- 자료는 횡단면 조사로, 2020년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NGO "이주민과 함께"가 실시했음.
- 이 조사는 이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며, 중국어, 베트남어, 태국어, 영어, 한국어 등 14개 언어로 실시되었음.
-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는 한국의 이민 인구 분포를 고려하고 농업 및 어업의 육체노동자, 중국 동포, 고려인, 난민, 유학생,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의료 서비스 접근성 측면에서 취약하다고 여겨지는 집단을 과표집하였음.
- 데이터는 연구진이나 별도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설문 조사하여 수집되었음

방법 - 측정

- **미충족 의료**
- "당신은 한국에 살면서 다치거나 아파서, 신체적·정신적 질병이나 만성질환 등의 건강 문제로 의료기관에서 진단, 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였으나 받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문항을 사용하였음.
- '예'라고 응답한 경우 '미충족 의료 있음', '아니오 ' 라고 응답한 경우 '미충족 의료 없음'으로 코딩하였음.
- '예'라고 답한 사람들에게는 미충족의료 이유를 물어보았음. 이유는 다음과 같이 분류되었음. (1) 시간이 없어서, (2) 증세가 가벼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아서, (3) 비용이 부담되어서, (4) 거리가 멀거나 교통편이 불편해서, (5) 거동이 불편해서 혹은 건강상 방문이 어려워서, (6) 어느 의료기관 또는 어느 진료과에 가야할지 몰라서, (7)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8) 기타
- Chen & Hou (2002)의 분류에 따라, 미충족 의료 이유를 다시 수용성(2,4,5,6,7번 응답)과 접근성(1,3번 응답)으로 나누었고, 기타 문항은 내용에 따라 재분류하였음.

방법 - 측정

- **비자 유형**
- "당신의 현재 체류 자격은 무엇입니까?" 문항의 응답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음.
-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방문동거(F-1),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업투자(D-8)
-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구직(D-10), 유학(D-2), 어학연수(D-4), 선원취업(E-10),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 **기타(G-1) 비자 소지자**: 기타(G-1), 출국유예(난민신청자)
- **미등록 이주민**: 미등록

방법 - 측정

- 공변량
- Yang & Hwang framework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변량을 포함하였음.
- 소인 요인에는 성별, 국적, 연령, 체류 기간, 고용 상태가 포함되었음.
- 가능 요인에는 지역, 월 가구 소득, 국민건강보험 가입, 코로나19관련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음.
- 필요 요인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 한국에서 거주한 지난 1년간 심한 불안 및 우울 경험 여부가 포함되었음.

방법 - 분석

- 비자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미충족 의료율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 및 카이제곱 검정 수행하였음.
-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수행하여 비자 유형과 미충족 의료 연관성을 확인하였음. 변수 선택 방법은 후진적 단계(backward stepwise) 선택 방법을 사용하였음. 결과는 95% 신뢰 구간과 오즈비(Odds ratio, OR)로 보고되었음.
-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9.0을 사용하여 수행하였음.
- 이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IRB 면제를 받았음(IRB No. 2024-1665-001).

결과

표 1. 비자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전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기타(G-1) 비자 소지자	미등록 이주자	p-value
	N=1060	N=315	N=503	N=86	N=149	
나이 (세)						<.001
평균	36.9	43.4	32.6	36.6	38.2	
중위수	35.0	40.0	30.0	34.0	39.0	
범위	18.0-74.0	19.0-74.0	18.0-62.0	21.0-61.0	20.0-61.0	
	N(%)	N(%)	N(%)	N(%)	N(%)	
성별						<.001
남성	522 (49.2)	106 (33.7)	302 (60.0)	43 (50.0)	66 (44.3)	
여성	538 (50.8)	209 (66.3)	201 (40.0)	43 (50.0)	83 (55.7)	
국적						<.001
비서양 아시아 국가	818 (77.2)	203 (64.4)	445 (88.5)	22 (25.6)	141 (94.6)	
비서양 기타 국가	242 (22.8)	112 (35.6)	58 (11.5)	64 (74.4)	8 (5.4)	
체류 기간						<.001
5년 미만	587 (55.4)	115 (36.5)	349 (69.4)	57 (66.3)	63 (42.3)	
5-10 년	298 (28.1)	116 (36.8)	120 (23.9)	20 (23.3)	39 (26.2)	
10년 이상	175 (16.5)	84 (26.7)	34 (6.8)	9 (10.5)	47 (31.5)	
취업						<.001
취업자	821 (77.5)	217 (68.9)	435 (86.5)	42 (48.8)	121 (81.2)	
실업자	239 (22.5)	98 (31.1)	68 (13.5)	44 (51.2)	28 (18.8)	

결과

표 1. 비자 유형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 (cont.)

	전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기타(G-1) 비자 소지자	미등록 이주자	p-value
	N=1060	N=315	N=503	N=86	N=149	
지역						<.00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787 (74.2)	264 (83.8)	342 (68.0)	58 (67.4)	121 (81.2)	
비수도권	273 (25.8)	51 (16.2)	161 (32.0)	28 (32.6)	28 (18.8)	
가구 월 수입						<.001
100만 원 미만	128 (12.9)	26 (9.5%)	65 (13.3%)	27 (32.9%)	10 (7.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87 (39.0)	62 (22.6%)	208 (42.4%)	41 (50.0%)	75 (54.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16 (31.9)	88 (32.1%)	171 (34.9%)	9 (11.0%)	42 (30.2%)	
300만 원 이상	161 (16.2)	98 (35.8%)	46 (9.4%)	5 (6.1%)	12 (8.6%)	
건강보험						<.001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743 (70.1)	305 (96.8)	398 (79.1)	39 (45.3)	0 (0.0)	
미가입 또는 모름	317 (29.9)	10 (3.2)	105 (20.9)	47 (54.7)	149 (100.0)	
코로나19 관련 차별 또는 인권침해 경험						<.001
없음	648 (61.1)	239 (75.9%)	287 (57.7%)	55 (64.0%)	64 (43.8%)	
있음	403 (38.0)	76 (24.1%)	210 (42.3%)	31 (36.0%)	82 (56.2%)	
주관적 건강 상태						<.001
좋음	500 (47.2)	133 (42.2)	254 (50.5)	41 (47.7)	69 (46.3)	
보통	420 (39.6)	127 (40.3)	210 (41.7)	25 (29.1)	55 (36.9)	
나쁨	140 (13.2)	55 (17.5)	39 (7.8)	20 (23.3)	25 (16.8)	
한국에 있으면서 지난 1년 간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험						<.001
없음	690 (65.1)	178 (56.5)	372 (74.0)	34 (39.5)	102 (68.5)	
있음	370 (34.9)	137 (43.5)	131 (26.0)	52 (60.5)	47 (31.5)	

결과

표 3. 미충족 의료 원인별 현황

미충족 의료 원인	N (%)					P-value
	전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기타(G-1) 비자 소지자	미등록 이주자	
	N=1049	N=312	N=503	N=86	N=148	
전체	295 (28.1%)	83 (26.6%)	112 (22.3%)	53 (61.6%)	47 (31.8%)	<.001
비용이 부담됨	157 (15.0%)	34 (10.9%)	46 (9.1%)	47 (54.7%)	30 (20.3%)	<.001
시간이 없음	109 (10.4%)	28 (9.0%)	51 (10.1%)	7 (8.1%)	23 (15.5%)	<.145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함	34 (3.2%)	8 (2.6%)	17 (3.4%)	3 (3.5%)	6 (4.1%)	.846
증세가 가벼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 같음	107 (10.2%)	32 (10.3%)	48 (9.5%)	10 (11.6%)	17 (11.5%)	.874
어느 의료기관 또는 진료과로 가야 할지 모름	52 (5.0%)	11 (3.5%)	27 (5.4%)	4 (4.7%)	10 (6.8%)	.463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움	82 (7.8%)	13 (4.2%)	40 (8.0%)	13 (15.1%)	16 (10.8%)	.003

결과

표 4. 한국 거주 이주민의 비자 유형과 미충적 의료 연관성 (N=974)

	전체		수용성		접근성	
	OR	CI 95%	OR	CI 95%	OR	CI 95%
비자 유형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Ref.)	1.00		1.00		1.00	
단기체류 비자 소지자	0.93	[0.62-1.40]	0.66	[0.40-1.07]	0.91	[0.52-1.62]
기타(G-1) 비자 소지자	**7.05**	**[3.73-13.33]**	**2.99**	**[1.42-6.27]**	**11.59**	**[5.47-24.56]**
미등록 이주자	1.20	[0.70-2.05]	1.93	[0.85-4.35]	1.73	[0.88-3.40]
소인 요인						
성별						
남성 (Ref.)	1.00		1.00		1.00	
여성	**1.99**	**[1.43-2.78]**	**2.17**	**[1.50-3.13]**	**1.58**	**[1.03-2.44]**
국적						
비서양 아시아 국가 (Ref.)	1.00		1.00		1.00	
비서양 기타 국가	**0.39**	**[0.24-0.63]**	**0.31**	**[0.18-0.55]**	**0.46**	**[0.25-0.84]**
나이			**0.97**	**[0.95-0.99]**		
체류 기간						
5년 미만 (Ref.)						
5-10 년						
10년 이상						
취업						
취업자 (Ref.)			1.00			
실업자			**0.48**	**[0.29-0.79]**		

주. 유의한 요인(p<.05)만 제시하였음

결과

표 4. 한국 거주 이주민의 비자 유형과 전체 미충적 의료 연관성 (N=974) (cont.)

	전체		수용성		접근성	
	OR	CI 95%	OR	CI 95%	OR	CI 95%
가능 요인						
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Ref.)	1.00		1.00		1.00	
비수도권	**1.72**	**[1.19-2.48]**	**1.50**	**[1.00-2.23]**	**1.68**	**[1.07-2.65]**
가구 월 수입						
100만 원 미만 (Ref.)					1.00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0.75	[0.42-1.3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0.59	[0.31-1.11]
300만 원 이상					**0.35**	**[0.15-0.83]**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Ref.)			1.00			
미가입 또는 모름			**0.46**	**[0.25-0.84]**		
코로나19 관련 차별 또는 인권침해 경험						
없음 (Ref.)	1.00		1.00		1.00	
있음	**1.64**	**[1.17-2.29]**	**1.55**	**[1.08-2.23]**	**1.79**	**[1.18-2.72]**

주. 유의한 요인(p<.05)만 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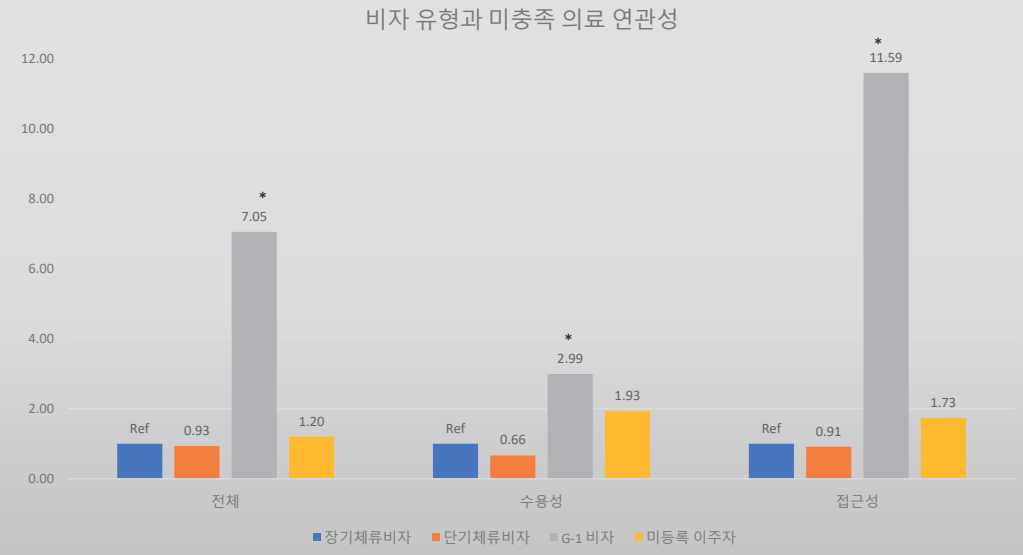
결과

표 4. 한국 거주 이주민의 비자 유형과 미충적 의료 연관성 (범주화) (N=974) (cont.)

	전체		수용성		접근성	
	OR	CI 95%	OR	CI 95%	OR	CI 95%
필요 요인						
주관적 건강 상태						
좋음 (Ref.)	1.00		1.00		1.00	
보통	**2.09**	**[1.45-3.00]**	**1.75**	**[1.78-2.59]**	**2.26**	**[1.38-3.68]**
나쁨	**3.81**	**[2.36-6.18]**	**2.21**	**[1.29-3.79]**	**6.01**	**[3.41-10.61]**
한국에 있으면서 지난 1년 간 심하게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험						
없음 (Ref.)	1.00		1.00		1.00	
있음	**4.57**	**[3.25-6.43]**	**3.75**	**[2.59-5.44]**	**4.54**	**[2.95-7.01]**

주. 유의한 요인(p<.05)만 제시하였음

결과



*유의한 집단

그림 1. 한국 거주 이주민의 비자 유형과 미충적 의료 연관성

논의

- 이 연구는 비자 유형이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의 미충족 의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혀냈음.
- 이는 대부분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자인 G-1 비자 소지자와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하여 연관성을 확인한 첫 연구임.
- 한국 G-1 비자 소지자의 미충족의료율은 61.1%로 외국의 난민 미충족의료율보다 높았음.

- 예를 들어, 태국의 도시 난민의 경우 입원 및 외래에 대한 미충족의료율은 각각 28.0%와 54.1%라고 보고했음. (Suphanchaimat et al., 2020) 또한,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은 42.6%가 미충족의료를 보고했음 (Tuck et al., 2019).

- 미등록 이주민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31.8%가 미충족의료를 보고했으나, 캐나다 연구에서는 신청서를 제출한 미등록 이주민은 67.4%, 제출하지 않은 미등록 이주민은 76.4%가 미충족의료를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음 (Ridde et al., 2020).
-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미충족의료율은 7.1%로, 이주민 미충족의료율 28.1%보다 훨씬 낮았음.

논의

- 난민은 의료 서비스를 더 적게 이용한다는 이전 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보였음.
- 스웨덴의 난민은 비난민 이주자에 비해 응급 서비스를 덜 이용하였음. (Björkenstam et al., 2022)
- 그러나 본 연구는 미충족한 의료 서비스를 분류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음.
- 한국에 거주하는 난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논의

- 미등록 이주민은 이전 연구와 일관되게 미충족의료가 발생한 위험이 컸음.
- 이전 연구에서도 추방이나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한다고 보고하였음 (Lee, Jeong, Kim, & Park, 2020; Son, 2023)
-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은 대부분 일할 수 있을 만한 건강 상태이고, 무료 진료소 등을 이용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지위로 인한 제한된 자유를 감안할 때,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 불안정성을 고려해야 함.

논의

- 단기 비자 소지자는 접근성과 수용성으로 인한 미충족의료를 보고할 위험이 모두 낮았음.
- 이는 '건강한 이주민 효과 ' 때문일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서는 낮으나, 20% 가량이 미충족의료를 보고하였음
- 따라서 한국에 도착 시 한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등 단기 비자 소지자 그룹의 미충족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함.

논의

- 성별과 국적은 모두 수용성과 접근성 관련 미충족의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소인 요인이었음.
-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의료 필요가 더 많으며, 이는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에도 나타남. (Guruge, Birpreet, & Samuels-Dennis, 2015; Cabral & Dillender, 2021).
-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등 국가에서 온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해당 이민자들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 (Kim, Son, & Kim, 2015; Lee, Kim, & Heo, 2024)
- 연령은 수용성으로 인한 미충족의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는데, 이는 젊은 사람들이 바쁜 일정으로 인하여 의료 서비스를 받을 시간이 적기 때문일 수 있음.

논의

- 가능 요인 중 지역과 차별 경험은 접근성과 수용성으로 인한 미충족 의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었음
- 한국의 대부분 의료 자원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불평등을 야기함
- 또한, 이주민들은 종종 문화적 친밀감이나 환대하는 분위기의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 진료소를 사용하는데 이 또한 수도권에 몰려 있음.
- 의료 시설에서의 차별은 이주민이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는 데 장벽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도 있었음 (Rivenbark & Ichou, 2020).
- 이러한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시스템에 이주민의 견해와 문화를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논의

-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 상태와 불안 및 우울 경험은 미충족의료와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 필요 요인이었으며, 이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함 (Yi & Lee, 2018; Kullamaa & Reile, 2023)
- 이주민들의 정신 건강 문제(George, Thomson, Chaze, & Guruge, 2015)와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 장벽 (Salami, Salma, & Hegadoren, 2019)을 보고한 선행 연구들이 있음
- 따라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이주민들의 미충족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

연구 제한점 및 향후 연구 제언

- 제한점
- 비확률 표집 (대표성 부족할 수 있음)
- 단면연구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훨씬 더 취약한 이주민 표본에 없을 수도 있음.

- 향후 연구
- 어떤 의료 서비스 미충족 의료 발생하는지 파악해야 함 (정신? 외래? 입원?)
- 체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종단 연구 필요

결론

-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비자 유형과 미충족 의료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G1비자 소지자와 미등록 이주민의 미충족 의료 취약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그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UN의 SDGs 3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주민의 미충족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별 접근 방법이 필요할 것임.

참고자료

- World Health Organization. Tracking universal health coverage: 2023 global monitoring report.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3.
-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3 Immigration Statistics Yearbook (Integrated). Korea Immigration Service; 2023.
- Solano, G., & Huddleston, T. (2020).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2020: South Korea.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Available from: https://www.mipex.eu/south-korea.
- Lee, B. S., Oh, I. K., & Lee, E. M. (2011). Foreign residents' experience of Korean health care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2), 226-237.
- Kim, K. S., Ahn, J. W., Kim, J. A., & Kim, H. J. (2014). [Title of the artic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4(1), 86–96. https://doi.org/10.4040/jkan.2014.44.1.86
- Yang, P. Q., & Hwang, S. H. (2016). Explaining immigrant health service utilization: A theoretical framework. SAGE Open, 6(2), 2158244016648137. https://doi.org/10.1177/2158244016648137.
- Chen, J., & Hou, F. (2002). Unmet needs for health care. Health Reports, 13(2), 23-34.
- Suphanchaimat, R., Sinam, P., Phaiyarom, M., Pudpong, N., Julchoo, S., Kunpeuk, W., & Thammawijaya, P. (2020). A cross-sectional study of unmet need for health services amongst urban refugees and asylum seekers in Thailand in comparison with Thai population, 2019. International Journal for Equity in Health, 19, 1-12. https://doi.org/10.1186/s12939-020-01238-0.
- Tuck, A., Oda, A., Hynie, M., Bennett-AbuAyyash, C., Roche, B., Agic, B., & McKenzie, K. (2019). Unmet health care needs for Syrian refugees in Canada: A follow-up study.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1, 1306-1312. https://doi.org/10.1007/s10903-019-00895-0.

참고자료

- Björkenstam, E., Helgesson, M., Norredam, M., Sijbrandij, M., De Montgomery, C. J., & Mittendorfer-Rutz, E. (2022). Differences in psychiatric care utilization between refugees, non-refugee migrants, and Swedish-born youth. Psychological Medicine, 52(7), 1365-1375. https://doi.org/10.1017/S0033291721002862.
- Lee, C. H., Jeong, S. N., Kim, J. H., & Park, J. K. (2020). Socio-cultural conditions of life in ruins and health deterioration: Focusing on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the A industrial complex. Comparative Cultural Studies, 26(2), 81-137. https://doi.org/10.17249/CCS.2020.12.26.2.81.
- Son, I. (2023). The dynamics of non-governmental healthcare services for immigrants in South Korea: Discriminatory medical insurance system and response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Economy and Society, 137, 165-201. http://dx.doi.org/10.18207/criso.2023..137.165
- Cabral, M., & Dillender, M. (2021, May). Disparities in Health Care and Medical Evaluations by Gender: A Review of Evidence and Mechanisms. AEA Papers and Proceedings, 111, 159-163. https://doi.org/10.1257/pandp.20211016
- Guruge, S., Birpreet, B., & Samuels-Dennis, J. A. (2015). Health status and health determinants of older immigrant women in Canada: a scoping review. Journal of Aging Research, 2015(1), 393761. https://doi.org/10.1155/2015/393761
- Kim, Y. G., Son, I. S., & Kim, S. S. (2015). Association between discrimin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region of origin and gender differenc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5(3), 421-452. https://doi.org/10.15709/hswr.2015.35.3.421

참고자료

- Lee, H., Paeng, E. J., Devakumar, D., Huq, M., Lee, G., & Kim, S. S. (2024). Racism and health in South Korea: history, concept, and systematic review. The Lancet Regional Health–Western Pacific, 52. https://doi.org/10.1016/j.lanwpc.2024.100498
- Rivenbark, J. G., & Ichou, M. (2020). Discrimination in healthcare as a barrier to care: experiences of socially disadvantaged populations in France from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BMC Public Health, 20(1), 31. https://doi.org/10.1186/s12889-020-8279-7
- Kullamaa, L., & Reile, R. (2023). Socio-demographic and regional differences in unmet healthcare needs among migrants in Europe. PLOS ONE, 18(5), e028588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85886.
- Yi, J., & Lee, I. (2018). Factors affecting unmet healthcare needs of working married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9(1), 41-53. https://doi.org/10.12799/jkachn.2018.29.1.41
- Salami, B., Salma, J., & Hegadoren, K. (2019). Access and utilization of mental health services for immigrants and refugees: Perspectives of immigrant service provider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28(1), 152-161. https://doi.org/10.1111/inm.12512

감사합니다

[세션#4]
이주와 공간: 이론, 데이타, 사례를 통한 교차 연구 모색

사회
한건수(강원대)

발표1. 정현주(서울대)
이주 연구의 공간적 전환

발표2. 이효중(서울대)
이주 배경 주민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 분리

발표3. 문경연(광운대)
‘하이브리드’ 축제 공간 만들기:
창원과 대만 신베이시의 축제 사례를 통해 본 지역성·문화다양성의 연결

토론
김철효(경상국립대)
송영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최선영(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발표1. 정현주(서울대)

이주 연구의 공간적 전환

이주연구의 공간적 전환

다문화공간의 재개념화를 통해 김해 외국인거리를 새롭게 상상하기

정현주 (서울대학교 환경계획학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장
서울대 여성연구소장

Why spatiality matters in migration study?

공간적 과정으로서 이주

이주의 분석도구로서 공간적 개념의 유용성

Migration as a Spatial Process

- 물리적/사회문화적 경계 넘기로서 이주
- 새로운 경계와 영토 창출하는 이주
- 정착지와 송출지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 다양한 스케일을 가로지르고 엮어내는 과정

공간적 사유?

- 사회적 현상을 공간이라는 렌즈를 통해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접근
- 공간적 사유는 20세기 후반 이래로 사회과학에서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을 통해 확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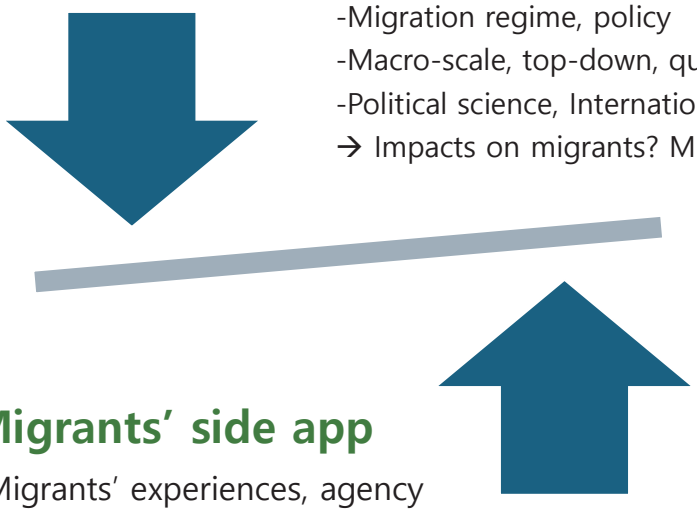
  공간적 전환: 20세기 후반 이후 인문/사회과학 전반에서 공간적 사고를 중심으로 사회와 세계를 이해하려는 일련의 거대한 변화. 지구화와 시공간압축이라는 시공간경험의 변화로 촉발

- 시간성을 바탕으로 한 근대성에 대한 성찰 및 대안적 인식론으로서 대두
- 공간적 사유는 시공간압축, 경계의 재협상, 다양성의 동시적 공존 등 초국가적 이주를 설명하는 새로운 상상력과 개념을 제안

이주연구의 딜레마1

- 구조/거시 vs. 행위자/미시

→ 둘 간의 작동을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중범위 이론 필요



Gov't side app

-Migration regime, policy
-Macro-scale, top-down, quantitative
-Political science, International studies, etc.
→ Impacts on migrants? Migrants'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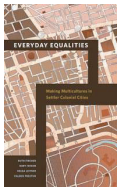
Migrants' side ap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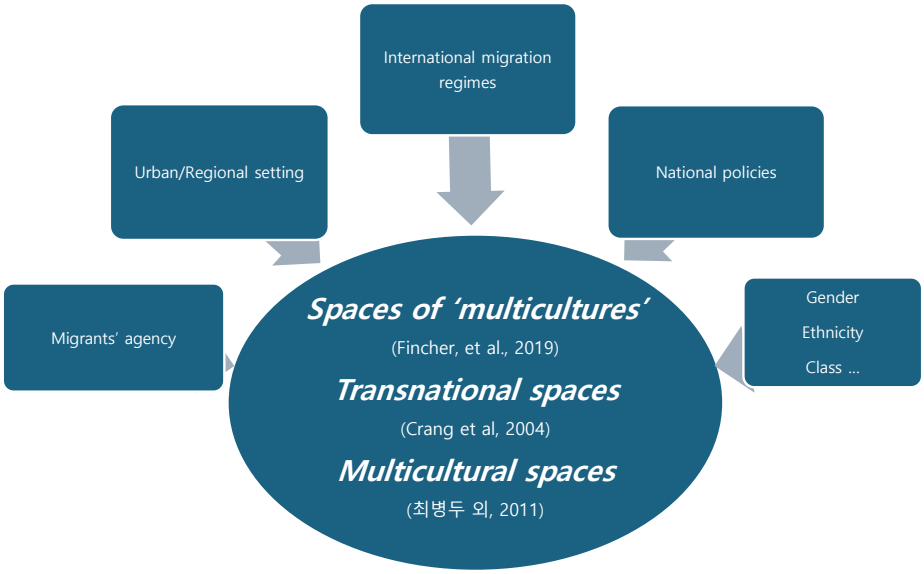
-Migrants' experiences, agency
-Micro-scale, bottom-up, qualitative
-Anthropology, women's studies, etc.
→Structure? Social changes?

이주연구의 딜레마 2

- 이주에 얽힌 과정의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복잡성
- 다양성의 공존

→ 다중성을 담지하는 개념적 도구로서 공간적 단위





이주연구의 딜레마 3

- 방법론적 국가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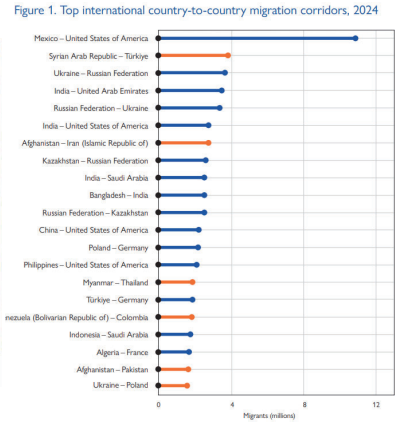
-이주의 핵심 거버넌스 단위로서 국가

-통계의 단위

-송출-유입, 체류자격, flow, 국적별 분류 등 국가 단위에서 구분

→ 국가 하위 스케일과 상위 스케일에서의 과정을 포착하는 개념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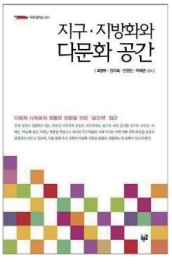
→ 다중스케일적 관점 필요



이주에 대한 공간적 이론화 사례: 다문화공간

최병두(2009), 다문화공간과 지구지방적 윤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다문화주의라는 정치·사회·문화적 과정을 공간적으로 사유하자는 제안. "지구지방적 차원에서 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문화적 교류 및 혼재와 관련된 사회공간적 현상"들을 담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문화주의의 공간적 불균등 작동 및 다문화주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인정투쟁의 구체적 양상을 담지하는 개념적 장치



이주에 대한 공간적 이론화 사례

박배균(2009),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바라보는 공간적 관점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초국가적 이주와 정착을 일방적인 지구화 또는 국가간 이동, 탈영토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다양한 스케일에서 사회-공간적 상호구성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 이를 위해 Jessop, Brenner & Jones (2008)가 제시한 공간성의 4가지 차원(PTNS)을 이주 연구에 접목하여 이론적 틀로 활용할 것을 탐색

PTNS: Place, Territory, Network, Scale
(Jessop, Brenner & Jones, 2008, Theorizing soicio-spatial relations, *Environment and Planning D*, 26(3))

표 1. 사회-공간적 관계의 4가지 핵심적 차원들 (Jessop, Brenner and Jones 2008을 바탕으로 재구성)

사회-공간적 관계의 차원	사회-공간적 구조화의 원리	사회-공간적 관계의 패턴
장소(Place)	접근성, 공간적 뿌리내림, 지역적 차별화	- 공간적 분업의 형성 - '중심(core)'과 '주변(periphery)' 사이에 형성되는 수평적 사회관계의 차별화
영역(Territory)	경계 만들기, 울타리치기, 구획화	- 내부/외부의 구분 - 영역 내부에 대한 외부의 구성적 역할
네트워크(Networks)	상호연결성, 상호의존성, 횡단적이거나 '리좀적인(rhizomatic)' 차별화	- 연결의 결절지점들 사이에 형성된 네트워크 - 위상학적 네트워크 내의 결절점들 사이에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스케일(Scale)	위계화, 수직적 차별화	- 스케일간 분업의 형성 - '지배적(dominant)', '결절적(nodal)', '주변적(marginal)' 스케일들 사이에 형성된 수직적인 사회적 관계의 차별화 - 다중스케일적 과정

'다문화공간' 개념의 전유와 확산

다양한 이주민 집결지를 지칭하는데 사용

- 허권(2021),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공간과 사회』31(3)
- 공윤경(2013), 다문화공간에 대한 이중적 시선과 차별화,『한국민족문화』48
- 김윤영(2019), 다양한 주체자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다문화공간의 정체성과 그 담론,『공간과 사회』29(4)
- 정병호·송도영 편(2011),『한국의 다문화 공간: 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현암사

다문화공간의 재개념화

정현주, 고일홍, 심우진, 김정섭, 2024, 메가아시아 관점에서 다문화공간 재사유하기: 김해시 외국인거리를 사례로, 인문논총, 81(4), *Forthcoming*

다중스케일적 구성 + 차이와 다양성의 공존 및 조우의 현장

- 배제와 내적 동질성을 내포한 서구적 ethnic enclave와 차별화
- 외국인 집결지라는 타자화 극복
- Multiscalar construction: 로컬의 특수성, national 이주 거버넌스, 글로벌 보편성 등이 교차하면서 빚어낸 창발적 과정으로 다문화공간
- Multiplicity: 내적 다양성, 선주민과 이주민/이주민 간의 경계의 다공성, 일상적 조우를 통한 다양성의 수용과 혼종

사례연구: 김해 다문화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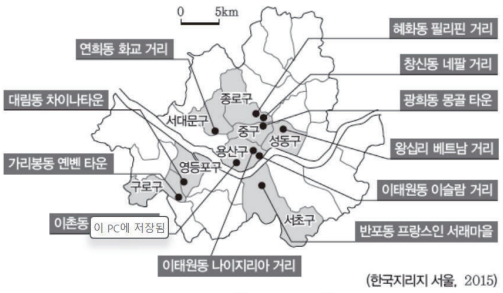
참 고

정현주, 고일홍, 심우진, 김정섭, 2024, 메가아시아 관점에서 다문화공간 재사유하기: 김해시 외국인거리를 사례로, 인문논총, 81(4), *Forthcoming*

김지현·김그린·정현주(2021),「김해시 다문화 로컬리티에 관한 고찰-구별짓기에서 마주침의 공간으로」,『로컬리티 인문학』25.

KBS 시사기획 창 476회 " 니산의 대한민국은 아직 없다" (23.8.20)https://www.youtube.com/watch?v=Z3OsqnRW8Zk&t=30s (서울대 아시아이주센터 방송 자문)

한국의 다문화공간



▲ 서울의 대표적 다문화 공간

서울의 대표적인 다문화 공간 (출처 : 2024 수능특강 한국지리 p139)

출처: https://blog.naver.com/y7971/223265028635

외국인주민 상위 20개 시군구(2022)

순위	시군구	총인구	외국인 소계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1	안산시	715,088	101,850	15,869	5,201	3,059	**33,515**	28,843
2	수원시	1,216,349	68,633	8,089	4,563	5,585	20,290	17,714
3	시흥시	557,663	68,482	12,225	4,199	1,069	21,572	17,628
4	화성시	931,472	66,955	**23,473**	4,264	765	10,514	17,717
5	부천시	810,142	55,383	4,927	4,254	1,511	16,602	14,060
6	구로구	424,038	52,845	7,240	2,785	592	19,809	12,657
7	영등포구	401,805	50,380	7,370	2,432	739	20,411	11,823
8	평택시	590,205	43,588	7,596	3,484	1,365	10,328	12,404
9	천안시	687,951	38,456	6,923	2,718	3,918	8,294	9,711
10	아산시	363,197	36,183	6,561	1,831	2,600	10,913	9,413
11	김포시	491,249	33,590	11,959	2,251	267	4,409	8,787
12	부평구	498,254	33,125	2,235	2,841	476	8,824	9,529
13	용인시	1,064,500	32,851	6,329	3,074	3,951	5,547	7,289
14	김해시	547,313	31,412	8,866	2,010	1,317	4,317	9,375
15	성남시	904,690	31,264	3,871	2,823	2,541	8,436	6,763
16	금천구	247,185	30,756	4,390	1,769	246	11,835	6,848
17	청주시	858,500	28,410	4,146	2,282	2,627	5,669	7,105
18	관악구	496,743	28,009	3,098	1,598	3,821	8,003	6,552
19	창원시	1,016,751	26,980	5,340	2,731	1,404	2,707	7,006
20	연수구	400,488	26,103	2,745	1,335	2,096	6,937	9,905

단위: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conn_path=I2)

다문화공간의 두 가지 유형

경기도 화성시 만세시장

영등포구 대림동 조선족타운

주말집거지 (Weekend Enclave)

-주말에만 한시적으로 형성
-주말동안 도시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
-주거지와 집결지 분리

에스닉 타운 (Ethnic Enclave)

-특정 에스닉 집단별로 점유
-에스닉 집단에게 필요한 주거와 서비스 제공
-주류사회와 분리

이주민 주말 집거지 weekend Encla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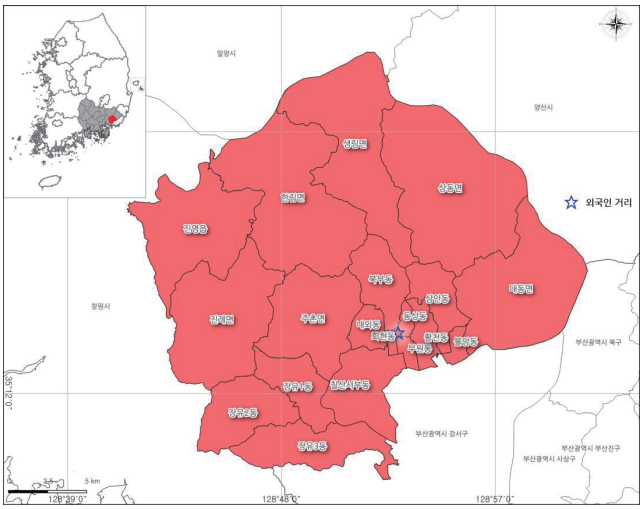
- 기원: 로마, 홍콩, 싱가폴 등에 대거 진출한 필리핀 가사노동자들이 유일한 휴일인 일요일에 도심 공공장소에 대규모로 모이면서 형성
- 다른 동남아 여성노동자들도 가세하여 '글로벌 도시'의 새로운 스펙터클로 등장
- 세계화, 노동의 성별분업의 전 지구적 확장, 빈곤의 여성화 및 이주의 여성화가 맞물려 나타난 현상→ 한시적인 작은 장소에 불과하지만 글로벌 과정과 긴밀한 연계 속에서 작동

경기도 화성시 만세시장

한국 주말집거지의 특수성

	한국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지배적 성별	남성 (20-30대)	여성 (20-30대)
지배적 업종	공장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미적용)
주거 형태	기숙사(공장내 임시거처, 컨테이너)	고용주의 집에 동거
주말집거지의 위치	산업도시의 구 시가지	글로벌 도시의 쇼핑 및 금융 중심가
주말집거지의 기능	상업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한시적 쉼터, 상업 기능 약함

김해 외국인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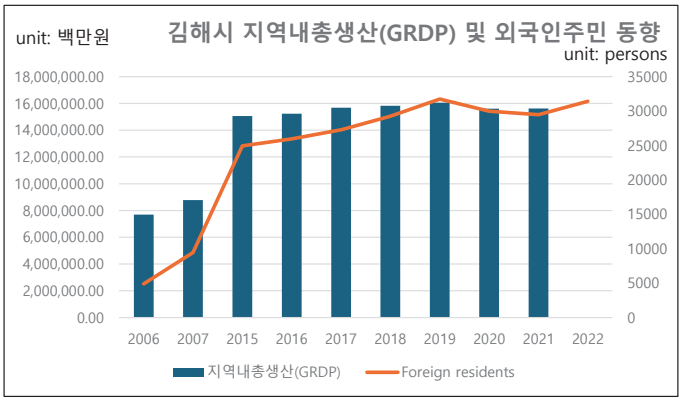
- 김해 동상동 일대 구도심/역사문화지구에 위치
- 2010년 도심재정비 이후 본격 발달
- E9노동자 중심,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드는 경남의 이태원
- 다양한 상업시설 집적, 지역경제 활성화

외국인주민 상위 20개 시군구(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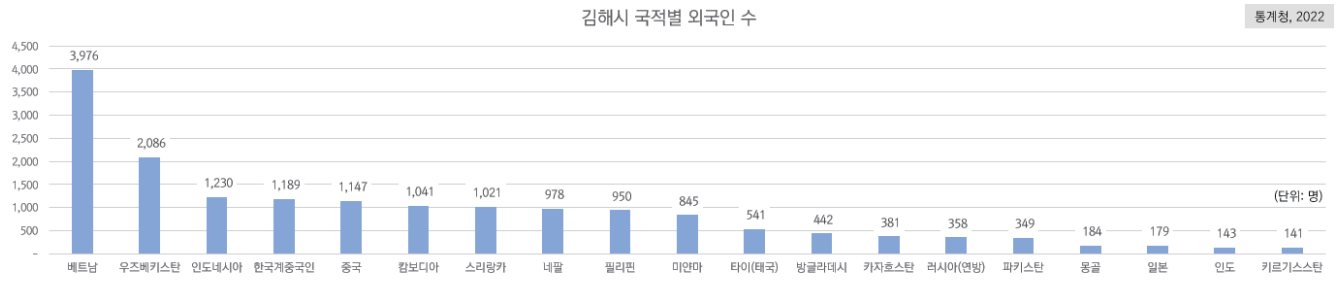
	시군구	총인구	외국인 소계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1	안산시	715,088	101,850	15,869	5,201	3,059	**33,515**	28,843
2	수원시	1,216,349	68,633	8,089	4,563	5,585	20,290	17,714
3	시흥시	557,663	68,482	12,225	4,199	1,069	21,572	17,628
4	화성시	931,472	66,955	**23,473**	4,264	765	10,514	17,717
5	부천시	810,142	55,383	4,927	4,254	1,511	16,602	14,060
6	구로구	424,038	52,845	7,240	2,785	592	19,809	12,657
7	영등포구	401,805	50,380	7,370	2,432	739	20,411	11,823
8	평택시	590,205	43,588	7,596	3,484	1,365	10,328	12,404
9	천안시	687,951	38,456	6,923	2,718	3,918	8,294	9,711
10	아산시	363,197	36,183	6,561	1,831	2,600	10,913	9,413
11	김포시	491,249	33,590	11,959	2,251	267	4,409	8,787
12	부평구	498,254	33,125	2,235	2,841	476	8,824	9,529
13	용인시	1,064,500	32,851	6,329	3,074	3,951	5,547	7,289
14	김해시	547,313	31,412	**8,866**	2,010	1,317	4,317	9,375
15	성남시	904,690	31,264	3,871	2,823	2,541	8,436	6,763
16	금천구	247,185	30,756	4,390	1,769	246	11,835	6,848
17	청주시	858,500	28,410	4,146	2,282	2,627	5,669	7,105
18	관악구	496,743	28,009	3,098	1,598	3,821	8,003	6,552
19	창원시	1,016,751	26,980	5,340	2,731	1,404	2,707	7,006
20	연수구	400,488	26,103	2,745	1,335	2,096	6,937	9,905

단위: 명
출처: 국가통계포털, 시군구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conn_path=I2)

김해시 외국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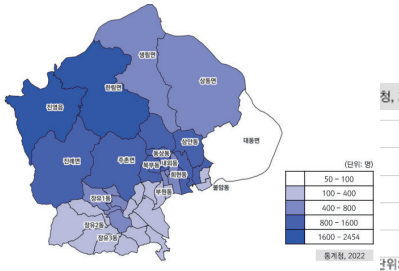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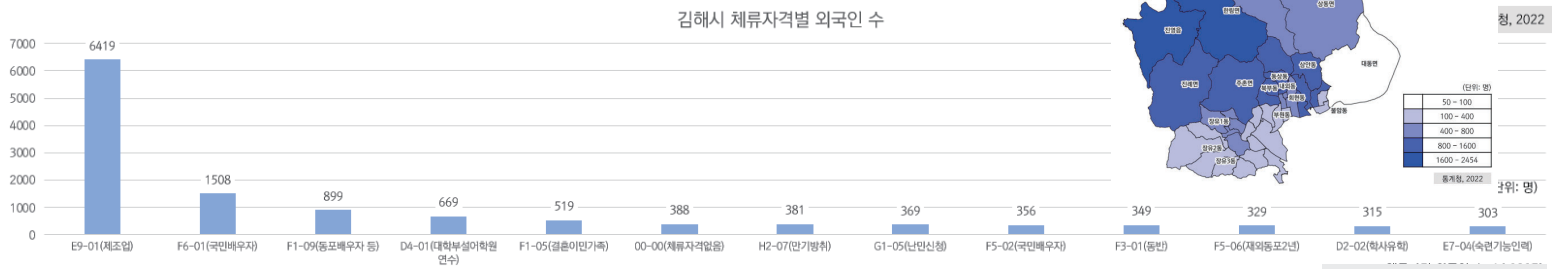
비수도권 중 외국인인구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
외국국적동포가 아닌 외국인노동자 중심
2022년 기준 79개 국적 수



Vietnam> Uzbekistan> Indonesia>Korean Chinese>China>Cambodia>SriLanka> Nepal...

김해시 내 체류자격 외국인 분포





E-9> F-6 >F-1>D-4> F-1-5... (Low skilled labors,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students)

시각자료: 김정섭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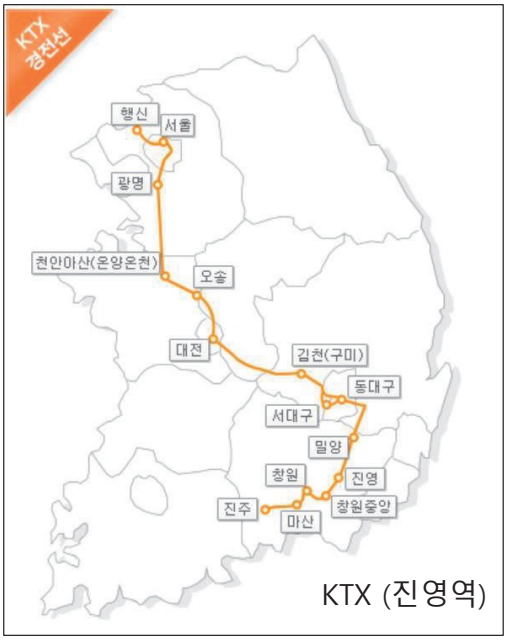
다문화도시로의 변화 과정

- 가야의 고도, 인구 55만
- 부산과 창원 사이에 위치: 부울경+창원 등 인근 산업도시에 비해 낙동강 하구 일대 충적평야인 김해는 과거 대표적인 농업지역
- 1980년대 이후 산업도시로 성장, 제조업이 전체 생산액의 50% 상회
- 인근 대도시에서 이전한 영세공장, 대기업의 하청업체 중심→ 고용허가제 이후 새로운 기회
-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가한 지자체, 경남에서 인구활력지수/외국인주민 수 가장 높음

가야왕도 김해
Royal Capital of Gaya, Gimhae

김해시 광역교통

부산-김해 경전철



KTX (진영역)

SRT (진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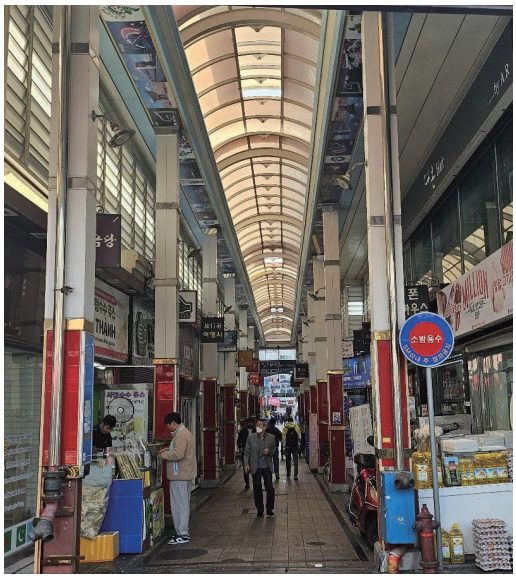
다문화도시 김해의 과거와 현재

김해합성초등학교

SINCE 1904, 57%가 다문화배경 학생(그 중 85%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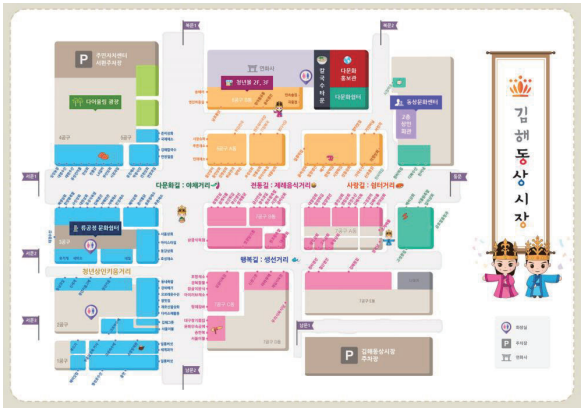
웰컴로 42길

"고대 가야의 정신과 현대 김해의 문화 다양성은 환대와 환영의 열린 가치를 지향하며... 42는 가야 건국의 해인 AD 42년을 뜻하며 우리말 "사이"의 뜻도 담아..."



동상동 재래시장의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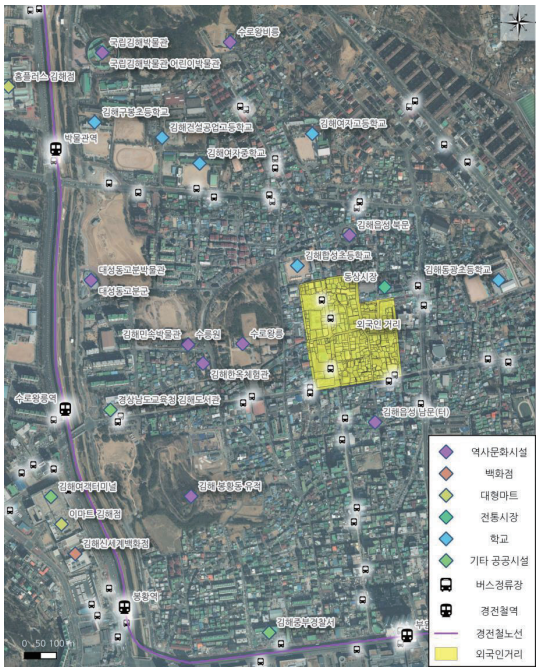
다문화길(야채거리)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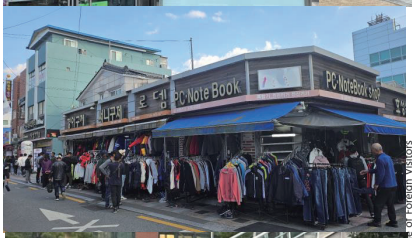
외국인 맞춤형 비즈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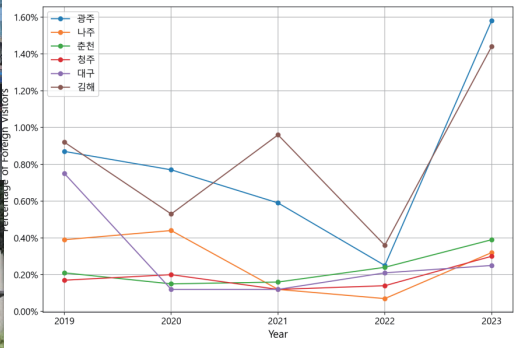
- 행정사 등 행정지원 서비스
- 외국인 전용 대출, 송금
- 국가별 맞춤형 택배
- 국가별 맞춤형 선물 가게
- 에스닉 푸드 (마트, 레스토랑..)
- 할랄 푸드

다문화공간을 통한 일상에서의 마주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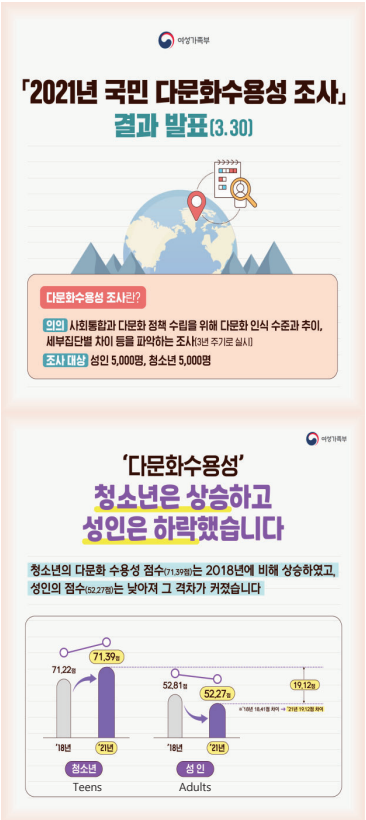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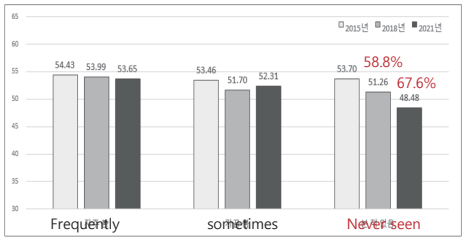
김해시 외국인거리 및 인근 공공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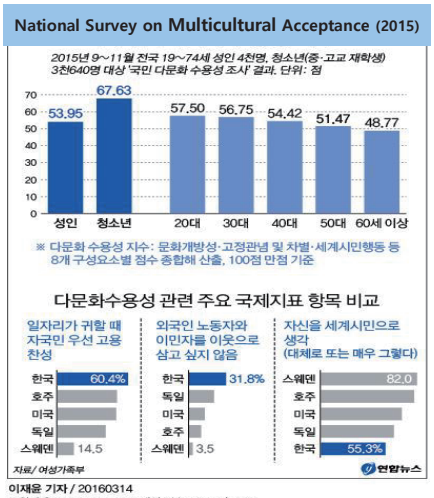


국립박물관 외국인 이용객 비율(대도시, 관광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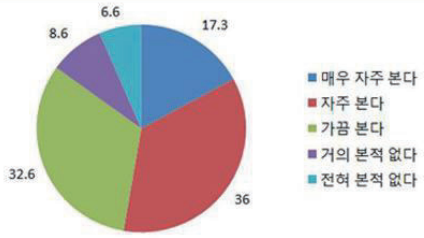
[그림 II-41] [일반국민] 길거리 등에서 이주민 목격 빈도별 다문화수용성(점): 2015, 2018, 2021



이재윤 기자 / 20160314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김해 다문화수용성 조사 (경남일보, 2021)

일상에서 외국인 이주민 마주치는 빈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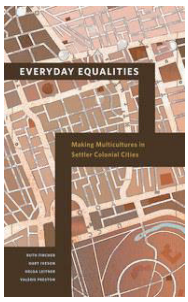
외국인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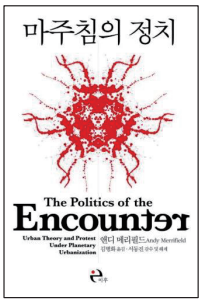
일상에서 외국인을 거의/전혀 본 적 없다 15%
(전국: 58.8% in 2015, 67.6% in 2021)

외국인노동자/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15%
(전국: 31.8% in 2015)

다문화주의의 테스트베드?

-마주침의 정치를 매개하고 담지하는 공간
-일상의 조우를 통해 다문화적 공존과 수용, everyday equality를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공간





- **서구 도시와의 차이점**: 인종별 분리주의 때문에 선주민이 떠나고 남은 대도시 슬럼에 게토화된 서구 에스닉타운과 반대의 길. 한국의 독특한 이주노동자 레짐(EPS)으로 인종별 분리가 아닌 다인종/다문화적 섞임을 유도
- **다른 아시아와의 차이점**: 저숙련/여성/가사노동자의 일시적 만남의 장소가 아닌 가처분 소득이 많은 저숙련/남성/공장노동자 주축이 되어 소비공간으로 발전→상설화되고 있는 중
- 낙후된 구도심과 시장 재활성화(김해, 화성, 동두천, 김포, 마석...): EPS로 인해 중소 제조업 밀집지에 조성. 인근의 구도심/장터가 이들의 집결지 역할
- 일부 대도시의 교통요지에서 초국가적 공간으로 발전하기도 (혜화동/동대문/안산)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국인들이 집결하여 국적,종교,인종,젠더,숙련도(계급)를 망라한 초다양성의 공간으로 변모중

이주연구-공간성 접목이 주는 이론적/실천적 유용성

- 사회-공간적 과정의 변증법적 이해 고양
- 공간적 메타포와 상상력의 확장: 권력과 헤게모니, 연결과 이동/부동성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공간적 메타포 (중심-주변, 1세계-3세계, inclusion-exclusion, border, scale, mobility, enclave, translocality, etc.)
- 공시적/다중적 관점 (다양성의 공존 포착)
- 다중스케일적 관점
- 이주의 지역화, clustering, 분포 등 지역이민 거버넌스의 분석적 도구 제공
- 지구지방적 윤리: 지구적 상호연관성에 대한 이해는 지구화 시대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연대의 철학적 기반

발표2. 이효중(서울대)

이주 배경 주민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 분리

한국 내 외국인의 지리적 분포

외국인의 주거 분리와 지리 수준별 분해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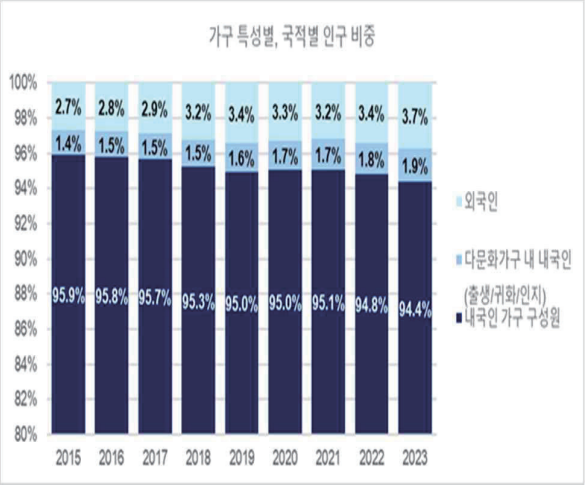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이 효 중

주요 내용 요약

- **배경:** 외국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및 특정 지역 집중과 주거 분리 (residential segregation)에 대한 우려
  - 1990년 5만 명 → 2023년 약 290만 명 (전체 인구의 5.6%)
  - 도시 공간 이용의 불균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
- **방법:** 읍면동 단위의 외국인의 전국적인 인구 분포와 주거 분리 정도를 국적별로 나누어 측정
  -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
  - 타일지수(Theil index): 지역 수준별로 주거 분리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해(decomposition)
- **결론:** 국적별로 상이지수 차이가 크며, 시군구 단위보다 읍면동 단위에서 외국인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현상
  - 읍면동 단위 및 시계열 분석의 중요성

서론



- 외국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 1990년 5만 명 → 2023년 약 290만 명 (전체 인구의 5.6%).
- 외국인의 특정 지역 집중과 주거 분리에 대한 우려
- 주거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는 왜 중요한가?
  - 두 개 이상의 인구 집단이 도시의 서로 다른 지역에 분리되어 거주하는 공간적인 상태
  - 개인의 선호가 아닌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따른 복합적인 산물
- 한국 내 외국인의 지리적 분포와 주거 분리 양상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 도시 공간 이용의 불균형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
- 선행연구는 시군구 단위 및 특정 연도, 특정 국적 분석에 치중하였음

선행연구 검토

- **주거 분리(Residential Segregation):**
- 특정 소득, 인종, 종교 등의 범주에 속하는 집단이 도시 공간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사회적 계층화를 형성하는 현상(홍사흠 외, 2022)
  - 경제적 자원, 사회적 자본, 제도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회적 현상(Logan et al., 1996).
  - 사회적 계층화가 강화되고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Fischer et al, 2004; Galster & Patrick, 2017)이 있다는 점에서 주거분리 연구는 가치가 있음
  - 미국과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는 이미 인종적 요인도 중요한 주거분리의 원인으로 작동했다는 연구가 있음(Shertzer et al, 2021)

선행연구 검토

- 외국인의 공간적 분포와 주거 패턴은 **국적, 체류 유형, 경제적 배경,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
- 한국 내 외국인이 동질적인(homogenous) 집단이 아니라 국적과 체류 자격별로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과 주거 분리 수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가 있음
  -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이 도심 외곽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반면, 선진국 출신(미국·일본·캐나다·영국·독일 등) 이주민은 내국인과 혼합된 주거 양상을 보임(손승호, 2008)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한국어 소통 능력이 뛰어난 만큼 다른 국적의 이주민에 비해 도심에 근접해 거주하는 경향(박세훈 외, 2010).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분석의 공간적 단위 세분화
  -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분석한 선행연구(이상호, 2021; 김혜진 & 이자원, 2018; 박윤환 & 임현철, 2015)와 달리, 전국 단위의 읍면동 단위에서 외국인의 주거 분리를 분석하여 보다 정밀한 외국인의 거주 분포 패턴을 파악
- 국적 구분 세분화
  - 선행연구: 중국인 및 한국계 중국인에 집중(윤진희 외, 2014; 이석준 & 김경민, 2014; 방성훈 & 김수현, 2012)
  - 국적 세분화: 네팔, 러시아,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일본, 우즈베키스탄, 중국,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카자흐스탄, 캐나다, 캄보디아, 타이(태국), 타이완(대만), 파키스탄, 필리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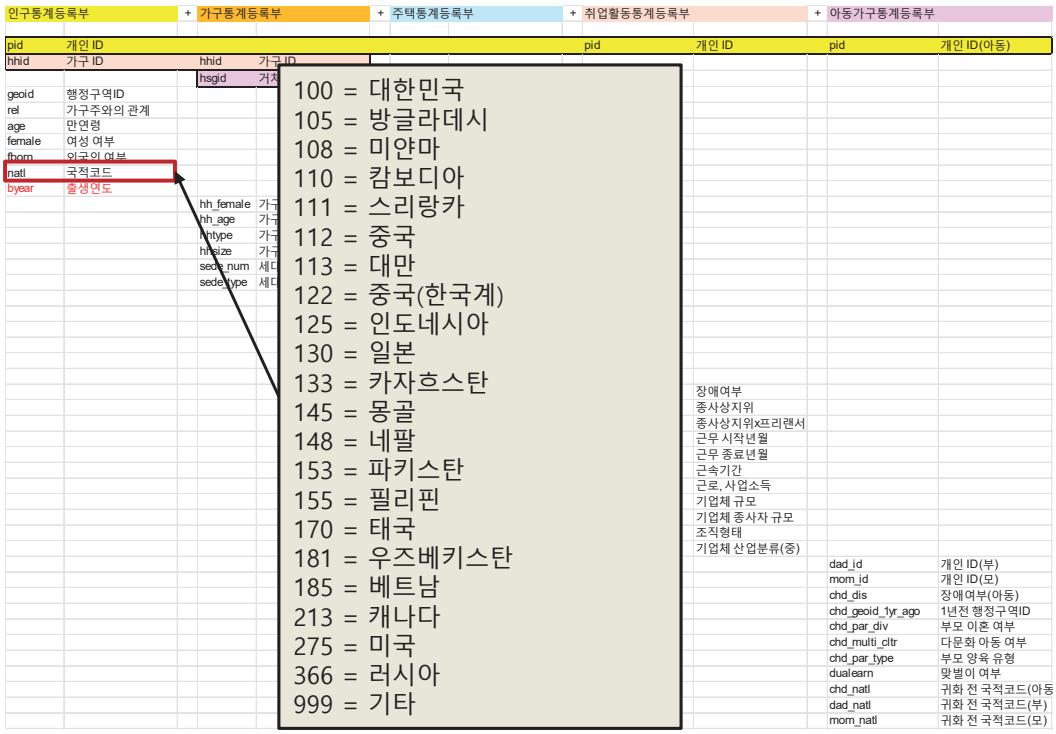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타일지수(Theil's H index)를 활용한 주거 분리의 지역 수준별 기여도 분석
  - 기존 연구는 상이지수(Dis-similarity Index)와 같은 단일 지표에 의존
  - 타일지수의 분해(decomposition) 기능을 활용하여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다양한 공간적 수준에서 주거 분리가 전체 주거 분리에 미친 기여도를 비교 분석
- 전국을 대상으로 한 시계열 분석
  - 기존 연구의 범위는 특정 연도 혹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함
  - 외국인 인구 비중이 지방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전국 단위의 동태적 분석이 필요

연구 설계 및 데이터

- 연구 대상: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등록 외국인
  - 행안부의 이주배경주민에서 귀화자 및 부모 세대의 한국 이주 경험자를 제외한 '순수 외국 국적자'
  - 1990년 약 2만 1천명, 2015년에는 약 136만명, 2022년에는 약 175만 명으로 빠르게 증가
- 데이터: 통계청의 통계데이터센터(SDC)에서 제공하는 인구통계등록부
  - 2015년 수행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12개 기관의 행정 데이터를 통계적 목적으로 연계·보완한 데이터
- 연구 기간: 2015~2022년
  - 2015년부로 등록센서스 집계 방식으로 전환, 2023년 데이터는 24년 11월 말에 공개되어 범위에서 제외됨

등록센서스 데이터(예시)



연구 방법

$$D = \frac{1}{2}\left(\sum_{i=1}^{i}\left|\frac{x_i}{X} - \frac{y_i}{Y}\right|\right)$$

- 첫째, 상이지수(비유사성 지수, dissimilarity index)를 통한 주거 분리 정도 측정
  - 국내외에서 주거 분리 정도를 평가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된 척도
  - 특정 인구 집단이 도시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기 위해 이동해야 할 비율을 의미(최은영, 2003)
  - 값 범위는 0과 1 사이; 0에 가까울수록 두 인구 그룹 간의 분리 수준이 낮음. 일반적으로(Rule of Thumb) 0.6 이상일 경우 주거 분리 정도가 심한 것으로 인식(박윤환, 2010)
  - *i*는 읍면동, X는 전국 내 인구 그룹 A의 인구, Y는 전국의 인구 그룹 B의 인구, xi는 읍면동 지역 내 인구 그룹 A의 인구, yi는 읍면동 지역 내 인구 그룹 B의 인구를 의미

연구 방법

- 둘째, 타일지수(Theil's H index)를 통한 주거 분리 정도 측정
  - 한 지역이 전체 인구에 비해 얼마나 덜 다양성을 가지는지를 측정 (Reardon and O'Sullivan, 2004)
  - 값 범위는 0과 1 사이; 0에 가까울수록 전체 인구와 세부 지역들의 인구 분포가 거의 유사함

$$\mathrm{E} = x_i \ln\left(\frac{1}{x_i}\right) + y_i \ln\left(\frac{1}{y_i}\right)$$

- 다양성 엔트로피(entropy) 개념
  - *i*는 특정한 지역 (전국 혹은 읍면동), xi는 해당 지역 내 인구 그룹 A의 인구, yi는 해당 지역 내 인구 그룹 B의 인구
- 엔트로피에 기반해 산출
  - Ntotal은 한국 내 전체 인구, Numd은 해당 읍면동 내 인구, Etotal과 Eumd는 각각 전국과 읍면동 수준에서 계산된 엔트로피

$$H_{umd_total} = \frac{1}{N_{total}\ E_{total}} \sum N_{umd}\ (E_{total} - E_{um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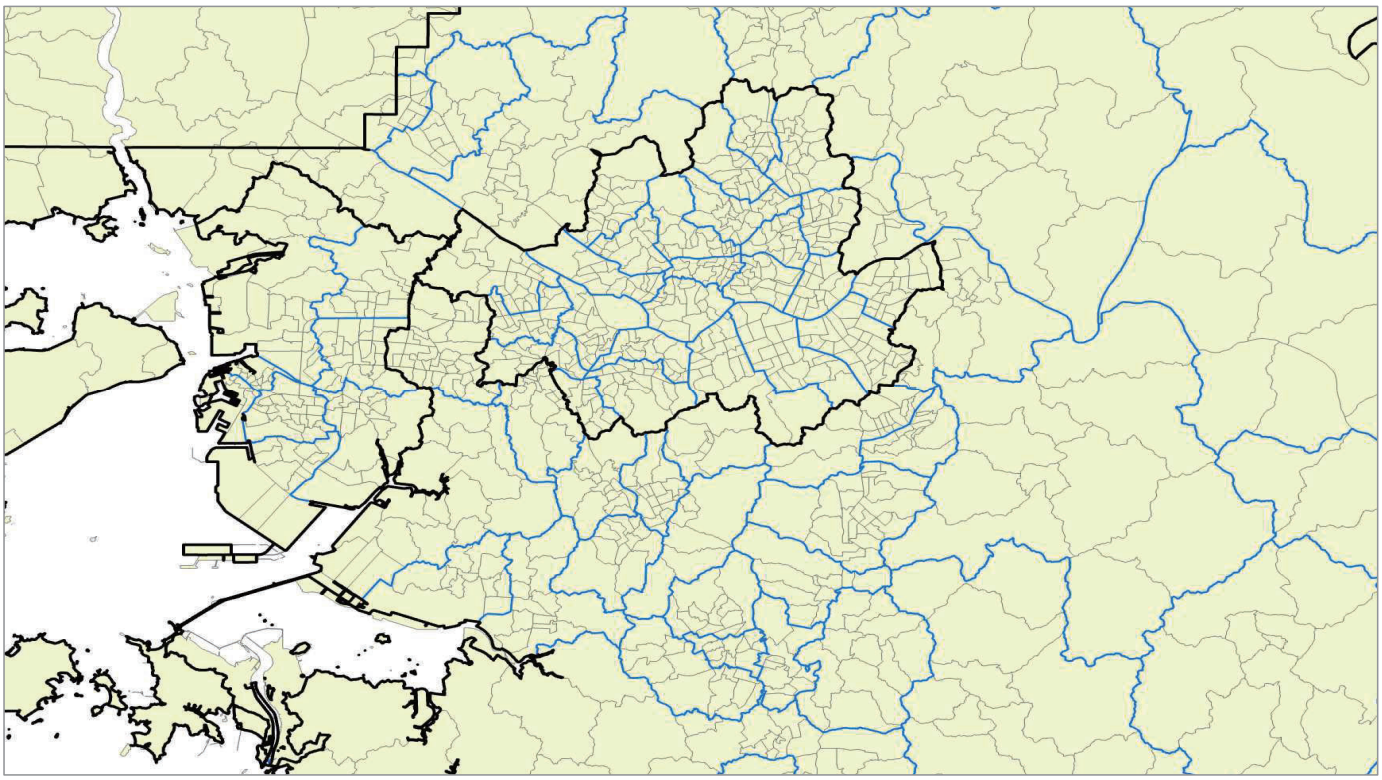
연구 방법

- 둘째, 타일지수(Theil's H index)를 통한 주거 분리 정도 측정
  - 분해가능성(decomposability)
    - 인구 분포의 균등성 (evenness)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상이지수와 유사 개념
    - 각 구성 요소의 기여도를 계산할 수 있는 특성이 차이
  - 기여도 계산 예시: 시도 내 시군구 간 외국인 인구 분포가 전체 주거 분리에 기여하는 정도
    - 분석은 총 12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여 Nsd은 각 시도의 인구 수를 의미하며, Esd 또한 시도 수준에서 계산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수준의 기여도 총합= 전체 분리 지수(Humd_total)

$$H_{sd_total} = \frac{1}{N_{total}\ E_{total}} \sum_{p=1}^{12} N_{sd}\ (E_{total} - E_{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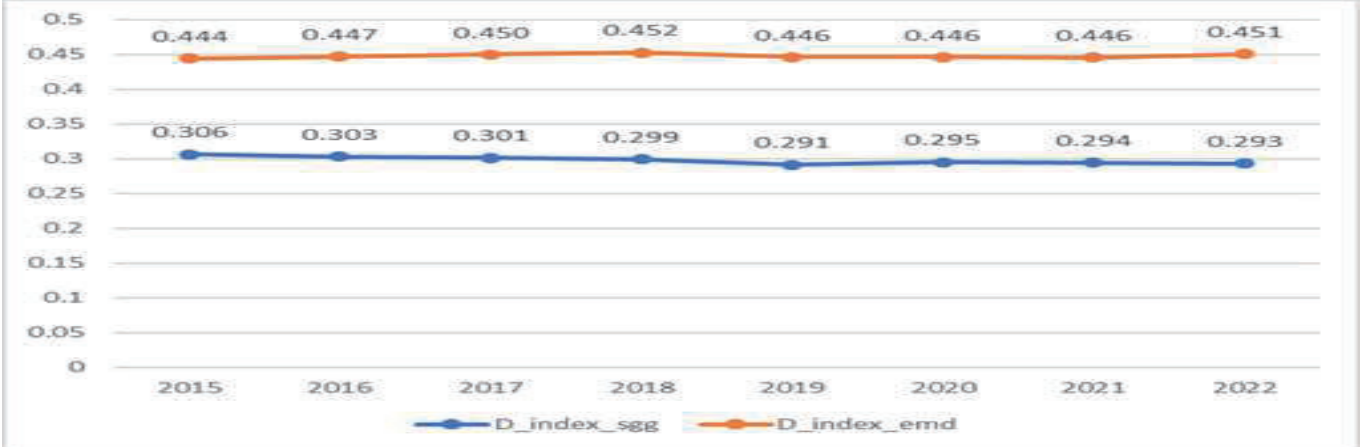
시군구 단위 및 읍면동 단위 분석 비교

- 외국인 인구 비율을 시군구 단위와 읍면동 단위로 시각화
  - 시군구 평균 면적 vs. 읍면동 평균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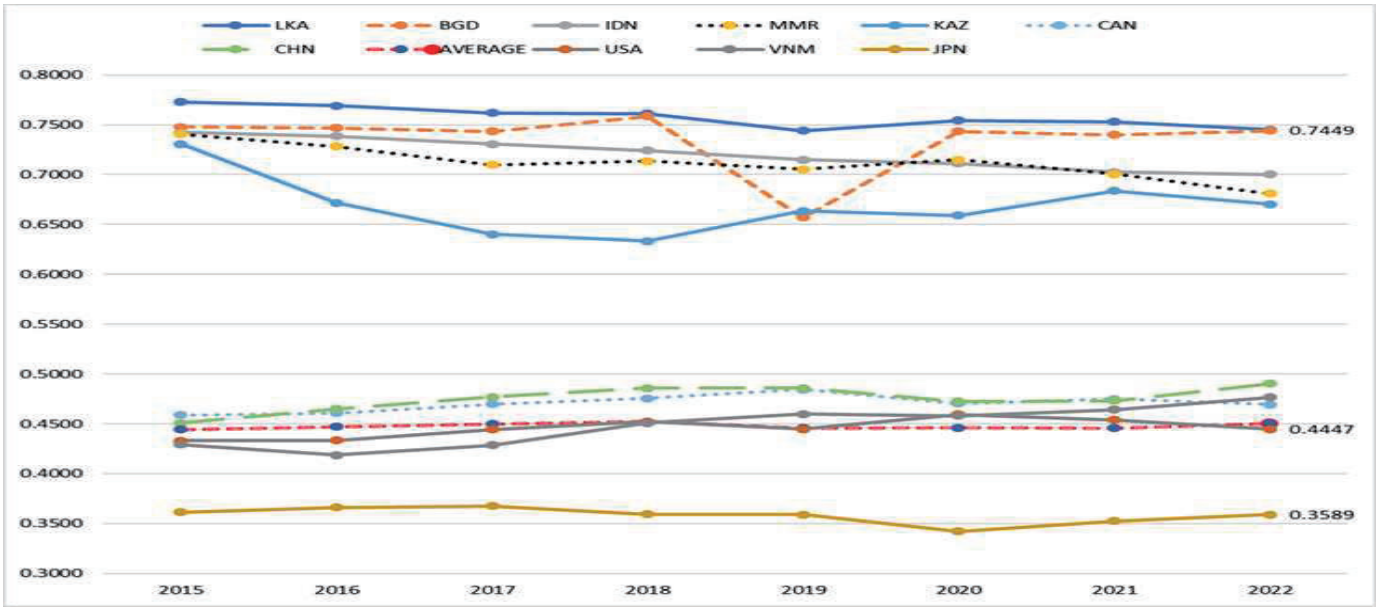
시군구 단위 및 읍면동 단위 분석 비교

- 상이지수: 시군구 vs. 읍면동 데이터
  - 시군구 단위는 약 0.30의 수준을 보임에 반해, 읍면동 단위에서는 약 0.45으로 높게 나타남
  - 즉, 읍면동 단위에서 공간적 분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남
  - 외국인 주거 분리 연구에서 지리적 범위 선택의 중요성 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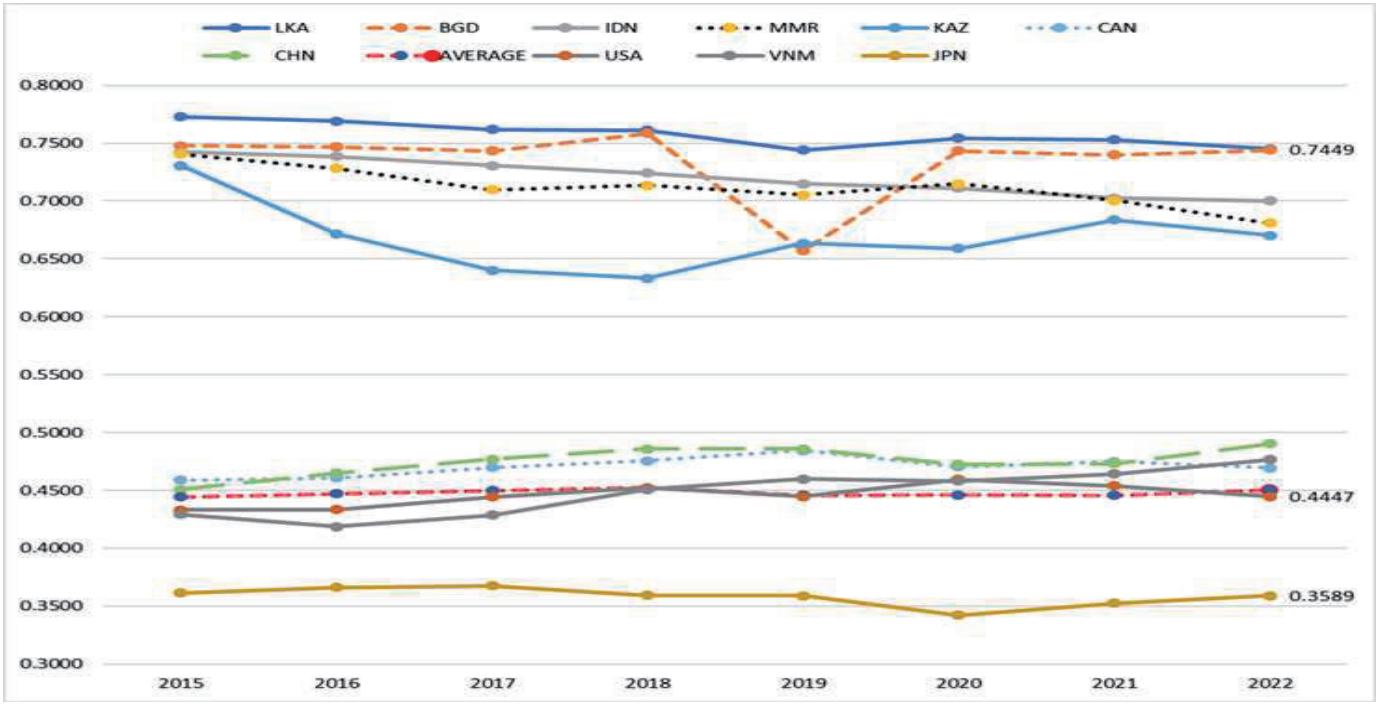
국적별 상이지수 추이

- 상이지수 상·하위 5개국 추이(2015-2022)
  - 국적별로 다양한 수준의 공간적 분리를 보임
  - 잠재적으로 이주 정책, 지역사회 통합 노력, 사회경제적 요인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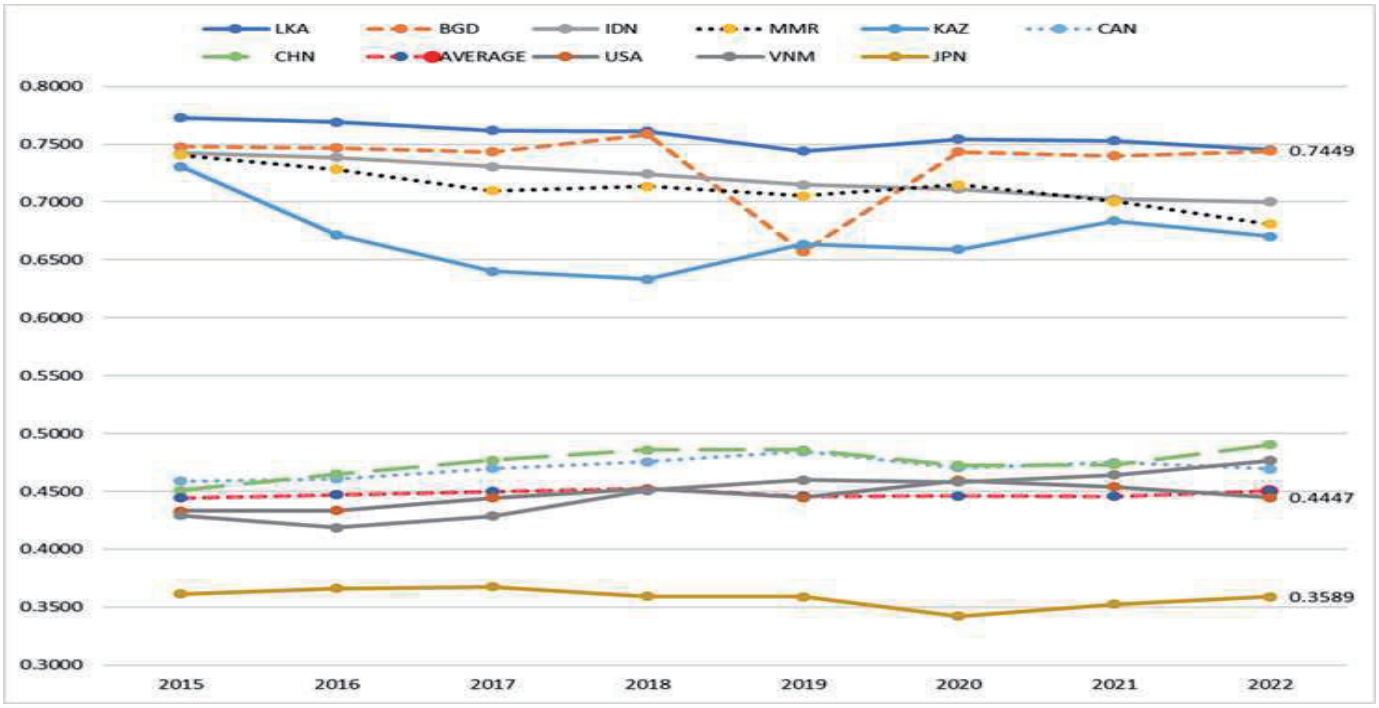
국적별 상이지수 추이

- 상이지수 상·하위 5개국 추이(2015-2022)
  - 상위 5개국은 주로 동남아시아 또는 중앙아시아 국가(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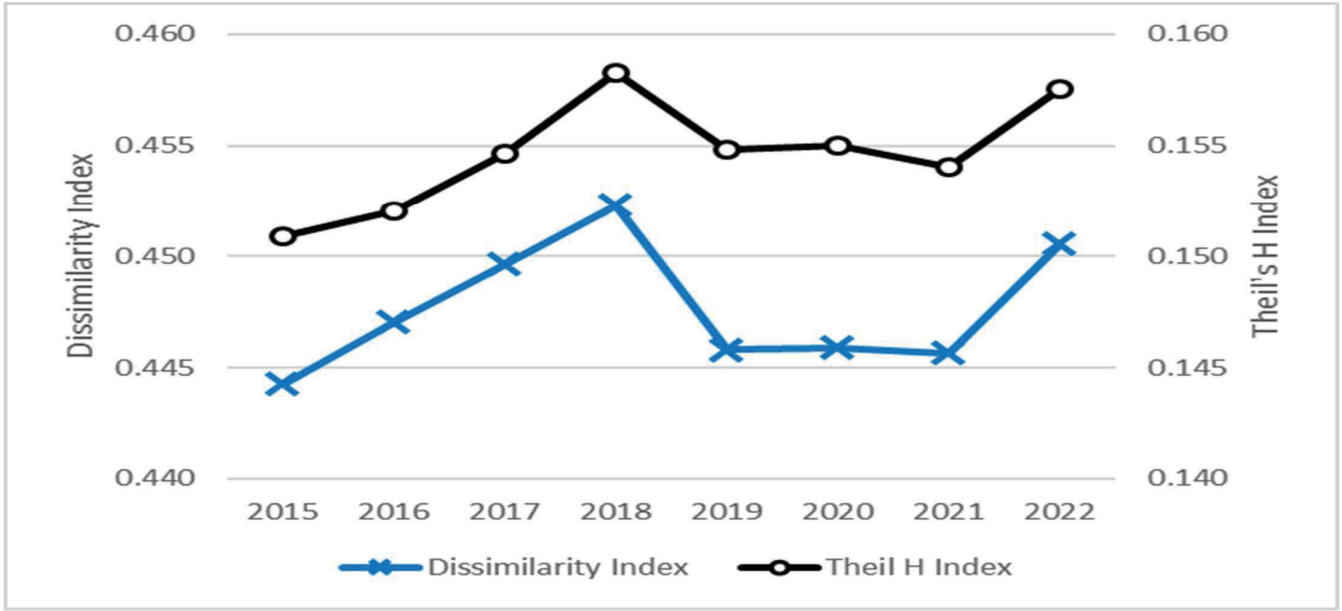
국적별 상이지수 추이

- 상이지수 상·하위 5개국 추이(2015-2022)
  - 하위 5개국은 일본, 중국, 베트남, 미국 등
  - 전반적으로 상이지수 상승 패턴



상이지수 및 타일지수 결과 비교

- 상이지수의 전반적인 추세와 타일지수의 추세가 동일
  - 상이지수와 타일지수의 계산 방식이 상이함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 결과의 신뢰도 확보



상이지수 및 타일지수 결과 비교

- 대체로 상이지수가 높거나 낮았던 국가는 타일지수도 높거나 낮음

민족/국가명	상이지수	타일지수	민족/국가명	상이지수	타일지수
방글라데시	0.771	0.232	조선족	0.598	0.248
스리랑카	0.766	0.241	몽고	0.586	0.144
네팔	0.724	0.220	타이완	0.544	0.134
인도네시아	0.719	0.230	필리핀	0.527	0.127
우즈베키스탄	0.718	0.268	캐나다	0.523	0.099
파키스탄	0.712	0.180	중국	0.493	0.137
미얀마	0.703	0.212	태국	0.479	0.118
카자흐스탄	0.701	0.256	베트남	0.478	0.119
캄보디아	0.676	0.200	미국	0.459	0.108
러시아	0.657	0.194	일본	0.390	0.082

공간적 기여도 분석 결과

- 외국인 주거분리 현상의 시도 내 시군구간 차이보다 시군구 내 읍면동 간의 기여도가 더 높음
- 시군구 단위만으로 분석할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공간적 분리 현상을 간과할 가능성

연도	타일지수	지수에 대한 기여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2015	0.151	0.014	**(9.4)**	0.050	**(32.9)**	0.087	**(57.7)**
2016	0.152	0.014	**(8.9)**	0.049	**(32.5)**	0.089	**(58.6)**
2017	0.155	0.013	**(8.6)**	0.049	**(31.5)**	0.093	**(59.9)**
2018	0.158	0.013	**(8.2)**	0.048	**(30.5)**	0.097	**(61.4)**
2019	0.155	0.012	**(7.5)**	0.047	**(30.1)**	0.097	**(62.4)**
2020	0.155	0.012	**(7.9)**	0.047	**(30.2)**	0.096	**(61.9)**
2021	0.154	0.012	**(7.7)**	0.047	**(30.3)**	0.096	**(62.0)**
2022	0.158	0.011	**(7.2)**	0.048	**(30.3)**	0.098	**(62.5)**

공간적 기여도 분석 결과

- 읍면동 수준의 기여도가 점차 상승
  - 2015년도에는 57.7%, 2022년에는 62.5%
  - 시계열적 분석의 필요성
- 외국인 인구가 지방에서 특히 빠르게 증가하는 맥락에서 이해 가능

연도	타일지수	지수에 대한 기여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2015	0.151	0.014	(9.4)	0.050	(32.9)	0.087	**(57.7)**
2016	0.152	0.014	(8.9)	0.049	(32.5)	0.089	(58.6)
2017	0.155	0.013	(8.6)	0.049	(31.5)	0.093	(59.9)
2018	0.158	0.013	(8.2)	0.048	(30.5)	0.097	(61.4)
2019	0.155	0.012	(7.5)	0.047	(30.1)	0.097	(62.4)
2020	0.155	0.012	(7.9)	0.047	(30.2)	0.096	(61.9)
2021	0.154	0.012	(7.7)	0.047	(30.3)	0.096	(62.0)
2022	0.158	0.011	(7.2)	0.048	(30.3)	0.098	**(62.5)**

공간적 기여도 분석 결과

- 국적별로 기여도 수준 상이
  - 상이지수 및 타일지수 순위와는 무관

민족/국가명	타일지수	지수에 대한 기여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우즈베키스탄	0.268	0.026	(9.8)	0.097	(36.0)	0.145	(54.2)
카자흐스탄	0.256	0.025	(9.7)	0.092	(36.0)	0.139	(54.3)
조선족	0.248	0.053	(21.5)	0.092	(37.3)	0.102	(41.2)
스리랑카	0.241	0.038	(15.8)	0.074	(30.6)	0.129	(53.5)
방글라데시	0.232	0.026	(11.4)	0.075	(32.4)	0.130	(56.2)
인도네시아	0.230	0.033	(14.2)	0.066	(28.5)	0.132	(57.3)
네팔	0.220	0.031	(14.0)	0.072	(32.6)	0.118	(53.4)
미얀마	0.212	0.023	(10.9)	0.056	(26.4)	0.133	(62.7)
캄보디아	0.200	0.032	(16.2)	0.064	(31.9)	0.104	(51.9)
러시아	0.194	0.010	(5.2)	0.070	(36.2)	0.114	(58.6)
파키스탄	0.180	0.009	(4.9)	0.053	(29.2)	0.118	(65.8)
몽고	0.144	0.011	(7.6)	0.044	(30.6)	0.089	(61.8)
중국	0.137	0.016	(11.3)	0.043	(31.6)	0.078	(57.1)
타이완	0.134	0.033	(24.5)	0.048	(35.6)	0.053	(39.9)
필리핀	0.127	0.011	(8.3)	0.037	(29.6)	0.079	(62.1)
베트남	0.119	0.011	(9.3)	0.028	(23.8)	0.080	(66.9)
태국	0.118	0.012	(10.1)	0.033	(28.3)	0.073	(61.6)
미국	0.108	0.027	(25.4)	0.041	(38.0)	0.039	(36.6)
캐나다	0.099	0.029	(29.4)	0.032	(32.4)	0.038	(38.2)
일본	0.082	0.014	(17.3)	0.023	(28.2)	0.045	(54.6)

공간적 기여도 분석 결과

- 읍면동 기여도가 높은 국가는 비전문 취업(E-9) 및 결혼이민(F-6) 목적 외국인 비율이 높음

민족/국가명	타일지수	지수에 대한 기여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우즈베키스탄	0.268	0.026	(9.8)	0.097	(36.0)	0.145	(54.2)
카자흐스탄	0.256	0.025	(9.7)	0.092	(36.0)	0.139	(54.3)
조선족	0.248	0.053	(21.5)	0.092	(37.3)	0.102	(41.2)
스리랑카	0.241	0.038	(15.8)	0.074	(30.6)	0.129	(53.5)
방글라데시	0.232	0.026	(11.4)	0.075	(32.4)	0.130	(56.2)
인도네시아	0.230	0.033	(14.2)	0.066	(28.5)	0.132	(57.3)
네팔	0.220	0.031	(14.0)	0.072	(32.6)	0.118	(53.4)
미얀마	0.212	0.023	(10.9)	0.056	(26.4)	0.133	**(62.7)**
캄보디아	0.200	0.032	(16.2)	0.064	(31.9)	0.104	(51.9)
러시아	0.194	0.010	(5.2)	0.070	(36.2)	0.114	(58.6)
파키스탄	0.180	0.009	(4.9)	0.053	(29.2)	0.118	**(65.8)**
몽고	0.144	0.011	(7.6)	0.044	(30.6)	0.089	**(61.8)**
중국	0.137	0.016	(11.3)	0.043	(31.6)	0.078	(57.1)
타이완	0.134	0.033	(24.5)	0.048	(35.6)	0.053	(39.9)
필리핀	0.127	0.011	(8.3)	0.037	(29.6)	0.079	**(62.1)**
베트남	0.119	0.011	(9.3)	0.028	(23.8)	0.080	**(66.9)**
태국	0.118	0.012	(10.1)	0.033	(28.3)	0.073	**(61.6)**
미국	0.108	0.027	(25.4)	0.041	(38.0)	0.039	(36.6)
캐나다	0.099	0.029	(29.4)	0.032	(32.4)	0.038	(38.2)
일본	0.082	0.014	(17.3)	0.023	(28.2)	0.045	(54.6)

공간적 기여도 분석 결과

-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은 대부분 수도권에 거주하여 시도간 기여가 큰 편

민족/국가명	타일지수	지수에 대한 기여					
		시도간		시군구간		읍면동간	
우즈베키스탄	0.268	0.026	(9.8)	0.097	(36.0)	0.145	(54.2)
카자흐스탄	0.256	0.025	(9.7)	0.092	(36.0)	0.139	(54.3)
조선족	0.248	0.053	**(21.5)**	0.092	(37.3)	0.102	**(41.2)**
스리랑카	0.241	0.038	(15.8)	0.074	(30.6)	0.129	(53.5)
방글라데시	0.232	0.026	(11.4)	0.075	(32.4)	0.130	(56.2)
인도네시아	0.230	0.033	(14.2)	0.066	(28.5)	0.132	(57.3)
네팔	0.220	0.031	(14.0)	0.072	(32.6)	0.118	(53.4)
미얀마	0.212	0.023	(10.9)	0.056	(26.4)	0.133	(62.7)
캄보디아	0.200	0.032	(16.2)	0.064	(31.9)	0.104	(51.9)
러시아	0.194	0.010	(5.2)	0.070	(36.2)	0.114	(58.6)
파키스탄	0.180	0.009	(4.9)	0.053	(29.2)	0.118	(65.8)
몽고	0.144	0.011	(7.6)	0.044	(30.6)	0.089	(61.8)
중국	0.137	0.016	(11.3)	0.043	(31.6)	0.078	(57.1)
타이완	0.134	0.033	(24.5)	0.048	(35.6)	0.053	(39.9)
필리핀	0.127	0.011	(8.3)	0.037	(29.6)	0.079	(62.1)
베트남	0.119	0.011	(9.3)	0.028	(23.8)	0.080	(66.9)
태국	0.118	0.012	(10.1)	0.033	(28.3)	0.073	(61.6)
미국	0.108	0.027	(25.4)	0.041	(38.0)	0.039	(36.6)
캐나다	0.099	0.029	(29.4)	0.032	(32.4)	0.038	(38.2)
일본	0.082	0.014	(17.3)	0.023	(28.2)	0.045	(54.6)

결론

- 읍면동 단위에서 주거 분리 분석의 필요성 도출
  - 읍면동 수준의 상이지수가 시군구 수준보다 높음
  - 타일지수를 분해한 결과, 읍면동 차이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그 비중도 점차 높아져 왔음
- 상이지수 및 타일지수 모두 국적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 외국인을 단일 집단으로 간주하지 않고, 맞춤형 정책 접근이 필요
- 시계열 분석의 필요성 도출
  - 상이지수 하위 국가들의 분리 정도가 높아지는 패턴 파악
  - 읍면동 차이의 기여도 심화
- 후속 연구에는 국적에 담긴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함의를 도출한 분석 제안

참고문헌

발표3. 문경연(광운대)

‘하이브리드’ 축제 공간 만들기:
창원과 대만 신베이시의 축제 사례를 통해 본
지역성·문화다양성의 연결

‘하이브리드’ 축제 공간 만들기:
창원과 대만 신베이시의 축제 사례를 통해 본 지역성·문화다양성의 연결

문경연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곧 논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인용은 삼가주십시오.

목 차

- 들어가며: 왜 하이브리드인가?
- ‘하이브리드’ 축제와 이주민 축제
- 창원의 맘프(MAMF): '초국적'과 '다문화'의 사이에서
- 신베이시의 다원문화축제: 지역성과 문화를 하이브리드하기
- 결론을 대신하여: ‘하이브리드’ 축제를 전망하기

들어가며: 왜 하이브리드인가?

- 하이브리드 축제의 등장
  - 팬데믹의 영향으로 확대된 '비대면' 공간 -> 비대면 축제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축제 약 80% 취소
  - 그러나 전면 온라인 축제에 대한 여러 의문과 비판이 제기됨: 행사 취소로 인한 적자 등
  - 2021년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축제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축제(Hybrid Festival)를 2021년 축제 실행방안으로 제시
  - 대만도 비슷한 시기 하이브리드 축제 도입
  - 하이브리드 축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하는 축제?

들어가며: 왜 하이브리드인가?

- '하이브리드' 축제와 이주민 축제
  - 하이브리드(hybrid): 라틴어로 '뒤섞임'을 의미하며, 혼종과 혼성으로 번역
  - 축제도 하이브리드 문화 현상임
  - 축(祝: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 제(祭: 제사) = 종교적 의례와 유희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현상
  - 의례와 유희가 결합된 축제는 각 역사와 문화에 따라 '지역성'을 가짐
  - 시간이 지나 축제의 의례성이 줄어들고 놀이와 유희의 특성이 강해지며, 축제의 의미는 지역 문화 전반으로 확장

‘하이브리드’ 축제와 이주민 축제

- 1990년대 이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성과 관광과 결합하는 축제도 등장
-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에 이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이주민들의 문화를 보여주는 이주민 축제 등장
- 이 이주민 축제들은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에 통합된 새로운 문화를 보여줄 것인가, 선주민들에게 한 민족의 특정한 문화를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 축제의 내용이 달라짐
- 이주민 축제:
  - 이주민들의 문화 뿐 아니라 원래 축제가 지니는 지역성이 만나는 장(field)
  - 이주민들의 증가와 함께 변화한 지역 공간 + 원래의 지역성 = 새로운 장소

‘하이브리드’ 축제와 이주민 축제

- ‘하이브리드’ 이주민 축제
  - 코로나 19로 도래하게 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이주민 축제의 등장
  - 이 축제는 원래 이주민 축제가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성이 강화되며 더 다층적인 축제의 장이 긴밀하게 연결
  - 이 연구는 같은 시기에 하이브리드 이주민 축제를 개최한 두 도시, 창원과 신베이시 사례를 비교하며 이 축제 공간이 변화하는 양상을 고찰
  - 지역성, 문화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이 어떻게 만나며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지에 중점을 두려고 함

창원의 맘프(MAMF): ‘초국적’과 ‘다문화’의 사이에서

- 한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축제
- MAMF: Migrants’ Arirang Multicultural Festival
- 2005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0년에 창원으로 옮겨가게 되었음
- 2019년까지 오프라인으로 열리다가 2020년은 전면 비대면으로 열림
- 2021년에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처음 도입
- 2022년부터는 점차 오프라인의 행사를 늘려가기 시작
- 축제 운영에서의 창원이라는 지역성이 강함: 경상남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문화재단 등 주최

창원의 맘프(MAMF): ‘초국적’과 ‘다문화’의 사이에서

- 그러나 축제 내용은 창원의 지역성보다 상대적으로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들의 문화를 선주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참여해보는 ‘문화다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
  - 축제의 이름에 담겨있는 ‘아리랑’: 한민족의 정서 뿐 아니라 한국에 사는 이주민들의 정서까지 확대해서 서로를 이해해 보려는 의도
- 하지만 2020년 비대면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축제의 내용도 바뀌게 됨
  - 예) ‘다문화호러퍼레이드-나희’ :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의 귀신과 축사 퍼레이드 + 생방송 실시간 댓글(한국 네티즌 뿐 아니라 이주민의 본국과의 연결)

신베이시의 다원문화축제: 지역성과 문화를 하이브리드하기

- 신베이시는 대만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
- 그러나 신베이시의 이주민들은 타이베이시와 가깝다는 이유로 타이베이시로 가서 관련 교육을 들어옴
- 2016년 각 지방정부가 엄격하게 구역을 나눠 이주민 교육을 담당하게 되면서 신베이시정부도 이주민의 문화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됨
- 2021년부터 신베이시 문화국이 이주민 행사를 축제로 바꾸어 담당하게 됨

신베이시의 다원문화축제: 지역성과 문화를 하이브리드하기

- 신베이시 축제에서 강조하는 내용: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사는 신베이시의 지역성과 대만의 선주민 역시 먼저 대만섬에 왔을 뿐 역사적으로 이주 경험이 있다는 점
  - 신베이시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의 문화: 원주민 문화
  - 신베이시에 먼저 이주한 사람들의 문화: 민난, 객가 문화
  - 그 후 이주한 사람들의 문화: 권촌 문화
  - 이후 이주한 사람들의 문화: 신베이시에 많이 살고 있는 출신국 사람들의 문화
- SNS와 홈페이지를 이용한 현장중계식의 방식, 그러나 홈페이지를 행사 후 바로 닫으면서 지속성이 길지는 않음

결론을 대신하여:
‘하이브리드’ 축제를 전망하기

- ‘하이브리드’ 축제의 등장은 기존의 축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줌
- ‘하이브리드’ 이주민 축제도 아무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인터넷의 장점을 살려 축제 공간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고, 다양한 참여와 반응을 이끌어냄
  - 신베이시의 사례: 거주지 신베이시라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안에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지역주민으로 '하이브리드' 하려는 의도 -> 지역 사회 통합?
  - 창원시의 사례: 하이브리드 방식을 활용해 맘프를 국경을 넘어 홍보, 이주민들의 모국과 거주국(한국)을 연결, 최근에는 창원의 지역성을 점차 드러내는 행사들도 늘어나고 있음

[세션#5]
경계를 넘는 유라시아의 난민들:
난민 이동과 정치경제적 영향

사회
신범식(서울대)

발표1. 백승훈(한국외대)
아랍의 봄 이후 난민 이동의 경제적 영향

발표2. 바딤 슬랩첸코(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 비교 연구: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 분석

발표3. 김선희(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폴란드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

토론
노다솔(한국외대)
정재원(국민대)
주송하(국민대)

발표1. 백승훈(한국외대)

아랍의 봄 이후 난민 이동의 경제적 영향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국제 난민 유입과 국가 경쟁력에 관한 연구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개 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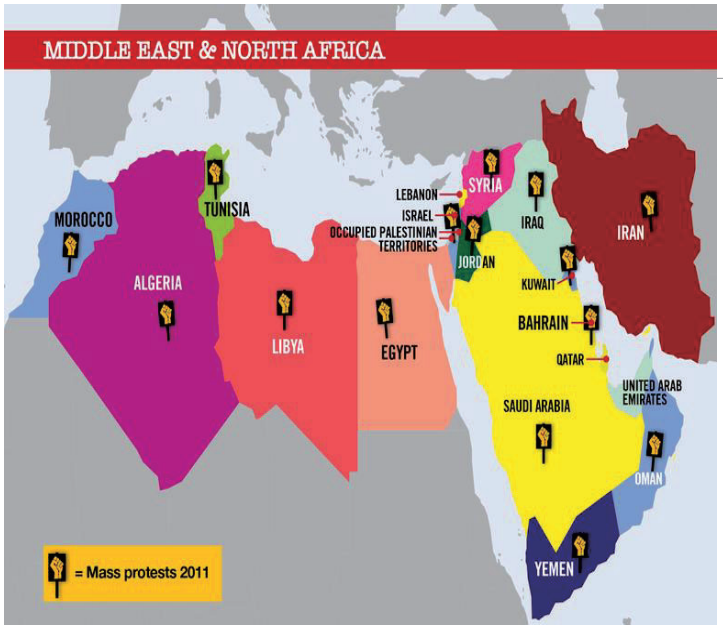
I. 2011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한 중동발 이주 환경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III. 실증 분석

IV. 소 결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의 필요성

-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발 대규모 민족 이산은 아랍의 시민 봉기가 발발한 지 12년이 지남
- 현대도 이주민을 발생시킨 유출국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는 유럽, 동아시아, 북미 지역 국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중동발 집단 이주민을 유출한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은 유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에서는 이슬람 혐오 및 이주민에 대한 반감 등 사회 갈등과 반목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가 수용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이 어떤 이유와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증 연구(empirical research)가 필요함.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Estimated migrant stocks circa 2000 in the MENA region and Turkey, in thousands and as a proportion of total population

Country	N	%
QATAR	409	70.4
UNITED ARAB EMIRATES	1,922	68.2
KUWAIT	1,108	49.3
JORDAN	1,945	38.6
BAHRAIN	254	37.6
ISRAEL	2,256	37.3
OMAN	682	26.1
SAUDI ARABIA	5,255	23.7
LEBANON	634	18.2
LIBYA	570	10.9
SYRIA	903	5.5
TURKEY	1,503	2.2
YEMEN	284	1.4
ALGERIA	250	0.8
TUNISIA	38	0.4
EGYPT	169	0.2
MOROCCO	26	0.1

SOURCE: United Nations (2004b)

- 북서 아프리카 Maghreb
  - ✓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는 1968년 이후 부터 자국의 실업률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프랑스 및 유럽으로의 적극적인 노동이주 정책 실시
  - ✓ 2004년 자료로 모로코는 해외에서 송금되는 금액이 전세계 4위로 33억 달러가 국외로부터 송금 됨.
  - ✓ 지식인은 물론 고기술 인력 대부분인 유럽, 미국, 캐나다로 이주
  - ✓ 관리직 인력난이 올정 정도로 심각한 문제, 이는 아랍의 봄 이후에도 진행 중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Country	2010 population (millions)			Population %		Workforce %	
	Total	Nationals	Expatriates	Nationals	Expatriates	Nationals	Expatriates
Bahrain	1.05	0.51	0.54	48.57	51.43	36.10	63.90
Qatar	1.68	0.22	1.46	13.10	86.90	5.70	94.30
Oman	3.41	2.39	1.02	70.09	29.91	28.70	71.30
Kuwait	3.47	1.04	2.43	29.97	70.03	16.90	83.10
UAE	8.19	0.95	7.24	11.60	88.40	4.20	95.80
KSA	28.69	20.94	7.75	72.99	27.01	50.50	49.50
GCC	**46.50**	**26.05**	**20.45**	**56.02**	**43.98**	**38.30**	**6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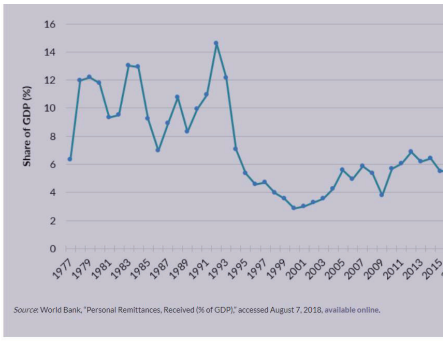
Source: Forstenlechner and Rutledge (2011).

- 걸프 산유국
  - ✓ GCC 국가: 바레인,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엄청난 수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형성된 2중 노동시장이 지대추구 경제 체제를 유지시켜주고 있음.
  - ✓ GCC 국가의 경우, 유가의 급등에 따른 석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경제개발이 지속됨. 개발을 뒷받침할 노동력 부족에 따른 외부 수급을 필요로 함. 문제는 GCC 국가들의 경제 개발에 필요한 기초 인프라 설비가 갖추어지고도 이주 노동자의 수요는 줄지 않음.
  - ✓ 그 이면에는 인프라 유지를 위한 값싼 인력이 지속해서 필요했기 때문. 2020년 기준, GCC 국가의 외국인 비중은 50%가 넘으며, UAE와 카타르는 80%를 초과한다 (GLMM 2020).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이전의 이주 형태

Destination	Number of Egyptians
Saudi Arabia	2,925,000
Jordan	1,150,000
United Arab Emirates	765,000
Kuwait	500,000
Sudan	500,000
Qatar	230,000
Oman	56,000
Lebanon	40,000
Iraq	22,000
Bahrain	21,000
Palestinian territories	14,500
Algeria	6,600
Morocco	3,000
Syria	2,000
Tunisia	800
Mauritania	150
Total	**6,236,050**



- 전통적인 이주민 유출국/ 수용국 (이집트, 레바논)
  - ✓ 높은 교육열, 아랍민족주의의 영향력 등등으로 이집트는 중동지역의 최대 노동 이주민을 전 중동과 서방국가로 수출하던 국가.
  - ✓ 노동 이주 외에도 무슬림 형제단을 비롯 오랜 군부 독재정권 통치에 저항하는 지식층의 유출도 가장 많았던 국가였음.
  - ✓ 레바논의 경우 1975년-1990년 15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이유로 많은 이주민을 유출한 나라임
  - ✓ 이집트와 레바논은 전통적으로 이주민을 많이 유출한 국가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은 중동발 난민을 수용한 국가이기도 하였음.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아랍의 겨울?

- 2011년 중동 전역에서 발발 한 아랍 시민 봉기는 역내 국가에서 만성화된 권위주의 체제와 경제 개발에 걸림돌이었던 정부 주도 경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발신.
- 국제 사회 역시 '아랍의 봄'이라는 수사를 통해 중동에서 벌어진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아랍의 봄과 이 사건이 추동할 변화에 대한 기대는 얼마지 나지 않아 무참히 무너지고 말았음.
- 아랍 시민 봉기가 일부 국가에서 장기 집권하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기는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권위주의 체제 자체는 공공화되었고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는 행위 주체만 변화한 채 더 강력한 소수 기득권층의 지대추구 체제가 확립됨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아랍의 봄? 아랍의 겨울?

- 아랍 시민 봉기는 시리아, 예멘, 그리고 리비아에서 내전을 초래하였으며, 시민 봉기 초기 30년 장기 독재의 무바라크(Hosni Mubarak) 정부를 무너뜨리며 많은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이집트에서는 나세르 이후 최초로 정부의 개입 없는 선거로 선출된 모하메드 무르시(Mohamed Morsi)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군부 쿠데타로 퇴출.
- 역내 여러 국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튀니지는 시민 봉기의 후폭풍 속에서도 민주적 전환을 이루어 진정한 '아랍의 봄'의 사례가 될 듯 보였으나, 2019년 대통령이 된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가 2022년 7월 개헌을 단행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서막을 알림. 새로운 튀니지 개정헌법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을 강화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내각 인사의 경우 의회의 신임 투표 대상에서 제외. 공화국의 주요 요체는 삼권 분립임에도 대통령의 판사 임명권까지 부여한 개헌안은 아랍의 봄 이후 2014년에 개정된 의원 내각제의 튀니지 정치 체제를 완전히 뒤엎음.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이슬람혐오, 이주민 혐오의 도래

- 역내 각국의 체제 불안정성은 중동발 이주민 또는 유민들이 지속해 유출되기 쉬운 환경을 제공.
-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민에 대한 반대(그리고 이민자에 대한 반대)와 극우파 정당의 도래 등 역외에도 여러 영향.
- 2017년 "유럽 연합의 이민자 사회 통합" 란 주제로 특별 편성하여 출간한 유로바로미터 469호에 따르면 유럽인의 38%가 유럽 연합 외부에서의 이민은 이들을 수용하는 유럽 회원국에게 기회보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밝힘(Eurobarometer 2017).
- 유로바로미터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국에게는 기회이다'라 생각하는 비율.
- 이주민 유입이 수용국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유럽인의 비율은 8%에 불가 특히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민이 가장 많이 정착했던 독일에서 2%의 국민 만이 이주민의 자국에 도움이 될것이라 여김.

I. 아랍의 봄 이후 변화하는 중동 발 이주 환경

II. 한국으로 유입된 중동 지역 이주민

공통점 & 상이점?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의 필요성

- 아랍의 봄이 추동한 중동발 대규모 민족 이산은 아랍의 시민 봉기가 발발한 지 12년이 지남
- 현대도 이주민을 발생시킨 유출국은 물론 이들을 수용하는 유럽, 동아시아, 북미 지역 국가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중동발 집단 이주민을 유출한 이집트, 튀니지,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은 유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들을 수용한 국가에서는 이슬람 혐오 및 이주민에 대한 반감 등 사회 갈등과 반목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아랍의 봄 이후의 중동발 이주가 수용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아가 그 영향력이 어떤 이유와 사실에 근거하여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증 연구(empirical research)가 필요함.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대중영합주의와 반이주 극우정당

- 대중영합주의(Populism)
  - ✓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는 1863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이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사용한 표현으로, 이후 민주주의 정부의 본령으로 회자하는 구절.
  - ✓ 한편으로는 민주주의가 대중영합주의(populism)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잘 설명. 민주주의 체제 혹은 민주주의 체제의 주요 행위자-정부, 정당, 시민단체 등등- 들이 대중영합주의의 위험성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언제든 대중영합주의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행동이라는 정당성을 부여받아 타자에 대한 배제와 심각할 경우에는 폭력까지 실행할 수 있게 됨.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아랍의 봄 이후의 이주와 대중영합주의

- 대중영합주의(Populism) 4 요소
  - ✓ 대중영합주의는 크게 4개의 요소로 1) 국민/시민/인민 2) 도덕적 정당성 3) 투쟁 4) 기득권, 구성됨.
  - ✓ 대부분의 대중영합주의 운동은 자신들이 '국민'을 대표한다고 주장. 또한 평범한 국민, 소시민이 억압받고 있고 이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다고 여김.
  - ✓ 이 과정에서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기득권이 존재하며, 이들을 타파해야 한다는 논리 구조를 견지함 (Arato & Cohen 2017, 286; Bonikowski & Gidron 2016; Norris & Inglehart 2016, 18).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아랍의 봄 이후의 이주와 대중영합주의

- 대중영합주의(Populism) 4가지 특성
  - ✓ 대중영합주의는 또한 4가지 주된 특성 1) 동질성 2) 배타성 3) 직접 민주주의 4) 민족주의.
  - ✓ 대중영합주의는 동질성을 강조.
    - 이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로 가기 위한 첫 시작점이기 때문. 국민/인민/시민에 대한 통일성과 동질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일상인 의견 충돌, 다양한 이해관계, 협의, 타협의 필요성을 약화. 국민/인민/시민의 범주화에 있어 동질화 과정은 사람과 사람을 내 범주, 외 범주로 분류하게 하며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내 범주를 더 선호하게 만듬. 국민/인민/시민의 개념을 범주화하는 과정은 그 범주 내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타자화되는 외 범주 대상에 대한 배타성 강화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투쟁 혹은 대항으로 이어지게 함. 이 과정에서 동질화된 내 범주 집단인 국민/인민/시민은 선량하고 균일한 존재가 되며 이에 반하는 세력과 대립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옳다는 신념이 됨. 특히 내 범주 집단과 외 범주 집단의 대립에 도덕률과 가치판단의 위계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세력이 등장하게 되면 대중영합주의가 완성되게 됨.

II. 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 관련 실증 연구

대중영합주의와 반이주 극우정당

- ✓ 모순적이지만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 담론이 제어 없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자연스러운 대립, 다양한 의견은 무시되고 동질성에 벗어난 사람 혹은 세력은 배제됨.
- ✓ 우리는 아랍의 봄 이후 대중영합주의 극우 정당들이 어떻게 자국민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이슬람 혐오, 반 이주민 정서를 극대화하여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고 지지를 얻었는지 경험.
- ✓ 르 펜(Marine Le Pen)이 이끄는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 in France, NFF), 독일의 대안통합당(Alternative for Germany, AfD),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reedom Party of Austria, FPO) 및 영국의 영국독립당(United Kingdom Independence Party, UKIP)과 같은 극우 정당들은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이야기하며 대중의 지지를 얻음.
- ✓ 이 정당들은 이민 문제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이용하여 이민이 국가 정체성, 자국의 문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이란 담론이 공론의 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도 대중영합주의의 4요소는 적절히 활용. 국민의 경계 밖에 있는 이주민은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존재이며 이주민들을 수용하려고 하는 기득권, 정치, 경제, 사회 엘리트 계층에 대한 투쟁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즉, 소위 기득권 세력이 규정하는 이주민들의 수용에 관한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에 대한 '동질한' 국민의 거부권 행사는 정당할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 옳다는 가치판단까지 하게 된 것임

III. 실증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Refugee → Labor Force

Index(['XXX', 'id', 'year', 'REFUGEE', 'LF', 'HCI', 'GDP'], dtype='object')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two-step difference GMM
Group variable: id — Number of obs = 2604
Time variable: year — Min obs per group: 12
Number of instruments = 80 — Max obs per group: 12
Number of groups = 217 — Avg obs per group: 12.00

log_LF	coef.	Corrected Std. Err.	z	P>|z|		
L1.log_LF	0.4520342	0.0860555	5.2528218	0.0000001	***
log_REFUGEE	**0.3087830**	**0.9458327**	**0.3264669**	**0.7440711**	
year_2012	-0.2616823	0.2134421	-1.2260107	0.2201946	
year_2013	-0.3515728	0.2885120	-1.2185722	0.2230066	
year_2014	-0.4122399	0.3041292	-1.3554763	0.1752659	
year_2015	-0.8224003	0.3454480	-2.3806778	0.0172808	*
year_2016	-0.7962294	0.3395373	-2.3450426	0.0190249	*
year_2017	-0.5082130	0.2728956	-1.8622985	0.0625610	
year_2018	-0.4670859	0.3464147	-1.3483432	0.1775480	
year_2019	-0.4395459	0.3037420	-1.4471026	0.1478682	
year_2020	-0.5696060	0.3143359	-1.8120930	0.0699718	
year_2021	-0.5957925	0.3016148	-1.9753428	0.0482293	*
year_2022	-0.5142122	0.3555815	-1.4461163	0.1481446	
year_2023	-0.8880612	0.4011099	-2.2140096	0.0268281	*

Hansen test of overid. restrictions: chi(66) = 59.689 Prob > Chi2 = 0.695
Arellano-Bond test for AR(1) in first differences: z = -5.52 Pr > z =0.000
Arellano-Bond test for AR(2) in first differences: z = 1.93 Pr > z =0.053

Refugee → HCI

Index(['XXX', 'id', 'year', 'REFUGEE', 'LF', 'HCI', 'GDP'], dtype='object')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two-step difference GMM
Group variable: id — Number of obs = 2604
Time variable: year — Min obs per group: 12
Number of instruments = 80 — Max obs per group: 12
Number of groups = 217 — Avg obs per group: 12.00

log_HCI	coef.	Corrected Std. Err.	z	P>|z|		
L1.log_HCI	0.0028117	0.0177370	0.1585205	0.8740466	
log_REFUGEE	**0.0266020**	**0.0630789**	**0.4217257**	**0.6732253**	
year_2012	-0.0742081	0.0115421	-6.4293435	0.0000000	***
year_2013	-0.0975046	0.0151204	-6.4485386	0.0000000	***
year_2014	-0.1022833	0.0150470	-6.7975818	0.0000000	***
year_2015	-0.0886292	0.0150306	-5.8965801	0.0000000	***
year_2016	-0.0621084	0.0165115	-3.7615224	0.0001689	***
year_2017	0.2326040	0.0202054	11.5119878	0.0000000	***
year_2018	0.2753804	0.0190580	14.4496184	0.0000000	***
year_2019	-0.0403810	0.0188651	-2.1405128	0.0323133	*
year_2020	0.2453248	0.0203076	12.0804354	0.0000000	***
year_2021	-0.0833933	0.0158742	-5.2533821	0.0000001	***
year_2022	-0.1075877	0.0148546	-7.2427289	0.0000000	***
year_2023	-0.1018779	0.0130398	-7.8128628	0.0000000	***

Hansen test of overid. restrictions: chi(66) = 82.945 Prob > Chi2 = 0.078
Arellano-Bond test for AR(1) in first differences: z = -9.16 Pr > z =0.000
Arellano-Bond test for AR(2) in first differences: z = -0.12 Pr > z =0.904

Refugee → GDP

Index(['XXX', 'id', 'year', 'REFUGEE', 'LF', 'HCI', 'GDP'], dtype='object')
Dynamic panel-data estimation, two-step difference GMM
Group variable: id — Number of obs = 2604
Time variable: year — Min obs per group: 12
Number of instruments = 80 — Max obs per group: 12
Number of groups = 217 — Avg obs per group: 12.00

log_GDP	coef.	Corrected Std. Err.	z	P>|z|		
L1.log_GDP	0.1996073	0.0781091	2.5554946	0.0106037	*
log_REFUGEE	**2.2413238**	**1.6498670**	**1.3584876**	**0.1743090**	
year_2012	-0.5381884	0.2771655	-1.9417585	0.0521663	
year_2013	-0.6614175	0.4171333	-1.5856263	0.1128241	
year_2014	-0.6627126	0.3815403	-1.7369399	0.0823978	
year_2015	-0.7573151	0.4295087	-1.7632127	0.0778646	
year_2016	-1.2275112	0.3965105	-3.0957849	0.0019629	**
year_2017	-1.1953745	0.4420169	-2.7043641	0.0068435	**
year_2018	-1.2103377	0.4006505	-3.0209313	0.0025200	**
year_2019	-1.2475578	0.4145546	-3.0093933	0.0026177	**
year_2020	-1.4905760	0.4290741	-3.4739363	0.0005129	***
year_2021	-1.3321209	0.4017330	-3.3159362	0.0009134	***
year_2022	-1.1851473	0.4649667	-2.5488864	0.0108067	*
year_2023	-2.7830782	0.7282351	-3.8216755	0.0001325	***

Hansen test of overid. restrictions: chi(66) = 71.581 Prob > Chi2 = 0.298
Arellano-Bond test for AR(1) in first differences: z = -4.34 Pr > z =0.000
Arellano-Bond test for AR(2) in first differences: z = 0.92 Pr > z =0.357

III. 실증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 ✓ 난민 유입이 수원국의 경제적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음.
- ✓ 특히, 난민 유입이 노동력, 인간 자본 지수(Human Capital Index, HCI), 그리고 GDP와 같은 경제적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 ✓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동태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난민 유입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였음. 연구 결과는 난민 유입의 부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통계적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연도별 외부 요인들이 경제적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 ✓ 먼저, 난민 유입이 노동력(Labor Force, LF)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계수: 0.309, p=0.744). 이는 난민 유입이 노동력 감소를 초래한다는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임. 반면, 이전 시기의 노동력 수준이 현재 노동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계수: 0.452, p<0.01), 이는 노동 시장의 자기 지속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력 감소는 특정 연도(2015년, 2016년, 2021년, 2023년)에 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외부 요인(예: 경제 불황, 정책 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해석됨.

III. 실증 분석

패널 데이터 분석

- ✓ 둘째, 난민 유입이 인간 자본 지수(HCI)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계수: 0.0266, p=0.673). 인간 자본 지수가 특정 연도(2017년, 2018년)에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감소한 경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난민 유입보다 해당 연도에 발생한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이 인간 자본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줌. 이러한 결과는 난민 유입이 수원국의 교육 수준이나 인간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오히려 인간 자본 지수는 난민 유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될 것 임.
- ✓ 마지막으로, 난민 유입이 GDP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난민 유입이 GDP에 양(+)의 효과를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수(2.241)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p=0.174). GDP 감소는 2020년과 2023년에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COVID-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이 GDP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이는 난민 유입이 경제적 성과를 저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으며, 오히려 난민 유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가능성을 열어둠.
- ✓ Hansen 검정 및 Arellano-Bond 검정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도구변수가 적절히 작동하였음을 보여줌.

V. 소 결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중동의 디아스포라 문제는 그 규모와 성격이 과거의 디아스포라와 다르다. 이주민 유출국가는 물론이고 역 내외 수용국가 사회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중동발 민족 이산 문제에 대응하는 역내외 국가들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대부분 이주민 및 난민들의 참혹한 상황을 공감하고 수용하는 방향보다 구별짓기 및 가려받기(extreme vetting)를 강화. 중동발 난민 및 집단 이주 문제가 점차 수용국가에서 인권 차원보다 안보 의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 아래 대중영합주의 정당의 세력화가 이슬람 공포를 이용하여 그 당위성이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로 이주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할 이주 및 난민 문제를 조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연구로서 의미를 가짐

V. 소 결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난민 유입이 수원국의 노동력, 인간 자본 지수, GDP와 같은 주요 경제적 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오히려 연도 효과가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특정 연도에 발생한 외부 요인들이 경제적 지표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난민 유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반박하며, 난민을 경제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난민 유입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통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함. 난민 유입이 단기적으로 경제적 지표에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점은 오히려 수원국이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난민을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이러한 점에서, 난민 유입을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 경제 발전의 기회로 보는 정책적 관점 전환이 요구됨.

발표2. 바딤 슬랩첸코(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 비교 연구: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 분석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 비교 연구: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사례 분석

바딤 슬랩첸코
(아시아연구소)

Made with Gamma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장악
- 다수의 아프간인 인접국으로 피난
-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피난처로 부상 (지리적 근접성 ▪ 문화적 유사성)

2 연구 목적

-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난민 수용 정책 비교 분석
- 두 국가의 상이한 정책적 접근 방식 고찰
- 중앙아시아 지역 난민 정책의 특성 파악

Made with Gamma

연구 방법

현지 조사

심층 인터뷰

문헌연구

학술 논문, 정책 보고서, 언론 보도 자료 분석

심층 인터뷰 개요

타지키스탄

- 현지조사 기간: 2024년 7월 13일~18일
- 현지 조사 지역: 두샨베, 바흐다트, 루다키
- 면담 대상: 아프간 난민 가정 16가구, UNHCR 타지키스탄 사무소, 내무부 시민권과, Central Asian Partnership, 아프간 대사관, '소모니욘' 학교

우즈베키스탄

- 현지조사 기간: 2024년 8월 25일~31일
- 현지 조사 지역: 타슈켄트
- 면담 대상: 류드밀라 막사코바(이주 전문가) 하피자 마모다메예바(우즈베키스탄 정부 산하 노동시장연구소 선임연구원)
- 추가 인터뷰 실시 예정: 2025년 2월

Made with Gamma

난민 수용 정책의 유형

통제형	임시 보호형	해결형

국경 관리 정책 (Border Control)

- **난민 유입 통제**: 입국 심사, 비자 발급
- **거주지 제한**: 특정 지역 거주 허용/제한
- **출입국 관리**: 국경 보안, 불법 입국 방지

난민 보호 정책 (Refugee Protection)

- 난민협약 가입
- 다소 높은 난민 인정률

영구적 해결방안 (Durable Solutions)

1. 자발적 귀환 (Voluntary Repatriation)
2. 현지 통합 (Local Integration)
3. 제3국 재정착 (Resettlement)

Made with Gamma

난민 수용 정책에 따른 국가 유형

1 난민 수용 제한국

- 난민협약 미가입 또는 소극적 이행
-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 난민 캠프 중심의 수용
- 자국 내 정착 제한
- 제3국 이주 위한 교육·훈련 제공 또는 강제 송환
- 통제된 지역 내 한시적 체류 허용

2 난민 경유국

- 난민협약 가입
- 높은 난민 인정률
- 단기 체류 중심 정책
- 사회통합 정책 부재
- 제3국 정착 프로그램 활성화
- 기본적 생활 여건만 보장

3 난민 수용국

- 난민협약의 적극적 이행
- 공식적 난민 지위 인정
- 장기 정착 지원
- 사회통합 정책 시행
- 시민권 취득 경로 제공
- 교육·의료 서비스 보장
- 취업 기회 제공

Made with Gamma

타지키스탄의 아프간 난민 수용 정책: 법적 기반 및 난민 현황

UN 난민협약 가입

타지키스탄은 1994년 UN 난민협약에 가입했음

난민 현황

현재 약 7,000명의 아프간 난민과 1,000명의 난민 신청자가 체류 중

민족 구성

- 타직인 40%,
- 하자라족 40%,
- 푸시툰인 20%로 구성되

난민 인정률

약 100%

Made with Gamma

타지키스탄의 난민 인정 절차

1. **관할 기관**
   내무부 시민권과에서 난민 인정 절차를 관할함
2. **난민증명서 발급**
   '적색 수첩' 형태의 난민증명서 발급
3. **등록 갱신**
   최초 난민 지위 취득 후 첫 3년간 갱신 불필요, 이후 매년 갱신 의무화
4. **심사 기간**
   난민 인정 절차 최대 6개월 소요

타지키스탄의 난민 거주 제한 정책

1. **수도 거주 금지**
   수도 두샨베에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2. **지정 도시 거주 원칙**
   바흐다트, 루다키 등 지정된 도시에 거주해야 함
3. **정기적 신고 의무**
   난민들은 정기적으로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타지키스탄의 난민 교육 현황

공립학교 입학

난민 아동들의 공립학교 입학이 허용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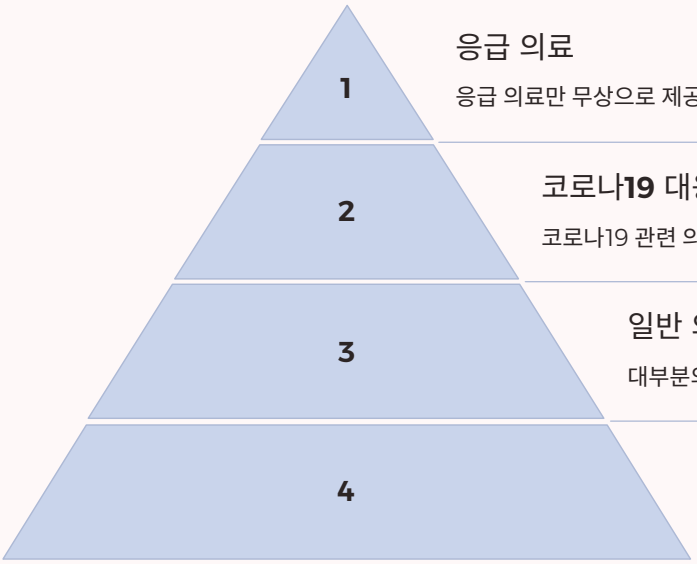
언어 장벽

타지크어와 다리어는 사실상 동일 언어이지만 문자 사용의 어려움 존재
(타지키스탄: 키릴 문자 사용)

아프간 학교

'소모니욘' 학교가 운영되지만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타지키스탄의 난민 지원 실태



응급 의료

응급 의료만 무상으로 제공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가 무상으로 제공

일반 의료

대부분의 의료비는 자부담 원칙 적용

취약계층 난민 대상 지원

현재까지 약 1,000명이 식품 및 현금 지원 수혜

Made with Gamma

NGO 및 국제기구의 활동

1. **UNHCR**
   주도적 역할
2. **RCVC**
   직업훈련
3. **Central Asian Partnership**
   생활 지원
4. '아리아나' 센터
   영어 교육
5. '인손 바 아돌랏'
   법적 지원
6. '소모니욘' 학교
   중고등 교육

Made with Gamma

난민의 현지 적응 실태

긍정적 요소

- 언어적 유사성
- 문화적 친밀성
- 종교적 공통점

부정적 요소

- 높은 실업률
- 주거비용 부담
- 교육기회 제한
-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
- 난민 지원 체계 부재

Made with Gamma

우즈베키스탄의 난민 정책 개요

제도적 특징

- UN 난민협약 미가입
- 정부령으로 난민 보호
-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국제기구와의 관계

- 2005년 UNHCR 대표부 철수
- 2016년 IOM 대표부 설립
- EU, UNDP와 협력 관계 유지

난민 현황

- 약 2,000명의 아프간 난민 체류

거주지 제한

- 테르메즈 시 난민 캠프 중심 수용

난민 발생 배경

- 탈레반 정권 수립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교육받던 많은 아프간인들이 귀국을 거부하고 우즈베키스탄에 남기로 결정했음.
- 우즈베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주로 아무다리야 강)을 통해 많은 아프간인들이 불법 입국하고 있음

Made with Gamma

우즈베키스탄의 난민 법적 지위 및 체류 조건

1. **법적 지위**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2. **체류 조건**
   대부분 아프간 난민들은 단기 비자를 달금하고 수시로 연장하는 방식으로 체류 가능
3. **입국 유형**
   대부분 경우 밀입국

Made with Gamma

Made with Gamma

우즈베키스탄의 난민 지원 체계 및 정부의 태도

교육 지원 체계

- [ ] 아프가니스탄 시민 기술 개발 교육센터 (2017년 설립)
- [ ] EU 지식센터 운영 (2023년 설립)
- EU, UNDP(유엔개발계획),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가 공동으로 설립
- 코워킹 스페이스 제공, 자기 학습 지원, 전문적 네트워크 형성 지원

정부의 태도

- [ ]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 [ ] 실질적 지원 제공
- [ ] 강제 송환 금지 원칙
- [ ] 교육 및 기술 개발 중심 접근
- [ ] 제3국 이주 위한 교육·훈련 제공

Made with Gamma

비교 분석

법적 기반

타지키스탄

UN 난민협약 가입국, 공식적 난민 지위 인정, 체계적인 난민 인정 절차, 높은 난민 인정률

우즈베키스탄

UN 난민협약 미가입,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존재. 정부령 기반 보호 실용적 접근 방식

수용 규모와 방식

타지키스탄

약 8,000명의 난민 및 난민 신청자, 분산 거주 정책, 거주지 제한 존재, 도시 중심 정착

우즈베키스탄

약 2,000명의 실질적 난민, 캠프 중심 수용, 테르메즈 시 집중, 통제된 지역에서 관리

Made with Gamma

비교 분석

지원 체계

타지키스탄

NGO 중심의 지원,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 제한적 정부 지원, 민간 주도 교육 프로그램

우즈베키스탄

정부 주도 지원,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EU와의 협력, 기술 교육 중심

정책의 특징과 한계

타지키스탄

개방적 수용 정책, 실질적 지원 부족, NGO 의존도 높음, 장기 정착 지원 미흡

우즈베키스탄

통제된 수용 정책, 체계적 교육 지원, 제한적 국제협력, 정부 주도 관리

Made with Gamma

결론

1 타지키스탄: 보호형 정책

▢ 전형적인 난민 경유국

- 난민 지위 인정
- 난민 거주 지역 제한(지정 도시 거주 원칙)
-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을 최종 정착지로 선택하지 않음
- 제3국 재정착 프로그램 통해 이주
  (주로 캐나다로 이주 ▪ 스폰서십 프로그램 활용)

▢ 정부 정책의 특징

- 난민 사회통합에 소극적
- 장기 정착 지원 부재
- 임시 보호(일시적 체류 관리)에 중점

2 우즈베키스탄: 통제형 정책

▢ 전형적인 난민 수용 제한국

- UN 난민협약 미가입 / 공식적 난민 지위 불인정
- 아무다리야 강을 통한 비공식 입국자 통제
- 난민의 자국 내 정착 제한
- 통제된 지역 내 한시적 체류 허용
  (테르메즈 시 난민 캠프 수용)

▢ 정부 정책의 특징

- 자국 내 난민 정착 불허 원칙
- 인도주의적 교육 지원 제공
- 제3국 이주 중심의 정책 운

Made with Gamma

발표3. 김선희(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폴란드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

우크라이나 난민이 폴란드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

2024. 12. 13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김선희 (shkim_politics_rus@snu.ac.kr)

초록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유입이 폴란드 국내 정치 지형에 미친 영향을 핵심적 영향을 평가하고 그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시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향하는 제1일의 피난처가 되었고 폴란드는 이들 난민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포용적인 난민 정책을 폈다. 2024년 12월 약 백만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수치는 우크라이나 난민 전체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전격적이고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정책은 단 한명의 난민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당시와 극적으로 대조되면서 난민 환대 수용의 한 사례로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분석은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특성, 즉, 민족, 종교, 문화 등의 측면에서 폴란드의 그것과 상대적으로 비슷하다는 것과 러시아라는 공유된 위협으로 부터 나오는 동맹적 결연 관계로부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요소들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과 관련한 유럽연합으로 부터의 강력한 정서적, 물질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수용과 보호가 NATO가 폴란드의 안보를 지키는 데 있어 그 명분을 강화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대(代)우크라이나 난민 환대의 부가적 이유가 되었을 것이라 보고 된다. 이외에도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원인을 탐구하는 연구 많은 한편 반대로 러-우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규모 유입과 그 수용이 폴란드 정치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이 대중 정서, 정당 역학, 정치적 담론의 변화를 중심으로 폴란드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여 우크라이나의 난민 유입은 기존 우파 파퓰리즘 집권 정당인 “법과 정의(PiS)”가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치 프로그램, 즉, 실패한 서구화를 통한 정상국가 도달이라는 목표에 대한 반동으로 보수적, 민족주의적, 종교성의 폴란드 정체성을 강조했던 정치 서사에 심오한한 균열을 가하는 계기 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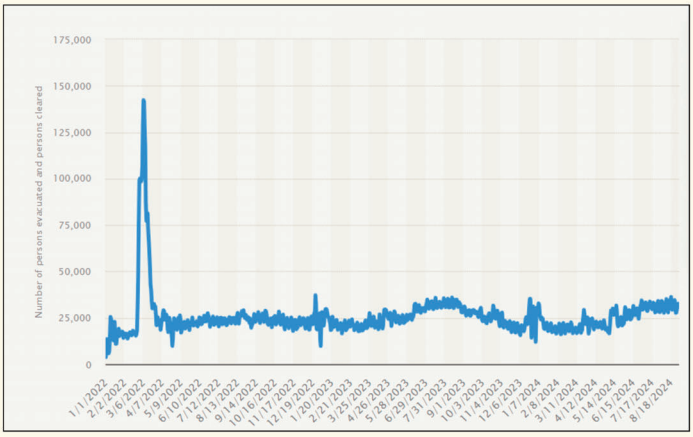
연구 배경

우크라이나 난민 위기에 대한 폴란드의 대응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폴란드는 매우 전격적인 포용정책을 펼쳤다. 전쟁이 시작되자 구호,주거, 식량,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이 신속히 조직되었고, 정부는 난민 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다. 2015년부터 집권했던 당시의 “법과 정의”(PiS)당은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사태때와는 달리 포괄적이고 전격적인 난민 정책을 주도했다.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폴란드 대중의 인식, 태도 변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크라이나 난민의 대하는 폴란드 대중의 인식은 변화했다. 바라사뱌 대학교에서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조사 인원 중 17%의 사람만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에 장기 거주하는 것을 지지 한다고 답변했으며 (1년전에는 같은 문항 중 37%),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61%에 달했다.



폴란드로의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추이

(자료 출처: Statistica 2024,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1293564/ukrainian-refugees-in-poland/)

법과 정의(PiS) 당의 플랫폼

To build the country back “from the ruins”

유럽회의주의

“정상화”의 실패

보수적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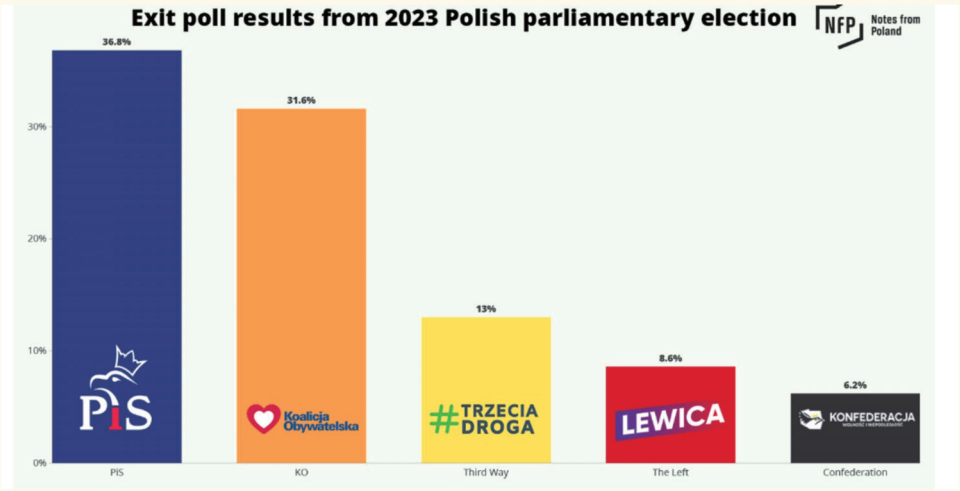
반이민정서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PiS 지지기반 플랫폼에 가한 균열

NATO 안보적 의존

사회경제적 열패감 환기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이 PiS 지지기반 플랫폼에 가한 균열



PiS는 1989년 민주화 이후 EU가입 등을 통한 소위 서구화를 통한 정상국가가 된다라는 목표가 폴란드의 정체성과 주권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을 내세워 집권에 성공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및 난민의 대규모 수용은 PiS가 본래 지지기반을 결집했던 자주적인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앞세우는 사조와는 그 궤가 맞지 않는 EU 및 NATO와의 통합을 옹호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다.

결론 및 함의

Civic Platform leader Donald Tusk celebrates after the first exit poll was published in Poland's parliamentary elections © Omar Marques/Getty Images

PiS 지지층의 분열:

PiS는 위기 관리에 대한 초기 대응으로 지지를 얻었지만,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PiS 플랫폼이 지향했던 반서구화 및 보수적 폴란드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으로 민족주의적·농촌 기반의 일부 지지층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이러한 유권자들은 난민 정책을 비용이 많이 들고 폴란드 주권에 해롭다고 비판한 극우 정당 (Confederation)으로 일부 이동.

CO(Civic Coalition)의 약진:

EU친화적 중도-우파의 성격을 띈 야당들의 연합, CO는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이후 CO는 양극화된 정치지형을 적극 활용하여 기존의 지지연합인 중도-우파에서 더 큰 범위의 Big Tent 결성. 더욱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 정책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및 보수 강경화된 정책들을 바로 잡겠다고 주장. 2023년 Sejm 선거에서 간발의 격차로 PiS 를 제치고 집권 연합 (Ruling Coalition) 달성.

[세션#6]
이주, 교육, 그리고 정체성:
유학생과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
정은주(인천대)

발표1. 김도혜(덕성여대)
한국 대학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의 위치성

발표2. 김혜옥 · 이상직 · 구치우옌 · 양샤오시아(경북대)
진입과 퇴장의 괴리:
비수도권 국립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발표3.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허가받지 못한 미래: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전환과 이후의 삶

토론
고민경(경북대)
최원근(한국외대)
김현옥(경상국립대)

발표1. 김도혜(덕성여대)

한국 대학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의 위치성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과 유학생 위치성 변화[1)]

김도혜(덕성여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1. 들어가는 글

대학뿐 아니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주체의 유학생 정책을 분석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의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을 '도구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비판해왔다(박소진, 2014). 특히 한국 대학의 유학생 정책이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유학생의 입국 이후의 삶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줄을 잇는다.[2)] 하지만 대학의 유학생 정책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구화'나 '유치 일변도'라는 식의 비판은 오히려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이보다는 무엇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유치하고 있는지 살펴, 유학생의 도구화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 지를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만이 현재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제대로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던진다. 첫째, '유학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 대학의 논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이를 통해 유학생은 어떤 존재로 위치지어졌는가? 둘째,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학생을 유치, 관리, 취업, 정주시키기 위해 대학은 어떤 대내외적 변화를 꾀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글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 변화 과정을 살피는데, 이를 위해 먼저 한국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변화와 유학생 정책 변화 과정을 밝힌다. 정부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과 유학생 정책을 대학 정책에 선행해 살피는 것은 한국 대학의 정책이 대학 구조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유학생 정책 역시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 일종의 "강압적 동형성"(coercive isomorphism)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Jon, Lee, & Byun, 2014). 다시 말해 대학의 설립 목적, 형태에 크게 상관없이 흡사한 유학생 관련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울권/비서울권 대학 간, 4년제 대학/전문대학 간 유학생 정책에 다소간 다른 시간성과 내용적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유학생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와 정책의 방향성은 정부 정책에 크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선 정부 정책을 먼저 살펴본다. 이 글에서는 유학생 정책의 변화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외교·통상적 목적으로 친한 인재 양성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의 이유로 국가주도의 유학생 유치가 시작된 2000년대와 중도탈락으로 인한 노동시장 불법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유학생 '질' 관리가 본격화된 2010년대, 그리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유학생이 노동력이자 잠재적 주민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2020년대로 구분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서로 다른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자원'으로 유학생이 소환되며 '유학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위가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이 유치(2000년대), 관리(2010년대), 취업 및 정주(2020년대)의 대상으로까지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와 함께 유학생 유치, 관리, 취업, 정주를 위해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대내외적 변화를 살피는데, 이를 대학의 외부 자원, 대학 조직, 학제 및 교육 과정 측면에서 대학이 추진하고 있는 유연화 전

1) 본 원고는 현재 작성 중인 원고로 인용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2) 이는 크게 두 가지 비판으로 이어지는데, 첫째, 기본적인 어학실력이 확인되지 않은 유학생들을 유치하여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둘째, 어학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교육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유학생이 비합법 노동시장으로 흘러들어간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략으로 인식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와 국가 통계, 언론기사를 참조하고, 대학 홈페이지, 대학알리미,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개별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며,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이나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에서 선정된 대학의 사례 역시 참조한다.[3] 이뿐 아니라 연구자가 2018년부터 유학생 연구를 진행하면서 수행한 대학의 유학생 관련 부처 담당자와 유학생 교육을 전담한 교원, 유학원 관련자와의 면담 내용 역시 참조한다. 본 연구에서 '대학'은 4년제 일반대학과 일반대학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문대학의 유학생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4] 현재 연구자의 역량이 전문대학의 현황까지 상세히 파악하는 데는 미치지 못하므로 차후의 연구주제로 남겨둔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과 등록금 동결 조치로 유학생이 대학 재정 건전성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2010년대 이후 대학은 여러 차원의 '유연화' 조치를 통해 유학생 유치, 관리, 취업, 정주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단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서 이 글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미국 대학 정책을 분석하며 스테파니 김(Stephanie Kim)이 소개한 '유연한 대학'(flexible universities)이라는 개념을 차용한다. 김(Kim, 2023)은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학생이 '자유롭게' 유학할 나라와 대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생존을 위해 자력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질서 하에서는 대학이 각종 유연화 조치를 통해 특정 유학생 집단의 유입을 '조직'해 내는 것이라 주장한다. 특히 시장 중심의 보상체계를 토대로 유학원을 비롯한 각종 유학 브로커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미국 대학이 특정 국가 출신의 유학생을 대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스테파니 김의 분석에 더해 이 글은 한국 대학의 경우 유학 브로커와의 유착을 통한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대학구조, 교육 과정, 수업 운영 등 다층적 영역에서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다층적으로 유연해진 대학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하여 취업 및 정주시키려는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욕구를 맞춰주기 위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변화가 현재 어떤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밝힘으로써 이것이 "국제적, 간문화적 그리고 범세계적 시각이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녹아들어 간 교육 정책"을 의미하는 고등교육의 국제화의 이상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OECD, 2004: 18).[5]

2. 정부와 대학의 유학생 정책 흐름과 유학생 위치성 변화

1) 한국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인구 추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9년 이래 2024년까지의 외국인 유학생 수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 1999년 3천 명대에 불과하던 유학생 수가 현재 2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2024년 유학생 수(어학연수생 포함)가 27만 명[6]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의 유학생 수는 인근 국

3) 유학생 유치 경쟁이 있는 현실에서 유학생에 대한 상세한 대학 정책은 대학 내부에서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4) 2000년 183명에 불과하던 전문대학의 유학생수는 2020년 12,345명, 2024년 16,789명으로 급속히 증가했다(교육통계서비스).
5) OECD. 2004. Internationalisation and trade in higher education: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ECD: Paris.
6) https://jstart.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224

가에 비해서도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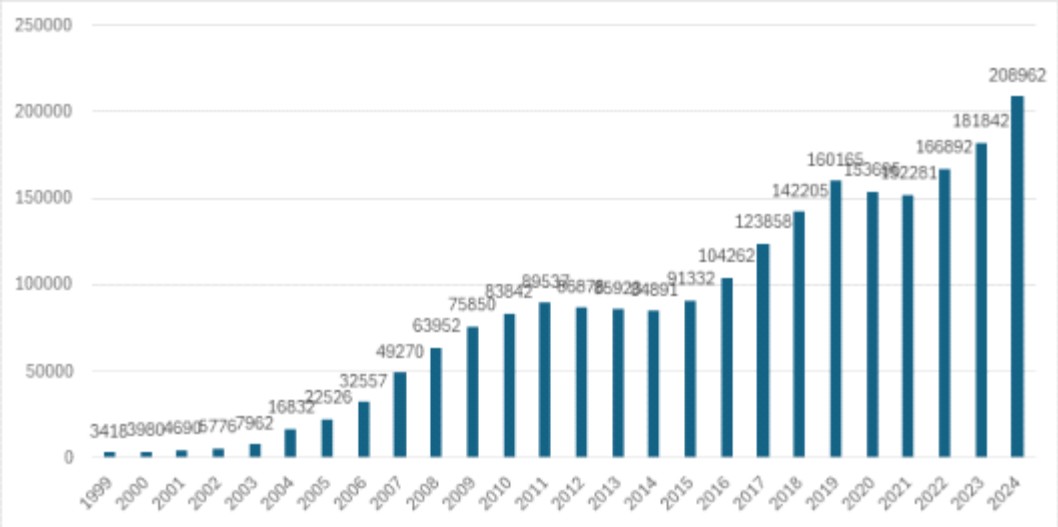


그림 1 한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 추이(연수생과 학위과정생 포함)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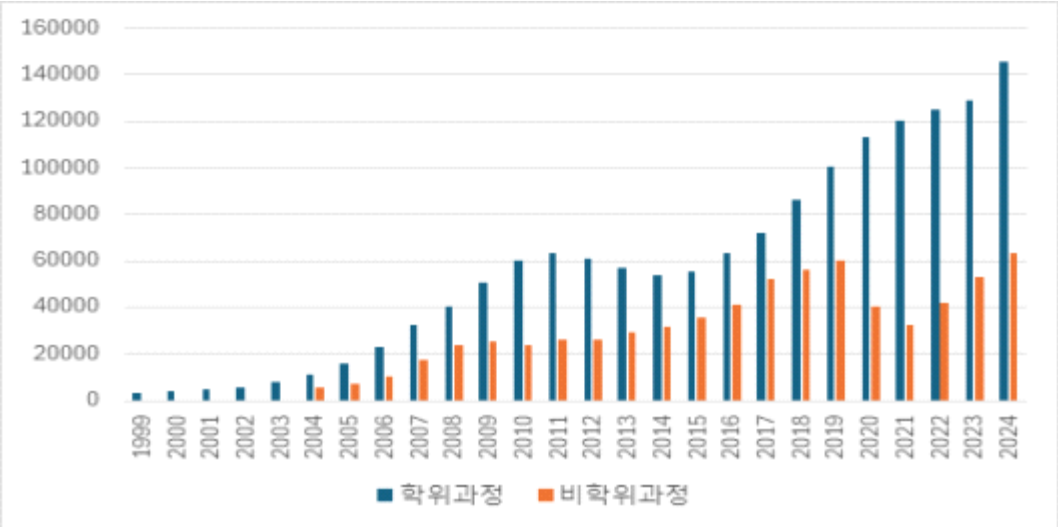


그림 2 유학생 중 학위과정생과 비학위과정생의 숫자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통계)

특히 유학생 수 가운데 학위과정생의 수가 비학위과정(어학연수 포함)에 다니는 학생에 비해 압도적 증가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그림 2) 한국 대학에서 학위를 따기 위해 적어도 2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할 수 있다.

전체적인 유학생 수 추이를 살펴보면, 유학생 수 변동에 몇 차례 굴곡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학생 수는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발표한 2004년(〈스터디 코리아〉)과 2008년(〈스터디 코리아 발전방안〉)을 계기로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급속한 증가에 뒤따른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2011년 유학생 '질 관리'를 주요 정책 목표로 천명하면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김성은·이교

일, 2018; 배소현·김회수, 2014; Kim, 2019). 이후 2015년 다시 정부가 양적 팽창을 염두에 두며 유학생 입학 관련 업무를 유연하게 바꾸면서 급속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0년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바 있으나 2022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세를 회복해 현재 다시 팽창 일로를 겪고 있다. 여기에는 가장 최근 2023년 발표된 〈스터디 코리아 300K〉도 일조하였는데, 이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 기업, 대학이 협력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수치로만 보면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과 2015년 사이 다소 주춤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했으며, 연구자들은 이런 증감을 이끈 주된 요인으로 정부의 유학생 정책 변화를 꼽는다(김현미, 2020; 김성은·이교일, 2018; Kim, 2019). 하지만 이런 설명에서 대학은 각 시기별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불분명하다. 여기서는 각 시기별로 대학이 정부의 유학생 정책 및 고등교육 정책 전반과 어떻게 호응하며 유학생 정책을 추진하였는지, 그리고 정부와 대학의 추진 과정에서 유학생은 어떤 존재로 인식되었는지 살펴본다.

2) 정부 주도의 고등교육 국제화 추진과 대학의 제한적 시도: 1990년대~2000년대

1995년 5월 31일 정부의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대학설립준칙주의에 따라 대학의 수가 급증한 바 있다.[7] 이후 교육부 주도로 이루어진 고등교육 개혁은 주로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대학평가를 통한 정원 감축과 대학 퇴출 등을 권장하거나 강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사교련,).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심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교육 무역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국내 학생들의 해외 유학을 자제시키고 대신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불러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언급되었다(Byun and Kim 2011). 그러므로 이때는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라기보다는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 언급되었으며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해외의 유명 대학 캠퍼스를 국내에 만드는 등의 국제화 방안과 함께 논의된 것이다(Byun and Kim, 2011). 외국인 유학생 정책이 하나의 독립된 중요 정책으로 정부 차원에서 처음 논의된 것은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인데 당시 정책 목표에서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내는 유학'에서 '받아들이는 유학'으로 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로 경제 통상적 목적이 강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그러나 받아들이는 유학으로의 전환은 다소 '선언'에 가까웠고(배소현·김회수, 2014) 구체적인 전략과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라 할 수 있다. 〈스터디 코리아〉 정책 역시 "유학·연수수지 개선"이라는 국가 경제적 목적이 전면에 드러난 정책이었으며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공관을 적극 활용하고, 대학이 외국어 전용강좌와 한국어 연수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천명한다(교육인적자원부, 2004). 이후 본격적으로 유학생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2008년에는 〈스터디 코리아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친한, 지한인사 양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고급 인적자원" 확보를 유학생 유치의 필요성으로 언급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다시 말해 유학생 유치는 교육적 목적보다는 외교·통상적 목적으로 시행되어, 대학의 어학연수과정이나 일반 학위과정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교육 정책과는 동떨어진 채 시작된 것이다.

이 시기 대학에서는 영어 전용강의나 국제 캠퍼스 건립,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 운영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2004년 〈스터디 코리아〉 발표 이후 영어 강의를 채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시작하는 등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른 것이다(Byun and Kim 2011). 2006년 기준, 영어강의는 9천 개로 전체 대학 강의의 2.2% 정도였으나(Byun and Kim 2011), 2010년에는 주요 대학 강의의 15~20%

7)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108개의 사립대학이 설립되었다.

가 영어로 개설될 정도로 확대되었다(김현철, 2011). 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영어로만 운영되는 국제 캠퍼스나 학부 건립이 시작되었다. 이 당시 대학의 유학생 유치는 국가가 선언한 '고등교육 국제화' 조치에 따른 대학 평가 기준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정도로 시행되었다 할 수 있다. 또 영어강의 신설이나 영어로만 강의하는 국제 캠퍼스 혹은 학부의 건립은 서울권 주요 사립대학이나 KAIST를 비롯한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중심으로 시행되어 대학 전반의 국제화 노력이라 볼 수 없다.[8] 나아가 서울권 명문 사립 대학이 경쟁적으로 만든 국제 캠퍼스 혹은 학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일차적인 목표로 두기 보다 해외로의 유학을 꿈꾸는 한국 학생들이 국내 머물거나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들이 국내 대학에 오도록 만드는 데 더 큰 방점이 찍혀있었다(S. Kim 2015). 스테파니 김(2015)은 이를 두고 '역 학생 이동성'(Reverse student mobility)이라는 개념을 주창하는데, 한국 대학의 국제화 전략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보다 해외나 국내의 한국인을 끌어들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Kim 215). 정리하자면 2000년대까지 대학의 유학생 유치 정책은 교육분야 무역수지 개선, 친한파 인재 양성 등의 이유로 마련된 국가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과 그에 따른 대학 평가 변화에 따른 조치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또 주로 영어강의 개설 및 국제 캠퍼스 혹은 학부 건설, 공동 학위제 운영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주로 서울 소재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된 것이다. 이후 대학의 유학생 정책 추진과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수동적, 제한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일차적인 목표였다 보기 어렵다.

3) 대학의 적극적 유학생 유치와 정부의 대응: 2010년대

서울권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 유치의 결과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0년을 기점으로 상위 10위권 대학이 모두 서울권 소재 대학으로 채워지고[9] 2020년을 기점으로는 상위 10개 대학을 서울권 사립 대학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서울대	594	연세대	1561	경희대	3,477	경희대	3933	경희대	5394	경희대	6,929
성균관대	556	서울대	1089	연세대	3,404	고려대	3714	성균관대	5092	경희대	6,929
선문대	422	경희대	915	이화여대	3,033	연세대	3662	한양대	4485	연세대	6,066
고려대	322	선문대	866	성균관대	2,477	성균관대	2947	연세대	4248	한양대	5,974
연세대	240	고려대	730	건국대	2,462	한양대	2568	중앙대	4092	중앙대	5,355
동국대	228	한양대	537	서울대	2,238	건국대	2522	고려대	4074	가천대	5,149
건국대	190	성균관	492	고려대	2,074	동국대	2252	동국대	3278	고려대	4,997
인하대	174	이대	449	한양대	1,989	서울대	2226	상명대	2904	성균관대	4,831
한양대	170	한국외대	391	중앙대	1,714	중앙대	1919	한국외대	2827	세종대	3,703
부산대	152	충남대	369	상명대	1,632	국민대	1807	국민대	2750	한국외대	3,586

표 1. 유학생 수 상위 10개 대학(2000년~2024년)(단위: 명)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다시 말해 사립대, 그중에서도 서울권 사립대가 유학생 유치의 허브가 된 것이다. 강창희 외(2021)는 2008~2019년 전국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분석한 논문에서 서울 소재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재정 악화가 곧바로 외국인 유학생 증가로 이어졌다는 점을 주장한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8) 이공계 특성화 대학의 영어전용 강의에 대한 연구로 박천웅 외 (2018) 참조하라.
9) 본교 캠퍼스 숫자만 감안하여 계산한 수치임

에서 시작된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의 결과 생겨난 재정 건전성 악화의 문제를 서울 사립대들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간 것이다. 사립대의 약진은 비서울권 지역에서도 두드러지는데,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비서울권 사립대 못지않게 유학생 수 증가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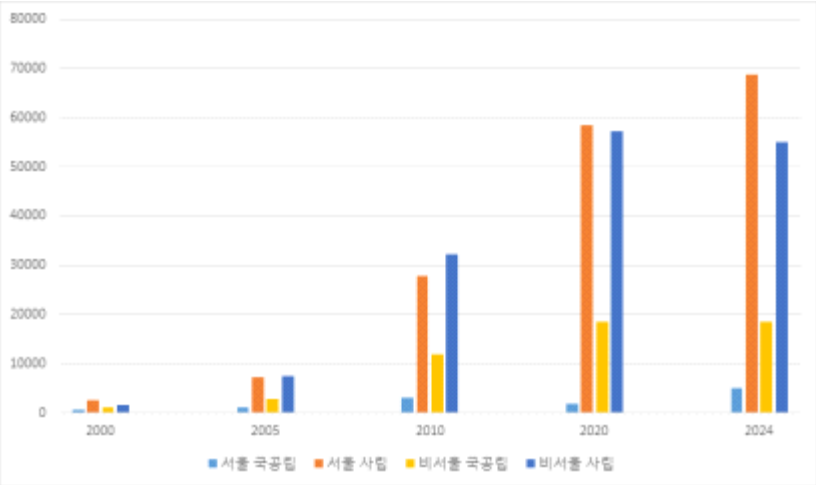


그림 3. 서울/비서울권 국공립/사립대 재학 유학생 수 비교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물론 서울권 유명 사립대와 비수도권 사립대의 유학생 유치 전략을 비교 분석한 박소진(2014)의 연구가 강조하듯이, 이들 대학은 각기 다른 추진 목적과 전략을 내세우며 유학생을 유치했다. 서울권 사립대가 (속내가 어떻든 간에)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비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재정 건전성 완화 목적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또 후자가 유학생과 내국인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를 달리하는 방식이나 풍부한 장학금 혜택을 내세우며 유학생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전자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존 유학원을 통한 유학생 홍보 및 모집 이외에도 대학이 직접 해외에 한국어센터를 만들고, 해외 대학과의 공동 학위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학은 본격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다.

이처럼 대학이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가담함에 따라 유학생 수가 급증하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언론을 통해 자주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언론에 언급된 '부작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대학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유치하여 학업에 적응하지 못하는 중도탈락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일부 비합법 노동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주장과 그에 따라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10] 한국 언론에서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를 다룬 것은 2001년이 처음이지만 2007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하였다.[11] 이에 정부는 2009년 〈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2011년에는 유학생 '질 관리'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며 〈유학생 유치관리역량인증제〉를 발표,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IEQAS)를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10) 2008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어학연수 과정 10%, 학위 과정 5% 정도가 중도탈락한다고 추정한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8.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 실태 조사).
11) 실제 2007년 전으로는 매년 1-2건 정도의 언론 보도가 된 반면, 2007년 이후로는 매년 수십 건이 넘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유학생의 학업 중 노동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4년마다 한 번씩 국제화 역량이 충분한 대학인지 정해진 특정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12] 평가지표는 꾸준히 수정되었지만 공통적으로 '중도탈락율'이 가장 큰 점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대학에 들어온 유학생이 중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각 대학에서는 유학생의 중도이탈방지를 목적으로 한 학사관리를 주요한 정책으로 펼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대학에게 유학생 관리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Kim 2019), 대학에서 유학생은 유치의 대상에서 유치·관리의 대상으로 변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각 대학에서 국제처 내 유학생지원센터와 같은 학생 전담 기구를 마련하고, 유학생 연합회 등 학생 자치 운동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 추진되었다.

2011년 인증제 발표와 함께 질적 관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유학생 수 증가세가 감소로 돌아서자,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부 지원방안〉, 2015년에는 〈유학생 유치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다시 양적 확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2014년 정책에서는 유학생의 학업 중 노동 시간을 확대해주는 것(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후 정부 정책에서 학업 중 노동 허용시간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현재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당 30시간까지 확대되었다. 2015년 정책에서 눈여겨볼 것은 "유학생 전용 강의 확대"인데 과거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영어강의 확대를 강조한 것과 달리 중국어, 영어, 한국어 어떤 언어로 교육을 하든 유학생만 들을 수 있는, 유학생 맞춤 강의를 개설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당시 대학 입장에서는 2009년 '반값등록금' 정책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2013~2017) 들어 더 거세진 대학입학정원 감축 압력에 따라[13] 유학생에 더욱 더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 역시 질적 관리를 내세우다가도 유학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서자 더 유학생 친화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지원하겠다며 양적 확대 쪽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2010년대 정부의 유학생 정책은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질적 관리를 위한 대학 평가 시스템 마련("인증제")과 양적 확대를 위한 각종 장벽 제거(예: 주당 노동 가능 시간 확대)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에 대학은 유학생을 유치 및 관리의 대상으로 보며,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학사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유학생 전용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의 방식으로 질 관리와 양적 확대를 동시에 꾀했다.

4) 인구감소 담론의 등장과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차원 동반관계의 시작: 2020년대

2020년대 정부의 유학생 정책 패러다임은 '지역소멸' 담론과 결합하여 한 번 더 거대한 변혁을 맞이한다. 정부 정책에서 유학생 '정주' 지원이 최초로 명시된 것은 2014년인데, 이와 함께 우수 지방대 유학생 유치와 취업 지원이 정책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즉, 인력 부족 분야에 유학생을 활용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외국인 인력으로 인식된 것은 소위 '이공계 인재'로 통칭되는 과학기술요원에 한정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유학생 중 이공계 대학원생을 인재로 양성하여 취업 및 정주시키는 전략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던 유학생 취업, 정주 전략이 유학생 일반에까지 확대된 것은 '지역 인구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 전망이 주요 정책 담론으로 본격화되는 2020년 전후라 할 수 있다.

---

12)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3년마다 발표되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행된 3주기부터는 인증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변경되었다. 1주기 (2011~2014) 2주기 (2015~2017) 3주기 (2018~2021) 3주기 보완 (2022~2024) – 3주기 인증대학의 인증기간을 1년 연장 4주기 (2025~2028)

13) 노중기, 2016

2021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처음 발표하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이 발효되면서 지역에 유학생을 유치, 지역 주민이자 노동력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을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서 발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유학생 정책인 스터디 코리아 300K뿐 아니라 글로컬대학30과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이하 RISE)를 발표하면서 지역대학이 지역의 산업체, 지방자치단체와 연합하여 유학생을 '유치-육성-취업-정착'하게 하는 정책 모델이 발효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7년까지 30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스터디 코리아 300K〉는 "비수도권 지역에 정주할 유학생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취업-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밝히고 있을 정도다(이창원 외, 2024). 여기에는 광역지자체 단위로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특구'를 지정해 지역발전을 위한 해외 인재 유치, 학업, 취업, 정주까지 연계하는 방안도 들어가 있다. 이뿐 아니라 비수도권대학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해 지원하는 교육부 정책인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도 2023년과 2024년 선정된 대학들 상당수가 '유학생의 지역 유치 및 정주'를 계획으로 내걸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선정된 대구한의대학교는 경북 영덕군과 협력해 외국 유학생을 위한 정주 시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박숙현, 2024).[14] RISE 역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지원체계로(교육부, 2024)[15] 현재 17개 시도별 계획 시안이 수립되어 2025년부터 본격 실행 예정인데, 이 가운데에도 유학생 지역 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대학과 연계한 지자체의 계획안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일례로 경남 RISE 2024년 시범사업 추진계획에는 유학생 유치 및 지역정주 지원을 세부 추진 내용으로 포함하여 지역의 핵심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지역특화형비자[16]와 연계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다. 교육부뿐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유학생을 미래 노동인력으로 활용하거나 지역 정주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 실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유학생 졸업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은 교육부와의 협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유학생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학생을 정주형 이민자에 가깝게 바라보게 되면서 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유학생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지역인재 유출, 지역 인구소멸로 골머리를 앓는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지역에 유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충북도는 'K-유학생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도내 대학과 도내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유학생 1만 명을 유치, 지역 기업에의 취업까지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17] 경상북도는 '경북형 초청장학제도', 일명 'K-GKS' 사업을 발표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도내 우수 기업에 부족한 연구인력 충원을 목표로 유치하겠다 밝히고[18] 부산 역시 '부산형 글로벌 인재 양성'을 표방하며 시 단위에 유학생 유치지원 전담 조직도 만든 상황이다.[19]

---

14) https://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9207

1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879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16) 지역특화형비자는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자제도로 일정한 한국어능력, 소득 등이 증빙된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하며 거주하며 가족동반, 배우자 취업의 혜택을 누리고 향후 더 나은 비자로의 전환에 혜택이 주어지는 비자이다.

1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410

18)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792&dept_code=&dept_name=&BD_CODE=bbs_bodo&bdName=&cmd=2&Start=120&B_NUM=374957901&B_STEP=374957900&B_LEVEL=0&key=4&word=&p1=0&p2=0&V_NUM=8121&tbbscode1=bbs_bodo#:~:text=%EA%B2%BD%EB%B6%81%ED%98%95%20%EC%B4%88%EC%B2%AD%EC%9E%A5%ED%95%99%EC%A0%9C%EB%8F%84(K%2DGKS%2C%20K%2D,%ED%95%98%EB%8A%94%20%EA%B2%83%EC%9D%84%20%EB%AA%A9%ED%91%9C%EB%A1%9C%20%ED%95%9C%EB%8B%A4.

19)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009240005021

이처럼 과거 법무부, 교육부 중심으로 유학생의 유치, 관리를 관장했다면 현재는 다수의 정부 부처, 거기에 지자체까지 유학생 '유치->취업->지역 정주' 시스템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여러 부처, 대학,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 수많은 기관이 유학생 유치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하였으며, 대학은 유학생 유치뿐 아니라 지역에서 교육, 취업, 정주할 수 있게 하는 지원체계를 구상·운영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잇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은 유치·관리의 대상에서 노동력이자 잠재적 주민으로 확대, 이해되고 있다.

정리하자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2000년대 외교·통상적 목적을 위한 유치에서 시작해 2010년대 비합법 노동시장으로의 유입을 막기 위한 질 관리를 함께 강조하는 방식으로 확대했고, 2020년대 들어 저출산·고령화와 지역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학생은 유치, 유치-관리, 그리고 노동력이자 잠재적 주민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지할 점은 이처럼 확대되는, 한국 정부의 유학생에 대한 인식은 항상 실제 유학생의 처지와 현실을 비껴간다는 점이다. 유치·관리의 대상일 때는 친한 인재인 동시에 잠재적 미등록 노동자로 인식되고, 미래 인력이자 주민일 때는 고급 인력(과학기술요원)으로, 때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한국인이 꺼리는 질 낮은 일자리에서 기꺼이 일할 인력으로 인식된다. 이 모든 인식은 실제 유학생의 모습이라기보다 한국 사회가 '원하는' 유학생의 모습을 반영한다. 기존 연구가 지적하듯이 유학생의 경우 합법적 시간제 취업제도로의 편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학업 중 비합법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20] '인재'와 '미등록 노동자'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밖에 없다. 또 정부의 정책은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분야를 공부하고 한국에서 일할 인력뿐 아니라 한국 청년들이 취업을 꺼리는 지역의 중소기업 일자리에서 일할 인력 모두를 유학생 출신자로 채우려 하면서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인구군을 모조리 '유학생'이라 통칭한다. 즉 인재인 유학생과 잠재적 미등록 노동자인 유학생이 서로 다른 존재일 것이라 상정하지만 실제로는 같은 사람일 수 있는 한편, 고급 노동시장에서 일할 인력과 질이 낮은 노동시장에서 일할 인력 모두를 유학생이라 칭하지만 실상은 현실에서 서로 다른 처우를 받을 존재라는 점을 인지하지 않는다. 제임스 스콧은 "국가처럼 보기"(2010)에서 국가 주도 사회공학의 비극을 설명하면서 개발과 복지의 명목으로 문제를 단순화하고 인구와 환경을 가독성 있게 재단하는 국가의 통치 방식이 현실에 대한 인식론적 오류로 실패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 지적은 현재 한국 정부의 유학생 통치 방식에도 적용 가능하다. 여러 선행연구가 지적하듯이 외교적, 통상적, 경제적 이유를 들어 한국 사회의 이익에 맞게, 국가의 눈으로 유학생을 재단하며 실제 유학생과 괴리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21]

3. 대학 '유연화'와 유학생 유치, 관리, 취업 및 정주

교육학자인 스테파니 김(Stephanie Kim)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에서 유학하는 한국 청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특정한 방향과 패턴의 학생 이동성이 구성되는 데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의 유연화 전략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Kim, 2023). 학생 이주를 포함한 초국적 이동성 논의에서 가장 파급력 있는 논의는 아이와 옹(Aihwa Ong, 1999)의 '유연한 시민권'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옹은 초국적 이동을 통해 자본축적을 이루려는 동아시아의 엘리트 집단이 '유연한 시민권'을 활용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으로의 학생 이동이 함께 일어난다고 주창한 바 있다. 스테파니 김은 대규모의 초국적 학생 이동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옹의 주장처럼 중산층 이상의 사회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가계가 취하는 유연한 시민권의 전략이라기보다, 고등교육기관의 초국적 팽창 전략이라고 지적한다. 김은 '유연한

20)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들이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임석준(2010), 바트챙게르·김도혜(2020) 등을 참고.

21)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선행연구들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학'(flexible universities)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삭감한 미국 정부의 신자유주의화 조치로 대학이 '우수 인재'인 유학생 석박사생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학 재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학부생 유치에 사활을 걸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더불어 각종 유학 에이전트와 유학원 등과 결탁한 미국 대학이 유연한 글로벌 확장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 사람들의 '글로벌'에 대한 열망을 자극해 유학생을 끌어모으게 되었다고 강조한다. 김(2023)의 연구에서 '유연한 대학'은 정부 정책에 의해 유연화를 경험했다는 의미와 스스로 다양한 유학 관련 업체와의 결탁을 통해 유연하게 글로벌한 확장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한국 대학의 유학생 유치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 대학 역시 정부의 고등교육 관련 정책 변화와 사설 유학원 등과의 결탁 관계를 통해 특정 국가 출신, 특히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유학생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여기에 더해 대학 구조, 교과 운영의 측면에서도 대학이 다양한 유연화 조치를 통해서도 학생 이동성을 조직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1)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

앞서 살핀 데로 한국 대학이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에 뛰어든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라 할 수 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 이전까지 연수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고, 2002년에는 대학원생 비율이 전체 유학생에 50%를 능가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04년 정부의 〈스터디 코리아〉 발표 이후 어학 연수생의 비중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정원감축이 본격화된 2000년대 후반부터 대학원생 비중이 급감하고 그 자리를 학사생과 어학연수생이 채우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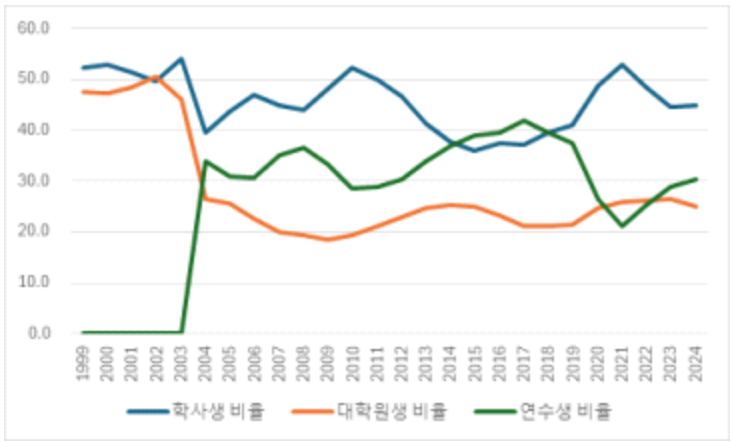


그림 4 외국인 유학생 중 학사, 대학원, 연수생 비율 추이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외국인 유학생 통계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재구성)

물론 최근 들어서는 대학원생, 학부생, 어학 연수생비중 간의 간극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학부생과 어학 연수생의 비중이 높다. 한국행을 선택하는 유학생의 국적의 다양성과 유학생을 받아들이는 대학의 증가 역시 발견된다. 1999년 당시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출신 국적은 총 159개, 재외동포 국적을 제외하고는 126개이며, 이 중 중국 출신자가 1,814명, 재외동포가 1,068명(15.59%), 일본 1,114명, 대만

1,056명으로 외국인 만큼이나 재외동포 대학생의 수도 많았다. 그러던 것이 2005년에는 총 159개국(재외동포 국적을 제외하고는 126개국)으로 국가 수는 동일했지만, 총 22,526명 가운데 중국 12,312명, 베트남 2,638명, 재외동포 1,214명(5.39%) 순으로 변했다. 2010년에는 총 235개 국가로 확대(재외동포 제외하고는 169개 국적)되었고 재외동포는 2,671명으로 전체 외국인 학생의 3.19%만을 차지하게 되었다. 재외동포 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유학생 국적은 갈수록 다양해진 것이다. 또 분교를 포함하여 1999년의 경우 총 97개의 일반대학에 유학생이 재학 중인 반면, 2005년에는 163개 대학, 2010년에는 174개, 2015년과 2020년에는 183개, 2024년 180개 대학에 재학 중으로 현존하는 4년제 일반대학 180여 개 모두에 유학생이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통상적, 외교적 목적으로 정부가 유학생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또 한편으로 대학 등록금 동결과 대학 정원감축을 대학 구조조정의 중요한 축으로 선언하면서, 학부생과 어학연수생을 타깃으로 더 많은 대학들이 더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유학생 유치에 돌입한 것이다.

대학이 초국적 학생 이동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자매 결연을 맺은 해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하거나 각종 유학 박람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일례로 2024년 현재 가장 많은 유학생이 재학 중인 경희대학교는 2022년 기준으로 84개국 594개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22] 하지만 모든 대학에게 이런 전통적인 방법이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을 알리기 어렵거나 지역에 위치한 경우 특히 유학원을 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특히 현재는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한국과 본국에 유학원을 내서 운영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연구자가 2022년 몽골 현지 조사에서 만난 한국 대학을 졸업한 몽골인 중에서도 현재 몽골 현지에서 한국 대학을 전문으로 하는 유학원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모두 자신의 모교 국제처와 연결되어 해당 학교와 학생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민감한 정보라 정확한 대답을 피했지만 이렇게 특정 대학과 연계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국 대학에 대한 정보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국가에서 한국 유학을 희망할 때 유학원을 주로 이용하는 경우가 보고되는데, 이때 유학원은 한국 대학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며 학생을 특정 대학과 연결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례로 네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서윤미(2024)는 네팔 유학생이 가장 많이 재학 중인 학교들이 주로 지방의 사립대이며, 때로 교육부의 국제화 인증제를 통과하지 않은 비인증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쉽지 않아 대학에 대한 정보 없이 유학원이 연계해주는 데로 들어오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실제 2024년 현재 네팔 전체 유학생 가운데 44%의 학생이 다섯 군데의 대학에 재학 중이고 스리랑카의 경우 전체 유학생 중 34%의 학생이 다섯 개교에 재학 중이다.[23] 실제 이들 학교가 현지 유학원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과의 교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의 경우 한국 대학에 대한 정보를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에이전시가 되어 특정 대학으로의 독점적 이동성을 만들어내고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대학이 외부 파트너십, 특히 사설 유학원들과의 유착 관계를 통해 유학생을 모집하는 것의 문제점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강조된 바 있다. 특히 유학생 출신의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학위논문에서 유학원의 횡포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례로 베트남 유학생으로 당사자 연구를 한 르 비(2019)는 석사 논문에서 일부 대학이 특정 유학원 출신의 베트남 학생의 입학 원서만 받는 식으로 운영해 유학원에 막대한 권한이 부여되고 이

22) http://oiak20.khu.ac.kr/kukje/sister.php

23) 참고로 2024년 현재 6,135명의 네팔 유학생이 있는데, 상위 5개교 경성대학교(794명), 경동대학교(639명), 칼빈대학교 (492명), 강서대학교(432명), 중부대학교(393명)에 44%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스리랑카의 경우는 총 609명 가운데 송곡대학교(52명), 아주자동차대학교(50명), 경성대학교(44명), 제주대학교(35명), 칼빈대학교(32명) 등 상위 5개교에 34%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때문에 정확한 정보 없이 한국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고한다. 몽골 유학생에 대한 우누르(2016)의 연구 역시 유학원의 권한이 막강해 유학원의 정보에 학생들이 휘둘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런 일은 대학이 '관리의 수월성'을 목적으로 특정 유학원에 학생 선발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대학 조직의 글로컬 팽창

유학생 유치를 위한 대학의 노력은 유학원이나 현지 대학과 같은 외부 자원과의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 어학당과 국제처 확대 개편, 나아가 현지 어학당 및 유학생 전용 캠퍼스 건립 등 대학 조직과 구조 자체를 유연하게 구성함으로써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유학생 본국에 어학당을 건립하는 일은 해외에서 해당 대학의 이름을 알리는 동시에 해당 국가로의 유학을 직접 연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전략이다. 대학이 직접 교비를 출연하여 해외에 물리적으로 새롭게 어학당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해외에 있는 유학원이나 대학과 협정서를 체결하여 어학당 해외 분교를 설립하는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후자의 방식은 긴 시간과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 안에 여러 국가에 어학당 분교를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4] 최근에는 현지 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현지에 캠퍼스를 설립하는 안도 발표되고 있는데, 일례로 2023년 한해에만 한국 대학 10여 곳이 베트남 현지에 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25]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 이런 대학 조직의 유연화가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매우 긴밀히 연동되어 작동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2020년대 들어 유학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시켜 줄 새로운 '인구'로 떠오르며 교육부뿐 아니라 각 지자체가 발표하는 다수의 정책에 '유학생'의 유치-취업-정주가 주요 목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특정 시군구와 대학이 연계해 유학생 전용의 '캠퍼스'를 설립하는 것을 계획으로 내건다는 것이다. 일례로 전북대학교는[26] 2023년 발표한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에서 남원시 서남대 등 폐교된 유휴 캠퍼스 부지에 글로컬 캠퍼스를 건립하고, 학위과정 유학생 학부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와 내용의 학부과정이 운영될지 알 수 없으나 계획서에 따르면 K-컬처, K-커머스, K-과학기술 등의 학부과정이 운영될 것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 1천 명 이상을 유치해 남원지역에 정주시키고, 지역민에게도 개방해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27] 이 같은 전략은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된 지역 인구감소를 배경에 놓고 대학이 캠퍼스를 글로벌뿐 아니라 지역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학령인구감소, 등록금 동결, 대학 정원 감축 등으로 빚어진 대학의 문제와 한국 사회 전반의 문제를 유학생 유치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여기서 유학생이 대학의 문제를 포함한 한국 사회의 난제를 해결해 낼 자원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대학이 자신의 조직을 글로벌뿐 아니라 로컬의 차원에서 유연하게 복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대학의 로컬 캠퍼스가 대개 유학생 '전용'이라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최근의 지역소멸 담론과 결합하여 지방대와 지자체가 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

24) 일례로 인천대학교는 2018년 한 해 동안 6개소의 해외 한국어학당을 설치했다고 밝혔다(https://www.kyeongin.com/article/1356656).
25)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30621000384
26)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5&boardSeq=9768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4&s=moe&m=0316&opType=N
27)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6297

울이며 유학생만을 위한 전용 공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역의 경우 최근 '비자발적'으로 유학생 전용 캠퍼스로 변모하는 대학들이 등장하기까지 하는데, "(한국인) 지원자가 한 명도 없던 한 대학은 국내 학생을 뽑지 않고, 외국인 대상 선발로 전환"해 정원을 채우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이다(이혜인, 2024).[28] 즉 학령기 인구 감소로 국내 학생들로 정원을 채우기 힘든 대학들의 경우 유학생 선발로 정원을 채우려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때로는 국내 학생보다 유학생 수가 더 많은 캠퍼스가 생겨나는 것이다.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유학생 전용 캠퍼스가 유학생뿐 아니라 지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한국사회에 연착륙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외부인의 유입이 많지 않던 작은 규모의 지방에서라면 대단위의 외국인 청년 유입은 그 자체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감수성과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청년 집단과 한국인 중장년층 선주민 집단은 말 그대로 상호배타적이며 상호 고립적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나아가 상호 불신과 반목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 것이다.

3) 학제 및 교육 과정의 유연화

마지막으로 살펴볼 대학 유연화 전략은 학제 및 교육 과정에서 드러난다. 우선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복수학위제 자체의 편제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멀게는 1997년 부경대가 해외 복수학위제를 시행해 부경대에서 3년간 수학하고 2년간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에서 수학하면 두 학교 학위를 수여하는 방식의 복수학위제를 시작한 바 있다(연합뉴스, 1997).[29] 하지만 과거 한국 대학들이 활용하던 복수학위제가 영미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 학생들에게 해외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out-bound)을 열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현재 많은 대학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복수학위제는 한국으로 들어오는(in-bound) 유학생 본국의 대학과 연계하여 더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테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국제대학교는 최근 한국의 몇몇 대학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신설하였는데 이 대학에서 3년 수학한 뒤 협약을 맺은 한국의 대학에서 나머지 1년을 수학한 뒤 두 개의 대학 학위를 받는 방식이다.[30] 또 선문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에는 2022년 이 프로그램을 통해 35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4학년에 입학한 바 있다.[31] 이런 조합은 특히 인구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 도시의 지자체와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학업을 마침과 동시에 지역 소재 기업에 취업시켜 정주케하는 방식으로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2]

이뿐 아니라 최근 들어서는 유학생 전용 교과목 개설에서 더 나아가 전담학과, 전담 학부 운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에도 유학생 전용 교과목이 없지는 않았다. 주로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어학 프로그램이나 교양 교과목에서 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김경훤·신영지 2014). 또 대학원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트랙' 과정이 설립되어 한국어와 영어 혹은 한국어와 중국어로 수업하는 유학생 전용 석사과정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 학부 개설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에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역시 정부의 조치와 결합되어 있는데, 2022년 정부가 유학생을 비롯한 정원외 인원만 전담하는 학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설

28)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13019581
2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4206110?sid=102
30) http://uzko-trade.org/bbs/board.php?bo_table=m03_02&wr_id=217
31) https://smartcar.sunmoon.ac.kr/smartcar/cm/cntnts/cntntsView.do?mi=40310&cntntsId=239024
32) 일례로 선문대는 2023년 중앙아시아 유학생을 충남소재 기업에 취업, 정주시키기 위한 '충청남도-중앙아시아 지역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은 바 있다.(http://www.ebaekj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68)

립, 운영규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33] 이에 서울권 유명 사립대학들도 유학생만으로 구성된 전담학과와 학부를 개설하겠다고 동참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최근 급속도로 번져 나가고 있다.[34] 더 주지할 것은 유학생의 모국어로만 수업을 하는 유학생 전용 전공 강의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수업을 열어 중국어로 수업을 하는 식이다.[35] 유학생을 별도로 '특별' 대우를 하는 일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유학생 출신 대학원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연성을 발휘하여 졸업 논문을 쓰지 않고 석박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하는 전공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36]

유학생 전용 교과목, 학과, 학부를 개설하고 유연하게 졸업 요건을 조정하는 일련의 대학 조치들은 대학 입장에서는 유학생 대상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대학 자체의 국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일일 수 있다(신재영 외 2018). 한국어가 부족한 유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교육, 관리하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또 유학생을 전담하는 교직원을 배치하여 이들의 학습 및 생활 관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유학생 대상 교육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유학생이 학과 공부를 따라오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소외되면서 유학생이 포함된 수업을 운영하는 교원과 유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이 이른바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37] 대학 입장에서는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로 유학생 전담 교과목, 학과, 학부 개설이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분리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특히 영어도, 한국어도 아닌 해당 유학생의 모국어로 배우는 전공을 배운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유학의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게 되는 것인지 연관시키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성 측면보다는 더 많은 유학생을 더 빠르게 유치하기 위한 전술 정도로 이해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것이다. 실제 69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에 대한 설문 연구에서 신재영 외(2018)는 유학생 전담학과 설치의 필요성 인식이 대학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지방 소재 중소규모 대학일수록 교육의 질이나 학생 교육 만족도 보다는 '대학' 차원의 이익 때문에 전담학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학원 졸업 요건을 특별히 완화시켜주는 방식 역시 전문 지식을 쌓아 초국적 맥락에서 활약할 글로벌 인재를 키운다는 대학의 국제화 미션에 그다지 들어맞지 않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학생의 초국적 이동은 단순히 대학의 유학생 유치를 통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국제화 맥락에서 등장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적, 간문화적 그리고 범세계적 시각이 고등교육의 목적과 기능에 녹아들어 간 교육 정책"을 만들어 다양한 사회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그들이 만든 지식이 글로벌 한 차원에서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만들어 지식의 폭과 깊이를 넓히는 데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말이다(OECD, 2004: 18). 현재로선 유학생 '전용'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문적 교류를 일으켜 상호 성장을 끌어낼 수 있을지 매우 모호한 상황이다.

4. 나가는 글

최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과거 유학의 주요 목적국이었던 국가들이 유학생 수를 더는 늘리지 않기

33) '외국인 유학생·성인학습자 및 재직자 등 정원 외 전담학과 설치 및 운영'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93013540001343
34) https://www.etoday.co.kr/news/view/2277028
35) https://www.chosun.com/DTDTBLYHLVD3DHX6TLNG5L5DO4/
36)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69770
37) https://www.chosun.com/DTDTBLYHLVD3DHX6TLNG5L5DO4/

위해 동결, 혹은 감축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준다(이창원 외 2024). 이들 국가가 모두 동일한 맥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민 수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와 일자리 확보에 위협을 느낀 내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반감이 궁극적으로는 유학생 수 동결 혹은 감소 정책으로 돌아서게 했다 할 수 있다(이창원 외 2024). 물론 이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대두되고 있는 일종의 '탈세계화'(deglobalization) 흐름과 연관해 읽어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원인이 되었든 간에 급속한 이주민 증가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경우, 이주민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대우를 받던 유학생마저 혼란의 주범으로 몰린다는 점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다.

한국의 경우 〈스터디 코리아 300K〉와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대학 30〉등 새로운 정책이 최근 마련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전에 없던 수준으로 유학생 수가 확대될 것이 전망된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인데,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유학생이 매우 중요한 지역 거주민으로 등장하게 될 한국의 지역에서 한국인 선주민과 이주 청년들이 어떤 문화적 접촉을 하게 될 것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다만 이미 대학에서도 급속히 증가하는 유학생 수 때문에 학교 기숙사를 놓고 한국인 학생과 유학생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는 사례가 보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서정원, 2024), 인구수의 증가는 더 많은 갈등의 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현재 대학이 앞다투어 구사하고 있는 사설 유학원을 비롯한 대학 외부 자원과의 파트너십 확대 전략, 글로벌과 로컬 캠퍼스 구축을 통한 팽창 전략 그리고 대학 학제와 교육 과정의 유연화 전략 등은 외국인 유학생의 양적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것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나 한국 학생, 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현재로선 불분명하다. 외국인 유학생 '전용' 교과목, 학과, 학부, 나아가 캠퍼스 건립은 유학생의 한국 사회 연착륙을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 한국 학생뿐 아니라 한국 사회와 유학생이 만날 수 있는 접촉면을 단절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상황이라면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될 때마다 유학생은 그 주범으로 쉽게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 영국, 캐나다, 호주의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일지 모른다.

발표2. 김혜옥 · 이상직 · 구치우옌 · 양샤오시아(경북대)

진입과 퇴장의 괴리:
비수도권 국립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진입과 퇴장의 괴리:
비수도권 국립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 중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김혜옥, 이상직, 구치우옌, 양샤오시아

Ⅰ. 연구 배경

2023년 8월, 한국의 교육부는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1]. 한국의 대학들은 유학생 수를 대폭 늘림으로써 이러한 정책에 부응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유학생 수는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다. 그러나 유학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온다. 한국 사회는 유학생을 어떤 이들로 인식하는가? 유학생들의 정착에 관심은 있지만, 이들이 누구이고, 어떤 인생을 살아 가려고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가? 한국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을 보면 유학생을 지역 인구 소멸 문제와 지역대학의 존치를 위해 긴급히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학생들은 성장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교육 이주를 능동적으로 선택한 주체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집단으로 도구화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유학생은 아시아 5대 주요국, 즉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출신이 대다수이다. 그 비율이 2021년까지 80% 내외였다가 2022년 76.1%, 2023년 75.8%로 소폭 감소했다[2]. 유학생 출신국이 점차 다변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시아권 출신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아시아권 유학생이 한국의 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3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학부생이 69,514명(56.2%), 비학위 과정생이 26,013명(21%). 대학원 과정 유학생이 28,089명(22.7%)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 내 외국인 박사과정생 가운데 중국 출신이 65.1%[3]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아시아 출신, 특히 중국 출신의 대학원생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해하고자 한다.

최근 대학원 유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중국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 '물박사'라는 단어가 화재가 되었다. '물박사'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나 전공 지식이나 연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슈가 떠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유학생들은 이러한 이슈를 왜 문제시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과정에서 앞서 제시된 궁금증도 함께 풀어내려고 시도할 것이다.

중국 대학원 유학생들은 어떤 이들인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비수도권 국립대에 오게 되었는가? 어떻게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게 되었는가? 유학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비수도권 국립대학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의 생애사 구술을 통해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나아가 그들에게 있어서 중국과 한국 사회는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교육부 보도자료, 2023.08.18
2) 교육부 고등교육 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3) 2024.10.15. 서울신문. 김우진. 「수업 내용 통역해 줘, 논문도 중국어로 써"… 물석사·물박사 봇물」https://www.seoul.co.kr/news/society/education-news/2024/10/15/20241015012007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유학생 연구의 변화

유학생과 관련한 선행연구의 초점은 유학생의 교육 만족도, 유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 유학생의 차별 경험, 이민정책에 주는 시사점 등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연구 내용에 있어서도 유학생 스스로가 써내려간 성찰적 경험 연구(마징이 · 딩치우진, 2022)에서부터 유학생의 졸업후 귀환, 재이주 및 정주 경험을 다룬 연구(이예지, 2024; 책소룡, 2020)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유학하며 겪은 차별 경험과 정체성에 대한 연구도 생산되었다. 전재은 · 장나영(2012)은 중국 출신 유학생이 겪은 차별을 보고했고 진사선(2019)은 그러한 차별의 범주를 개념 도식으로 설명한다. 강진구(2022)의 연구는 COVID-19 이후에 차별이 혐오에 이르렀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차별의 원인을 일면적으로나마 추적하는데, 선주민 학생들이 무한 경쟁의 교육의 장에서 유학생을 상대로 방어기제를 작동시킨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유학생들을 차별 경험을 겪는 피해자인 대상으로 타자화하여 관찰한다. 이에 반해 김정숙(2021)의 연구는 유학생들이 차별에 대항하고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진다고 보고 그 행위를 분석하였다. 김정숙(2021: 96)은 COVID-19로 인해 인종화를 경험한 유학생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임계적(liminal) "상태에 머물게 될지라도 이러한 경험과 삶의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맺는 관계 속에서 초국적 주체로 그 정체성이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차별의 상황에서 유학생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신화, 고정관념과 편견, 차별의 허위성을 드러내는(debunking) 대항적 스토리"(김정숙, 2021: 95)로 응답한다고 분석한다. 나아가 고민경(2022)은 유학생들이 학생 이외의 정체성으로서의 다층적 경험이 그들의 귀환과 정주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적 관점에서 연구한 Joanna Pfaff Czarnecka(2020)는 국제 학생들의 이동이 아시아 내에서 최근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상호 연결을 통해 아시아가 형성되고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이러한 연결망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유학생의 행위자 주체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Sarah Jane Lipura & Francis Leo Collins(2020)의 연구 역시 교육 이주가 확대되는 만큼 유학생의 생애 과정, 특권과 불안정, 다각화와 계층화에 관심을 가지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공계열의 유학생과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 연구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창원 외(2020)는 한국의 대학이 유학생을 국제화지수를 높여주고, 등록금 등을 통해 대학 재정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여겨 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 정부는 이공계열 유학생을 첨단 분야의 글로벌 인재로 인식함에 따라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 사업(GKS)'을 통해 이공계 인원을 확보하고 취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통계청의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를 보면 이공계열의 유학생은 인문사회계열 유학생 대비 1/2~1/3 수준이다. 즉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 수가 이공계열 유학생 수의 2~3배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공계열의 대학원생은 영어로 연구 결과물을 생산하지만,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 향상에 비교적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한국어로 연구를 서술한다. 그래서 이공계열의 유학생보다 유학 후의 선택지가 좁을 수 있다. 즉 이공계열의 유학생은 한국에서 유학 후 영어권 국가로의 재이주

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선택지가 넓은 반면에 인문사회계열 유학생은 귀국 혹은 한국 정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 안에서 고를 가능성이 높다. 혹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이 이공계열 유학생보다 한국에 정착하여 생활하기에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공계열 유학생과 인문사회계열 유학생의 진로는 다른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문사회계열 유학생은 일상 생활에서 선주민과 소통하고 만나는 경험이 더 빈번할 것이므로 선주민과의 관계가 이들의 유학 이후의 선택에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전공 계열의 차이는 유학생 연구에서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 중국 사회의 변화

중국은 오랜 세월동안 관료를 등용하기 위한 시험인 과거제도를 시행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소노다 시케토·신보 아쓰코(2010)의 저서 『중국의 교육,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서는 이러한 과저제도를 '문화적 유전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의 과거제도가 한반도뿐 아니라 베트남, 일본 나아가 프랑스와 영국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과거제도로 형성된 교육에 대한 맹신이 오늘날 굳건한 학력사회의 뿌리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는 '문화적 유전자'로 전해져서 현재에도 살아남아 "연속성"을 가진다고 설명한다(소노다 시케토·신보 아쓰코, 2010: 18).

중국에서 1980년대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이후 출생한 아동들은 가정 내 충분한 물적, 정서적 지원을 받으며 학력이라는 문화자본을 쌓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산아제한 정책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로 인해 2014년 부분적으로 완화되다가 2016년에는 두 자녀 정책으로 변경됐다. 1990년대 중국이 개방 정책을 펼친 후에 태어난 세대는 인터넷과 SNS 사용에 익숙하여 해외로의 이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교육 이주의 대중화로 이어졌다.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를 나타낸 다음의 표를 보면 유학의 대중화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미국 내 중국 유학생 수 (출처: IIE Open Doors / Leading Places of Origin)

년도	2003	2007	2013	2017	2023
중국 유학생 수	61,765	81,127	274,439	363,341	277,398

최근 중국에서는 '드러누워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청년들의 탕핑이 유행이라고 한다[4]. 중국에서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2020년 COVID-19을 겪으며 취업난을 경험한 청년들은 대학원이라는 회피처를 찾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전문대 학력보다는 4년제 대학 학력을, 학사보다는 석사, 석사보다는 박사학위를 취득해 놓아야 취업난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졌지만 중국에서 대학원 입시는 그 문턱이 너무 높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단순히 고등교육의 기회를 획득하려는 유학생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대학의 강사들도 다시 대학원 과정에 진입하기 위해 해외 유학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은 기회 비용이 비교적 적은 유학지로 긍정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K국립대의 경우 석박사과정의 중국 유학생이 2017년 144명, 2020년 162명, 2023년 232명[5] 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4) 국제신문. 2024.08.22. [시사난장] 청년세대의 무기력과 '탕핑'
5) 교육부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통계'

Ⅲ.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이 연구는 유학생이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한국 사회에서 주체로서 겪는 유학 경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유학생 연구가 다루지 않은 유학생의 경험이 유학 경험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어떤 맥락에서 그 의미를 가지는지 해석하고자 한다. 그러한 해석에 있어서 의미의 다각화를 시도하며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자 한다. 둘째, 선행연구가 주로 학교 안에서의 경험에 대해 다루었다면 본 연구는 교내와 교외에서 유학생들이 겪는 경험들의 연결점을 찾고 한국 사회의 어떤 지배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유학생들이 실천하는 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사회와 유학생의 관계를 다양한 맥락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유학생들은 비수도권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비수도권의 맥락에서, 인문사회계열이라는 전공 계열의 맥락에서, 국립대라는 맥락에서, 졸업 후의 궤적 등을 탐색하여 유학생의 경험이 한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만들어 내는지 보고자 한다.

연구참여자로는 인문계열과 사회과학계열의 대학원 중국 유학생 10여명을 선정하였다. 전공 계열의 맥락적 측면을 살펴보기 위해 언어(한국어)의 능력이 주요하게 여겨지는 인문사회계열의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문화 속에서 언어를 매개로 한 다양한 경험을 발굴해내는데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출신 유학생들을 선정한 이유는 2017년 사드 사태와 2020년 COVID-19으로 인한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과 최근 대학원 과정의 중국 유학생의 증가가 동아시아 지식 생산의 장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역사, 경제, 정치, 안보적으로 맞닿는 부분이 많은 근린 국가로서 한국 사회는 중국 유학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표 2 연구 참여자 인구 사회학적 특성

사례	연령	성별	부모의 직업	형제 자매	출생 지역	교육 이주 시점	학부 전공	중국 최종 학력	한국 진학 수준	입학 조건	현재 상태
A	35	여	부: 농민; 모: 농민	오빠 2명	산동성 호저시 농촌지역	2022 ~	유아 교육	학사	석사	자비	석사 학위 취득 후 박사 입학 첫 학기, 육아 병행
B	32	남	부:대학 교수; 모: 판매원	외동	안후이성 마안산시 도시지역	2013.9 ~2014.2 (교환학생) 2014.9 ~ 2024.9	한국어	학사	석사	자비+중국 국가 장학금	박사학위 취득 후 귀국
C	31	남	부:자동차 엔지니어; 모:중학교 교사	외동	충칭시 도시지역	2011 ~	경제통 상학부	고등학교 졸업	학사	자비+BK 장학금 수혜	박사 수료 박사논문 준비

D	31	여	부:운송장사; 모: 주부	언니 1명	요녕성 후루도시 농촌지역	2016 ~	관광한국어-〉심리학 학부 편입	전문학사	학사 편입	자비	석사수료 무논문 졸업 신청, 박사 진학 계획, 한국인과 결혼
E	29	여	부:약국 회계; 모: 프리랜서	언니 1명	장쑤성 염성시	2023 ~	전기자동차-〉전기자동차 학부 편입	학사	석사	자비	무역학과 4학기 재학중
F	29	여	부: 과수원 농업; 모: 과수원 농업	언니 1명	하북성 창주시 농촌지역	2018 ~	관광한국어-〉국어국문학과 학부 편입	전문학사	학사 편입	자비	석사 수료, 학위 논문작성중, 박사 진학 계획
G	28	남	부:공무원; 모:공무원	외동	랴오닝성 선양시	2016.9~ 2017.7/ 2018.9 ~	회계학	학사	석사	자비+BK 장학금 수혜	박사 수료, 박사논문 준비
H	29	여	모:자영업	외동	산동성 쯔보시 도시근교	2021 ~	국제통상학과	석사	박사	자비	박사 수료, 박사논문 준비
I	27	여	부:공무원; 모: 주부	외동	산동성 위팡시 도시지역	2016 ~	심리학	고등학교 졸업	학사	자비, 장학금	박사 수료, 학위 논문 작성중
J	24	남	부: 공장일; 모: 주부	외동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	2016 ~	경제통상	중학교 2학년	중학교	자비	경제학과 석사 첫 학기 재학중

현재 대다수의 유학생들은 인터넷과 SNS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소위 MZ세대라고 불리우는 이들이다. 따라서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을 전공한 공동연구자들은 융·복합적으로 유학생의 다각적 측면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즉 청년이라는 공통적인 생애주기적 특성과 함께 출신 지역, 종교, 언어, 문화, 성별 등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더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과 유학생의 관계, 한국사회와 유학생의 관계성에 접근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이주 현장의 단면을 포착하기를 기대한다.

2. 분석방법

이 연구의 연구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국립대 대학원에서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2회 이상 실시하였다. 면접은 각 1회당 2~3시간 정도가 걸렸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각각의 연구참여자 상황에 맞추어 유연하게 질문하였으며,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연구의 목적과 배경에 관해 연구 참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녹음한 후 녹음 자료는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질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참여자의 성별, 연령, 유학 기간, 한국어 수준, 전공 등을 물어본 다음에 부모님과 고향, 성장기 경험을 포함한 생애사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관계와 장소에서의 경험에 대해서도 질문하여 폭넓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녹취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는 프로파일(profile)을 만들었다. 프로파일은 연구참여자의 말로 1인칭 표현으로 작성하여 연구참여자가 일화 속에 있도록 위치시킴으로써 연구참여자의 의도를 명확히 전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참여자의 처해 있던 상황과 시간에 대한 감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주제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유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문장들과 주제 및 단어들을 찾아 범주화하여 그 의미를 도출할 것이다. 연구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공동체 내에서 분석 결과를 교차 검토하고 한국 사회와 중국 사회의 구조적 현실과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Ⅳ. (잠정적) 연구 결과

1. 쉬운 입학: 한국, 국립대, 인문사회계열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유학을 고려한 첫 번째 요소는 한국의 대학 입시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이었다. 까다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의 대학들이 중국의 대입시험인 가오카오 시험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신 이들은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제출했지만 입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등의 대학은 가오카오 시험 성적도 제출해야 하지만 그 외에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비해 한국의 대학은 입시를 통과한 다음에는 학업계획서가 큰 의미가 없어서 전공 지도 방향이 그것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학업계획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학원의 접수 대행 서비스를 받은 몇몇 연구참여자는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의 수정, 보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입학에 대해 까다롭지 않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두 번째 요소는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해외 이주와 관련한 정보를 초국적 인적 네트워크에 의지했으나 최근에는 SNS를 활용하여 익숙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물리적인 접근성도 탁월하다. 즉 중국 내륙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비교적 짧은 비행시간과 수십만원이면 가능한 왕복 항공권도 큰 이점으로 여긴다.

셋째, 친밀감을 들 수 있다. 한류를 통한 문화적 친밀감으로 낯선 나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동양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 있어서 즉각적이거나 심각한 인종차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다만 보편적인 인종차별, 미세한 무시와 차별은 존재했는데,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제대로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기숙사에서의 외국인 학생을 향한 빈번한 민원 발생 등에 대해 고민을 전한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의 비수도권 국립대로 진학한 공통적인 이유로는 '가성비'라는 단

어를 사용했다. 수도권으로 가면 높은 생활비를, 사립대로 가면 높은 등록금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대의 상당수 학과가 BK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성비' 가 좋은 이유이다.

> "BK장학금이 있어서 딱히 알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석사는 2년 동안 받을 수 있고, 박사는 4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 학기부터는 이제 BK는 안 나오고요. 저희가 뭐지 교수님들이 또 조금 진보적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뭔가 평균적으로 모든 사람이 나눠주고 좋은 실적에 따라 조금 차이나게 장학금을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좀 많이 혜택을 받았죠. 왜냐하면 원래 저의 예전 성적으로는 경쟁하면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교육을 통해서 돈 받으면서 사람이 키워질 수 있다, 키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적 따지면서 돈 주는 거 아니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스스로 느꼈어요. 이게 뭔가 인생 태도를 제대로 정할 수가 있죠. 이런 대우를 받으면 후대한테, 다음 세대한테도 이렇게 해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연구참여자 C 프로파일 발췌)

장학금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서 공부와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다고 밝히는 연구참여자 C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장을 빗대어 표현했다. 그는 이러한 경험이 인생 태도에 영향을 끼쳤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BK장학금을 받기 위해, 혹은 받았으므로 그만큼 학업에 충실해야 하는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는 소논문 게재가 확정된 후에 BK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 소논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2. 어려운 졸업: 학부가 아닌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립대

앞에서 언급한 입학시의 수월함은 진입 후에는 방향을 바꿔 난관으로 돌아온다.

첫째, 한국어 논문 쓰기의 어려움이 있다. 한국 문화의 친밀감은 한국어 학습 초반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한국어로 논문을 쓸 정도가 되려면 TOPIC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6급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은 부단히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연구참여자 C는 6급을 따기 위해 2년 가까이 하루에 2~3시간씩 꾸준히 공부했고 마침내 6급을 땄을 때 장학금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기뻤다고 한다. 연구참여자 A의 경우는 고득점을 위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노하우는 다른 유학생에게 TOPIC과외를 하며 전수되었는데, 즉 TOPIC 시험 요령이 돈으로 환산될 만큼의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도교수 선정 과정의 어려움이다. 인문사회계열 전공 대학원 입시 면접은 비교적 간단한 질문 몇 가지에 답하는 것이 다였다. 그렇게 간단한 면접 과정은 오히려 입학 후 지도교수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 연구참여자 B의 지도 교수 선정은 녹록치 않았다. 그는 여러 명의 교수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간단한 입시 면접으로는 교수와 학생이 서로를 파악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입시 면접에서 자신을 합격시켜 준 교수는 모든 교수를 다 만나본 후에도 지도 교수를 선정하지 못하면, 자신이 뽑은 학생이니 책임질 수밖에 없으니 제자로 받아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 "만약에 다들 안 받으면 자기가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뽑았으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또 외국인 학생이라 어쩔 수 없고요."(연

구참여자 B 프로파일 발췌)

또한 국립대는 사립대에 비해서 학사관리와 논문 심사 등에서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특성이 있다. 연구참여자 B는 학위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자 재심사를 위해 추가로 2년을 더 한국에 머물러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는 대학원생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달았다고 한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지도 교수님의 평가였는데, 그만큼 지도교수 선정은 대학원생에게 특히 유학생에게 있어서는 체류 기간의 연장 등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는 유학생이 학부와 대학원이 다른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더욱 문제가 된다. 대학원은 연구자가 되기 위해 학생이 지도교수로부터 훈련받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유학생이 낯설어한다면 유학생과 지도교수 간의 거리가 멀어지듯이 졸업으로 가는 길 역시 멀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논문 투고와 관련한 고민이다. 연구참여자 I는 박사학위 논문의 마지막 심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kci 학술지에 소논문을 투고하기 위해 한국에 가능한 오래 머무를 예정이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중국에서 kci 논문이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ssci와 cssci(중국 내 학술지) 학술지에 투고해야 실적이 되고 중국 내 대학 임용시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ci 논문이 중국에서 인정받는 경우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련된 전공인 경우에 한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I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다. 자신 역시 cssci에 논문을 투고했으나 cssci의 경우 심사료가 무료인 반면에 심사 과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2024년 봄 cssci에 투고한 논문이 반 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심사중이라고 설명했는데,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심사를 하지 않고 있어서, 게재 일정을 알 수 없다는 막막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차라리 kci에 심사료를 내고 빠르게 결과를 듣는 편이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기에, 그는 남은 3개월 정도의 체류 기간 동안 kci 논문 투고를 최대한 많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인문사회계열 연구자의 특성에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 연구참여자 I는 비수도권의 다른 국립대에서 석사를 한 후에 K국립대로 박사과정 진학을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소논문의 제1저자를 한국인 학생에게 뺏긴 기억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대학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학부를 다녔던 K국립대로 돌아왔고 그 후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한다. I는 이미 독립 소논문을 써서 게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탓하는 동료 연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공계열 영어 논문 작성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사유와는 다르다. 인문사회계열 논문이 갖는 특성상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저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깊은 관계를 맺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문사회계열의 중국 유학생들은 연구 질문을 찾고 논리를 만드는 과정을 한국어로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더불어 연구 현장을 한국에서 찾아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참여자 H의 경우는 과감히 한국 사회에 대한 연구는 할 수 없다고 결론지으며 졸업을 위한 시간 단축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 “한국 사회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쉽게 졸업하려면 중국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제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여기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처음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언어적으로도 인터뷰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돼서 그렇게 하면 시간 너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 대상도 찾는 게 쉽지 않아요. 거리감이 좀 있

어요.”(연구참여자 H 프로파일 발췌)

연구참여자 H는 자신을 연구자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는 중국 대학의 강의 전담 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 가운데는 자신이 과연 연구자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신을 연구자로 인식한 소수의 연구참여자들은 박사학위를 취득했거나 학위 논문의 마지막 심사를 마친 상태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이들이었다. 하지만 연구자의 정체성을 부담스러워하는 유학생들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했고, 연구 과정에서 터득하게 된 앎의 즐거움, 시야의 확장, 객관적 판단 그리고 논리적 사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 졸업을 하더라도

연구참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중국에서 한국의 국립대 박사학위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대부분 중국 내에서 세계대학 순위(QS) 500위 내의 대학 학위에 대해 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참여자G의 경우는 자신이 졸업하기 전에 자신이 속한 대학의 순위가 QS 500위 내로 진입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립대가 운영 중인 이중언어 유학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들은 중국에서 한국의 유학생들을 ‘물석사’, ‘물박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자신들처럼 국립대에서 ‘진짜 공부’를 한 유학생들도 취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들은 더 조급해진다. 지금은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중국의 작은 대학, 전문 대학의 강사 자리는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년 후에는 그마저도 인맥있는 ‘물석사’, ‘물박사’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느낀다. 하지만 다른 연구참여자들은 ‘물박사’와 다른 것은 논문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공계열과 달리 인문사회계열 석.박사 학위는 진로를 보장받기 쉽지 않지만 이미 한국어 능력을 체화시킨 연구참여자 D의 경우는 한국에서 창업을 선택했다. 한국사회를 연구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자신이 메꿀 수 있는 틈새시장을 찾아내는 감각을 키운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중국유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중고시장에서 저렴하게 구해서 공급하기도 하고, 때로는 언니가 되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중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그 중 부모 가까이에 자리잡겠다는 유형과 조금 떨어진 곳이라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면 고향이 아닌 곳이라도 자리잡겠다는 유형이 있었다. 그리고 일자리만 있다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상관없다는 유형과 부모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유학생활 동안 느낀 자유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유형도 있었다. 이들이 시간에 쫓기는 것은 졸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중국 내 대학, 전문대학, 작은 대학들에서 자신의 일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될까봐였다. 이는 몇 년 후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도 중국 내에서 취업이 어렵다면, 국립대 출신의 이점을 살릴 수 있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이 더 선호될 수 있다는 점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연구참여자들은 그 정도가 각각 다르지만 모두 연애와 결혼, 가족 (형성)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은 재이주에 대한 계획보다는 졸업 후 취업 그리고 정착이라는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혼 시기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학업을 끝내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고, 부모님도 공부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결혼을 재촉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듯 학업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정부가 이들을 도구화하는 것처럼 이들 역시 전략적으로 한국 대학을 활용하는 상호 도구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인문사회계열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 대학이 위치한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 거주 지역을 생활이 편리하고 쇼핑하기에 적당한, 산책할 수 있는 조용한 도시라고 평가했는데, 지역 사회에 대한 심층적인 경험이나 중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지 않았다. 이는 유학 생활의 끝이 취업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자유로운 연구 활동이나 다체로운 경험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의 대학과 지역 사회 역시 유학생을 정주할 가능성이 있는 이주배경 주민으로 이해하려는 시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Ⅴ. 결론

이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공통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포괄적으로 정리해보려 시도했다. 그리하여 중국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한국의 비수도권 국립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의 문턱은 낮고 입학이 쉽지만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 졸업의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졸업하더라도 학위 가치와 논문 실적에 대한 고민 및 취업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다음 관문으로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시기별로 발생한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활용해왔다. 한국 정부의 정책이 바로 이주민의 유입을 당기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한국 사회는 이주 배경 경험을 가진 구성원과의 공존을 위해 그들이 누구이고 어떤 삶을 꾸려가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참여자 10명 중 2명은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고, 1명은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열어 두고 떠났다. 귀국하여 취업을 하겠다는 이도 있고 한국에서 취업을 하겠다는 이도 있다.

유학생의 대다수가 청년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경험은 초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초국적 정체성을 가졌다고 해석할 만한 연구참여자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로 인해 또 다른 한국인 가족이 생겼고 애정을 주고받는 경험과 한국 국적의 자녀가 애국심을 표현할 때 느끼는 불안한 감정의 경험 등은 분명 정체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던질 것이다. 따라서 유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대학에서,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한국인과 한국 사회와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앞으로도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연구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은 고등교육 시장은 중국 유학생에게 양적으로 충분한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어떠한가? 지식의 장에서 우리의 대학과 유학생들은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 사회도 유학생들을 잠재적인 역량을 가진 개개인으로 그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유학생들 역시 지속적인 학문의 발전 가능성을 한국 대학과의 관계 구축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의미있는 관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연구의 결말은 열려 있고, 고민하고 분석해 나갈 일이 남았다.

※참고문헌※

강진구. 2022. “COVID-19 팬데믹과 초연결사회의 자화상-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차별을 중심으로 -”『탐라문화』69:5-39.

고민경. 2022.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28(4): 474-488.

김도혜·최희정.2019.“한국 유학 선택과정과 초국적 연결망:한국 지방 대학으로의 유학생 이동을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52(3): 127~164.

김정숙. 2021. “초국적 주체와 COVID-19: 유학생의 인종언어 이데올로기 차별경험, 정체성, 그리고 행위주체성”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69~102.

김환철 · 서은숙. 2019.“아프리카 흑인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아프리카학회지』58: 3-39.

김혜련.2020.“중국 해외 유학생의 모국 귀환과 귀국 영향요인 분석* 『동북아문화연구』62:145-158.

마징이·딩치우진. 2022“중국 유학생의 대학원 생활 경험에 대한 셀프 내러티브 탐구”『내러티브와 교육연구』10(2): 157~182.

책소룡. 2020. “재한 중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이주 실태에 관한 질적연구” 부산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소노다 시게토·신보 아쓰코. 2010.『중국의 교육,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백계문 역. 한울아카데미.

이예지. 2024. “한베 노동시장에서 졸업 유학생의 초국적 경계 넘기: 베트남 유학생의 유학-취업-귀환-한국 재이주-정주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47: 213-270.

이창원·김도혜·최서리·신소희. 2020.「국내 유학생의 학업실태 및 취업이행 연구: 이공계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연구원.

전재은 · 장나영. 2012.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326.

진사선. 2019. “캠퍼스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별경험 - 개념도방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Joanna Pfaff Czarnecka. 2020. “shaping asia through student mobiliti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64(10): 1400-1414.

Sarah Jane Lipura & Francis Leo Collins. 2020. “Towards an integrative understanding of contemporary educational mobilities: a critical agenda for international student mobilities research”.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18(3): 343-359.

발표3.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허가받지 못한 미래: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전환과 이후의 삶

허가받지 못한 미래: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전환과 이후의 삶[1)]

이창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1. 머리말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각국은 이주노동력의 유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이주는 때로 '불법' 혹은 '미등록', '비정규'의 형태를 띠고 있다.[2)] 미등록 이주민은 전 세계 인구에 비해 그 수는 많지 않으나 각 이주민 유입국가에서 다양한 법적·정치적 논쟁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가속화하고 있다.

○ 국내의 경우 약 30년이 넘는 이주민 유입의 역사 속에서 많은 미등록 이주민이 발생했다. 이주민 유입 초기 이주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불법'으로 체류하고 근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를 거듭하여 2002년에는 미등록 체류율이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49.1%에 이르기도 했다(이창호 2022).

○ 2003년에 4년 미만 불법 체류한 22만 7천여 명에 대해 국내 취업 자격을 부여한 일시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기도 했지만(최서리 외 2014) 2004년 8월 고용허가제 시행 등의 법적, 제도적 정비 이후에는 기존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일시적인 자진 귀국 유도 및 강력한 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했다.[3)] 그러나 현재까지도 불법체류율은 전체 외국인의 15.1%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4)]

○ 국가가 미등록 이주민을 완전히 단속하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이주민 유입국이 그렇듯 합·불법의 규정이 항상 국가 및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불규칙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여러 이주민 유입국가의 산업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법적으로 유연하고 취약한 예비 노동의 원천으로 인식해 이들 모두를 추방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 것과도 맥락을 같이한다(Castañeda 2010).

○ 최근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외국인숙련기능인력 점수제비자(E-7-4)나 우수한 외국인 인재를 특정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지역특화형비자(F-2-R)와 같이 합법적으로 이주한 이주민에 대해서 장기 체류자격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불법의 논리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1) 이 발표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6082554).

2) '불법체류'는 행정법을 위반한 행위이지만 '불법'(illegal)이라는 용어가 형사법을 연상시키고 인간으로서 이들이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국제기구에서는 '불법'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최서리·이창원·김웅기·정혜진 2014: 11). 이에 따라 여러 논문에서 '불법' 대신 '비정규'(irregular), '미등록'(undocumented) 등의 표현을 쓰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법과 제도적 차원의 접근도 다루기 때문에 '불법'과 '미등록'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3) 2004년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4차례의 합법화 정책이 있기는 했지만 중국동포만을 대상으로 한 낮은 수준의 부분 합법화 조치였다(최서리 외 2014; 한준성 2018)

4) 2024년 10월 기준 총 체류 외국인은 2,692,359명이며 이 중 불법체류 외국인은 406,709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11. 20.).

있다.

○ 미등록 이주민 중에서도 책임 없는 사유로 미등록 이주민이 되거나, 체류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기반을 한국에 두고 가족을 형성하는 등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도 나타나고 있다(정상우·이미정·박지인 2016). 대표적인 사례로 미등록 이주민의 국내 출생 자녀 및 영유아기 동반입국 자녀를 들 수 있다. 이 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UN아동권리협약(UNCRC, 1989년 제정, 1991년 한국 비준) 당사국으로서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사회활동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 체류자격 부여 등의 방안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으나(법무부 보도자료 2022. 1. 20.) 제도적인 틀로 다듬어지기까지는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

○ 앞으로의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 과제는 합·불법이라는 관행적이고 이분법적인 논리에 매몰되기보다는 이들의 다양한 사례에 주목하면서 이들의 삶과 문화를 보다 구체적이고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가 및 지방정부가 인권 및 국제규약에 맞는 이주민 정책을 형성해나가는데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2.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대응

○ 그동안 국내에서는 단속과 처벌, 강제송환을 중심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에 대응해 왔으며 간헐적으로, (재입국 제한 완화를 통한) 자진출국 유도, (동포 대상) 제한적 합법화가 시행되어왔다(이창원·최서리 2018).

○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이 커다란 전환점을 맞은 것은 2006년 '초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을 추진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한시적 특별체류 허용」이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및 인도주의적 배려에 따른 이 조치는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그 범위가 확대되기에 이른다.

○ 2022년의 조치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국내 출생자뿐만 아니라 영유아기에 입국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해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부모에 대해서는 불법체류에 대한 범칙금(30% 감면)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시체류자격(G-1)을 부여하도록 했다.

○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2.1.20; 강성식 2022.2.8.).

〈표 1〉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변동사항

기존 정책(2021. 4. 19.) 적용대상	새로운 정책(2022. 1. 20.-2025. 3. 31.) 적용대상
국내에서 15년 이상 체류하였을 것	① 국내 출생 후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거나, ② 영·유아기(6세 미만)에 국내 입국한 후 6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거나,
국내에서 출생하였을 것	

	③ 6세 이후 국내 입국한 후,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였을 것
국내 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국내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것

* 출처: (강성식 2022. 2. 8.)

○ 법무부는 장기간 우리나라만을 터전으로 삼아 성장한 아동에게 투입된 우리 사회의 공적 자원과 노력, 그리고 아동의 인권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포용하여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동의 삶과 우리 사회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법무부 보도자료 2020. 4. 19.)

○ 다만 이 조치는 2025년 3월 31일 자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한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재량권을 어디까지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조기에 입국 후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거주한 성인기에 접어든 미등록 성년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 시행기간을 장기간 또는 무기한으로 정할 경우, 지금부터 자녀를 가져 본인의 불법체류 상태를 해소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판단이다. 비록 한시적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지정한 기준을 장기간에 걸쳐 충족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개별 합법화로 향후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3. 미등록이주아동의 성인기 전환의 이론적 배경과 의미

○ 국제법에 따라 모든 아동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리와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받는다. 특히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불법적 신분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부모나 다른 성인이 내린 결정과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다. 그러나 아동이 18세가 되면 더 이상 아동의 권리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했지만 이주 아동의 성인기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Suárez-Orozco, Yoshikawa, Teranishi, & Suárez-Orozco 2011).

○ 일반적으로 아동이 18세가 되어 성인기로 접어든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연령에 접어든 것을 뜻한다.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아동에게 성년은 기회의 시기이다. 그러나 18세가 된 미등록 성년자에게 이는 적어도 문제가 되고, 최악의 경우 금지되며, 자신의 미약한 신분을 직설적으로 상기시키는 신호가 된다.

○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있어서 18세가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성인이 되면 불법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과정은 개인의 사회적, 정서적인 삶의 형성뿐 아니라 권리, 접근권, 국내 체류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Gonzales 2016). 또한 이들의 가족 관계도 부모와 형제의 체류 신분이 각기 다른 혼합신분가족(mixed-status family)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많다. 미등록 이주 가족이 있는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누군가가 체포되거나 추

방될 경우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과 분리될지 몰라 두려움을 느낀다(Suárez-Orozco et al. 2011).

○ 미등록 이주 아동과 합법적인 체류권이 있는 아동은 같은 동네와 학교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화 과정은 다른 이주민 자녀의 사회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두 집단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가 학교를 졸업하면 종료된다는 것이다(Abrego 2006; Abrego & Gonzales 2010). 미등록 이주 아동은 그동안 '유예된 불법'(suspended illegality) 상태에 놓여 있던 것이다(Gonzales 2011).

○ 성인기로 나이가 드는 것은 미등록 이주 신분를 가진 대부분의 아동에게 충격으로 다가온다. 성인기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한다. 이들은 자신이 인식한 그동안의 정체성과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법적 지위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성인이 된 미등록 이주아동의 실제 연령과 '사회적 연령'(social age) 사이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같은 연령대인 동료들에 비해 더욱 뒤떨어진다(Vuilleumier 2021). 대학 진학이나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또한 상층부로 향하는 사회적 이동성에 대한 모든 전망을 저해한다.

○ 이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최근 이주민 자녀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국가의 경제와 노동시장과의 연관 관계에서 이주민 자녀의 성인기 전환의 과정은 향후 사회의 진정한 통합에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오늘날 성인이 되는 과정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 생애과정 학자들은 에릭슨(Erikson 1950)의 초기 연구를 바탕으로 성인기로의 전환을 청소년기(12~17세)와 청년기(18~35세)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추가 교육이 늘어나고 취업이 늦어지며 주택 마련을 위해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Rumbaut & Komaie 2010).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아네트(Arnett)은 청소년기와 성인기 사이인 18-25세에 새로운 단계의 발달이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성인모색기' 혹은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로 규정했다(Arnett 2000).

○ 그러나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는 일반적인 '성인진입기'와 다른 경로를 겪을 수 있다. 곤잘레스Gonzales)는 합법적 지위가 불법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더 잘 개념화하기 위해 불법의 발견(16~18세), 불법이 되는 것을 습득하는 시기(18~24세), 대처기(25~29세)라는 세 가지 전환 시기에 초점을 맞췄다(Gonzales 2011).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지위'(unauthorized status)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자신을 다르게 보고 정의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부모와 마찬가지로 추방에 취약하고, 일의 세계에서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성인이 되면 더욱 더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인간이 한 생애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이행에 주목한 리미널리티(liminality, 역치성) 이론[5]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공식적인 성인기 진입이 어떻게 복잡한지 이해하는 데 특히 유용한 틀이 된다. 리미널리티는 사회적 행위자가 더 이상 자신이 속했던 떠나야할 집단에

5) 민족지학자이자 민속학자인 방주네프(Van Gennep 1960)가 처음 사용하였다. 방주네프는 저서인 '통과의례'(Rites of Passage)에서 개인이 집단에서 집단으로, 한 사회적 지위에서 다른 사회적 지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탄생, 성장, 결혼, 점령 시작, 죽음 등 생애 과정에 따른 전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각 전이에는 세 가지 중요한 단계가 관여한다. 인류학자 빅터 터너(Turner 1967)는 방주네프의 전이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했다. 여기서 리미널 단계는 모호성으로 특징지어지며 개인이 새로운 사회적 지위에 도달할 때 비로소 끝난다.

더 이상 속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적 영역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과도기적 소속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이주민과 다르게 삶 속에서 중단된 통과의례와 끝없는 리미널리티를 경험한다(Menjívar 2006).

4. 연구참여자의 사회문화적 특성

1) 몽골 출신 이주민의 국내 유입 과정 및 현황

○ 몽골인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1990년대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한국이 그동안 미수교 지역이었던 몽골과 1990년 3월 26일 수교를 맺고 국제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부터였다. 당시 몽골은 1989년 사회주의 정권이 종식되고 1990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이 시작되었다. 1992년에는 18세 이상의 몽골인 누구나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신헌법이 공포되면서 몽골 국민은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해외 이주의 큰 기폭제가 되었다(김현미 외 2008: 127-128).

○ 2000년대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이주정책이 좀 더 완화되면서 몽골인 디아스포라는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을 포함한 세 부류의 주요 공동체 집단으로 다양해졌다(Dolgormaa and Kim 2023). 몽골의 해외이주자 수는 2020년 기준 총 122,301명이다. 해외로 이주한 국가 중 한국(남한)은 39,982명으로 전체 해외이주자의 다수인 32.7%를 차지한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2021: 61-65).[6)]

○ 몽골 출신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미등록 체류자도 함께 증가하여 2023년 기준 몽골인 체류자 54,845명 가운데 불법체류 몽골인은 18,52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423,675명의 4.4%를 차지한다(법무부 2024).

2)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

(1) 가족주의적 이상(理想)의 강화와 연결망의 재생산

○ 몽골 출신 미등록 이주민의 가장 큰 특징은 모국에서와 같이 가족주의적인 이상이 강조되며 이것이 미등록 이주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희소한 몽골에서는 전통적으로 전세대의 가족원이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생활했다.[7)] 이러한 가족적 이상은 1990년대 체제 이행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현재까지도 몽골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단기간에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목적지 국가에서 가족과 함께 집단을 이뤄 일하는 것이 좋다는 공통된 견해가 있다(Battsengel 2010).

○ 그런데 비자 취득 절차가 엄격해서 부부나 가족 모두 한국에 입국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와 같이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가진 가족이나 친척의 결혼식 초대를 받아

6) 다음으로 미국(15.7%), 일본(7.2%), 카자흐스탄(5.9%), 체코(4.9%), 호주(4.5%), 중국(4.2%), 독일(3.2%), 스웨덴(3.2%) 순이다.

7) 2022년 기준 몽골의 총인구는 3,457,548명이다(National Statistical Office of Mongolia 홈페이지 / 검색일 2024. 04. 24).

관광비자로 입국하기도 하고, 유학비자나 연수비자를 신청해서 1명이 먼저 입국한 다음 배우자나 자녀를 동반비자로 신청하기도 한다(이창호 2023).

○ 가족문화의 강조는 출산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적어도 4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것은 일부 기성세대 몽골인의 경우 당연시되어 있는데 인구가 부족한 몽골에서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과 교육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다. 미등록 이주민의 출산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은 한국의 양질의 양육 및 교육 환경이다.

(2) 익숙한 외모, 비가시적 노동

○ 몽골인 미등록 이주민이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뿌리내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비결 중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이른바 '비자가 얼굴에 있다.'라고 일컫는 '익숙한 외모'이다. 즉 입으로 소리 내어 말만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외국인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으며 미등록으로 단속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이창호 2023).

○ 두 번째로는, 이들이 '비가시적 노동'(invisible labor)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이다(Segarra & Prasad 2024: 6-7). 국내 몽골인 미등록 이주민의 노동은 주로 이삿짐센터에서 이사하는 가구의 짐 옮기기와 이사·입주청소(이하 이사청소), 호텔(모텔) 객실 청소, 야근 공장 근무 등으로 일반적으로 3D 업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이 근무하는 작업장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일종의 틈새(niche)업종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규적인 근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단속을 피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착취를 당해도 이를 권리의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3) 초가시적 정체성

○ 미등록 이주민은 주로 '비가시적 노동'에 종사하지만 거주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사회적·법적으로 과도한 위험이 있는 존재라는 정치적 수사(rhetoric)의 표적이 되면 눈에 아주 잘 띄는 '초가시적 정체성'(hypervisible identity)이라는 모순적 상황에 놓인다(Segarra & Prasad 2024: 3-8).

○ 거주국 대중은 미등록 이주민이 위험스럽고 자신들에게 실존적 위협을 가하는 존재라는 생각에 이르면 아예 추방을 요구한다. 미등록 이주민은 대중에게 끊임없이 감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일상적 행동까지 점차 규제하기 시작한다. 미등록 이주민의 '초가시적 정체성'은 '추방가능성'(deportability)의 불안과 공포로 이어진다(De Genova 2002, 2004; Willen 2007; Khosravi 2010).

5.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험과 성인기 대처 전략

1) 미등록 이주아동과 성인기의 정의와 기준

○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체류허가 없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 1) 단기 체류(90일 이내)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비자 만료 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2) 장기 체류(90일 이상) 목적으로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했으나 갱신하지 않은

경우, 3) 무국적자인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Lee 2023).

○ 아동은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사람이고(같은 협약 제1조), 아동복지법도 동일하게 아동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조 제1호). 하지만 한국 법체계에서 아동과 함께 ‘미성년자’나 ‘청소년’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그 기준에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8)]

○ 인권의 주체로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 아동의 문제에서 아동은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18세 미만(17세 이하)의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이준일 2022). 성인기로 접어든 성년자 역시 18새 이상으로 보아야 하나 각 국가마다 법률과 학기제가 각기 달라 한국의 경우는 통상 19세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2021년 8월말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 가운데 19세 이하는 129,641명으로 6.6% 정도를 차지하는데 만 18세 및 19세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여기에 불법체류율(20%)을 적용하면 2만여 명이 미등록 이주 아동인 것으로 추정된다(이준일 2022). 그러나 법무부의 「장기체류 외국인 아동에게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조치로 인해 일시적으로 3,000명 정도가 그 대상에 해당하여 그 수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기준 19세 이후 미등록이주아동은 6,169명이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 18세 이상의 미등록 이주 성년자의 정확한 추정치는 알 수 없으나 외국인가정 고등학생(정규+각종학교, 총 5,716명) 중 1905명 정도가 고등학교 3학년을 마치고 졸업한다고 볼 때 이 중 미등록 신분을 20%로 가정하면 약 380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해마다 성인기로 진입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2) 몽골 출신 성년자의 삶의 경로와 전략

○ 본 연구는 2023년 6월 14일~2024년 10월 31일까지 경기도 인근 및 서울 지역에 분포하는 몽골인 미등록 이주민의 집거지 및 몽골 울란바토르(2023년 8월 14일~20일)를 중심으로 문화인류학적 질적 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이 중 1차 조사(2023. 6. 14 - 12. 31)는 주로 성인 미등록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2차 조사(2024. 6. 14- 10. 31.)는 4세 이상 시기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성인기에 도달하거나 경험한 미등록 이주 성년자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을 둘러싼 부모, 교사,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수행하였다.

(1) ‘불법’의 발견과 대응방식

○ 모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한국에 이주한 1.5세대나 한국에서 태어난 2세대 미등록 이주아동은 1세대와 다른 법의식이 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UN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사회활동과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 진학하며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는 한국인과 외모도 비슷하고 출석부에도 한국식 이름으로 만든 가명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이라는 표식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8) 민법상 미성년자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닌 사람, 즉 18세 이하인 사람을(민법 제4조), 형법상 미성년자(형사미성년자)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한다(형법 제9조). 반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지만(같은 법 제3조 제1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한편 ‘공직선거법’은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같은 법 제 15조 및 제16조).

○ 그러나 차츰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이 불법 혹은 미등록 이주민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비자', '단속'과 같은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듣거나, 부모로부터 밖에 나가서 남에게 외국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든가 몽골어를 쓰지 말라는 등의 훈육을 받으면서 어렴풋이 자신의 신분에 대해 알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1.5~2세대 아이들은 자신감이 없어지고 기가 죽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되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이창호 2023).

○ 이들 아동이 자신이 미등록 신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자각하고 한국인 및 합법적 지위를 가진 동료들과 다르다고 깨닫는 시기는 주로 제주도 수학여행 때이다. 비행기를 타야해서 신분증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갈 수 없으며 이후에도 수학여행을 다녀온 친구들과 수학여행 얘기에서 소외되곤 한다.

○ 자신이 하고 싶고 소질이 있는 운동부에서 활동은 가능하나 신분상의 문제로 대표팀 소속으로 시합에 참가하기 어렵고 특기생으로 상급학교 진학이 어려울 경우에도 상실감이 크다.

○ 유아기에 한국에 입국한 아동들은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자신의 진로를 경찰관이나 소방관으로 정했다가 신분상의 이유로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는 경우도 있다.

○ 이들은 공통적으로 단속에 대한 공포감을 겪는다. 주변에서 단속에 걸려 강제출국 당하는 것을 직접 볼 경우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가족 중에 누군가 단속에 걸려서 강제 출국 당할 경우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와 우울감을 겪기도 한다.

(2) 진로의 선택

○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준비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진학을 포기하고 부모가 살아온 대로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다.

○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할 경우 한국 학교와 재한몽골학교 재학생은 차이가 있다. 재한몽골학교에 재학하는 아이들은 이미 자신이 불법 신분인 것을 알고 있으며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져있다. 몽골 현지 학교와 마찬가지로 총 12학년인 재한몽골학교에서 10~11학년 정도 수업을 마친 후 불법체류자 특별자진출국기간을 이용해 자진 출국하여 몽골의 교과 과정에 재입학하는 경우가 있으며, 졸업자인 경우 한국에서 몽골의 수능격인 대학입학 시험 중 몽골어 시험을 치르고[9] 몽골에 가서 나머지 과목으로 대학입학자격 시험을 치른 후 몽골의 대학에 입학한다. 이들은 실제로 합법적 신분을 가진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강렬히 원하지만 미등록 신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몽골에 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일부는 몽골에서 학점 교류제가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다시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한다.

○ 그런데 부모 및 본인의 불법체류 경험 때문에 재입국 유예기간인 5년 후에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으며 실제로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

○ 이렇게 아이들이 특별자진출국 기간에 귀환한다고 해도 부모가 한국에서 미등록을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경우, 자녀가 몽골에 갔을 때 돌봐줄 친척이 없을 경우, 재입국 유예기간인 5년이 지났어도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 남자 아이인 경우 병역을 마쳐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서 자녀를 아예 몽골이 아닌 호주 등의 제3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

9) 몽골은 해외 거주자일 경우 현지에서 몽골어 시험에 한해 수능을 치를 수 있으며 본국에서 이 과목만 성적을 인정한다.

○ 또 다른 경우, 자신이 미등록 신분이라서 한국의 대학 입학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아예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노동에 종사하는 어머니 대신 어린 동생들을 돌보거나 그동안 부모가 해온 일용직 노동에 뛰어들어 종사하기도 한다.

(3) 성인기 이후의 삶

○ 대학진학을 포기한 경우 미등록 성년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공장이나 이삿짐센터, 택배회사 등지에서 비정규적인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아간다. 이들은 한국에서 '불체자'로서 나갈 문도 없이 사방이 "뚫을 수 없는 두꺼운 벽"에 둘러쳐져 있는 곳에서 전기자전거를 돌리면서 살아간다고 느낀다.

○ 가족들은 대체로 혼합신분 형태의 가족이라서 18세 이상인 본인만 미등록인 경우도 있다. 몽골로 혼자 자신 출국 할 수도 있지만 유아기인 4~6세 때부터 한국에서 생활해온 이들에게 "사실은 다른 나라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로 가는" 것으로 생각된다.

○ 가족들은 30세 이전이어야 캐나다 등 다른 이민국가에서 이민신청을 잘 받아주므로 몽골로 돌아간 다음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지만 그동안 생활해온 한국에서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 간혹은 한국인과 사귀어 결혼을 약속하기도 하지만 결혼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는 본국에 다녀와야 한다.

6. 맺음말

○ 미등록 이주민에게 있어서 아동기에서 성년기로의 전환과 이후 시기는 진로 고민, 소속감의 갈등, 추방가능성의 공포 등으로 인해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인다. 아동기와 달리 성인기로 접어든 이들에게는 향후 진로에 대한 상담이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나 단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 이들 미등록 청소년은 거주국의 틈새에 숨어 있는 '유령'이 아니다. 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통제를 우회하기도 하고 관용을 누리기도 하지만 교육이나 취업의 시간과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적발과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자면, 영국의 경우 국제법을 근거로 영국에서 태어나 7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경우 거주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인생의 절반을 영국에서 계속 거주한 18-25세 성인의 경우에도 5년 정착 경로(route to settlement)를 신청할 수 있다(Van der Vennet et al., 2022).

○ 국내의 미등록 성년자의 경우도 성년에 이르기 전과 후에 걸쳐 교육, 직업, 신체 및 정신 건강 문제를 상담하고 치료해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합법화 정책이 필요하다. 향후 국가와 지방정부는 성인기 전환기 전후에 위치한 미등록 이주아동, 성년자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합법화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

〈참고문헌〉

강성식, 2022. 2. 8., “새로운 불법체류 아동 합법화조치의 문제점 (1) - 급격한 변화의 배경,” 『재외동포신문』.

교육부, 2024, “2024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김현미·김민정·김정선, 2008, “'안전한 결혼 이주'? : 몽골 여성들의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과 경험,” 『한국여성학』 24(1), 121-155.

바를톨가 바다므체첵, 2012, “재한 몽골 불법체류자들의 삶에 대한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 석사학위 논문.

법무부 보도자료, 2022.1.20., “법무부,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대상 대폭 확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2023『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4. 11. 20.,『2024년 3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이준일, 2022,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인권법평론』28: 201-232.

이창원·최서리, 2018,『불법체류 관리방안으로서의 합법화와 귀환지원: 해외사례 분석과 한국에의 제언』, IOM이민정책연구원.

이창호, 2022, “‘불법’ 이주의 생산과 사회문화적 구성: 경기도 공단 인근 미등록 이주민의 사례를 중심으로,”『인문과학연구』45(1): 239-280.

_____, 2023, “미등록 이주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초국가적 열망,”『현대사회와 다문화』14(2): 31-68.

정상우·이미정·박지인, 2016, “미등록 이주민 인권침해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이민법학회 · 한양대 법학연구소 · 인하대 BK21+다문화교육 사업팀 2016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최서리·이창원·김웅기·정혜진, 2014,『국제비교를 통한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관리정책 개선방안 연구』, IOM이민 정책연구원.

한준성, 2018, “불법의 생산과 합법화 정책” 힌극이주노동정치의 사례,”『민주주의와 인권』18(1): 43-68.

Abrego, L. J., 2006, ‘‘‘I Can’t Go to College Because I Don’t Have Papers’: Incor poration Patterns of Latino Undocumented Youth,’’ Latino Studies 4(3): 212-231.

Abrego, L. J., & R. Gonzales, 2010, “Blocked Paths, Uncertain Futures: The Postsecondary Education and Labor Market Prospects of Undocumented Latino Youth,” J. of Education of Students Placed at Risk(JESPAR) 15: 144-157.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Battsengel, M., 2010, “Situation of Mongolian Legal and Illegal Migrant Workers in South Korea,” xYн YYл(Journal of Mongolian Population) 19, 69-87.

Castañeda, H., 2010, “Im/migration and Health: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positions for Applied Anthropology.” Napa Bulletin 34: 6-27.

De Genova, N., 2002, “Migrant Illegality and Deportability in Everyday Life,”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31(1): 419-447.

_____, 2004, “The Legal Production of Mexican/Migrant Illegality,” Latino Studies 2: 160-185.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Gonzales, R. G., 2011, “Learning to be illegal: Undocumented Youth and Shifting Legal Context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4): 602-618.

Gonzales, R. G., 2016, Lives in Limo: Undocumented and Coming of Age in America, Oak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ee, B. Y., 2023, “The Path to Inclusion for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South Korea,”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32(2): 284-313.

Segarra, P. and Prasad, A., 2024, “Undocumented Immigrants at Work: Invisibility, Hypervisibility,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Slav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mmunications 11(45): 1-16.

Suárez-Orozco, C., H. Yoshikawa, R. Teranishi, & M. Suárez-Orozco, 2011, “Growing Up in the Shadows: The Developmental Implications of Unauthorized Status,” Harvard Educational Review 81(3): 438-473.

Turner, V., 1967. “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In The Forest of Symbol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pp. 93-111.

Van der Vennet et al., 2022, Turning 18 and Undocumented: Supporting Children in Their Transition into Adulthood, PICUM.

Van Gennep, A., 1960. The Rites of Passage, London: Routledge.

Vuilleumier L., 2021, “Lost in Transition to Adulthood? Illegalized Male Migrants Navigating Temporal Dispossession,” Social Sciences 10: 250-264.

Willen, S., 2007, “Toward a Critical Phenomenology of 'Illegality': State Power, Criminalization, and Abjectivity among Undocumented Migrant Workers in Tel Aviv, Israel,” International Migration 45(3): 8-38.

[세션#7]
동포와 지역사회: 돌봄과 건강, 그리고 상생

사회
노고운(전남대)

발표1. 남부현 · 박미숙(선문대)
고려인 학부모의 자녀돌봄 경험과 사회적 이슈

발표2. 송영호(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이주민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건강: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의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3. 박정용(순천향대)
도시재생사업은 이주민을 위한 것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의 사례

토론
허정원(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이주센터)
정종민(전남대)
문경연(광운대)

발표1. 남부현 · 박미숙(선문대)

고려인 학부모의 자녀돌봄 경험과 사회적 이슈

고려인 영유아 학부모의 자녀돌봄 경험과 사회적 이슈

남부현[1]·박미숙[2]

I. 서론

최근 몇 년 간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속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이주민들이 있다. 한국 사회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국적동포 등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이주민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와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4년 10월 기준으로 약 2,640,000명이며, 그중 외국국적 동포는 약 860,000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32.6%를 차지한다.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 중 고려인은 약 200,000명으로 추정된다(법무부, 2024). 한국은 이주민의 유입과 함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다문화적 가치와 이해의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중 외국국적동포들의 유입은 동포와 이주민 사이에서 새로운 문제로 다가왔다. 외국국적 동포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 혈통의 사람들로, 중국의 조선족과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자신이 자라고 교육받은 국적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이주, 결혼 이주 등으로 한국에 입국했으며,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의 유입은 한국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동시에,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통합 문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외국국적 동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들 중 고려인은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국가에서 주로 거주하는 한민족 동포를 의미한다. 고려인 동포의 유입은 재외동포법 제정 이후 2007년 방문취업제와 동포비자 신설로 취업 기회가 제공되면서 가족과 함께 이주가 확장되었다(김경학, 2016). 2019년에는 고려인 4세까지 동포로 인정하면서 가족 정착이 증가하고, 최근 중앙아시아 국가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 한국으로 이주하는 고려인들이 늘고 있다(선봉규, 2017). 이들은 주로 중앙아시아에서 자라며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고려인의 한국으로의 이주는 주로 경제적 동기와 자녀 양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채영란, 2023). 고려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한국 사회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에서 자녀 돌봄은 쉽지 않다. 중국 조선족과 달리 한국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 교육시스템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적인 이유로 고려인들의 장시간 노동은 자녀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남부현, 오정아, 2013), 이는 자녀 교육과 돌봄에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고려인 자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자녀 양육과

1) 선문대학교, namx0015@sunmoon.ac.kr
2) 선문대학교, altnr@sunmoon.ac.kr

돌봄의 어려움을 탐색하고 이들의 요구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첫째, 자녀 양육에 관한 연구(박민정, 2024; 채영란, 2023; 김성원, 어성연, 2023; 김기영, 2019)는 대부분 고려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분석한 것이다. 김기영(2019)은 고학력 고려인 여성들이 초국가적 관점에서 이주를 선택하고, 한국 이주 후 자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둘째, 공동체를 통한 자녀 교육에 관한 연구(박미숙 외, 2022; 박봉수 외, 2023)는 인천의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고려인 자녀 교육을 탐색하며, 고려인들이 이 지역에서 자녀 양육을 위해 맘카페를 활용하거나 한국인과의 갈등을 다루고 있다. 셋째,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에 관한 연구(갈라디바딜노자 외, 2016)는 고려인 결혼이주여성들이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의 실태를 탐색한 연구이다. 넷째, 고려인 자녀의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선봉규, 2017; 남부현, 박미숙, 2022)는 고려인 자녀들의 가정과 학교 교육 실태를 다루며, 한국 사회에서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고려인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 양적, 질적 연구를 실시하고, 고려인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문제를 분석하는 데 그쳤으며, 실질적인 대안이나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고려인 영유아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는 채영란(2024)의 연구가 있지만, 고려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원하는 지원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으며, 돌봄과 양육지원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향후 고려인 자녀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에 있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영유아 고려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자녀 돌봄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고려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둔 고려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들의 경험과 요구를 분석하여 고려인 가정의 자녀 돌봄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고려인 부모들이 겪는 자녀 양육과 돌봄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직면하는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장벽들을 조망하고,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재한고려인의 증가

고려인의 이주 역사는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주요 원인으로는 모국 방문 기회의 증가와 1991년 소련연방 해체로 인한 중앙아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 발전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맞물리면서 발생했다. 2000년대에는 재외동포비자(F-4)와 방문취업비자(H-2)가 신설되면서 고려인의 국내 체류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고려인의 국내 체류가 감소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코로나 이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878,439명이었으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778,67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반등을 시작하여, 2023년 12월에는 848,724명, 2024년 8월에는 860,63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외국국적 동포는 전체 체류 외국인(2,639,521명)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내 외국인 중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며, 고려인 및 다른 외국국적 동포들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가족 단위로 이주하여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노동 이주와 귀환 이주로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이 한국의 교육 환경과 더 나은 생활 조건을 추구하면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정착하기 위해 가족결합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 및 육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나 다른 친인척들이 입국하여 가족의 주거 안정성을 도모한다. 고려인들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지인의 거주지나 서비스를 활용하며, 이러한 형태의 집거지는 그들 사이에 중요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서대승, 2022; 홍숙영, 2017; 김기영, 2019; 한정훈, 2020).

최근에는 F-1 사증이나 F-3 사증을 통해 고려인들이 고국의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하기가 용이해졌고,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한국과 CIS(구 소련 연방 국가들) 간의 초국가적 네트워크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할 때 초기 비용이 감소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출신국 가족과의 별거로 인한 어려움을 과거보다 훨씬 더 쉽게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려인들의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가족 결합을 촉진하고, 한국 사회 내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초기 한국에 입국한 고려인들은 서울 동대문을 중심으로 집거지를 형성했으나, 최근에는 경기도 안산(뗏골마을), 광주광역시(고려인마을), 인천(함박마을), 경주(성건동 고려인마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연해주 출신 고려인 영주귀국자들(사할린 한인)은 대부분 경기도 파주시에 정착하여, 매년 가을에는 파주에서 '사할린 어르신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각 지역에서 집거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려인을 위한 조례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 내에서 고려인들의 사회적 통합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인들이 겪고 있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은 이들의 정착과 통합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2. 이주민의 자녀 돌봄

자녀 돌봄은 역사적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으며, 주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돌봄은 가족 내에서, 때로는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 의해 수행되었고, 이는 대개 사적 영역으로 간주되었다(Lewis, 2001). 특히 여성들이 출산 후 모성애를 기반으로 육아를 책임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돌봄 활동은 종종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자녀 돌봄은 단순한 가사노동을 넘어서 가족,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물론, 사회적 지원과 교육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분야이다. 자녀 돌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이제 가정 내 책임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들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이주민 가정에서의 자녀 돌봄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이주민 가정의 자녀는 학교에서 새로운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부모의 돌봄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Banks(2006)는 학교와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모는 자녀가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등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이주민 부모는 자신의 원래 문화와 새로운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한 도전적인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교육과 사회적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친다(정영미, 2024).

이주민 부모가 자녀에게 전통적인 모국 문화와 새로운 문화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지에 따라 자녀는 두 가지 문화에서 적응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가 새로운 문화에 잘 적응할 경우, 자녀는 문화적 적응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주민 부모는 문화적, 언어적 장벽을 넘어 자녀와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박은정, 2023). 특히, 이주민 부모가 경제적 불안정이나 사회적 고립을 경험할 때,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은 아동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 부모는 자녀에게 건강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고려인 영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돌봄 경험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사용하였다. Patton(2002)은 FGI 참여자의 적절한 인원수를 약 6-12명으로 권장하였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는 총 7명이었다. 연구참여자 선정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모국에서 자녀를 임신 후 한국으로 이주하여 어린이집 또는 학교를 보내고 있는 고려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유아가 있는 고려인 학부모를 표집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어 소통에 문제가 없는 고려인 학부모들을 소개받아 이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구분	출신국	성별	연령	체류자격	자녀수	직업유무	한국거주	주거유형
고려인 1	카자흐스탄	여	26	F1	1	주부	1.5년	월세
고려인 2	우즈베키스탄	여	45	F5	1	개인사업자	15년	자가
고려인 3	우즈베키스탄	여	34	F4	2	생산직	10년	월세
고려인 4	우즈베키스탄	여	28	F4	2	생산직	5년	월세
고려인 5	러시아	여	32	F4	2	주부	6년	월세
고려인 6	카자흐스탄	여	25	F1	1	주부	2년	월세

연구참여자들의 출신국은 카자흐스탄 2명, 우즈베키스탄 4명, 러시아 1명으로, 모두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지역에서 출생하고 자란 사람들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부모로, 전체

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20대 3명, 30대 3명, 40대 1명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으며, 체류자격은 F1 2명, F4 4명, F5 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1-2명을 두고 있으며, 직업은 개인사업자 1명, 생산직 2명, 주부 4명이었다. 한국 거주기간은 1.5년부터 15년까지 다양했으며, 1.5년 또는 2년 정도 거주한 고려인들은 출신국에서 자녀를 낳거나 임신하고 한국으로 입국한 경우였고,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 돌봄 경험과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고려인 학부모의 자녀 돌봄 경험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수집은 초점집단인터뷰(FGI)를 통해 심층면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연구자는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하고, 연구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면담을 진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한국에 이주한 기간이 짧아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체류 기간이 길고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다른 참여자가 통역을 도와주어 면담 진행에 어려움이 없었다.

연구자는 FGI 집단 면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들의 표정과 태도에 주의를 기울였으며, 이를 기록한 면담노트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시간은 약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후 부족한 내용은 추가로 수집하였고, 면담에서는 한국으로의 이주 동기, 자녀 돌봄, 경제 상황, 취업 현황 등 한국에서의 생활 실태와 미래 계획, 그리고 한국에서 지원받는 서비스와 요구되는 정책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과정은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진행되었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하여 녹취 후 분석을 위해 한국어로 전사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려인 학부모들이 겪는 자녀 돌봄에 대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그들이 요구하는 지원 및 정책적 필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자료 분석은 반복적 비교분석법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질적 연구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법으로,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살펴보면서 코딩, 범주화, 범주 확정 및 조정을 통해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Merriam, 2009).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면담 내용을 세분화하여 주요 주제와 패턴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범주를 설정하였다. 또한, 자료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참여자들에게 추가질의를 진행하여 자료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분석된 자료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강화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경험이 있는 동료 박사와 공유하여 피드백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연구의 결과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연구에 포함된 범주와 분석 결과의 정확성을 점검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한국에서 임신과 출산

1)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고려인

고려인들은 임신 후 남편을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에 이주한 후 아이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둘째 아이는 대부분 한국에서 출산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남편 이외에 가족이 없는 고려인들에게 한국에서의 출산은 매우 힘든 과정 중 하나였다. 이들은 출산을 앞두고 출신국에서 친정부모가 입국하기도 하고, 먼저 한국에 입국한 다른 고려인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러한 지원은 고려인들이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제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남편이 먼저 한국으로 들어갔고 몇 달 뒤 저도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한국에 와서 아이를 출산했어요. 아이 낳을 때 남편 말고 가족이 아무도 없어 힘들었어요. (고려인 1)

> 저는 한국에서 둘째를 가졌어요. 아이 낳았을 때 큰애가 봐줄 사람이 없어 더 힘들었어요. 가끔 고려인들이 도와주긴 하지만 많이 힘들어요. (고려인 4)

> 저는 다행이도 아이 출산했을 때 친정엄마, 아빠가 러시아에서 왔다가 갔어요. (고려인 6)

2)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아쉬움

고려인들은 한국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출신국에서는 이주민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외국인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답하였다.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것이 거의 없다고 불만을 표했다. 특히 코로나 지원금과 같은 혜택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인 대우는 고려인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 우리 고려인들은 지원금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내야 되요. (고려인 2)

> 외국인들은 지원금 못받아요. 코로나때 한국인에게 주는 지원금이나 어린이집 지원금 없어요. (고려인 5)

>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이라고 차별받았는데 모국인 한국에 들어왔는데 외국인이라고 또 차별을 받고 있어요. (고려인 3)

3) 출산 후 혼자하는 산후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를 출산한 후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지만, 고려인들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혼자 산후조리를 해야 했다.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싸서 고려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출산 교육이나 산전·산후 교육도 고려인들은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인들이 출산 후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하며, 산후 회복이나 자녀 양육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아기는 낳았고요, 산후조리원은 안 가봤어요. 비싸서 못 갔어요. (고려인 1)

한국사람들은 애기 낳으면 산후도우미 같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외국인이라 그런 지원은 받은 적 없어요. 맘카드는 받아본 적 있어요. (고려인 3)

임신했을 때 태교교육, 출산교육, 산전산후교육 받아본적 없어요. 외국인이라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고려인 6)

2. 자녀 양육

1) 서로 도와주는 러시아권 사람들

한국에 가족과 친척이 없는 고려인들은 고려인 마을에서 함께 거주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장기 이주한 고려인들이나 이웃 고려인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모임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고려인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었으며, 이는 이들에게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호 지원은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고립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었다.

한국인과 만날일은 공장사람들, 어린이집 선생님, 슈퍼, 병원 그리고 없는 것 같아요. 주로 고려인들을 만나 아이들 얘기도 하고, 어려울 때는 도움도 주기도 하고 우리끼리 만나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편이예요. (고려인 4)

고려인 모임을 하면 그냥 만나서 식당가서 같이 밥먹고 러시아말을 하면 다 같이 친해져요. 거기서 아이 키우는 이야기부터 어린이집, 학교 보내는 이야기 같은 것을 하는 편이에요. (고려인 7)

저는 어린이집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여 러시아권 학부모를 돕고 있어요. (고려인 3)

2) 혼자 책임지는 자녀 돌봄

고려인 엄마들은 대부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편이었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고려인 엄마들은 대부분 혼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아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할 경우, 하루 종일 아이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남편들은 대개 경제적 활동을 위해 아침 일찍 직장에 나가면, 하루 종일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다. 한국어 소통조차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이들은 아이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었다.

아이가 자주 감기걸려 어린이집을 못가고 일도 못하되니까 돌볼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제가 집에서 데리고 있는 편이에요. (고려인 4)

아이를 한국에서 낳으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남편밖에 없어요. 저랑 남편이랑 3살짜리 아이밖에 없어서 걱정이에요. 아이 낳으면 지원받는 것 없어요. (고려인 6)

3) 자녀에겐 한국어보단 러시아어 먼저 교육

고려인 부모들은 자녀의 러시아어 교육에 대해 아이와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 먼저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을 진행한다고 응답하였다. 한국어보다 러시아어에 더 익숙한 이들은 러시아어 교육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남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남편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언제까지 한국에 살지 모르기 때문에, 모국으로 돌아갔을 때를 대비해 반드시 러시아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자녀가 두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자녀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향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길 바라고 있었다.

제가 아이들과 소통해야 되니까 러시아말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한국어를 가르칠려고 해요.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요. (고려인 1)

우리나라에 들어갈 때 좀 러시아 대화만 있어도 나으니까 좀 필요하죠. 읽을 수도 있고,, 부모님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어는 가르쳐야 되요. (고려인 3)

아이들은 한국어는 아빠 때문에 좀 읽을 수 있는데 러시아 말은 집에서 공부시켜요. 과외를 따로 해서 러시아어를 읽고 쓰게 하려고 하거든요. (고려인 2)

4) 교육비가 너무 비싼 한국

고려인들은 한국의 교육비가 너무 비싸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였다. 자녀 교육비는 자녀 출산 계획에 차질을 가져왔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녀들은 한국의 학습을 따라가기 위해 한국어를 추가로 배워야 하고, 동시에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러시아어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비는 이들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고려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다.

저는 아이가 한명인데 더 나을 계획은 없어요. 한국에 교육비하구 아이 키우는데 돈 너무 많이 들어가요. (고려인 4)

남편은 한국 온 것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 교육비 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아이 키우기 너무 힘들어요 (고려인 1)

우리아이 학교에는 한반에 외국아이들이 한두명 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한국어 숙제나 학교공부를 위해 추가로 학원을 보내고 있어요. (고려인 3)

3. 지원받은 서비스

1) 운전면허 취득으로 활동 강화

고려인들은 한국의 복지 서비스 참여 경험으로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답하였다.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에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정보나 프로그램이 메시지로 전달되어,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고려인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녀를 데리고 이동하거나,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답하였다. 이는 고려인들이 한국 사회에 더 잘 통합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례로, 고려인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아산 가족센터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게 해주는 프로그램 참여해본 경험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은 잘 몰라요. (고려인 4)

> 운전교실을 다니고 난 다음부터 다문화가족센터에 대한 정보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왔어요.그거 보면 친구들한테 알려주기도 해요. (고려인 3)

2)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교육 참여

고려인 부모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받고 있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면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으며,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을 이용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이는 고려인들의 한국 생활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특히 자녀 교육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에 진학한 후, 선생님과 상담이나 통화를 할 때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점을 실감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 다문화센터에 한국어 교육 받으러 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아기 때문에 못가는데 저는 임신중이어서 낮에 한국어 배우러 가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어를 잘해야 우리아이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열심히 참여하고 있어요. (고려인 6)

> 한국어 공부는 온라인으로 해요. 주로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유투브를 보고 하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학교가기 전에 한국어 2급을 따려고 해요. (고려인 7)

>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닐때는 괜찮았는데 학교를 들어가니까 학교 선생님 상담이나 선생님이 전화가 와도 못알아들어서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어교육은 계속 해야되요. (고려인 3)

3) 임신 중 지원은 맘카드 하나

임신을 경험한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지원받은 것이 맘카드가 전부라고 답하였다. 맘카드는 아이를 위한 병원 진료비로만 사용 가능하고, 다른 곳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으며, 이들은 한국의 임산부를 위

한 다양한 지원이 있지만, 자신들이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일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 고려인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특히 고려인 가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 맘카드에는 100만원 들어있어요. 이카드로는 병원에서 진료비만 사용하고 있어요. 약국도 안되고 다른 것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고려인 3)

> 아이를 가져 병원에 갔더니 맘카드 신청하라고 해서 맘카드 발급받았어요. 맘카드는 출산할 때까지 병원비로 사용한 것 같아요. (고려인 6)

4. 자녀를 위한 미래계획

1) 자녀를 교육을 위해 경제적 안정이 우선

고려인들이 한국 생활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이었다. 이는 자녀들을 위해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려인 어머니들도 맞벌이를 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을 선호하며, 가정과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은 개인사업하고 싶어요. 저는 러시아에서 네일아트를 배웠어요. 여기서 자격증 따서 고려인 대상으로 네일아트 하려고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빨리 자리잡고 싶어요. (고려인 5)

> 저는 화장품 판매 같은 사업하고 싶어요. 화장품은 온라인으로도 팔수 있어 좋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요. (고려인 1)

2) 아이들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

고려인들은 미래 계획 중 하나로 고려인 마을을 떠나 더 큰 도시로 이주하고 싶어했다. 이들의 이주 목적은 주로 자녀들의 학교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였으며, 현재 거주 지역보다 더 발달한 대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도시는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자녀의 학업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고려인들은 이러한 이동이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새로운 지역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통해 자녀들이 보다 폭넓은 시각을 가지길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가족의 미래를 위해 신중하게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자녀의 성장과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신창에 살고 싶지만 아이 학교 갈 때는 천안 같은 곳으로 이사가고 싶어요. 신창보다 좀 더 큰도시로요. (고려인 3)

아이들 때문에 큰 도시로 가고 싶은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언제 갈지 몰라요. 돈 많이 벌면 천안 정도로 나가고 싶어요. (고려인 2)

3) 한국 국적 취득하고 싶은 마음

고려인들은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 마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했다. 이를 위해 사회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나, 신청 과정이 복잡하고 1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사는 고려인들은 남편 덕분에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을 국제 결혼의 긍정적인 사례로 보고 있었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미래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얻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려워요. 순천향대학교에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했는데 1급에서 더 못 올라갔어요. 그리고 신청받는 인원이 20명 밖에 안되어 신청한 사람이 많으면 접수를 못했어요. (고려인 4)

한국인 남편가 사는 것 중 가장 좋은 것은 아기가 한국국적이에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고려인 2)

내 아이는 한국에서 자랐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고려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고려인 5)

5. 고려인 자녀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

1) 고려인 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

고려인들은 고려인 자녀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여 낮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에는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적어 한국어 교육 등 기본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느끼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 가정에 제공되는 방문서비스가 고려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교육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 한국 사회에 잘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시간이 안맞아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아요. 주말에도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요. (고려인 2)

제생각에는 일하고 있는 엄마들은 주말이 좋고 일 안하는 엄마들은 평일이 좋대요. (고려인 7)

집집마다 방문서비스는 받아본 적 없어요. 한국어 가르쳐주거나 아이돌봄이라든지... 아마 고려인이어서 안되는 것 같아요. (고려인 2)

2) 통역서비스와 한국어교육 지원

현재 고려인들은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은행, 병원, 학교 등에서 무료로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장벽을 낮추고,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또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가정 방문 등을 통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학교 선생님과 쉽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고려인 가족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센터나 은행, 학교상담 갈때는 한국어 안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불러요. 24시간 콜센터에서 통역해준다는 것 들어본 적 없어요. 통역하는 사람에게 1시간당 4만원 정도 주고 통역해달라고 해요. 돈도 많이 들지만 쉽게 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어요. (고려인 7)

병원같이 같이 동행하지 않아도 될 때는 전화로 하고 은행이나 병원을 가야 되면은 만나서 같이가요. 저는 애기 임신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같이 가요. 산부인과 가면 3만원부터 5만원까지 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런 비용이 많이 지불되어 바뀌면 좋겠어요. (고려인 6)

방문해서 한국어 가르쳐주고 방문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으면 상담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당연히 활용하지요. (고려인 3)

3) 정보제공은 문자메세지로

고려인들은 한국어 교육 외에도 아이 돌봄 교육, 임신 출산 교육,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정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관련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인들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고려인들이 지역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어 교육이 있어, 아니면 아이 돌봄 교육이 있어. 이런 프로그램 소개는 메시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고려인 1)

한국어 교육,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교육하는데를 찾으려면 인터넷보고 찾아보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하는 곳이 있다면 교육받고 싶어요. (고려인 5)

한국인이나 어린이집 선생님과 소통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번역기를 사용해요. 가정통신문도 번역해서 나누어주는데 번역하지 않고 제공되는 정보는 문자로도 보내주면 핸드폰으로 번역해서 볼 수 있으니까 문자로 제공하면 좋겠어요. (고려인 5)

4) 자녀들 한국 학생들과 매칭

고려인들은 한국인과의 교류와 소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친구나 지인이 없어 한국인과 만날 기회가 적었으며,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한국인 교사와 마주치긴 하지만, 한국어 소통을 위해 번역기를 사용하거나 소통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는 한국 학생들과 1:1로 매칭하여 동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어린이집에서는 한국 아이들과 잘 지냈지만, 학교에 가면 오히려 교류가 더 어려워진다고 느꼈다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사들이 한국 학생들과의 소통과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려인 자녀들도 한국어의 장벽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감과 문화적 이해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도 한국인이랑 1대1로 연결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족 단위는 힘들 것 같고. 우리 엄마들 아이들은 어린이집 오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랑 잘 지내거든요. 그 애들은 괜찮아요. (고려인 4)

우리아이들 한국아이들과 친할수 없어요. 한국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도 러시아학생이 대부분이라서 선생님들이 한국아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고려인 3)

Ⅴ. 결론

본 연구는 고려인 영유아학부모들의 자녀돌봄 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에 따른 정책제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영유아 자녀를 가진 고려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고려인 영유아 학부모들의 한국에서 출산경험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임신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거나, 한국에서 출산하는 경우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출산 후 혼자 산후조리를 하는 등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고려인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고립감을 겪고 육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가중되었다.

둘째, 출산 후 자녀 돌봄과 양육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자녀 돌봄을 위해 러시아어권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고, 자녀에게 한국어보다 러시아어를 먼저 가르쳤다. 이는 고려인들이 한국어 부족에서 오는 문제보다는 자녀들이 러시아어를 알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녀 돌봄을 위해 한국에서 지원받는 서비스는 매우 미흡했다. 다문화가정이나 북한이탈 가정과 달리, 외국국적동포인 고려인들은 임신 중 제공되는 맘카드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고려인 부모들은 자녀 돌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넷째, 고려인 영유아 학부모들의 미래계획은 주로 자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들은 자녀를 위해 경제적 안정은 물론,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 했으며,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이주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려는 부모들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었다.

다섯째, 자녀 돌봄을 위해 고려인 학부모들은 한국인과 동일한 정책 지원을 요구하였다. 친인척이 없는 고려인들은 한국인처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으며, 한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 자녀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고려인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나타난 사회적 이슈와 이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인의 체류 및 취업에 대한 제한은 가정경제와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국가의 법과 정책에 따라 고려인과 그 가족들의 한국 내 입국과 정착이 급증했지만, 한국 사회는 고려인에 대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다. 고려인들은 한민족 동포로 거주하고 있지만, 체류와 취업에 대한 제약으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인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려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려인과 그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이나 북한이탈주민 자녀들과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 국내 거주 고려인들은 동포로 정의되지만,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교육에서 배제되거나 다문화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한국어 교육, 학습 보조 프로그램,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학교적응을 돕고, 다문화 교육과 지역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차별 없이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고려인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가 부족하다. 고려인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 부족으로 고려인과 그 동반 가족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 통역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에 대한 언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고려인 가정과 자녀들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본적인 교육과 복지혜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고려인 집거지는 고려인 자녀들의 문화교육 기회를 제한한다. 고려인들은 사회의 인력으로 흡수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통합 측면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원주민과의 문화적 적응이 어려워 결국 한국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려인 자녀들의 문화적 적응과 사회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언어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인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지역문화 행사,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고려인 자녀들이 지역 주

민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려인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보다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갈라디바딜노자, 박미숙, 김영순(2016). 우즈베키스탄계 고려인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이중언어교육 방식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2(2), 317-342.

김경학(2016).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이주자의 노부모에 대한 초국적 돌봄. 비교문화연구, 22(1), 169-226.

김기영(2019). 고려인 고학력여성의 초국가주의적 선택과 전략: 이주와 자녀교육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연구, 13(2), 45-79.

김성원, 어성연(2023). 광주 고려인마을 가족의 자녀양육경험과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7(4), 271-303.

남부현, 박미숙(2022). 고려인 중도입국 청소년의 생태체계 속 삶의 적응 모습: 지역사회 교사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2), 83-120.

남부현, 오정아(2013).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가족관계 경험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1), 131-154.

박미숙, 강성희, 최이윤(2022). 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및 한국인 주민의 거주경험과 공존방안연구. 다문화와 평화. 16(2), 80-106.

박민정(2024). 경북지역 고려인 자녀 돌봄에 관한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연구보고서, Vol.2024 1-161.

박봉수, 임지혜, 오선영(2023). 고려인 자녀 돌봄공동체 사례연구-인천 함박마을 고려인 엄마들 모임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63, 29-51.

박은정, 2023.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위한 자녀돌봄 시간정책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보고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s://www.immigration.go.kr

서대승. (2022). 고려인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분화에 따른 한국사회 편입 방식의 차이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15(3), 119-154,

선봉규(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거주 고려인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2), 803-829.

정영미, 202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자녀돌봄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적 접근. 선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영란(2023). 고려인 부모가 지각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방안. 국제문화연구, 13(2), 213-238.

한정훈, 2020. 이주의 서사와 고려인공동체의 미래-광주 고려인마을 거주 고려인의 구술생애담을 대상으로. 호남학, 68, 63-115.

홍숙영. (2017). 고려인의 귀환과 이주의 내러티브 탐색. 다문화사회연구, 10(2), 119-143,

Banks, J. (2006)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s (6th ed.). Hoboken, NJ: John Wiley & Sons, Inc.

Lewis, 2001. A likelihood approach to estimating phylogeny from discrete morphological

character data

Merriam, S. B. (2009).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to design and implement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Patton(2002). Patton, M. Q. (2002).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s. (3rd Ed.). CA: Sage.

발표3. 박정용(순천향대)

도시재생사업은 이주민을 위한 것인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의 사례

도시재생사업은 이주민을 위한 것인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 사례[1)]

박정용(순천향대학교)

1. 머리말

이 연구는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 과정에서 이주민이 어떻게 '사회문화적 자원'으로서 활용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를 통해 이주민이, 특히 고려인이 행정적인 담론으로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펴본다.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수도권 집중화, 저출생과 노령화 등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급감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 공간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이곳에 사람들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급증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곧 쇠퇴한 도시 공간을 재생시키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 공간 내 여러 문제를 문화적·경제적으로 재생시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2024년 현재 도시재생사업은 수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총 560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하면 총 444건의 도시재생사업이 지방에서 전개되고 있다.[2)] 이러한 수치는 그만큼 현재 지방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반증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나타난 것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 사례들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행위자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김진간, 2015; 심승구, 2012; 이욱진 2016). 이러한 사례들이 함의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지역의 문화적 요소와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는 사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묘사된다. 둘째, 사업 전개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건물, 공원, 조형물 등 가시적인 성과로 도출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요소는 항상 특정한 형태를 지닌 무언가로 재현하기에 이른다.

특히 2020년 이후 몇몇 에스닉 집거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은 에스닉 집거지의 이국적인 문화적 요소를 활용함으로써 도시 공간을 재생시키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동시에 에스닉 집거지에서 그러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이주민들로 인해 발생한 각종 사회·문화적 문제에서 찾는 이중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각종 연구 사례와 필자의 참여관찰 기록 등을 통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통해 재중동포, 고려인 등을 비롯한 한국 사회 내 소수자들의 정치적 배제 및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

1) 본 발표문에서 인용된 현장자료 대다수는 필자의 학위논문(2023)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수집됐습니다. 또한, 본 발표문은 현재 학술지 논문 투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미완본이며, 발표를 진행하기 위해 내용을 축약하였습니다.

2)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2024. 06. 26. 참조.

2. 행정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주민

도시재생사업은 수치적·외형적 성과를 중시하는 관주도적 사업에 가깝다. 예를 들면 필자의 연구현장(field)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체 예산 약 230억 중 문화플랫폼, 공유주택, 사회기반시설 건축 등에 약 200억 원이 배정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광산구청 도시재생과, 2023a). 즉,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가시적으로 성과 혹은 이윤을 낼 수 있는가'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 도시재생은 실무적으로 도시재개발(urban redevelopment)로 이해되는 측면이 강하다(김혜천, 2013: 6)."

이때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화적 요소들'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호명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과정을 견인하는 매개체로서 문화자원은 특정지역의 문화를 다소 '낭만적'으로 바라봄에 따라 지역민들의 문제를 비가시화시키기도 한다(김주영, 2015; 박해란, 2021). 즉, 이러한 문화적 요소들은 단순히 지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비가시화하고 특정한 측면만을 재현함으로써 일종의 문화적 긴장(cultural tension)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에스닉 마이너리티(ethnic minority)가 어떤 형식으로든 행정·정책적 담론으로서 활용 및 소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 내 여러 사례 중 인천광역시 함박마을과 서울특별시 가리봉동의 사례가 대표적인 그것이다. 함박마을의 경우 한국 내 가장 대표적인 고려인 에스닉 집거지(ethnic enclave)이며, 실제 이 지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사업은 "고려인의 정착 및 적응 등을 유도하고, 고려인의 역사문화를 활용하는 형태로 사업이 전개됐다(최혜주, 2023: 25-27, 33-47)." 가리봉동 역시 재중동포 집거지이나, 이곳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는 재중동포를 지역사회 내 문제적 존재로 재현함으로써 재개발을 정당화하는 것에 가깝다(유정화, 2010: 79-90)."

도시재생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지역의 경관을 개발하든, 특정한 공간적 조정을 거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에스닉 마이너리티라는 특정한 존재를 활용하여 경관을 개발하고, 공간적 조정을 가능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 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이주민이 행정적·정책적 전개를 가능케하는 존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정책이나 그와 관련된 사업들이 특정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듯이, 도시재생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는 것을 넘어서는 다른 목적을 가질 수 있다.

3. 이주민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사례 분석

1) '강제이주 피해자'와 '사회주의 부흥의 영웅'

고려인과 관련된 역사적 서사는 주로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통해서 다루어진다. 이는 대표적으로 '잃어버린 우리의 역사', '자랑스러운 항일독립투사', '사회주의 부흥의 영웅', 그리고 '1937년 강제이주의 피해자'이다. 실제로 고려인들은 1800년대 후반 몇몇 조선인이 연해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됐다. 이들은 당시 정치적·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던 조선을 떠나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모색하기 위해 연해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일본에 의한 조선의 강제합병이 이루어지면서 항일독립투사들의 활동이 조선을 넘어 연해주 지역에서도 이루어지는 등 수많은 고려인이 연해주에 거주하게 됐다. 하지만 1937년 중일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소련과 일본 간 긴장이 대두되면서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이주시키는 정책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고려인이 희생당했다. 그리고 강제이주 이후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은 특유의 '민족 정신'을 발휘하여 소련 사회에 성공리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발생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국가로 국제이주를 하게 된다.[3)]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도 그러한 대상지 중 한 곳이었다.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수는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편리한 교통, 저렴한 집세, 산단·공단과 가까운 위치 및 이로 인한 많은 일자리의 존재 등으로 인해 고려인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앙아시아 여러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고려인의 경우 이들을 지원하는 NGO 단체가 존재했을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고려인이 이주민 네트워크(migrant netwo가)를 통해 이주했기에 현재까지도 월곡2동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3년에는 지자체 차원에서 「광주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고려인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월곡2동은 2017년 이전까지 광주광역시는 물론 한국 내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었으나 2017년 이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과 관련된 여러 행사가 개최됨에 따라 관심이 증가하였다. 실제 몇몇 연구참여자도 "이러한 사실(고려인 강제이주)을 2017년 이전까지 몰랐었는데, 이후에 그러한 행사들이 개최되면서 나의 역사의식이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광주광역시 내에서 고려인에 대한 시선은 2017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고, 그 이전에는 정치적, 학술적 영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관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의 전개와 지역 주민들의 엇갈린 평가

월곡2동에는 고려인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존재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제공하였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양한 이주민지원단체 등이 존재하고, 이주민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국가의 사람들을 '지역자원'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광주광역시 광산구, 2020: 2)." 특히 월곡2동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통해 '쇠퇴지역'으로 판명되었고, 이에 따라 월곡2동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생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대두됐다. 또한, 지자체 역시 관광객을 지역으로 이끌기 위해 지역 내 역사문화 탐방지 등을 발굴 및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월곡2동에 거주하는 고려인의 존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별되었다.[4)] 이러한 이유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문화적 테마로 고려인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적 서사'가 채택 및 활용된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된 중요한 배경 중 하나로 월곡2동에 수많은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연구참여자 이혁영(가명)은 "'고려인마을'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뭔가 되겠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고려인의 존재는

3) 고려인 지원센터 너머, http://www.jamir.or.kr/main/main.php, 2024. 11. 07. 참조.
4) 시민의소리, "'고려인마을 도시재생 사업' 통해 새롭게 거듭난다.", https://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88 (2020. 04. 27.), 2024. 11. 07. 참조.

지역 내에서 ‘무언가’를 전개할 수 있게하는 중요한 ‘자원’이 됐다. 또한, 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역사적 서사’는 실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여러 시설을 건립 및 정비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핵심적인 문화적 테마로 기능했다.

〈그림 1〉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 사업총괄도
출처 : 광산구, 2020: 4

그림에서 보이듯이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은 이 지역에 외국인 이주민이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을 반영한 여러 사업이 계획됐다. 이때 글로벌 테마거리 조성 사업, 다문화 역사 아카이브 조성 사업 등은 철저하게 고려인의 역사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글로벌 테마거리 조성 사업의 하위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노후화 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는 노후화된 주택의 대문과 창문 등을 교체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때 대문과 창문 등은 우즈베키스탄의 한 시장에 위치한 천장 돔을 모티브하여 리모델링 됐다[5]. 그리고 다문화 역사 아카이브는 지역 내외에 잘 알려진 월곡고려인문화관으로 재탄생하였고, 이곳의 전시 역시 고려인의 역사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월곡고려인마을의 노후화된 환경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넘어선다.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에 긍정적인 지역 주민들은 “고려인의 ‘눈물겨운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 “‘고려인마을’에 대한 사업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긍정적인 시도” 등으로 평가한다. 이들에 의하면 2017년 이후 지역사회 내외에서 고려인이 월곡2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문화 콘텐츠로 주목받게 됐다. 월곡고려인마을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시민 단체들,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를 꾀하는 지역 정치인들 역시 고려인의 ‘가치’에 주목하게 된다. 실제로 지역 정치인들은 월곡2동 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꾸준히 모습을 비추고 있다. 또한, 이들은 석상에서 “지역사회가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 ‘고려인마을’이 관광명소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고려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등의 연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한데 얽히고 섞여 지역사회에 관광객을 유입함으로써 정치적 목

5)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으로 독립국가연합(CIS) 내 국가에 거주하는 고려인 약 50만 명 중 18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uz-ko/index.do, 2024. 11. 16. 참조.). 즉,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국가의 문화적 요소가 깃든 돔을 모티브삼음으로써 고려인의 ‘이국적인(exotic)’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를 달성하고, 경제적 활성화를 꾀하려는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바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이다.

반면,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역 주민들과 극소수의 고려인 역시 존재한다. 이들은 “사실상 고려인이라는 존재를 앞에 세워서 수익사업을 벌이려는 것이다,” “고려인이 지역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이나, 막상 같이 지내보면 신체적·문화적 특성 등이 달라 위화감이 조성된다,” “선주민(한국인) 몇 사람이 이권에 개입해서 고려인을 이용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상생이냐” 등의 반응을 보인다. 사실상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몇몇 한국인과 지역 정치인, 그리고 이에 관련된 시민 단체들의 각기 다른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활용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 고려인 연구참여자는 “과거의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사실 우리 이미지는 그렇게 슬프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려인들도 조금은 더 (한국어 교육 같은 자기계발 활동에) 투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현재 지역사회 내외에서 이야기되는 고려인과 관련된 이야기 자체가 고려인 1, 2세대에 맞추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즉, 고려인 3, 4세대의 삶 자체가 과거의 역사적 서사에 맞추어지면서 고려인의 내부적 다양성이 잘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연구참여자 임준(가명)은 “내가 아는 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고려인은 없다. 오히려 이러한 사업들이 (월곡2동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품화’, ‘대상화’하여 월곡2동을 관광지로 만들고, 관계자들도 자기 정치적인 자리를 하나 마련해보려고 하는 것에 가깝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즉, 지역사회 내에서 고려인과 관련된 여러 사업 역시 사업을 유치 및 전개하기 위해 고려인을 활용하는 것에 가깝다. 실제로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월곡2동이라는 공간을 조정하기 위해 전개되는 고려인 관련 사업들에 고려인이 실제로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시행 연도	프로그램명	참여인원(명)	국적
2020	도시재생대학	43	한국(39), 러시아(2), 베트남(1) 우즈베키스탄(1)
	주민제안공모사업	60	한국(41), 러시아(10), 베트남(4), 키르키스탄(2), 탈북민(3)
2021	도시재생대학	24	한국(21), 러시아(2), 네팔(1)
	주민제안공모사업	80	한국(68), 러시아(5), 베트남(2), 우즈베키스탄(2), 키르키스탄(1), 탈북민(2)
	글로벌한마음문화축제[6]	418	한국(156), 러시아(100), 베트남(30), 필리핀(30), 네팔(15), 인도(15), 우즈베키스탄(50), 키르키스탄(10), 탈북민(12)
2022	도시재생대학	80	한국(78), 러시아(2)
	주민제안공모사업	200	한국(139), 러시아(25), 베트남(10), 필리핀(5), 네팔(2), 인도(2), 우즈베키스탄(15), 키르키스탄(2)

〈표 1〉 도시재생대학 등 SW프로그램 참여현황(광산구청 도시재생과, 2023b)

6) 축제의 경우 단순 참여자만 집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맺음말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은 공동체 형성과 회복, 이를 통한 도시 공간의 재생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도시 공간에 부여된 이미지를 특정한 주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에 가깝다. 이러한 주체들은 '고려인마을' 관련 시민 단체들, 지역 정치인, 그리고 이권에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몇몇 한국인들로 대표된다. 이 과정에서 고려인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종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자원으로서만 호명되는 것에 가깝다. 월곡2동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여러 사업은 고려인을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문화적 테마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러한 문화적 색채를 공간에 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려인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이주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 연구참여자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고려인을 (사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숫자적인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이러한 연구참여자의 발언은 과연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자원'에 불과한지, 이들이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면, 그러한 과정에 낯설다고 여겨지는 '지역주민'의 목소리와 욕망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와 같은 질문을 야기하고 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탐구하되, 지역주민으로서 이주민을 포옹하기 위한 도시재생·재개발 등의 개념 역시 다시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논문

김주영, 2015, "낭만과 현실 사이에서: 문화예술사업을 통한 달동네 빈곤의 재현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21(2): 43-84.

김진간, 2015, "도시재생과 예술가집단의 공간 전략," 한양대 석사학위 논문.

김혜천, 2013,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26(3): 1-22.

박해란, 2021, "도시재생 사업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다시, 세운〉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심승구, 2012, "역사 공간의 복원과 재현을 통한 도시 재생의 의미 -수원 화성을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25: 39-67.

유정화, 2010, "부정 당한 현재 : 가리봉 도시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중심부-주변부의 동학,"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이욱진, 2016, "장소성의 인위적 형성을 통한 저층 주거지 재생 연구 : 인천시 송월동 동화마을의 사례," 한국교원대 석사학위 논문.

최혜주, 2023, "이주자 밀집지역의 도시재생과 선주민-이주민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 : 인천시 함박마을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보고서 및 자료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2023a,『요청자료1(예산내역 및 담당정보)』,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2023b,『요청자료2(도시재생대학 등 SW 프로그램 참여현황(추가자료)』,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도시재생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2020,『월곡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요약(일반근린형) -더불어 상생(相生)하는“월곡고려인마을”-』,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인터넷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https://www.city.go.kr/), 2024. 06. 26. 참조.

시민의소리, “‘고려인마을 도시재생 사업’ 통해 새롭게 거듭난다.”, https://www.simin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88 (2020. 04. 27.), 2024. 11. 07. 참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https://overseas.mofa.go.kr/uz-ko/index.do, 2024. 11. 16. 참조.

[세션#8]
타자를 만드는 난민 서사와 제도적 대응

사회
한준성(강릉원주대)

발표1. 김승아(한국외대)
21세기 독일의 무슬림 난민 혐오,
과거 구동독 이탈 주민 차별의 잔상인가?: 타자화를 중심으로

발표2. 김효진(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분석: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발표3. 정유진(한국외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유입과 난민 없는 난민 혐오:
2018년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토론
유혜림(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바딤 슬랩첸코(서울대학교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황의현(서울대 중앙아시아센터 이주난민연구단)

발표1. 김승아(한국외대)

21세기 독일의 무슬림 난민 혐오, 과거 구동독 이탈 주민 차별의 잔상인가?: 타자화를 중심으로

21세기 독일의 무슬림 난민 혐오, 과거 동독 이탈 주민 차별의 잔상인가? : 타자화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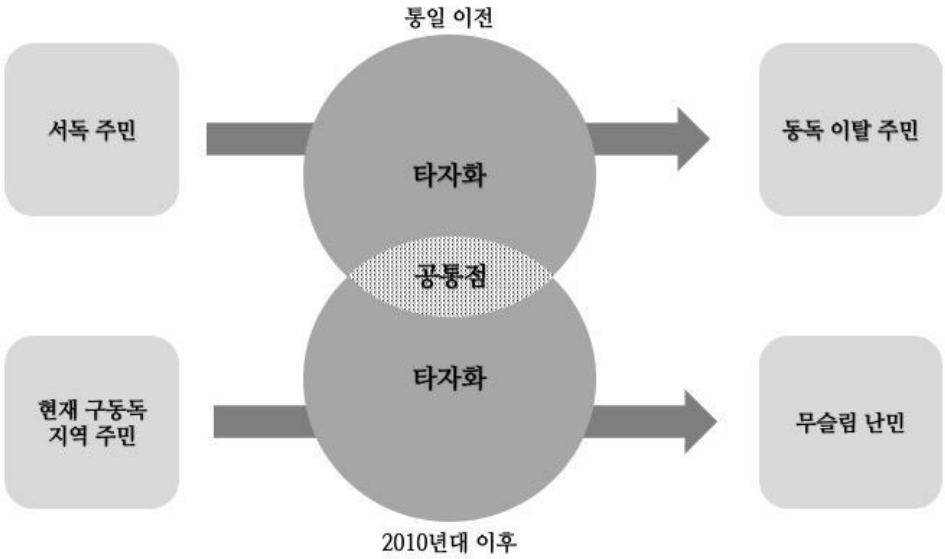
한국외대 김승아

Ⅰ. 서론

분단되어 이념 싸움을 하던 독일이 재통일을 통해 합의와 협의의 민주주의로 나아간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지난 34년의 시간 동안, 독일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었는가? 현재 독일은 어디쯤 머무르고 있는가? 독일의 극우정당인 대안당(AfD)은 난민 사태 이후 줄곧 극우적인 색채를 내비치며 독일 내의 이슬람혐오(Islamophobia)를 조장해왔고 이를 통해 정치적 성공을 거둔 바 있다(김승아·김면회, 2022). 난민사태 이전부터 현재까지 대안당의 인기는 구동독 지역에서 더 높게 관측된다. 실제로 대안당은 올해 3월 작센(Sachsen) 주에서 시장을 배출한 데 더해 최근 작센과 튀링겐(Thüringen) 주의 주의회 선거에서 높은 득표율을 올리며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다[1]. 이처럼 구동독 지역에서 더 높게 관측되는 대안당에 대한 지지는 구동독 지역에서 무슬림 난민에 대한 반감이 더욱 심하다는 사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 중 상당수는 과거 동독 이탈 주민으로서, 또는 통일 이후 동독인으로서 타자화를 겪은 아픔을 기억한다. 독일이 분단 된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통일이 된 이후까지도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는 계속 되었다. 특히나 분단 당시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인들과 여타 이주민 집단이 가하는 이중의 타자화를 몸소 겪어내야 했다. 통일 이후에도 구서독 지역으로의 이주 행렬은 계속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낙후를 극복하기가 더더욱 어려웠다. 이외에도 사회 각종 부문에서 동독 출신 인사의 등용 비율이 저조해 동독 출신 엘리트들이 덜 대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로써 구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2등 시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동시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무슬림 난민들에 대한 타자화가 매우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 또한 이에 상당히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1) https://www.wahlrecht.de/umfragen/(검색일: 2024. 10.16);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sachsen-2024.html(검색일: 2024년 11월 14일);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thueringen-2024.html(검색일: 2024년 11월 14일).



〈그림 1〉 연구 도식화
출처: 저자 작성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서독 사회에서 동독 이탈 주민이 받았던 차별과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무슬림에게 행해지는 차별을 비교해 교차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단 당시 동독 이탈 주민들이 받았던 차별과 이들에 대해 독일 사회가 가한 타자화의 방식을 밝히고 이를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와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타자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진행한 이후 과거 구동독 주민에게 가해졌던 타자화와 현재 무슬림 난민을 대상으로 구동독 지역에서 행해지는 타자화의 방식과 그 매커니즘을 탐구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인종과 언어가 같은 동독 이탈 주민이 서독에서 '동독 이탈 주민'이자 '2등 시민'으로서 겪어야 했던 타자화와 배제의 매커니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최근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종과 언어가 상이한 무슬림 난민에게 가해지는 타자화에 대해 파악할 것이다. 이로써 이 두 사례를 비교연구하여 교차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Ⅱ. 선행연구 검토

동독 이탈 주민의 사회 통합 과정 및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대응에 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대다수의 연구는 분단 직후부터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까지 서독에서 나타난 이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리 위주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이탈이 동독 정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박명선, 1997; 최승완 2011; 허준영, 2012; Bispinck, 2003; Heidemeyer, 1994; 2019; Schmelz, 2002). 이에 더해 독일 통일 이후 동독인들이 서독인들의 민주주의를 인식하는 방식 혹은 동독 주민들이 느낀 차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강구섭, 2020; 양계민·이우영, 2021; Pollack, 2004). 이처럼 과거 분단 시절 발생한 동독 이탈 주민과 관련한 연구들은 대체로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서독 정부의 수용 정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강구섭, 2020; 박명선, 1997; 양계민·이우영, 2021; 최승완 2011; 허준영, 2012Bispinck, 2003; Heidemeyer, 1994; 2019; Pollack, 2004; Schmelz, 2002).

독일 사회의 무슬림 난민에 대한 차별과 관련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졌다. 연구들에 의하면, 무슬림 난민에 의한 차별은 무슬림 '난민'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그 대상은 대체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 그 자체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를 '이슬람혐오증'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대안당(AfD)과 페기다(PEGIDA)로 대표되는 현상을 분석하거나 이슬람혐오증에 대한 독일 정당의 대응을 분석하기도 하였다(김승아·김면회, 2022; Benz, 2019; Rosellini, 2019; Schneiders, 2012). 아울러 독일 내 무슬림 이민자의 정착과 갈등 실태를 영국, 프랑스 등과 비교하기도 하였으며(김종원, 2008; 조희선, 2010) 방송 채널에서 나타나는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김동조, 2022; Hafez, 2007). 이처럼 유럽 공간에서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 및 이민자에 대한 타자화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극우정당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거나 타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다(김동조, 2022; 김승아·김면회, 2022; 김종원, 2008; 조희선, 2010; Benz, 2019; Hafez, 2007; Rosellini, 2019; Schneiders, 2012).

주지하듯 2차대전 종전 이래 이주민의 유입이 지속된 독일 사회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배제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본 연구와 같이 과거 동독 이탈 주민과 현재 무슬림 난민에 대한 차별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두 사례에서 나타나는 타자화의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공백 상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깊어지는 세계화 속에서 우리와 남을 구분 짓고 배척하는 레토릭인 타자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심화되는지를 과거의 독일과 현재의 독일을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현재의 학문적 공백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해당 연구가 단순히 독일 사회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후속 연구를 통해 현재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이 분명 이루어지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통일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Ⅲ. 타자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실제

타자화(othering)는 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특정 대상을 다른 존재로 인식되게끔 함으로써 분리된 존재로 부각시키는 말과 행동, 사상 등의 총집합을 의미한다. 타자화는 그 방식에 따라 타인을 자신들보다 열등한 집단으로 구분하는 수직적 타자화(vertical axis othering)와 내그룹(in-groups)과 외그룹(out-groups)을 구분하는 방식의 타자화인 수평적 타자화(horizontal plane othering)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타자화의 대표적 예시로는 노예제를 들 수 있다. 수평적 타자화에는 히틀러가 유대인을 희생양(scapegoat)으로 삼아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며 유대인을 타자화한 것과 북아일랜드에서 개신교와 천주교가 충돌한 것, 르완다의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갈등 등이 포함된다(Bellinger 2020, 12-14; 이일환, 2017).

일례로 히틀러의 유대인 타자화와 관련하여 당시 나치 정부는 점령 중인 거의 모든 지역에서 유대인을 가시적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유대인에게 별 표식의 띠를 착용하게 했으며 이로써 유대인을 독일인으로부터 명확히 유리시켰다(Bannister, 2021). 이러한 구분을 통한 외집단화는 유대인을 외집단으로 낙인찍고 내집단인 순수 독일인과 구분짓는 수평적 타자화이다. 동시에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부는 유대인을 '기생충'으로 묘사하는 등 독일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강등시키는 수직적 차원의 타자화를 동시에 가하였다. 즉, 수평면과 수직적 차원의 타자화 모두 개개인의 특성을 지워버리고 한 집단을 동질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외집단과 우리를 구분지음으로써 시작된다. 또한 수평적 타자화와 수직적 타자화는 같은 대상에게 동시에 가해질 수 있다(Bellinger 2020, 12-14; 이일환, 2017). 따라서 주류 집단인 내국인과 언어와 종교, 문화 등이 상이한 이주민은 쉽게 타자화의 대상으로 지목되며

사회 내에서 약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난민 또한 마찬가지이다.

언어와 종교, 문화 등을 통해 타인과 우리를 구분하고 내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매커니즘의 타자화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016년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는 타자화 정치의 대표 주자였으며 유럽 내에서도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난민 사태 이후 난민(타자)과 내국인(우리)을 구분짓는 방식의 타자화가 심화되었다. 유럽 일부 국가들에서는 정치권이 이러한 타자화를 주도했으며 독일의 대안당 또한 그 선두에 있었다. 대안당은 난민 대량 유입 국면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타자화 전략을 취했다. 2017년 총선 을 기점으로 대안당은 이전까지 난민과 이주민으로 묘사하던 집단을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으로 규정하고 타자화함으로써 차별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대안당은 이들이 독일의 정체성을 위협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무슬림이 독일의 문화와 사회를 점령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처럼 난민을 타자화하는 방식을 통해 대안당은 유권자의 결속을 다졌으며 이로써 2017년 총선 결과 원내에 진입 할 수 있게 되었다(김승아 외, 2022, 167; 이일환, 2017).

이외에도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프랑스의 국민연합(RN), 오스트리아의 자유당(FPÖ), 이탈리아의 동맹(Lega) 등 대안당을 위시하여 유럽의 많은 극우정당들이 반난민과 반무슬림을 표방하며 난민에 대한 타자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다. 이들은 대안당의 방식과 유사하게 무슬림 난민의 개별적 특성을 지워버리고 이들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을 외집단으로서 배척하고 타자화하기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황을 단순화한 극우정당들은 현 상황을 '이슬람의 침입'이라고 표현하며 외집단인 무슬림 난민들이 자국민을 공격할 것이라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Oztig, 2022, 7-14). 이처럼 유럽의 극우정당들은 타자화를 통해 무슬림 난민 혹은 이주민을 외집단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활용했다.

독일이라는 공간에서는 과거에도 언어와 외모가 같은 존재 또한 타자화의 희생양이 된 바 있다. 독일이 분단 된 이후 서독으로 향한 '동독 이탈 주민'은 독일 국내법상 난민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으나 심사를 거쳐 서독의 거주 허가가 발급된 이후에도 서독인이 될 수는 없었으며 '2등 시민'으로 남게 되었다.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 출신들은 "Ossi"라는 비하를 받아왔으며 미디어는 동독인들이 통일 이후에도 서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폄하해왔다(Rädel 2019, 35). 이처럼 동독 이탈 주민들과 시간이 흘러 통일된 이후 구서독 지역에 거주하는 동독인들은 서독인들과 같은 외모와 언어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일부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독인에 의해 외집단화 되었으며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 개개인의 특성보다 '동독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이들을 식별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수평적 타자화에 이어 동독 출신 주민들은 '2등', 즉 서독인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는 수직적 타자화를 동시에 겪었다.

동독 출신 주민들이 겪은 수평 및 수직적 타자화는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다시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경우,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더 이상 타자화의 피해자가 아닌 타자화를 행하는 주체이며 그 대상은 독일 내의 무슬림 난민이다. 구동독 지역은 통일 이후 3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서독에 비견하여 여전히 경제적으로 뒤쳐진다. 구동독 주들의 가계자산은 구서독 지역과 비교하여 절반 혹은 1/3 수준에 그치며 임금이 구서독 지역과 비교하여 낮은 턱에 젊은 층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경제 상황은 이주민을 비롯한 외부인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으며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이주민 집단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것에 대해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는 경제 상황이 준수한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Deutsche Bundesbank 2023, 36; Marton, 2021; Packroff 2023). 이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구동독 지역의 불만이 현재의 반무슬림적 정서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가 발생한 구서독 지역은 현재 무슬림 난민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과거 동독 이탈 주민으로서, 통일 이후에는 동독 출신으로서 차별 받아 온 아픔을 지니고 있는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무슬림에 대한 반대는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과거 서독에서 동독 이탈 주민을 향해 가해진 타자화와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무슬림 난민에 대해 행해지는 타자화를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Ⅳ. 독일의 타자화, 과거와 현재

1. 20세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

독일은 2차대전 이후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되어 40여 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다. 소련이 통치하던 동독에서는 분단 직후부터 서독으로의 이주가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동독과 서독 모두 전후 재건이 우선이었으며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탈하는 주민이 국가의 경감을 덜어주는 것이라고 여기는 등 이들의 이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서독 또한 분단을 일시적인 상황으로 간주하고 동독에 거주하는 모든 독일인에게도 서독인과 같은 내국인의 자격을 부여했다. 그러나 서독으로 유입되는 동독 이탈 주민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강제이주된 난민들과 동독에서 서독으로 불법 이주한 난민 등 다양한 난민 집단의 이주가 계속되자 서독 정부는 정치적으로 이들을 구분하고 구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박명선, 1997, 239-240; 최승완, 2011, 461-463; Bispinck, 2003, 289).

당시 서독 정부로서는 동독 이탈 주민의 탈동독 동기를 파악하고 동기에 따라 이들을 분류하는 것이 서독 거주권 부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였다. 이에 1950년 제정된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은 동독 이탈 주민을 정치적 이탈 주민(Politische), 서독 정부의 재량에 따라 인정되는 이탈 주민(Ermessensweg Aufgenommene), 불법적 이탈 주민(Illegale)의 세 종류로 구분하였으며 이로써 '난민' 즉 "생명·신체·인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과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동독을 탈출한 동독인에게만 서독의 거주허가가 부여되었다. 이러한 선별수용에 대해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와 기민련(CDU)은 탈동독민에 대한 지원과 수용보다 서독의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하며 '진짜' 난민에 한해서만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던 사민당(SPD)은 기본법에 명시된 거주이전의 자유가 동독 이탈 주민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동독 이탈 주민을 서독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로 보아야한다고 정부를 설득했다. 논쟁 끝에 결국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관철되어 동독 이탈 주민 수용에 관한 서독 초기의 원칙은 인도주의적 관점보다는 통제에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최승완, 2011, 461-463; Bispinck, 2003, 286; Geschichtswerkstatt Uelzen e.V.[2]; Heidemeyer, 1994, 100-104).

따라서 서독에 도착한 동독 이탈 주민들은 긴급수용법 시행령에 따라 이탈동기를 서독 정부에 보고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거주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거주권을 받기 전까지 이들은 동독인도 서독인도 아니었으며 서독의 기본법에 명시된 권리도 선별수용을 원칙으로 하는 긴급수용법의 기준에 부합해 서독 거주권을 받은 후에야 보장받을 수 있었다. 다행히 긴급수용법이 거주허가 신청을 거부당한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의무화하지 않은 덕에 거주허가를 받지 못

2) https://uelzen-bohldamm.de/das-notaufnahmegesetz-1950/#Konflikte_zwischen_CDU_und_SPD (검색일: 2024년 10월 20일)

한 동독 이탈 주민도 서독에 머무를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의 동독 이탈 주민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탓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최승완, 2011, 461-463).

이처럼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인들은 서독에 도착한 직후부터 서독 정부의 검열을 거쳐 서독에 머무를 자격을 인정 받아야 했다. 이 기간 동안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 정부의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서독 정부가 마련한 수용소에 거주했는데, 이로 인해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고착화되었다. 서독 사회는 수용소에서 나와 서독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독 이탈 주민들까지도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무기력한 게으름뱅이이자 기생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시간이 흘러도 기저에 남아 통일 이후에도 동독인이 자기 개발 의지가 부족하고 역량이 없다는 인식으로 이어졌다. 또한 서독인들은 동독 이탈 주민들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주택을 빼앗아 간다고 여겼으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착 지원에도 강한 불만을 품었다. 서독 사회의 냉담한 시선으로부터 도망치고자 한 동독 이탈 주민들은 동독 이탈 주민끼리 교류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수용소와 동독 이탈 주민들의 주거 지역은 게토화되고 점점 더 고립되었다(강구섭, 2020, 15-16; 최승완, 2011, 491-492).

이처럼 서독 사회는 동독 이탈 주민에게 다양한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고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규정지음으로써 자신들과 명확히 구분짓고자 시도했다. 나아가 서독 사회는 동독 이탈 주민을 개별적인 인간으로 바라보기보다 한 집단으로 인식하며 동독 이탈 주민 개개인이 아닌 동독 이탈 주민이라는 집단 자체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여겼다. 즉, 서독 사회는 동독 이탈 주민을 외그룹으로 인식하며 내그룹인 서독인들과 다른 존재이자 피해를 입히는 존재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언어와 인종이 같고 문화를 일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동독 이탈 주민들은 단지 '동독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독인과 구분되는 집단으로 여겨졌으며 자신들의 세금을 통해 정부의 정착 지원을 받고 자신들의 주택과 일자리를 뺏어가는 존재로 묘사되었다.

이후 1950년대를 거치며 동독 이탈 주민 수용에 대한 조건들은 점차 완화되어 1950년대 후반에는 신청자 중 1% 안팎만이 거절을 경험했다(Heidemeyer, 1994, 45). 그러나 이와 같은 수용 조건의 완화가 서독에 거주하는 동독 이탈 주민의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동독 이탈 주민들은 동독에서 가졌던 직업의 연속성을 찾기 어려웠으며 엘리트 계층은 동독에서 취득한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많은 동독 이탈 주민들이 서독 내에서 취업 혹은 창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에 대해 서독인들은 이들이 일할 의욕이 없으며 반사회적인 존재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서독인들은 동독인들이 자신의 삶을 개선할 의지도 없고 서독의 재정착 지원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고 여겼다. 이러한 부정적 편견과 이들이 자신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서독인들의 인식은 동독 이탈 주민이 서독에 정착하는 데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동독 이탈 주민 또한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불만을 가졌으며 서독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만을 좇는 사람들이며 인간관계를 경쟁과 적대로 생각한다고 비난했다(강구섭, 2020, 14-16; 최승완, 2011, 491-493; Benz, 2006). 주지하듯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인들과 같은 외모를 지니고 같은 언어를 구사했음에도 그 존재 자체로 서독 사회 내에서 분명한 타자의 위치에 머무르게 되었으며 서독인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짐으로써 수직적 타자화와 수평적 타자화에 동시에 노출되었다.

이에 더해 동독 이탈 주민들은 그들과 분류되는 이주민 집단인 강제이주민[3]들에 비해 그 수가

3) 강제이주민이란 독일 국적자이거나 독일 민족인 자로서 강제 이주 당시의 주거지가 '외국의 행정적 관리를 받는 독일 동부지역이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제국 영토 외부에 있고, 독일이 2차대전에서 패전함으로써 주거지를 잃게 된 사람'들과 '외국의 행정적 관리를 받는 독일 동부지역, 단치히, 리투아니아, 소련연방,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 중국에서의 일반적인

적었던 탓에 이주민 집단 사이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되었다. 1961년의 통계에 의하면 강제이주민은 9백만 명이던 반면 당시 동독 이탈 주민은 310만 명으로 3분의 1 수준이었다. 이에 한정된 자원으로 배분되는 지원을 나눠가져야하는 입장이었던 이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었으며 상대적으로 소수이던 동독 이탈 주민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일례로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보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전쟁부담조정법은 소련군 점령지역과 이후 동독에서의 피해 또한 보상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강제이주민과 서독 주민들 모두에게서 반발을 샀다(박명선, 1997, 242-251). 이처럼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의 타자화에 더해 다른 이주민 집단에 의해 타자화됨으로써 이중으로 희생양이 되었다. 이러한 이중의 타자화가 가해지는 열악한 현실로 인해 동독 이탈 주민이 동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했다. 실제로 1949년부터 장벽이 세워진 1961년까지 6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동독으로 넘어간 바 있으며 이들 중 3분의 2는 동독을 탈출해 서독으로 향했으나 서독 사회에서 원활히 정착하지 못하고 되돌아간 경우였다. 아울러 1950년대에 동독으로 되돌아간 이탈 주민 가운데 24.5%는 장기적인 실직 상태가 원인이었으며 3분의 1 가량은 경제적 원인으로 동독으로 되돌아갔다. 경제적 이유에는 주거 문제가 주된 이유로 작동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Heidemeyer, 2019, 60; Schmelz, 2002, 19-32).

주지하듯 동독에서 보다 나은 삶을 그리며 서독으로 향한 이탈 주민 중 상당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서독에서 서독인과의 경쟁에서 뒤쳐졌으며 서독인과 여타 다른 이주민 집단들에 의한 타자화로 인해 지속적인 차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처럼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해 서독 사회의 여러 집단이 가하는 타자화는 동독 이탈 주민들이 서독 사회 내에 통합되고 융화 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했으며 이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다시금 공산당 치하의 동독으로 되돌아가는 선택을 하기도 하였다. 동독 이탈 주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여유를 꿈꾸며 서독으로 향하였으나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것은 낯선 문화와 경제 체제였으며 이 속에서 고군분투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전후 서독은 재건과 경제 성장을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경제적 요인에 방점이 찍혀 있던 서독 정부의 동독 이탈 주민 수용 정책은 언어와 문화 등을 교육 시키는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덜 드는 동독 이탈 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했고 이에 서독 사회 또한 표면적으로는 그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다. 나아가 경제가 일정 정도 안정된 이후에는 서독 사회 또한 동독 이탈 주민이 서독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고 서독 사회에 진입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반응하였다. 일례로 시간이 흘러 서독의 경제가 안정되고 강제이주민의 외적 통합이 마무리 된 후에는 여행 허가 없이 혹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서독으로 이주한 동독 난민에 더해 동독에서 여행허가를 소지한 채 서독으로 넘어와 동독 시민권을 잃어 서독에서 거주하게 된 동서독 이주민 또한 피해 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었다(박명선, 1997, 251-254).

이처럼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 주민들과 언어와 문화, 외모 등 많은 공통점을 지녔으나 서독 주민들 및 이주민 집단에 의해 지속적인 차별과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 이탈 주민을 게으르다고 여기거나 서독 사회에 기생하는, 즉 서독인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며 배척하였고 이로 인해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 사회에 완전히 융화되지 못하고 외집단이자 열등한 집단에 머무르게 되었다. 또한 이주민 집단 중에서도 규모가 작은 편이었던 동독 이탈 주민들은 한정된 자원을 나눠가져야 하는 처지인 다른 이주민 집단들에 의해 배척당하고 차별받음으로써 이중의 타자화를 겪어야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독 정부와 사회는 경제적 필요에 의해 그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활용했으나 이들이 실제로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 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통일은 동독 이탈 주민들은 물론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이 서독인들

강제이주 방침으로 인해 해당 지역들을 떠난 사람'을 의미한다(박명선, 1997, 241).

과 계속하여 마찰을 빚고, 완전히 어우러지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어냈다.

2. 21세기 무슬림 난민에 대한 구동독 지역의 타자화

독일 재통일 이후 동서독 간의 간극과 분열은 점차 개선되었으나 시간이 흘러도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은 구서독 지역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히 뒤쳐졌으며 서독 출신이 정부의 요직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동독인들은 중앙 정치가 서독의 이익을 더 많이 대변하고 있으며 동독 출신의 엘리트들은 차별받는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일반 동독 시민들 또한 자신들이 서독의 정치체제 하에서 보호받거나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한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서독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도 서독인보다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강구섭, 2020, 19; Pollack, 2004, 258).

아울러 통일 이후에도 구동독 지역 출신 주민의 절반 이상이 스스로를 단순한 독일인이 아닌, '동독인'으로 인식하며 독일인으로서의 집단 정체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독일인으로서의 통합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강구섭, 2020, 13) 실제로 2019년의 여론조사에서 구동독 지역 주민들의 3분의 1가량이 자신들이 여전히 서독인에 비해 2등 국민이자 희생양(Opferrolle)이라고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여전히 상당수의 동독인들이 과거에 경험한 수평적 타자화는 물론 수직적 타자화의 그림자에서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연구는 동독인들이 무슬림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현재 독일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과 타자화가 만연한 데 더해 동독인들 또한 과거 타자화의 그늘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Eubel, 2019) .

이러한 동독인들의 2등 국민 정서는 세대가 교체되는 와중에도 자녀와 손자들을 통해 전달되었다. 당연하게도 분단 당시 동독에 거주하던 인구 전부가 여전히 구동독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부터 2016년까지 총 백만 명이 넘는 인구가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해 갔다. 이로 인해 구동독 지역에서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했으며 젊은 층이 다수 이동하는 탓에 고령화가 가속화 되었다. 2017년에서 2022년 사이 구서독 지역에서 구동독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소폭 많았으나 상황은 곧바로 역전되어 2023년에도 구동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구서독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구서독 지역에서 이주해 오는 인구보다 많았다[4].

이처럼 구동독 지역의 인구 유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주지하듯 구동독 지역은 통일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낙후되고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다. 특히나 구동독 지역에 포함되는 다섯 개 주 모두 구서독 지역의 주들보다 인당 국내총생산(BIP)이 낮다(Statistische Ämter, 2024). 실업률 또한 구동독 지역의 평균이 7.4%로 독일 전체 평균인 6%와 구서독 지역의 평균인 5.7%에 비해 높다(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26). 아울러 동독에 본사를 둔 주요 기업은 없으며 드레스덴 옆에 위치한 하이데나우(Heidenau)와 같은 지역은 통일 이후 지역의 사업체들이 파산해 상당수의 주민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서쪽으로 이주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경제 수준이 구서독 지역에 비하여 뒤떨어지고 실업률은 더 높은 상황에서 구동독 지역의 주민들은 다수의 이방인이 독일 내로 유입되는 상황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심지어 경제가 안정된 곳의 구동독 지역 주민들 또한 난민이 자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적 위상을 위협한다고 느끼곤 했다(Marton, 2021, 299-357).

---

4) https://www.destatis.de/DE/Themen/Querschnitt/Demografischer-Wandel/Aspekte/demografie-wanderungen.html (검색일: 2024년 11월 27일)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은 이주민과 난민을 비롯한 이방인, 즉, 외부 집단이 자신들의 몫을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시작되는 경계심과 배척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러한 배타심의 일환으로 인해 실제로 구동독 지역에서 반무슬림 극우집단인 'PEGIDA(Patriotic Europeans against the Islamization of the Occident; Patriotische Europäer gegen die Islamisierung des Abendlandes; 서양의 이슬람화에 반대하는 애국적 유럽인; 이하 페기다)'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페기다는 2015년 난민 사태가 불거지기 전인 2014년 탄생하였으며 독일 내의 무슬림을 물리치고 서양의 유구한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페기다의 첫 행진은 2014년 10월 드레스덴 지역에서 진행되었다(Weisskircher and Berntzen, 2019, 2). 페기다는 비록 정치화에는 실패했으나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매주 시위를 이어갔으며 해당 시위에 매주 2만여 명이 운집했다. 이후 세가 다소 수그러들었으나 2018년까지도 매주 1000여 명의 독일인들이 페기다의 시위에 참가하여 무슬림에 대한 반대를 공공연히 표명했다. 특히나 페기다가 탄생한 2014년 당시에는 독일의 연방하원(Bundestag) 내에 극우정당이 진입해 있지 않았으며 2015년 난민사태 또한 발생하기 이전이었다. 이는 난민 사태 이전부터 독일, 특히 동독 사회 내에서 이주민과 무슬림에 대한 혐오가 이미 만연해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동독 지역의 외국인 비율은 난민사태가 발생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여타 주에 비해 현저히 적은 편이다. 튀링겐(Thüringen) 주는 인구 2백만의 도시이며 외국인 수가 18만 명으로 구동독 지역의 주들 가운데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주 다음으로 인구와 외국인 인구의 수가 적다. 더불어 여느 구동독 지역의 주들과 마찬가지로 튀링겐 주 또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른다. 작센 주는 구동독 지역의 주들 가운데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여전히 구서독 주들 중 가장 외국인 비율이 적은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보다도 적다(DeStatis, 2024a; DeStatis, 2024b). EASY 제도[5]에 의해 구동독 지역 주들이 할당 받은 난민 비율 또한 여타 주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다. 해당 제도에 의하면 구동독 지역에 속하는 주들은 2023년 기준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메른 주 1.9%,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 3%, 작센 안할트(Sachsen-Anhalt) 주 2.6%, 튀링겐 주 2.6%, 작센 주 4.9%로 잘란트(Saarland)와 브레멘(Bremen) 주를 비롯한 몇 개의 서독 지역보다 현저히 난민 배당 비율이 적었다. 가령 구서독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는 21%, 바이에른(Bayern) 주는 15.5%를 배당 받았다(BAMF, 2024, 15).

2015년 발생한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 페기다에 이어 대안당 또한 반무슬림을 본격적으로 내세우며 중앙 정치권으로 진입했다. 대안당은 2013년 창당 당시 구제금융에 대한 반대를 외치며 탄생했으나 그 때에도 이미 공공연히 국수주의와 반이민정책을 내세웠었다. 시간이 흘러 구제금융에 대한 논의가 사그러들자 대안당은 2015년 난민 사태를 기회로 삼아 반난민정책을 당의 주요 노선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2017년 원내 진입에 성공했다. 이후 대안당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반난민과 반무슬림의 의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슬람혐오적 입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김승아 외, 2022, 157-158; Marton, 2021, 296). 이러한 대안당의 정치적 전략은 구서독 지역에 비해 구동독 지역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실제로 최근 구동독 지역에 속하는 작센 주와 튀링겐 주에서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 대안당은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한 바 있다[6].

---

5) 독일은 난민할당 제도인 EASY(Erstverteilung der Asylsuchenden) 제도에 의해 각 주(Bundesland)마다 난민 수용 비율을 정한다. 이 제도는 Königsteiner Schlüssel 제도에 기초하여 재정기여도와 인구 비례를 고려하여 각 주에서 수용할 망명 신청자의 비율을 설정한다. 해당 제도는 재정 기여도와 관련해 주들 간에 1949년 체결한 쾨니히슈타인 협정(Knönigsteiner Staatsabkommen)에서 유래하였다(BAMF, 2024, 14).

6)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sachsen-2024.html(검색일: 2024년 11월 14일)

페기다와 대안당의 사례를 통해 구동독 지역에는 난민사태 이전부터 반무슬림 정서가 만연해 있었으며 난민사태 발생을 기폭제로 하여 구동독 지역 내의 반이주민, 반난민, 반무슬림 정서가 본격적으로 조직화 되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과 가장 대조되는 지점이다. 동독 이탈 주민과 구동독 지역 출신 주민에 대한 차별은 주로 동독 체제에 대한 폄하에서 시작하였으며 동독 체제가 서독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보다 열등한 것이므로 동독인들이 무조건적으로 동독의 것을 버리고 서독 사회의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이처럼 과거 분단 시절에도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이 행해졌으며 1970년대에는 빈곤층과 저학력 계층 및 청소년 사이에서 이주민과 외국인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독 사회는 외국 이주민에 비하여 언어 등을 교육할 필요가 없는 동독 이탈 주민이 갖는 경제적 이점을 이유로 하여 결국 이들을 사회 내로 적극적으로 통합시키고자 시도하였다(강구섭, 2020, 17-18; 허준영, 2012, 272-277).

반면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심화되고 있는 무슬림과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혐오는 그 대상이 난민 혹은 이주민으로 반드시 특정되지 않는다. 페기다와 대안당은 사실상 대다수 난민이 포함되는 '무슬림'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무슬림들 중 독일 사회에 융화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대상을 집중적으로 비난한다. 특히나 페기다와 대안당 모두 이슬람이라는 용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테러, 극단주의, 종교적 자유의 부재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무슬림과 동일시하고자 시도한다.(김승아 외, 2022, 175; Rosellini, 2019, 109-110). 이로써 독일 국민들은 무슬림과 난민, 이주민, 테러범, 극단주의자 등과 관련한 이미지를 은연중에 함께 받아들이고 이들 간의 특성을 구분하기 어렵게 된다. 이처럼 페기다와 대안당은 독일 내의 무슬림들과 이주민, 난민 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동시에 타자화가 되는 대상 개개인의 개별적 특성을 지워 '무슬림'이라는 동일 집단으로 인식되게끔 함으로써 타자화가 용이하게 유도했다.

아울러 구동독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무슬림에 대한 타자화의 현상은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차별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본격적이다. 페기다와 대안당은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무슬림 혐오를 어떻게 응집하고 표출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나 페기다의 시위에서는 과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동독에서 발생한 시위의 구호였던 '우리는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7]라는 구호가 제창되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독일에서 난민이 아닌 자신들이 국민이라고 외치는 구호는 난민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자신들의 의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리아 난민사태를 발판 삼은 대안당의 급부상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었다(Rosellini, 2019, 110-111; Weisskircher and Berntzen, 2019, 4-5).

살펴보았다시피 구동독 지역에서 현재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는 사실상 무슬림 '난민'만을 정확하게 겨냥하지 않는다. 외모가 눈에 띄게 다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다른 종교를 갖는 '무슬림' 그 자체가 공격의 대상이다. 대안당과 페기다가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무슬림에 대한 타자화는 이들의 실질적 신분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이들이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 종교 등을 버리고 독일 사회에 흡수 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들을 재단한다. 이러한 타자화는 무슬림이라는 특정 정체성과 집단 자체를 열등한 것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동시에 독일인에 대적하는 철저한 외그룹으로 만들어 희생양으로 삼는다. 이처럼 수평적 타자화와 수직적 타자화가 동시에 가해지는 타자화의 매커니즘은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게 가해졌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가 보다 더 조직적이고 공공연하며 정

---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thueringen-2024.html(검색일: 2024년 11월 14일)

7) 과거 분단 당시 해당 문구는 '우리는 한 민족이다(Wir sind ein Volk)'라는 구호로 변하였다(Rosellini, 2019, 110-111).

치권에서조차 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중앙정부가 이러한 타자화를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술하였듯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수용에 있어 아데나워 정부는 동서독 냉전의 구도 하에서 동독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으며 1950년대 경제 호황으로 인해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자 동독 이탈 주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고자 하였다. 물론 상술했다시피 연방 정부의 주요 정책 기조는 경제적 필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어 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에는 다소 무감각했으나 정치권에서 주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타자화를 주도하지는 않았다. 아데나워 정부 이후에도 동독 이탈 주민의 수용에 대한 정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되었으며 필요시 특별 프로그램 등을 수립하여 보강 및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허준영, 2012, 273-278).

난민 사태 당시의 메르켈 정부 또한 난민 수용에 매우 우호적이었다. 일례로 메르켈 정부는 유럽 연합 차원에서 더블린 조약의 일시적 유예를 앞장서서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난민 사태 초반, 메르켈 정부가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밝힐 당시에는 극우정당의 세가 강하지 않았다. 대안당은 오히려 메르켈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반발하는 유권자의 심리를 간파하여 정치권으로 진입했으며 이후 연방하원에 진입하여서도 공격적으로 반이주민 정책을 내세운 것이다(김승아·김면회, 2022; 김황식, 2023, 352-353). 이로 인해 결국 최근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는 과거 이루어진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달리 정치권에서 조직적으로 타자화를 주도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 이처럼 조직적인 진행과 더불어 정치권의 주도라는 특징이 현재 무슬림 난민에 대한 구동독 지역의 타자화와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 간의 중요한 차이점으로 나타난다.

〈그림 2〉 동독 이탈 주민과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 비교
출처: 저자 작성

주지하듯 과거 종전 이후 서독에서도 동독 이탈 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심했으나 1950년대 이후 경제가 급성장하고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며 서독의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이러한 불만들이 사그러든 바 있다. 아울러 이 당시 언어와 문화 등을 추가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없는 동독 이탈 주민들은 다른 외국 이주민들에 비해 노동 시장에서 환영 받았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구동독 지

역의 외국인과 난민 비율이 매우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반대 정서가 심각한 것에 대해 구동독 지역의 혁신적인 경제성장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동시에 무슬림 난민은 언어 교육이 필요하며 외형적인 차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경제 성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난민들이 경제적으로 구동독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를 앗아가지 않으며 상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론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 분할 통치를 받게 되었으며 이러한 분단은 많은 수의 동독 이탈 주민을 양산했다. 그러나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서독으로 넘어간 동독 이탈 주민들의 삶은 녹록치 않았다. 이들은 서독에 도착한 이후 지난한 과정을 통해 동독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아야만 거주 허가를 부여 받았으며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동독 난민으로 인정을 받아 거주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서독 사회가 가하는 타자화와 차별적 시선에 고스란히 노출되어야 했으며 같은 이주민 집단과도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수가 열세였던 동독 이탈 주민들은 또 한번의 타자화와 배척을 겪게 되었다(박명선, 1997; 최승완, 2011).

그러나 종전 이후 재건을 위해 노동력이 절실했던 서독 사회는 언어 등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동독 이탈 주민이 갖는 노동자로서의 가치를 인정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다. 아데나워 정부부터 시작된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수용 정책은 시간이 흘러 정부가 교체 되어도 그 기조를 이어나갔다. 정부의 수용 정책은 경제적 문제에 방점이 찍혀 있던 탓에 동독 이탈 주민이 실제 사회에 얼마나 융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했다. 이로 인해 동독 이탈 주민들은 서독 주민과 여타 이주민 집단이 가하는 이중의 타자화와 차별에 지속적으로 노출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독일이 통일 된 이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박명선, 1997; 허준영, 2012).

이처럼 분단 당시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차별로부터 시작된 동독인에 대한 서독인의 배척과 멸시는 통일 이후에도 이어졌으며 통일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구서독과 구동독 지역 간의 경제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서독 출신의 엘리트가 사회 요직에 더 차지하는 등의 이유로 동독 출신의 시민들은 독일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자리한다고 생각하며 차별 받고 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구동독 지역은 현재 무슬림에 대한 반감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반이슬람 단체인 페기다는 구동독 지역에서 시작되어 구동독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극우정당인 대안당 또한 2015년 난민사태 당시 구동독 지역에서 많은 인기를 얻으며 급격히 성장하였다(강구섭, 2020; 김승아 김면회, 2022; Bispinck, 2003;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Statistische Ämter, 2024; Weisskircher and Berntzen, 2019). 이처럼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무슬림 난민에게 가해지는 타자화는 과거와 유사하게 수직 및 수평적 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짐에 더해 보다 조직적이고 노골적인 차이점을 보인다.

본 연구는 자신들이 ‘2등 시민’이라고 불평하는 동독인들이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와 이를 조장하는 극우 정당 지지에 더 적극적인 이유에 대한 이유를 밝히기 위한 선행 연구로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과거 서독 지역에서 동독 이탈 주민에게 가했던 타자화와 현재 구동독 지역에서 무슬림 난민에 대해 행해지는 타자화 간의 교차점과 차이점을 찾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의 타자화 모두 수평적이고 수직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아가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의 경우 경제적 필요에 의해 결국 이들을 독일 사회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던 반면 현재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는 보다 더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것 또한 확인 할 수 있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두 경우 모두 수용을 목표로 하였다. 과거 서독 정부의 경우 경제적 이유에 보다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과 상이하게 난민 사태 당시 메르켈 정부는 난민 수용의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수용 정책을 펼치고자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보다 더 포용적이고 적극적인 수용 정책은 오히려 구동독 지역의 기저에 깔려 있던 반이주민, 반난민 정서에 도화선이 되어주었다. 이로 인해 반무슬림 단체인 페기다가 탄생했으며 반무슬림을 공공연히 내세우는 극우 정당인 대안당이 정치적 성공을 거두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이로써 구동독 지역에서 현재 발생하는 무슬림 난민에 대한 타자화는 과거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타자화와 달리 훨씬 더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허준영, 2012; Marton, 2021).

이로써 본 연구는 종전 이후 독일에서 발생한 타자화의 대표적 두 사례간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타자화 양상이 보다 더 치밀하고 조직적이게 되었음을 확인했다. 언어와 외모가 같은 동독 이탈 주민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다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상대적 가치를 인정 받았으나 언어와 외모 및 종교가 다른 무슬림 난민들은 이러한 차이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나아가 대안당과 페기다 모두 '무슬림 난민'만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그들은 부정적인 다양한 개념들을 무슬림 및 이슬람과 연결지음으로써 각 개념 간의 경계선을 흐리고 이를 통해 '무슬림'이라는 집단 자체를 악마화하고자 시도한다. 또한 과거 경제 성장을 이유로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견지했던 서독과 달리 현재 구동독 지역의 경제적 상황이 열악한 탓에 경제적 이유를 통해 이들을 설득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단순한 경제적 이유 혹은 인도적 이유를 통해 구동독 지역의 여론을 무슬림 난민에게 호의적으로 환기하기보다는 무슬림 난민들이 구동독 지역의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며 이들과 상생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 구동독 지역의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전망이 계속해 부정적인 가운데, 경제를 넘어서는 가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앞으로 언젠가 도래할지 모르는 남북한의 사회 통합에 대비하고자 독일의 사회를 깊이 살펴보기 위한 시작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독일 사회 이면에 나타나는 타자화의 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타자화가 만연한 세계적 흐름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며, 다가올지 모르는 그 날에 대비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발판이 되어줄 것이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강구섭. “독일통일 후 동독주민의 이등 국민 정서 고찰-통일교육을 위한 시사점.”「통일교육연구」 17(2), 2020, pp. 5-31.

김동조. “독일 미디어 속 스테레오타입과 차별에 대한 고찰-성차별 스테레오 타입과 인종차별 스테레오타입의 사례에서-” 「 유럽연구 」40(3), 2022, pp. 57-78.

김승아·김면회. “이슬람혐오증과 독일을위한대안당(AfD)의 선거전략: 2017년 총선과 2019년 주의회 선거를 중심으로”「EU연구」62, 2022, pp.155-186.

김종원. “유럽 연합과 유럽의 무슬림-독일, 영국, 프랑스를 중심으로-” 「 영 국사학회 」20, 2008. pp. 299-323.

김황식.「독일의 힘, 독일의 총리들 2」파주:21세기북스, 2023.

박명선. “기획: 동서독의 통일정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서독의 동독난민 정책과 사회통합.” 「 역사비평사 」38, 1997, pp. 239-260.

양계민·이우영. “독일통일 후 동독 출신자의 지각된 차별감과 통일에 대한 태도.” 「 현대북한연구 」24(3), 2021, pp. 143-182.

이일환. “트럼프 시대/브렉시트 현상과 ‘타자화’(othering).”「머니투데이」(2017.2.8)

조희선.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의 이주와 정착 및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 이주 무슬림과의 비교를 위하여.” 「 한국중동학회논총 」31(1), 2010, pp. 105-149.

최승완. “동독 이탈 주민에서 서독 시민으로-1950년대 서독의 탈동독민 통합 정책-” 「이화사학연구」46, 2011, pp. 457-500.

허준영.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 한국행정학보 」 46(1), 2012, pp. 265-287.

Marton, Katie 저. 윤철희 역. 「 메르켈 리더십-합의에 이르는 힘 」 서울: 모비딕 북스, 2021.

[외국어 자료]

Bannister, Miranda. “Jewish Badges During the Holocuast: The Othering of Jews Across Nazi Europe.”(Nov. 23, 2021).

https://mjhnyc.org/blog/jewish-badges-during-the-holocaust-the

-othering-of-jews-across-nazi-europe/(검색일: 2024. 10. 22)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2023-Asyl,. Migration und Integration. Nürnberg: BAMF, 2024.

Bellinger, Charles, K. Othering: The Original Sin of Humanity. Oregon: Cascade Books(2020).

Benz, Wolfgang. Stereotype des Ost-West-Gegensatzes,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bpb. 13.01.2006.

_____. “Angst vor Muslimen als Gefahr für unsere Demokratie.” Antimuslimishcer Rassismus und Islamfeindlichkeit. Osnabrück: V&R unipress, 2019, pp. 141-148.

Bispinck, Henrik. “”Republikflucht“: Flcuth und Ausreise als Problem für die DDR-Führung.” Vor dem Mauerbau: Politik und Gesellschaft in der DDR der fünfziger Jahre, edited by Dierk Hoffmann, Michael Schwartz and Hermann Wentker. Berlin, Boston: Oldenbourg Wissenschaftsverlag, 2003, pp. 285-310.

Bundesagentur für Arbeit. Arbeitslose nach Rechtskreisen(Monatstzahlen). Nürnberg: Bundesagentur für Arbeit, 2024.

Destatis. “Bevölkerung, Erwerbstätige, Erwerbslose, Erwerbspersonen, Nichterwerbspersonen aus Hauptwohnsitzhaushalten: Bundesländer, Jahre, Geschlecht, Altersgruppen.” 2024a.

_____. “Ausländische Bevölkerung nach Bundesländern.”(2. Mai 2024). 2024b.

Deutsche Bundesbank. Monatsbericht(April 2023), No. 42.

Eubel, Cordula. “Westdeutsche pflegen ähnliche Klischees über Ostdeutscheund Muslime.”Tagesspiegel(02.04.2019).

Geschichtswerkstatt Uelzen. e.V. Das Notaufnahmegesetz 1950. https://uelzen-bohldamm.de/das-notaufnahmegesetz-1950/#Konflikt

e_zwischen_CDU_und_SPD (검색일: 2024. 10. 20)

Hafez, Kai und Carola Richter. Das Gewalt- und Konfliktbild des Eslams bei ARD und ZDF. Erfurt: Universität Erfurt, 2007.

Heidemeyer, Helge. Flucht und Zuwanderung aus der SBZ/DDR 1945/49-1961. Düsseldorf: Droste, 1994.

_____. “Flucht und Zuwanderung aus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und der DDR in die Bundesrepublik.” Migration und Intergration in Deutschland nach 1945, Oldenburg: De Gruyter, 2019.

Oztig, Lacin Idil. “Islamophobic Discourse of European Right-Wing Parties: A Narrative Policy Analysis.” Social Currents, Vol. 0, No. 0, 2022, pp. 1-20.

Packroff, Jonathan. “Germany’s reunification, 33 years on: East-West divide persists.” Euractiv(2023.9.29).

Pollack, Detlef. “Support for Democracy in Eastern and Western Germany: an Attempt to Explain the Differences.” Archiv european sociology. Vol. 26, No. 2, 2004, pp. 257-272.

Rädel, Jonas. “Two Paradigmatic Views on Right-Wing Populism in East Germany.” German Politics and Society, Vol.37, No.4, Winter 2019, pp. 29-42.

Rosellini, Jay Julian. The German New Right. London: Hurst&Company, 2019.

Schmelz, Andrea. “Die West-Ost-Migration aus der Bundesrepublik in die DDR 1949-1961.” Archiv für Sozialgeschichte, Vol. 42, 2002, pp.19-54.

Schneiders, Thorsten Gerald. “Islam, Islamfeindlichkeit und die Unionspartei.” Islamophobie und Antisemitismus-ein umstrittener Vergleich. Berlin/Boston: de Gruyer, 2012, pp. 143-168.

Statistische Ämter. “Bruttoinlandsprodukt, Bruttowertschöpfung.”(Di,, 24 Sep 2024).

Traverso, Enzo. The New Faces fo Fascism: Populism and the Far-Right. London: Verso(2019).

Walz, Dieter. and Wolfgang Brunner. “Das Sein bestimmt das Bewußtsein. Oder: Warum sich die Ost-deutschen als Bürger 2. Klasse fühlen-”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12.12.1997).

https://www.bpb.de/shop/zeitschriften/apuz/archiv/538339/das-sein-bestimmt-das-bewusstsein-oder-warum-sich-die-ostdeutschen-als-buerger-2-klasse-fuehlen/(검색일: 2024년 11월 22일)

Weisskircher, Manès and Lars Erik Berntzen. “Remaining on the Streets: Anti-Islamic PEGIDA mobilization and its relationship to far-right party politics.” Radical Right Movement Parties in Europe, edited by. Manuela Caiani and Ondřej Císař. Oxon: Routledge, 2019.

[인터넷 자료]

https://www.wahlrecht.de/umfragen/(검색일: 2024. 10.16)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sachsen-2024.html(검색일:2024년 11월 14일)

https://www.wahlrecht.de/news/2024/landtagswahl-thueringen-2024.html(검색일: 2024년 11월 14일)

https://www.destatis.de/DE/Themen/Querschnitt/Demografischer-Wandel/Aspekte/demografie-wanderungen.html (검색일: 2024년 11월 27일)

발표2. 김효진(한국외대)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분석: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 분석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김효진(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saebom1026@naver.com)

요약

지정학적 갈등,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아프가니스탄, 러시아, 중국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이들 국가에서 발생하는 난민 및 이주 문제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의 이주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주요 난민 경유지이자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국제적 난민 보호 기준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1951년 난민 협약과 같은 국제 협약을 전면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난민 지위 부여 절차의 비효율성,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의 부재가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세 국가를 중심으로 제도적 대응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난민 지위 인정 절차는 마련되어 있으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법적 틀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지원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난민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난민 보호 체계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주 및 난민 문제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각국의 난민 지위 인정 절차,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 지원, 국제 기구와의 협력 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의 정책적 강점과 약점을 도출하고,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핵심 단어: 중앙아시아 난민 제도, 난민 지위 부여 절차, 경제적 통합, 국제 협약 이행

I. 서론

국제 난민 문제는 최근 지정학적 갈등, 기후 변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정권 교체는 중앙아시아로의 난민 유입을 가속화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정학적 위치와 역사적 맥락상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난민 정책은 국제 사회의 충분한 주목을 받지 못했다.[1]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은 각각의 경제 · 사회적 맥락에 따라 상이한 난민 정책을 채택하고 있어, 이들 국가들의 정책적 특징과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국제 난민 보호 체계는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같은 국제지구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 협약에 대해 제한적 이행 또는 부분적 준수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에 대해 비교적 유연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식 난민 지위 부여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난민 지위 결정 절차가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어서, 난민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이후 유입된 러시아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도 국가별로 상이하다.[2] 이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그리고 이들이 국제 난민 보호 체계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비교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중앙아시아의 난민 문제는 경제적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지역은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적 불안정이 상존하고 있으며, 난민의 경제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제한적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난민들이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경우, 난민들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접근에 제약을 받으며, 이로 인해 장기적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민 보호와 통합을 위한 국제기구의 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각국의 행정적·법적 구조가 미비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정책을 국제 기준과 비교하여 각국의 정책적 특징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난민 정책을 비교 연구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을 탐구하고자 한다. 첫째, 이들 국가들의 난민 정책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둘째, 각국의 난민 지위 부여 절차와 사회적 통합 수준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셋째, UNHCR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각국의 국제적 난민 보호 기여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넷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비교 연구 방법을 통해 각국의 난민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적 차이와 공통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2장에서는 이론적 틀과 연구 방법을 다루며, 국제 난민 보호 체계와 관련된 개념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난민 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며, 4장에서는 이들 국가 간의 정책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과 문제점을 도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난민 보호 체계 내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필요한 변

1) Migration Data Portal, “Migration data in Central Asia”,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regional-data-overview/central-asia (검색일: 2024.10.18.).
2) Khashimov, Sher, et al. "Introducing the Central Asia migration tracker." The Oxus Society, December (2020), p.14.

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적 공백을 메우고, 중앙아시아와 국제 사회 간의 협력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선행연구 검토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및 이주 정책의 발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에서 난민 및 이주 정책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볼 것이며, 특히 소련 붕괴 이후 각국의 정치·경제적 배경 속에서 난민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이주 및 난민 정책에 대한 최신 데이터를 다룬 자료인 Introducing the Central Asia Migration Tracker 보고서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이주 동향을 다루고 있다. 이 자료는 특히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한 이주민의 이동을 분석하며,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배경에 따라 난민 및 이주민 유입과 유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과 사회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순 이주율이 여전히 부정적이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주요 이주 목적지로 삼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91%의 이주민이 러시아로 이동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성, 사회적 보호 시스템의 미비, 부패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3)]

한편, 카자흐스탄은 인도적 체류 허가 제도를 통해 난민을 수용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이 주요 이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로의 노동 이주가 두드러진다. 2019년 기준으로 키르기스스탄의 노동 이주는 약 28%의 GDP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에 대한 보호 시스템과 인프라가 미흡하여, 많은 이주민들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4)] 이 자료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난민 및 이주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며, 국제 기준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정책적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Amangeldy Shapievich와 Zhanna Amangeldinovna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및 이주 정책은 소련 붕괴 이후 독립한 각국이 국제법적 틀 안에서 자체적인 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전해 왔다.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중앙아시아 국가들 대부분이 가입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를 통해 난민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여전히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5)]각국은 난민 지위를 정의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법률을 도입했으나, 실제 난민 보호 시스템은 국가마다 차이가 크며, 국제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의 난민 및 이주 정책은 경제적 불안정성, 정치적 변동서으 그리고 미흡한 행정적 역량으로 인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되는 난민

3) Khashimov, Sher, et al., op. cit., pp. 13-14.
4) Khashimov, Sher, et al., op. cit., pp. 7-8.
5) Khamzin, Amangeldy Shapievich, et al.,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exercising refugees' rights in Central Asia."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7(4), 2016, pp. 836-837.

들이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이 지역에서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약 4,500명 이상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도 난민 보호와 관련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했으나, 실제 난민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6]

1.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은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하여 국제적 난민 보호 체계의 의무를 수용한 국가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을 구축했다. 이러한 법적 틀은 1998년 제정된 난민법으로 더욱 체계화되었으며, 난민의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7] 그러나 법적 틀을 마련했다고 해서 현실에서 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 정책 실행 과정에서 법적 틀이 가진 한계는 난민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를 남기고 있다. 특히, 법적 체계와 현실 간의 괴리는 난민 지위 부여 절차, 사회적 통합, 의료 접근성 및 경제적 자립에서 명확히 드러난다.[8]

카자흐스탄의 난민 정책은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난민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난민 지위 부여 절차의 복잡성과 제한성이다. 난민 지위는 단순한 법적 신분을 넘어 난민들에게 체류 안정성과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난민 지위 부여 절차는 국제 기준과 상당한 괴리가 있으며,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제한적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보다는 '인도적 체류 허가'와 같은 임시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다.[9] 이러한 조치는 난민들에게 단기적인 체류를 허용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10]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난민들이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비공식 경제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 조건과 법적 보호의 부재로 인해 착취와 차별에 취약하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성은 난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합법적인 주거권이나 공공 서비스 접근을 보장받지 못하며,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11] 이는 난민들의 생활 수준을 악화시키고, 그들이 사회에 통합될 가능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카자흐스탄에서 난민들이 겪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통합의 부재이다. 난민들이 사회의 일부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난민들은 의료,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 접근하는 데 있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12] 난민 아동들은 공교육 시스템에 등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

6) Khamzin, Amangeldy Shapievich, et al., op. cit., p. 838.
7) Delovarova, L. F., “MIGRATION POLICY OF KAZAKHSTAN: OVERVIEW OF EXTERNAL V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national Law Journal/Seriâ Meždunarodnye Otnošeniâ & Meždunarodnoe Pravo, 105(1), 2024, pp.52-53.
8) Proń, Elżbieta, “Tokayev’s approach to Kazakh asylum seekers from China: an assessment and foreign policy implications.”, Asian Affairs 52(4), 2021, pp.880-882.
9) Proń, Elżbieta, op.cit., pp. 885-886.
10) Oka, Natsuko. “A note on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changing priorities and a growing dilemma.”, IDE Discussion Paper, 394, 2013, pp. 78-79.
11) Druke, Louise, “Capacity and Institution Building in the CIS in Refuge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with Emphasis o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Revue québécoise de droit international, 13(2), 2000, pp. 121-123.
12) Druke, Louise, op.cit., pp. 885-886.

언어 장벽과 법적 지위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교육 접근성의 부족은 난민 아동들이 장기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게 하며, 이는 결국 그들의 사회적 이동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난민 가정에서 태어난 많은 아동들이 초등학교에조차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 교육 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다.[13] 이와 같은 교육 접근성의 부족은 난민 아동뿐만 아니라, 성인 난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수단이며, 난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난민들이 언어 교육이나 기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제적 자립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는 난민들이 안정적인 고용을 얻지 못하고, 비공식 경제에 의존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14] 이로 인해 난민들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도 더욱 낮아지게 된다.

난민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도 여전히 높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난민들은 공공 의료 서비스에서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만성 질환이나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문제를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특히 여성과 아동 난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15] 예를 들어, 출산과 관련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여성 난민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출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16] 이러한 상황은 난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잘 보여주며, 난민 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의료 서비스 부족 문제는 난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며,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아동 난민의 경우, 예방 접종이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장기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카자흐스탄의 난민 및 이주민 정책에 또 다른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전쟁 이후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며,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형태의 난민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러시아 출신 이주민들을 난민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임시 체류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17] 이주민들은 비교적 높은 교육 수준과 자원을 가진 경우가 많아 초기 적응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만, 이들 역시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사회적 배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난민 문제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특히 난민과 이주민 간의 정책적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18] 이러한 변화는 카자흐스탄이 난민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

13) Kassen, Maxat, “Understanding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Kazakhstan: a case study of the landlocked and transcontinental countr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1(3-4), 2018, pp.328-329.
14) Bokayev, B., Ismailova, R., & Torebekova, Z, “Affecting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through a Multi-Faceted Policy: Kazakhstan within Central Asia and the EAEU”, Studia Politica: Romani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2), 2020, pp.232-233.
15) Ryazantsev, Sergey, “KAZAKHSTAN TODAY: MIGRATION--TRENDS AND REGULATION APPROACHES.”, Central Asia & the Caucasus (14046091) 17(2), 2016, pp.65-66.
16) Ryazantsev, Sergey, op.cit., p.50.
17) Bazarbekov, T. R., A. B. Sarsembayev, and N. B. Zhumzhayeva, “Kazakhstan's management of migration: Adapting to new circumstances”, BS thesis. International School of Economics Maqsut Narikbayev University, Astana, 2024, pp.29-30.
18) Bazarbekov, T. R., A. B. Sarsembayev, and N. B. Zhumzhayeva, op.cit., p.33.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은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넘어 국가 사회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현재 카자흐스탄의 난민 통합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난민들은 주로 비공식 노동 시장에 종사하고 있다.[19] 이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이어져 난민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난민 아동들이 교육을 포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난민들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소외를 경험하게 되며, 이는 지역 사회 내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투자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난민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구조에 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들에게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공식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난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소규모 창업 지원 및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난민 정책은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난민 지위 부여 절차의 제한성과 사회적 통합 지원 부족은 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국가 사회의 장기적인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20] 난민 문제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카자흐스탄이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난민 보호 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원과 행정적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난민들의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카자흐스탄은 국제 사회에서 난민 보호의 모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정책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적인 인도적 기구와 협력을 강화하고,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지역 사회의 이해와 수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2.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정책은 국제 협약 준수를 기반으로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난민 지위 부여의 복잡한 절차와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은 난민들이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그리고 행정적 역량의 제약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은 여전히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복잡성을 동반한다.

---

19) Khamzin, Amangeldy Shapievich, et al., op. cit., p. 850.

20) Werner, Cynthia Ann, Celia Emmelhainz, and Holly Barcus, “Privileged exclusion in post-soviet Kazakhstan: Ethnic return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not) belonging.”, Europe-Asia Studies 69(10), 2017, pp.1561-1562.

난민 신청자들은 종종 반복적인 서류 제출과 비효율적인 행정 절차에 직면하며, 이는 많은 난민이 체계 밖으로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한 경우, 이들은 불법 체류자로 간주될 위험에 처하며, 공식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지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21] 난민 지위 부여의 행정적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디지털화를 통해 서류 제출과 검토 과정을 간소화하고, 신청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기술 기반의 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난민 지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키르기스스탄에서도 참조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2022년 키르기스-타지크 국경 충돌은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정책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약 14만 명의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면서, 기존 난민 지원 시스템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중시켰다. 이들은 난민들과 동일한 자원을 공유해야 했으며, 이는 난민과 실향민 모두의 지원 수준을 저하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키르기스스탄이 현재의 난민 보호 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22] 특히, 국내 실향민과 난민은 각기 다른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지만,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는 매우 유사하다. 이로 인해 난민 보호 시스템은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국경 충돌 이후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실향민을 위한 임시 주거 시설과 식량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기존 난민들에게 제공되던 의료 서비스와 교육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난민 정책이 비상 상황에서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대부분은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공식 노동 시장은 불안정한 고용 조건과 낮은 임금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난민들이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23] 특히 여성 난민들은 가사 노동이나 비공식 서비스 업종에 집중되어 있어, 착취와 차별에 더욱 취약하다.[24] 이와 함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 현실은 난민들이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방해한다. 난민들이 공식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기술 훈련, 고용 관련 법적 장벽 제거와 같은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25] 예를 들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난민들에게 직업 훈련과 고용 연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다.

교육은 사회적 통합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 난민 아동들에게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러나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아동들은 언어 장벽, 법적 지위 문제, 그리고 제한된 교육 자원으로 인해 공교육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학업 성취를 방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난민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교사의 부족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네스코(UNESCO)의 연구에 따르면, 공교육에 접근하지 못하는 난민 아동들은 평생 동안 경제적 자립 가능성이 낮아지며, 이는 결과적으로 빈곤

21) Orchard, Cynthia, “The Almaty Process: Improv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28(1), 2016, pp. 65-66.
22) Orchard, Cynthia, et al., op. cit., pp. 82-83.
23) Aynura, Elebaeva, “Migration policy of the Kyrgyz republic toda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4(4), 2013, pp. 61-62.
24) Orchard, Cynthia, et al., op. cit., pp. 68-69.
25) Omelicheva, Mariya Y,“Convergence of counterterrorism policies: A case study of Kyrgyzstan and Central Asia.”,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32(10), 2009, pp. 895-896.

의 대물림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난민 아동들에게 무료 교육과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이들의 통합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된다. 키르기스스탄의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난민들이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으며, 이는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난민과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난민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은 국제 협약 이행과 난민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난민 지위 부여, 경제적 통합, 교육 접근성 부족과 같은 현실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 지원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키르기스스탄은 이를 통해 난민 보호의 모범 사례를 제공하며, 국제 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3.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의 난민 정책은 1994년 1951년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 의무를 수용한 체계 위에 구축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안보와 경제적 제약을 고려한 정책 운영은 종종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약 600명의 난민이 타지키스탄에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다. 타지키스탄은 UNHCR과 협력하여 난민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과 정책적 한계는 여전히 주요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타지키스탄에서 난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는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난민 신청자들은 서류 제출, 심층 인터뷰, 추가 검토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법적 지원과 행정적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다.[26] 특히,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행정 요구사항은 난민들의 권리 실현을 어렵게 만든다. 난민 지위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난민들은 비공식 체류자로 간주되며, 이는 그들의 생계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27] 합법적인 경제활동이나 공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은 난민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며, 이들이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상황은 타지키스탄의 난민 정책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타지키스탄의 국경 정책은 난민 보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 지역은 난민 유입의 주요 통로로 기능하지만, 타지키스탄 정부는 안보 위협과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국경 폐쇄와 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28] 이러한 정책은 난민 보호라는 국제적 의무와 국내 안보 우선 정책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는 사례로 볼 수 있다.[29] 국경 폐쇄는 난민들이 타지키스탄에 합법적으

---

26) Kluczewska, Karolina, and Oleg Korneev, “Engaging with labour migrants: Emigration policy in Tajikistan.”, Asian Studies Review 46(1), 2022, pp. 135-137.
27) Kluczewska, Karolina, and Oleg Korneev, op. cit., pp. 140-141.
28) Schutt, Meredith, “Trapped in the Margins: Russia,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the Story of Afghan Refugees in Tajikistan.”, 2023, pp. 52-53.
29) Schutt, Meredith, op. cit., p. 60.

로 입국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는 난민들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입국하거나, 다른 국가로 떠나도록 강요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들이 인신매매, 착취와 같은 2차적 위험에 노출되는 원인이 되며, 타지키스탄이 국제 인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화한다.

타지키스탄의 난민 정책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난민들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는 데 있어 부족한 점이다. 난민들은 대부분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며, 이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농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난민들은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의료 혜택이나 퇴직금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된다.

특히, 여성 난민들은 가사 노동과 같은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경제적 자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난민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이나 창업 지원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부족한 상황에서, 난민들은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30] 이는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난민의 의료와 교육 서비스 접근은 타지키스탄에서 여전히 큰 도전 과제다. 난민들은 공식적인 의료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비공식 의료 서비스에 의존해야 하며, 이는 기본적인 건강 관리조차 보장받기 어렵게 만든다. 교육 서비스의 경우, 난민 아동들은 언어 장벽과 법적 지위 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 접근성의 부족은 단기적으로는 난민 아동의 학업 성취를 제한하며,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 난민 아동이 공교육 시스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과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난민들이 타지키스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타지키스탄의 현재 난민 정책은 국제 협약에 기초한 난민 보호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책 실행에서 다수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복잡한 난민 지위 부여 절차, 국경 폐쇄로 인한 유입 제한, 경제적 통합의 부족은 타지키스탄이 국제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한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국제적 협력을 더욱 확대하여 장기적인 난민 보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타지키스탄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난민 보호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Ⅲ. 중앙아시아의 국제 난민 보호 참여와 협력 수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난민 보호 정책은 국제 협약의 틀 안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경제적 여건, 정치적 환경, 행정적 역량 등 각국의 특성에 따라 실행 수준과 협력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은 공통적으로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 참여하고 있지만, 각국의 대응은 그들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이 직면한 난민 문제의 복합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1. 카자흐스탄

30) Olimov, Mouzaffar, “The policy of Russia in Central Asia: a perspective from Tajikistan.”, Russia and Asia: the emerging security agenda, 1999, pp.110-122.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국가로서, 국제 난민 보호 체계 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UNHCR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지만, 난민 보호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의 국제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난민 보호 정책이 국제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의 난민 보호 체계는 1998년 제정된 난민법을 기초로 한다. 이 법은 난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만, 난민 지위 부여 과정에서 국제 기준과의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31] 특히,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는 대신, 인도적 체류 허가와 같은 임시적 조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32] 이러한 접근은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지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한계를 드러내며, 이로 인해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 또한 제한받고 있다.[33] 법적 프레임워크의 한계는 난민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의 접근이 제한되며, 이는 난민들이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러한 문제는 카자흐스탄이 난민 보호와 관련된 국제 협약의 원칙을 더 철저히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34]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잠재력은 난민의 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난민들은 여전히 경제적 불안정에 처해 있으며, 이는 정책적 지원 부족과 행정적 장벽 때문인 경우가 많다.[35] 예를 들어, 난민들은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저임금 비공식 직업에 종사하거나 경제적 착취에 노출되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36]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UNHCR과 세계은행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협력하여 난민들이 공식적인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 훈련 및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은 난민 보호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상황에서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카자흐스탄이 경제적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난민 통합 프로그램의 실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카자흐스탄은 러시아로부터 대규모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 난민 정책과 이주 정책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주민의 유입은 난민 보호 체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며, 기존 난민과 신규 이주민 간의 자원 경쟁과 행정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37]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주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임시 체류 허가를 통해 관리하고 있

---

31) UNHCR Central Asia, “Kazakhstan Ministry of Labor and UNHCR strengthen capacity to protect refugees”, https://www.unhcr.org/centralasia/en/22829-kazakhstan-ministry-of-labor-and-unhcr-strengthen-capacity-to-protect-refugees.html (검색일: 2024.12.1.).

32) Ibid.

33) UNHCR, November 2023,“Strategy 2023-2025 for Kazakhstan Multi-Country Office”, 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files/2024-09/Kazakhstan%20Multi-Country%20Office-strategy-2024.pdf (검색일: 2024.12.1.)

34) UNHCR, March 2024,“Kazakhstan: Factsheet”, https://www.unhcr.org/centralasia/wp-content/uploads/sites/75/2024/03/Factsheet-National-Office-Kazakhstan-EN-2024.pdf (검색일: 2024.12.1.)

35) Ibid.

36) Ibid.

37) UNHCR, May 2023,“Annual Results Report: Central Asia”, https://reporting.unhcr.org/files/2023-06/1%20Asia%20-%20Kazakhstan%20Multi%20Country.pdf (검색일: 2024.12.1.)

으며, 이로 인해 난민과 이주민이 서로 다른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원에서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과 이주민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UNHCR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민 보호와 이주 정책 간의 조화를 이루는 포괄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난민과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은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또 다른 과제다. 난민들은 법적 지위 부족과 경제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의 차별과 배제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 주민들은 종종 난민이 자원을 소비하며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인식하며,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강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와 UNHCR은 지역 사회 내 난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38] 특히, 지역 사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는 난민들이 지역 경제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난민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선 장기적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인도적 체류 허가와 같은 임시적 조치는 난민들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와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카자흐스탄은 난민들에게 영구적 거주권을 부여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난민 아동에게는 언어 교육과 학교 통합 프로그램을, 성인 난민에게는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난민들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국제 난민 보호 체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정책적 실행력과 장기적 전략 부재는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적 강점을 바탕으로 난민 보호와 통합의 모범 사례를 제공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적 접근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UNHCR과의 협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며, 카자흐스탄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정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난민의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카자흐스탄은 난민 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경제적 자원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협약 이행과 난민 보호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며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UNHCR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무국적자 문제 해결, 국내 실향민 지원, 그리고 난민 통합 정책에서의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이러한 성과는 여전히 다양한 한계를 동반하고 있다.[39] 본 장에서는 키르기스스탄의 국제 협력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도전 과제 및 개선 방향을 분석한다.

UNHCR과의 협력을 통해 키르기스스탄은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서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2014년 시작된 #IBelong 캠페인을 통해 약 54,000명의 무국적자가 국

38) Ibid.
39) UNHCR, October 2024,“Global Action Plan to End Statelessness 2.0”, https://www.refworld.org/policy/strategy/unhcr/2024/en/148761 (검색일: 2024.11.30.)

적을 획득할 수 있었다.[40] 이 성과는 법적 지위가 없는 개인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여전히 농촌 지역에서는 출생 등록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새로운 무국적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생 등록 의무화를 강화하고, 행정적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41] 이러한 노력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무국적자 문제는 단기적 해결을 넘어 근본적 예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2년 키르기스-타지크 국경 분쟁은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보호 체계와 실향민 대응 역량을 시험한 주요 사건이었다. 분쟁으로 인해 발생한 약 14만 명의 실향민은 임시 거주 시설에서 긴급 지원을 받았으나, 장기적인 정착 지원과 재건 프로그램은 미흡한 상황이다.[42] UNHCR은 긴급 구호를 위해 식량, 의약품, 그리고 임시 주거 시설을 제공하며 분쟁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러한 지원은 주로 단기적 성격에 머물렀다. 국경 분쟁으로 인해 실향민과 난민 모두가 동일한 지원 체계를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는 한정된 자원과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43]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실향민과 난민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장기적인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독립적 자원을 활용한 국내 대응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난민의 경제적 통합은 키르기스스탄 난민 정책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난민이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며, 이는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조건, 그리고 경제적 착취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성 난민들은 경제적 자립 기회를 찾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단위의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UNHCR과 협력하여 직업 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지만, 이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에게 소규모 대출을 제공하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44]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활용하면서도, 국내 차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통합은 난민 보호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난민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현재 키르기스스탄에서는 일부 지역 주민들이 난민을 공공 자원을 소비하는 존재로 인식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45] 이는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초래하며, 난민들의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UNHCR은 공동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협력을 증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난민들이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난민들이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40) Ibid.
41) Ibid.
42) UNHCR, December 2021,“UNHCR Kyrgyzstan FACT SHEET”, https://reporting.unhcr.org/kyrgyzstan-factsheet-1913 (검색일: 2024.11.30.)
43) Ibid.
44)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pril 2021, “Digital Refugee Livelihoods and Decent Work - Towards inclusion in a fairer digital economy”, https://www.ilo.org/meetings-and-events/launch-ilo-report-digital-refugee-livelihoods-and-decent-work-towards (검색일: 12.2.)
45) Ibid.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UNHCR은 키르기스스탄의 난민 보호 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키르기스스탄의 국제적 지원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난민 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국제 협력과 독립적 정책 개발 간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키르기스스탄은 자체적인 난민 지원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 기반의 난민 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활용하여 재정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난민 보호 정책의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키르기스스탄이 단순히 국제적 지원을 받는 수혜국을 넘어, 책임 있는 난민 보호 국가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르기스스탄은 국제 협약 이행과 UNHCR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와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어냈다. 그러나 경제적 통합의 부족, 사회적 통합의 어려움, 그리고 독립적인 난민 정책의 부재는 여전히 중요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국제 협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자원을 활용하여 난민 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하며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키르기스스탄이 난민 보호와 국제 협력의 선도적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타지키스탄

타지키스탄은 UNHCR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 체계 강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국적자 문제 해결과 난민 지원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제약, 그리고 안보 우선의 정책은 난민 보호 체계의 국제 기준 충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장에서는 타지키스탄의 난민 보호 체계 및 국제 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보다 심화하여 논의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타지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간의 긴 국경은 난민 유입의 주요 경로로 작용하며, 이는 타지키스탄의 국경 관리 정책이 난민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부각시킨다.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경 안보를 이유로 난민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는 난민 보호 체계가 안보 정책에 의해 제약받고 있음을 보여준다.[46] 국경 폐쇄와 제한적 비자 정책은 난민들의 합법적 입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며, 많은 난민들이 비공식 경로를 선택하도록 강요받는다. 이는 난민들이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기타 인권 침해와 같은 2차적 위험에 노출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종종 고위험 지역을 통과해야 하며, 이에 따라 난민들이 생존과 보호를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다.[47]

UNHCR은 타지키스탄 정부와 협력하여 국경 지역에 난민 수용소와 일시 거주 시설을 설치하고 긴급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의 장기적 관리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은 국경 안보와 난민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타지키스탄은 UNHCR의 지원을 통해 약 58,000명의 무국적자를 등록하고, 그중 54,000명에게 국적을 부여하며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법적 지위가 없던 수많은 개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통합과 기본 권리 접근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출생 등록 제도의 부재는 무국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

46) UNHCR, June 2023,“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22”, https://www.unhcr.org/sites/default/files/2023-06/global-trends-report-2022.pdf (검색일: 2024.11.28.)
47) Ibid.

다. 농촌 지역과 같이 행정적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많은 아동들이 출생 시점에 법적 신분을 획득하지 못하며, 이는 새로운 무국적자 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48]

타지키스탄 정부는 출생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프로젝트와 인식 제고 캠페인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들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49]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개선과 더불어, 모든 출생을 기록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행정적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난민의 경제적 통합은 타지키스탄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다. 현재 난민들은 대부분 비공식 노동 시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을 동반한다. 특히 여성 난민들은 제한된 고용 기회와 취약한 노동 환경으로 인해 경제적 자립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UNHCR은 타지키스탄에서 난민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 창업 지원, 그리고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타지키스탄의 경제적 제약과 행정적 역량 부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난민들이 공식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관계는 난민 통합의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타지키스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난민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50] 특히 국경 지역에서 자원의 제약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UNHCR은 지역 사회와 난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업 기반 협력 프로젝트는 난민과 지역 주민이 함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난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동시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난민과의 협력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타지키스탄은 난민 보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발전시키기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의 국경 중심적 정책과 국제 지원 의존 구조는 난민 보호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51] 이를 해결하기 위해 타지키스탄 정부는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자원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난민 보호 및 통합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난민들의 장기적 거주권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난민 보호 체계의 안정성을 높이고, 난민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타지키스탄은 UNHCR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와 무국적자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경 관리와 경제적 제약은 난민 보호 체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개선과 장기적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타지키스탄은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난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48) Toktomushev, Kemel,“Understanding cross-border conflict in post-Soviet Central Asia.”, Connections 17(1), 2018, pp. 32-33.
49) Fryer, Paul, Joni Virkkunen, and Furugzod Usmonov, “What kind of choice?: Understanding migration in Tajikistan.”, The EU's Eastern Neighbourhood. Routledge, 2016, pp.186-188.
50) Fryer, Paul, Joni Virkkunen, and Furugzod Usmonov, op. cit., p. 190.
51) Jonson, Lena, “Tajikistan in the new Central Asia.”, Tajikistan in the New Central Asia, 2006, pp.103-105.

타지키스탄은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난민 보호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 중앙아시아의 국제 난민 보호 참여와 협력 수준〉

항목	내용
중앙아시아 국가의 참여 현황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난민 보호 참여 현황 분석
각국의 난민 정책 특징	카자흐스탄: 난민 지위 부여 절차 복잡성, 인도적 체류 허가 우선
	키르기스스탄: 법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 지원과 인프라 부족
협력 수준	타지키스탄: 난민 지위 부여 절차 비효율성, 국경 통제 강화
	UNHCR 등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각국의 난민 보호 기여 평가
한계점	국가별 정책 차이 및 국제 기준 이행 격차 명확히 서술 부족

Ⅳ. 결론

중앙아시아의 난민 문제는 지정학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현상으로, 이 지역의 각 국가가 난민 보호와 통합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지는 국제 사회에서 점점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세 주요 국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을 중심으로 난민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한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국가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난민 지위 부여 절차와 경제적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각국의 정책적 한계를 밝혀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법적 프레임워크는 비교적 정비되어 있으나,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임시 체류 허가와 같은 제한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비해 키르기스스탄은 국제 협약 준수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UNHCR과 협력하여 난민 보호 체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과 행정적 역량의 한계로 인해 난민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타지키스탄은 국경 지역에서의 난민 유입을 강력히 통제하는 정책을 통해 안보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이는 난민 보호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 세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는 난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은 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 내에서 갈등을 유발하거나, 국가 경제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난민 보호와 통합은 단순히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안정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난민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을 위해 세 가지 주요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행정적 투명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난민 지위 부여 절차는 간소화되고 투명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화된 관리 시스템의 도입과 독립적인 심사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둘째, 경제적 자립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난민들이 공식 노동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직업 훈련, 소규모 대출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이 지역 경

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통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난민과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와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은 갈등을 줄이고, 난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난민 보호와 이주 문제에 있어 국제적 협력의 중심지로 부상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의 국가들은 UNHCR 및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난민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은 경제적 강점을 기반으로 난민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위한 선도적인 모델을 구축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 정책의 실행력이 부족하여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무국적자 문제 해결과 같은 일부 분야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사례를 제공한다. 타지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을 통한 난민 유입이라는 독특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경 관리와 난민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국제 난민 보호 체계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전체 국가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통찰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난민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질적 연구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을 평가하는 실증 연구가 병행될 때, 난민 보호와 통합 정책의 효과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의 난민 문제는 단순히 지역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글로벌 도전 과제이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난민 보호 체계의 법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아시아 지역이 국제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A Di Bartolomeo, S Makaryan, A Weinar. “Regional Migration Report: Russia and Central Asia.”,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2014).

AS Khamzin, ZA Khamzina, et al., “International legal aspects of exercising refugees’ rights in Central Asia.”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Law and Economics, Vol. 7, Iss. 4, (2016).

AV Korobkov. “Migration trends in Central Eurasia: Politics versus economics.”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Vol. 40, Iss. 2, (2007).

B. Bokayev, R. Ismailova, & Z. Torebekova. “Affecting International Migration Trends through a Multi-Faceted Policy: Kazakhstan within Central Asia and the EAEU”, Studia Politica: Romani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2), (2020).

Cynthia Ann Werner, Celia Emmelhainz, and Holly Barcus, “Privileged exclusion in post-soviet Kazakhstan: Ethnic return migration, citizenship, and the politics of (not) belonging.”, Europe-Asia Studies 69(10), (2017).

Cynthia Orchard. “The Almaty Process: Improv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refugee law in Central Asia.”, International Journal of Refugee Law, 28(1), (2016).

Elebaeva Aynura. “Migration policy of the Kyrgyz republic today.”,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14(4), (2013).

Elżbieta Proń. “Tokayev’s approach to Kazakh asylum seekers from China: an assessment and foreign policy implications.”, Asian Affairs 52(4), (2021).

Karolina Kluczewska, Oleg Korneev. “Engaging with labour migrants: Emigration policy in Tajikistan.”, Asian Studies Review 46(1), (2022).

Kemel Toktomushev.“Understanding cross-border conflict in post-Soviet Central Asia.”, Connections 17(1), (2018).

L. F Delovarova. “MIGRATION POLICY OF KAZAKHSTAN: OVERVIEW OF EXTERNAL VECTOR.”, International Relations & International Law Journal/Seria Meždunarodnye Otnošenia & Meždunarodnoe Pravo, 105(1), (2024).

Lena Jonson. “Tajikistan in the new Central Asia.”, Tajikistan in the New Central Asia, (2006).

Louise Druke. “Capacity and Institution Building in the CIS in Refugee and Human Rights Protection with Emphasis on Central Asia and Kazakhstan.”, Revue quebecoise de droit international, 13(2), (2000).

Maxat Kassen.“Understanding foreign policy strategies of Kazakhstan: a case study of the landlocked and transcontinental country.”, Cambridge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31(3-4), (2018).

Meredith Schutt. “Trapped in the Margins: Russia,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and the Story of Afghan Refugees in Tajikistan.”, (2023).

Mouzaffar Olimov. “The policy of Russia in Central Asia: a perspective from Tajikistan.”, Russia and Asia: the emerging security agenda, (1999).

Natsuko Oka. “A note on ethnic return migration policy in Kazakhstan: changing priorities and a growing dilemma.”, IDE Discussion Paper, 394, (2013).

Nozomi Matsui, James Raymer. “The push and pull factors contributing towards asylum migration from developing countries to developed countries since 2000.”, International Migration, Vol. 58, Iss. 6, (2020).

Oleg Korneev.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global migration governors: The World Bank in Central Asia.”, Global Governance, (2017).

Paul Fryer, Joni Virkkunen, and Furugzod Usmonov. “What kind of choice?: Understanding migration in Tajikistan.”, The EU's Eastern Neighbourhood. Routledge, (2016).

S Khashimov, R Zhandayeva, et al. “Introducing the Central Asia migration tracker.” The Oxus Society, (December 2020).

Sergey Ryazantsev.“KAZAKHSTAN TODAY: MIGRATION--TRENDS AND REGULATION APPROACHES.”, Central Asia & the Caucasus (14046091) 17(2), (2016).

Sonja Fransen, Hein De Haas. “Trends and patterns of global refugee migr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48, Iss. 21, (2022).

T. R. Bazarbekov, , A. B. Sarsembayev, and N. B. Zhumzhayeva. “Kazakhstan's management of migration: Adapting to new circumstances”, BS thesis. International School of Economics Maqsut Narikbayev University, Astana, (2024).

Timothy J Hatton. “Asylum migration to the developed world: Persecution, incentives, and polic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34, Iss. 1, (202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pril 2021, “Digital Refugee Livelihoods and Decent Work – Towards inclusion in a fairer digital economy”, https://www.ilo.org/meetings-and-events/launch-ilo-report-digital-refugee-livelihoods-and-decent-work-towards (검색일: 12.2.)

Migration Data Portal, “Migration data in Central Asia”, https://www.migrationdataportal.org/regional-data-overview/central-asia (검색일: 2024.10.18.).

UNHCR Central Asia, “Kazakhstan Ministry of Labor and UNHCR strengthen capacity to protect refugees”, https://www.unhcr.org/centralasia/en/22829-kazakhstan-ministry-of-labor-and-unhcr-strengthen-capacity-to-protect-refugees.html (검색일: 2024.12.1.).

UNHCR, December 2021,“UNHCR Kyrgyzstan FACT SHEET”, https://reporting.unhcr.org/kyrgyzstan-factsheet-1913 (검색일: 2024.11.30.)

UNHCR, June 2023,“GLOBAL TRENDS FORCED DISPLACEMENT IN 2022”, https://www.unhcr.org/sites/default/files/2023-06/global-trends-report-2022.pdf (검색일: 2024.11.28.)

UNHCR, March 2024,“Kazakhstan: Factsheet”, https://www.unhcr.org/centralasia/wp-content/uploads/sites/75/2024/03/Factsheet-National-Office-Kazakhstan-EN-2024.pdf (검색일: 2024.12.1.)

UNHCR, May 2023,“Annual Results Report: Central Asia”, https://reporting.unhcr.org/files/2023-06/1%20Asia%20-%20Kazakhstan%20Multi%20Country.pdf (검색일: 2024.12.1.)

UNHCR, November 2023,“Strategy 2023-2025 for Kazakhstan Multi-Country Office”, https://reporting.unhcr.org/sites/default/files/2024-09/Kazakhstan%20Multi-Country%20Office-strategy-2024.pdf (검색일: 2024.12.1.)

UNHCR, October 2024,“Global Action Plan to End Statelessness 2.0”, https://www.refworld.org/policy/strategy/unhcr/2024/en/148761 (검색일: 2024.11.30.)

An Analysis of Institutional Responses to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in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 Focusing on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

KIM HYOJ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aebom1026@naver.com)

Abstract

Geopolitical conflicts, economic crises, and climate change are compounding factors that have intensified the global refugee crisis. Central Asia, due to its geographical proximity to Afghanistan, Russia, and China, is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originating from these neighboring countries. In particular, the sharp increase in migration from Russia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has positioned Central Asian countries as both key transit and destination points for refugees. While these nations have partially adopted international refugee protection standards, such as those outlined in the 1951 Refugee Convention, they often fail to fully comply with these agreements. Consequently, inefficiencies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es and the lack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and social integration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This study focuses on the institutional responses of Kazakhstan, Kyrgyzstan, and Tajikistan—three Central Asian countries where research on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has been relatively active. For instance, Kazakhstan has established procedures for recognizing refugee status but is often criticized for its insufficient policy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Kyrgyzstan has a legal framework in place, but the country faces difficulties in protecting refugees due to a lack of practic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Tajikistan's refugee protection system remains in its nascent stages, highlighting inadequate institutional preparedness for addressing migration and refugee issue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sses, institutional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and frameworks for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these countries,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ir policy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explore potential direction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s.

Keywords: Central Asian Refugee Systems;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dures; Economic Integration;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발표3. 정유진(한국외대)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유입과 난민 없는 난민 혐오: 2018년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유입과 난민 없는 난민 혐오 : 2018년 국회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정유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jinny_0924@hufs.ac.kr

요약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를 향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난민 없는 난민 혐오와 무슬림 없는 무슬림 혐오로 설명된다. 본 연구는 2018년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난민 없는 난민 혐오가 어디에서 기인했고 또 어떻게 발흥되고 있는가를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발의안 제출과 같은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는 재선을 동기로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함과 동시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국회의원의 이념을 반영한 발의안은 유권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의제 설정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핵심 단어: 예멘 난민, 난민 혐오, 발의안, 유권자 선호, 의제 설정

I. 서론

2018년 한 해 간 유입된 561명의 예멘인[1]은 한국 사회가 처음 접한 집단적인 난민 유입이었음과 동시에 낯선 이슬람(Islam) 문화의 유입이었다. 이러한 유입에 한국 사회에서 발흥된 예멘 난민 신청자를 향한 반감은 타자(othering)[2]를 향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야기된 것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제주도 예멘 난민 유입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은 '난민 없는 난민 혐오'와 '무슬림(muslim) 없는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3]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예멘 난민[4]을 반대만 한 것은 아니다. 2018년 6월 30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난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을 때,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난민 찬성 집회가 열리기도 했었다.[5] 찬성 집회 측은 한국이 1992년 난민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Status of Refugees) 가입국임과 동시에 2012년 동아시아 최초로 단일 난민법(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법, 이하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이므로, 난민 신청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역설했다. 하지만 반대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약 1,0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약 100명 정도로, 반대 측의 10%에 불과했다.

반대 집회를 주관한 '불법난민 · 외국인 대책 국민연대'측은 한국에 입국한 예멘인은 단순히 전쟁과 징집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왔으므로 난민으로 볼 수 없음을 역설했다. 반대 집회에서는 난민을 한국에 적응시키는 데 필요한 재사회화 교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과 만약 재사회화에 실패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테러의 위험성 역시 반대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웠다. 다시 말해, '국민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내세우며 국민의 평온과 난민의 수용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본 것이다.

문제는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입장이 한국에서 우세한 것처럼 보였음은 6월 30일의 집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이미 다수의 언론이 예멘 난민의 유입으로 인해 발생할 각종 부작용과 이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중점으로 다루는 기사를 보도함에 따라(주재원 · 임이삭, 2022: 109), 한국 사회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담론이 만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70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다(정유진, 2024: 8). 특기할만한

---

1)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20.『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1』.

2) 젠슨(Sune Qvotrup Jensne)은 타자화를 "다수를 차지하는가와 관계없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 종속 집단(subordinate groups)에게 문제 또는 열등한 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 말한다(Jensen, 2011: 65). 타자를 열 등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성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타자화의 핵심은 우월성과 열등성이라 말할 수 있다. 한건수(2003)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타자화는 피부색에 근거한 서열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설명한 바 있는데(한건수, 2003: 173), 이러한 맥락에서 예멘인 역시 타자화의 대상이 되었다 볼 수 있다.

3)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without Muslim)를 연구한 폴란드의 미하우 부호브스키(Michal Buchoski)는 무슬림에 대한 무지와 적대 속에서 이슬람 포비아가 발생하는 현상을 무슬림 없는 이슬람포비아(Islamophobia without Muslims)라 설명한 바 있다(Buchowski, 2016: 61). 이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난민에 대한 무지와 무조건적인 적대 속에서 발생하는 난민 혐오를 난민 없는 난민 혐오라는 표현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4) 난민(asylum)과 난민 신청자(asylum seeker)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난민 신청자는 난민이나 보충적 보호 지위가 결정되기 전 보호를 요청한 자 또는 아직 난민 지위를 신청하지는 않았으나 그럴 의도가 있는 자를 일컫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18년 제주도에 유입한 예멘인을 난민 신청자라 지칭하는 대신 난민으로 지칭하는 바, 본 연구에서도 난민으로 부르고자 한다.

5) BBC NEWS 코리아. 2018.『"제주 예멘: 난민 둘러싼 찬 · 반 여론 갈등으로 확대 우려"』.(https://www.bbc.com/korean/news-44672142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23일 접속).

사실은 당시 청원 글에는 이슬람 종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여과 없이 드러나 있었음에도, 70만 명의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해당 청원에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애 낳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니 성범죄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까지 했다(정유진, 2024: 8).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에 70만 명이 동의했다는 데 힘입어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외 7인이 9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국민이 먼저다! 대국민 정책 토론회: 난민법 폐지 왜 필요한가?'에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난민 문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가짜 난민이잖느냐. …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으면 유엔 난민기구에서 잘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응원해주면 된다"발언하기도 했다.[6] 이처럼 난민을 가짜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형적인 혐오의 일환인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난민을 배척하는 태도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내재된 용어가 가짜 난민이기 때문이다(전홍기혜, 2018: 57).

이와 같은 한국 사회의 난민 없는 난민 혐오는 어디에서 기인했으며, 어떻게 발흥되고 있는가?와 같은 의문으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예멘 난민이 유입된 2018년으로 시기를 한정하여 발의된 난민 관련 법안 8개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난민 없는 난민 혐오의 발흥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발의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한 동기가 재선(re-election)인 만큼, 국회의원은 여론이 주목하는 현안과 관련된 법률안의 발의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고종안, 2024: 95). 이는 민주적 반응성(Democratic Responsiveness)에 관한 문제로 국회의원은 재선을 위해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Dahl, 1989). 동시에 국회의원의 발의안은 의제 설정(agenda-setting) 기능을 하기도 한다. 이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특정 문제를 채택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국회의원이 담당함을 의미한다.[7] 다시 말해, 의제 설정자인 국회의원은 발의안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의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발의안은 대중의 선호를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원하는 정책 기조는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2018년 난민 없는 난민 혐오가 한국 사회에 만연했음을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II. 기존 연구 검토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통해 난민 없는 난민 혐오라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발의안이 갖는 두 가지 특징에 관해 보다 더 자세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담겨 있는 발의안이며, 다른 하나는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발의안이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이후, 마지막으로 2018년 제주도에 유입된 예멘 난민에 관한 학문적 흐름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말하고자 한다.

6) 인디포커스. 2018.『"국민이 먼저다…난민법 폐지"토론회 열려』. (https://www.indifocus.kr/16315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23일 접속).

7) 대통령에게도 의제 설정 기능이 있으나, 국회의원에 비해 대통령의 의제 설정 기능은 약하다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은 다양한 의제를 설정하기보다는 몇 가지 의제만을 적극적으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통령의 임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Edward and Wood, 1999: 328).

1. 유권자 선호 반영으로서의 발의안

민주적 반응성은 민주주의 체제를 다른 정치체제와 구별할 수 있는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로 간주된다(May, 1978: 4). 이러한 민주적 반응성은 유권자의 선호가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물론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데(Powell, 2005), 이중 본 연구는 제도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시발점인 제출된 발의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하지만 2018년 제출된 8개의 난민 관련 발의안은 모두 임기 만료 폐기로 처리되었다. 실제로 가결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발의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는 발의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활동의 주요 동기가 재선에 있다는 데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는 가결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을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고종안, 2024: 95)과 그 맥을 함께 한다.

메이휴(David Mayhew)는 미국 의원의 가장 주요한 목표는 재선이라 단언한 바 있다(Mayhew, 1974: 5). 김장수(2006) 역시 한국 국회의원이 정치 활동을 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재선에 있음을 지적했다(김장수, 2006: 209). 김장수는 선출된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은 재선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한다는 데 학문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말하기도 했다(김장수, 2006: 209). 해당 연구의 주요 가설은 입법 활동의 적극적 참여가 다음 선거의 승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경우 입법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으며, 17명[8]을 심층 면접한 결과 반증(反證)을 통해 가설은 입증되었다. 마지막으로 김장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국회의원의 발의안 제출을 의정활동의 지표로 삼고 있음을 염두에 두며, 외부의 영향력이 재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안을 제출하는 행위를 추동하기도 한다 주장했다. 즉, 시민단체의 평가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 열심히 일한다는 인상을 유권자에게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발의안을 제출할 동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덕교(2020)는 김장수가 연구를 진행한 2006년과 오늘날은 다르다며,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발의안의 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한다(서덕교, 2020: 178). 고종안(2024) 역시 오늘날은 과잉 입법을 야기한 입법자에 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입법홍수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국회의원의 발의안이 과도하게 제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고종안, 2024: 86-88).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발의안이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재선을 지목하며(고종안, 2024; 95; 서덕교, 2020: 187), 김장수의 요지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인다.

서덕교는 발의안이 재선 가능성을 높임에 관해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는데, 여기서 유권자의 선호와 조응되는 지점에 관해 말한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관심을 받는 사회 문제에 관한 발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이다(서덕교, 2020: 187). 이는 특정 이슈에 관한 발의를 통해 국회의원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특정 문제가 나타날 경우 유사한 발의안이 연달아 제출되는 현상과 상관성을 갖는다(서덕교, 2020: 187).

상기의 기존 연구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정치 활동의 주요 동기가 재선인 국회의원은 발의안을 제출할 때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하게 된다는 것이다.

8) 인터뷰는 2006년 4월 초부터 5월 중순까지 진행되었으며, 5명의 국회의원과 2명의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10명의 의원 보좌관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었다(김장수, 2006: 206).

2. 의제 설정으로서의 발의안

하지만 국회의원을 유권자의 선호만을 반영하는 수동적 존재로 보기에는 어렵다. 국회의원에게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페트로치크와 그의 동료들(Petrocik et al., 2003)은 정치엘리트는 각자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제를 지속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유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나간다 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엘리트 역시 국가에 당면한 문제에 관해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의제를 선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음을 의미한다(김정연, 2017). 이를 통해, 국회의원은 다양한 사회 문제 중 특정 의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해당 의제의 지배적 방향을 좌우하는 의제 설정자의 역할을 하는 능동적인 존재라 말할 수 있다.

페어클로(Norm Fairclough, 2003)의 연구 역시 국회의원의 능동성을 방증한다. 페어클로는 사회적 행위자(social agent)가 텍스트를 생산할 때는 온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회적인 맥락을 반영하여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라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사회적 행위자는 텍스트 생산에 있어 상당한 자유(great deal of freedom)를 가지게 됨을 의미한다(Fairclough, 2003: 550).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일환인 국회의원 역시 담론을 생산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자유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원의 자유는 국회의원의 이념[9]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국회의원의 이념에 관해서는 김석우와 전용주(2012)가 설명한 바 있는데, 이들은 이념을 한국 사회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개인적 판단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정부와 사회는 어떤 가치를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가에 관한 판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정의한 바 있다(김석우.전용주, 2012; 24). 이러한 이념은 간통제 폐지나 동성애자의 결혼 및 낙태를 합법화할 것인가와 같은 개인적 판단과 같은 가치관이 반영되는 안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가치관이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서 주요한 동력임은 이현우(2005)의 연구가 말해준다. 16대 국회의 본회의 표결 결과를 통해 국회의원의 정치적 행위 동기를 분석하여, 소속 정당의 당론 외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주요함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개인의 견해가 드러난 안건은 이라크 추가 파병에 관한 것이었다. 이현우는 해당 안건에 관한 국민의 여론이 찬반으로 나뉨에 따라 국가이익과 전쟁의 정당성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바로 이러한 상황이 국회의원의 가치관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보았다(이현우, 2005; 213).

요컨대, 국회의원에게는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며, 의제를 설정하는 발의안 제출과 같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동기는 한국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관한 국회의원 개인의 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점은 국회의원의 의제 설정 기능이 유권자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김정연, 2017:9).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난민법 개정안을 분석한 최유(2022)는 난민에게 큰 관심이 없던 국민에게 이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국회의원의 발의안이라 주장한 바 있다(최유, 2022; 32).

발의안이라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활동은 앞서 논한 재선에 관한 동기나 개인의 이념에 기반한 의

9) 국회의원의 이념을 설명하는 연구들은 신념이나 가치관, 동기, 정치적 입장 또는 선호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용어는 다양하나 내재된 의미가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한 개인의 가치관이라는 데는 공통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념을 대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상이한 명칭을 세밀하게 정의하기보다는 동의어로서 간주하고자 한다.

제를 제시함으로써 해당 정책의 지배적 방향을 주도하고자 하는 목적 외, 다양한 요인[10]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발의안의 내용에서 한국 사회의 난민 없는 난민 혐오에 주목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혐오가 어떻게 발흥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함에 따라, 상기의 두 요인에만 집중했다. 발의안을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대중의 선호와 난민의 수용은 반대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이념이 드러난 또는 둘의 선호가 부합한 결과로 보고자 하기 때문이다.

3. 예멘 난민에 관한 연구

2018년 무사증 제도로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에 관한 다수의 연구는 부정적인 프레임(frame)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강진구 · 이기성, 2019; 문미리, 2022; 박현희 · 고서현, 2023; 백일순 · 구기연, 2021; 신예원 · 마동훈, 2019; 주재원 · 임이삭, 2022; 황태연 외, 2022).

〈표 1〉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에 관한 기존 연구 정리

	저자	연도	제목	특징
담론 주체로서의 언론	문미리	2022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의 프레임을 비교분석
	백일순 · 구기연	2021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의 변동	1990년대부터 2018년까지의 경향신문 · 국민일보 · 내일신문 · 문화일보 · 서울신문 · 세계일보 · 한국일보 · 한겨레의 난민 관련 기사 분석
	신예원 · 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생산하는 담론을 비교분석
여론	강진구 · 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네이버 뉴스의 댓글을 분석

10)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을 말할 수 있다. 한국의 정당 체제가 중앙집권적인 형태임에 따라,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정당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별이 나 연령, 경제적 지위나 재산, 교육 정도와 같은 사회적 배경 역시도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박현희 · 고서현	2023	해석수준이론과 계층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제주 예멘 난민 사례에 대한 프레임 분석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키워드 난민을 중심으로 트위터 게시글 분석
	황태연 · 유정모 · 김화연	2022	제주 에멘 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	2018년을 기점으로 전 · 후 3년간의 난민 기사에 달린 댓글 분석
언론과 여론	주재원 · 임이삭	2022	매개된 배타적 담론과 혐오적 공론장의 재생산: 제주 예멘 난민 관련 포털 뉴스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	한겨레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가 생산한 제주 예멘 난민 관련 보도 기사 중 댓글이 많이 달린 순으로 네이버와 다음 포털에서 각 130개씩 추출하여 비교분석

*자료: 저자 작성

〈표 1〉에서 볼 수 있듯,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 프레임에 관한 학문적 흐름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예멘 난민에 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는 담론을 생산하는 언론에 주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인터넷 뉴스 댓글에서 나타나는 예멘 난민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가지를 조응하여, 언론이 생산한 예멘 난민 관련 부정적인 담론이 언론과 댓글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에 방점을 두는 것이다. 상기의 연구들은 일관되게 한국 사회는 예멘 난민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는 데 공통점을 보인다. 예컨대, 예멘 난민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한 문미리(2022)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우 비호를 제공해주어야 하는 존재로 묘사한 것과 달리, 예멘 난민의 수용에 관해서는 우려 섞인 텍스트를 구성했음을 밝혀냈다(문미리, 2022: 32).[11)]

예멘 난민을 둘러싼 부정적인 프레임에 집중하는 것이 학문적 흐름으로 대표되나, 이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관해 제언하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김진희 · 이로미, 2019; 석인석 · 황기식, 2019; 송영훈, 2019; 윤은주, 2022).'혐오하지 않아야 할 대상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태도

11) 문미리(2022)의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난민에 관한 조선일보의 입장 차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일보는 예멘 난민을 다룬 보도에서 이슬람 국가의 여성에 대한 인식 및 성범죄를 우려하는 내용을 언급한 반면,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관한 보도에서는 국제사회의 대응에 순응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들을 도와야 함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조의 차이는 한미동맹에 방점을 두어 미국의 외교정책을 따라 유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문미리, 2022: 26).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미국의 상관성에 관해서는 해당 논문(p.26-29)을 참고.

(윤은주, 2022; 22)'를 지적하며 대두되는 제언의 다수는 소수 약자의 보호라든가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함을 말한다. 이때, 김진희와 이로미는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앞으로의 한국 다문화 교육은 이주민의 정착에 따른 적응과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국적이나 인종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권리를 가질 권리를 가진 주체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멘 난민에 관한 또 다른 연구는 국제 난민 규범이 한국에서 내재화되었는가를 분석한 것이 있다(정유진, 2024). 한국은 난민 보호라는 국제 규범을 국내법으로 이행 입법하기까지 했으나, 한국 사회에서는 규범이 내재화되지 않았음이 예멘 난민에 관한 반발을 통해 드러났음을 지적한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기존 연구와는 달리 난민의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초점을 맞춰, 한국 사회에서 규범이 내재화되지 않았음을 말했다는 데 있다.

상기의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하나는 예멘 난민에 관한 반발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미디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중 다수는 온라인 뉴스의 댓글이나 트위터(Twitter, 현 X)의 게시글 분석을 통해 대중의 반감을 분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몇몇 연구는 언론사 분석을 통해, 예멘 난민에 관해 부정적인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에 주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가의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해당 의제에 부정적인 기류를 생산함과 동시에 유권자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는 국회의원의 발의안에 방점을 둔 연구는 미비하다.[12] 그러므로 본 연구는 2018년 예멘 난민 유입으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난민 없는 난민 혐오라는 현상을 학문적 공백으로 남아 있는 발의안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자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Ⅲ. 2018년 예멘 난민 유입과 한국 사회의 반응

1.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도 입국과 주요 업무 연표

제주도는 2002년부터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의 육성을 목적으로 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법률 제6643호)을 통해, 외국인이 비자를 받지 않고도 입국하여 30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13] 시행 이후부터 무사증 입국 제도의 최대 이용국은 중국이었으나, 제주도는 다변화를 위해 2017년 12월 12일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Kuala Luppur)와 제주도를 잇는 신규 항공노선을 개설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노선으로 내전을 피해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 있던 561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예멘인이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주요 동기는 말레이시

12) 최유(2022) 역시 난민법 개정안이라는 명목으로 입법 동향에 관해 연구했다. 그러나 연구를 통해 개정안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인권 보장에 취약한 한국의 민주주의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는 데 방점을 둔다는 데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아울러, 20대 국회에 제출된 모든 개정안을 살핀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13) 제주출입국청과 외국인청이 발간한 2018년 제주 예멘 난민 백서에 의하면,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제주 무사증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하다. 2002년 법의 시행 당시 예멘 역시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였으나, 2014년 2월 예멘이 일방적으로 한국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한국 역시 당해 7월부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가 국가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예멘인의 무사증 입국을 허가했다(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18: 36-38).

아와 달리 한국은 난민 협약국이라는 데 있었다.

〈표 2〉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1월~5월, 총 561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남	10	14	8	73	406
여	4	10	2	8	26
합계	14	24	10	81	432

*자료: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18. “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 1” p.39에서 인용

〈표 2〉에서 볼 수 있듯, 예멘인의 제주도 입국은 2018년 3월을 제외하고는 증가했다. 실제로 4월 한 달간 유입된 81명은 2013년부터 2017년 유입된 예멘인의 수보다 더 많았다.[14] 하지만 5월에는 4월의 약 5배에 달하는 432명이 입국하기까지 했다.

〈표3〉 연도별 예멘 난민 신청자 수(명)

합계	1994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5월)
985	38	130	39	92	131	552

*자료: 법무부. 2018.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및 향후 계획”에서 인용

〈표 3〉을 통해, 예멘인의 유입이 증가한 것처럼 난민 신청자 역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2018년의 난민 신청자 수는 채 반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작년의 4배를 웃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집단적 유입에 따른 주요 업무 연표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표 4〉 2018년 예멘 난민 관련 주요 업무 연표

일시	주요 업무	비고
2017. 12. 12	말레이시아 체류 예멘인 제주 입국 본격화	
2018. 4. 10	예멘인 2명 심사 회부 결정 및 입국 허가	4월 3일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난민신청서를 제출[15]
2018. 4. 30	난민 신청자 출도 제한 조치 시행	

14)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은 2013년에는 2명이었다. 2014년에는 11명, 2015년에는 3명, 2016년에는 10명 그리고 2017년에는 52명으로, 5년 동안 제주도에 유입한 예멘인은 총 78명이었다(제주출입국·외국인청, 2018:38).

2018. 5. 8	예멘에서 제주도로 입국하는 사례 최초 발생	
	제주청, 예멘 난민 접수 전담 창구 개설	
2018. 6.1	예멘을 무사증 입국 국가에서 제외 조치	
2018. 6. 7	제주청장, 제주경찰청 방문	예멘인 숙소 순찰과 치안 활동 강화 당부
2018. 6. 9	예멘 난민 신청자 조기 취업 활동 허가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업 활동 허가 (단, 1차 산업에 국한)
2018. 6. 19	제주청 · 도청 · 경찰청 공동으로 언론 브리핑	예멘인의 인도적 지원 방안 등에 관해 발표
2018. 6. 21	제주경찰청, 국민 불안 해소 및 인권 보호 종합대책 발표	
2018. 6. 25	난민 심사 개시	
2018. 6. 28	예멘 난민 특별전담반 회의 개최	
2018. 6. 29	법무부 차관, 예멘 난민 대책 언론 발표	난민법 개정과 난민 심판원 도입 등 개선 방안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청 방문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심사 요청
2018. 7. 16	국무총리, 제7차 국가대테러회의 개최	난민 증가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논의
	10세 이상의 예멘인을 대상으로 마약 검사 착수	
2018. 7. 24	예멘인 경유지(제3국) 범죄경력 조회 실시	

2018. 8. 9	관계기관, 예멘인 신원 조회 결과 회신	테러 연계 의심 인물 발견되지 않음
2018. 8. 13	예멘인 취업 분야를 건설 및 제조업으로 확대	
2018. 8. 18	취업자 대상으로 교육 실시	한국 사회 이해 및 기초법질서 등을 교육(총 237명 참석)
2018. 8. 31	취업 알선 혐의 인도인 조사 종결	무혐의 처리
2018. 9. 14	1차 심사 결과 발표	23명 인도적 체류 허가
2018. 9. 18	예멘인 폭탄 테러 혐의자 조사	무혐의 처리
	마약 검사 양성반응자 1명 경찰에 수사 의뢰	
2018. 10. 17	2차 심사 결과 발표	339명 인도적 체류 허가, 34명 불인정, 보류 85명
2018. 10. 22	인도적 체류 허가자 대상 교육 실시	출입국관리법과 기초법질서 등 교육
2018. 10. 24	법무부 장관, UNHCR 최고 대표 면담	난민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
2018. 12. 14	3차(최종) 심사 결과 발표	2명 난민 인정, 50명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 불인정, 11명 직권 종료
2018. 12. 17	난민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대상 교육 실시	한국 문화 및 출입국관리법 등 교육
2018. 12. 21	국정원 대테러센터장 제주 방문	
2018. 12. 31	최종 심사 결과 통계	562명 입국, 549명 난민인정 신청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 : 2명 인정, 412명 인도적 체류 허가, 56명 불인정, 14명 직권 종료

*자료: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18.『2018 제주 예멘 난민 백서 1』p.8-13을 참고하여 재정리

〈표 4〉를 통해,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라는 제도로 인해 예기치 못한 집단적 유입에 직면한 한국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예멘인의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출도 제한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도 제한 이후의 조치는 예멘인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법무부는 6월 1일 자로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16)]

2. 예멘 난민의 제주도 유입과 한국 사회의 반응

2018년 561명의 예멘 난민 유입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우선적 조치는 〈표 4〉에서 보이는 것처럼 출도 제한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물론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해당 조치에 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17)] 정부에서 택한 다음 조치는 예멘을 제주 무사증 입국 불허국으로 지정하는 것이었는데, 역설적이게도 해당 시행령이 배포된 6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멘 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18)] 해당 성명서는 2015년 시작된 내전으로 예멘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2천만 명이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며, 19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죽음을 피해 예멘을 떠난 만큼 이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가 절실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난민 협약에 의거하여 신청자에게 보호를 제공할 주된 책임이 보호를 요청받은 국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예멘 난민을 위한 대책은 물론 심사에 집중하는 대신 구체적인 방안 없이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2018년 당시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난민 혐오 정서만이 한국에 있던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예컨대, 6월 9일에는 인권단체들도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용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난민 협약에 위반된 것임을 논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6월 26일에는 도내 33개의 단체들이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를 결성하기도 했으며[19)], 당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천주교.대한불교조계종.원불교 4대 종단의 이주 · 인권협의회 역시 예멘 난민을 수용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바 있다.[20)]

---

15) 통상 입국이 불허될 경우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이 하나의 공식으로 자리 잡을 만큼 일반적인 일이다. 그러나 4월 3일 입국한 2명은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이는 최초의 사례다(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18: 39).

16) 법무부. 2018.『"[설명자료] 예멘. 제주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지정"』. (https://www.moj.go.kr/mog/222/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DIxNTcxJTJGYXJ0Y2xWaWV3LmRvJTNG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17) 어필(APiL)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출도 제한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주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취업 활동이 보장되지 않았음에도 제주도를 벗어나지 못 하게 한 건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BBC NEWS 코리아. 2018.『"제주 예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현실"』. (https://www.bbc.com/korean/news-4463226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출도 제한이 가장 문제가 된다며, 난민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주도 안에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나 관광지라는 특성상 제주도의 물가는 난민 신청자가 긴 기간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체류를 위해서는 일자리를 얻어야 하나 제주도에서 그 많은 일자리가 당장에 나타나지 않는 현실임을 지적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웹진. 2018.『"난민, 생소한 이름의 새 이웃"』. (https://www.www.humanrights.go.kr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18) 국가인권위원회. 2018.『"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2829&searchCategory=&page=9&searchType=total&searchWord=%EB%82%9C%EB%AF%BC&menuLevel=3&menuNo=9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19) 경향신문. 2018.『"예멘난민 돕겠다…제주 종교사회단체 '난민인권범도민위원회' 결성"』.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627152200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20) 한겨레. 2018.『"개신교 목사들 "예멘 난민 배척은 하나님 뜻 아니다""』.

문제는 난민 협약국임과 동시에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이 난민의 보호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동조하는 분위기가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데 있다. 이는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해야 함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역대 최다인 70만 명이 넘게 동의한 것은 물론 난민대책국민행동의 주도로 총 6차례에 걸쳐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린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정유진, 2024; 8). 아울러,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는 6월 30일 제주 시청 앞에서 그리고 7월 15일에는 제주청에 방문하여 이슬람 난민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21] 게다가 그 외의 난민 반대 단체들 역시 10월 18일과 11월 29일 예멘 난민 신청자를 즉각적으로 추방하라는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제주청에 항의 방문하기까지 했다.

이와 같은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은 다음의 두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그간 한국이 난민에게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다. 난민은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다른 나라에 존재한다 생각했으므로, 한국은 난민이라는 존재에 익숙치 않았다(이용승, 2018; 황태연 외, 2022). 이는 난민은 공간적 거리(spatial distance)가 먼 나라의 일이므로 난민을 향한 대중의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한다(박현희 · 고서현, 2023; 10). 그러므로 불과 반년 만에 조우하게 된 561명의 집단 난민이 야기한 당혹스러움 또는 부담이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멘인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난민의 수용이 국민의 안전 문제와 조응하게 된다. 무슬림 난민을 테러의 주동자로 간주(조영희.박서연, 2018; 9)[22]하는 것은 물론 이슬람을 여성은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어린 소녀들과 부부 관계를 맺도록 하는 종교를 넘어선 일종의 이데올로기로 간주하기 때문이다.[23]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난민을 받은 이후 한 달간 여성 6명이 실종됐다는 사실무근의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을 뿐만 아니라 캠핑 중 실종된 여성이 난민에게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제주도가 위험하다. 가만히 있으면 제주도뿐 아니라 한국 전체가 난민으로 위장한 사람들에게 먹힐 것이다'라는 예멘 난민과 범죄자를 동일시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혐오에 불과했으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확산됐다. 이에,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집회에서는 자신들이 인종차별주의자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가 국민차별주의자라는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51719.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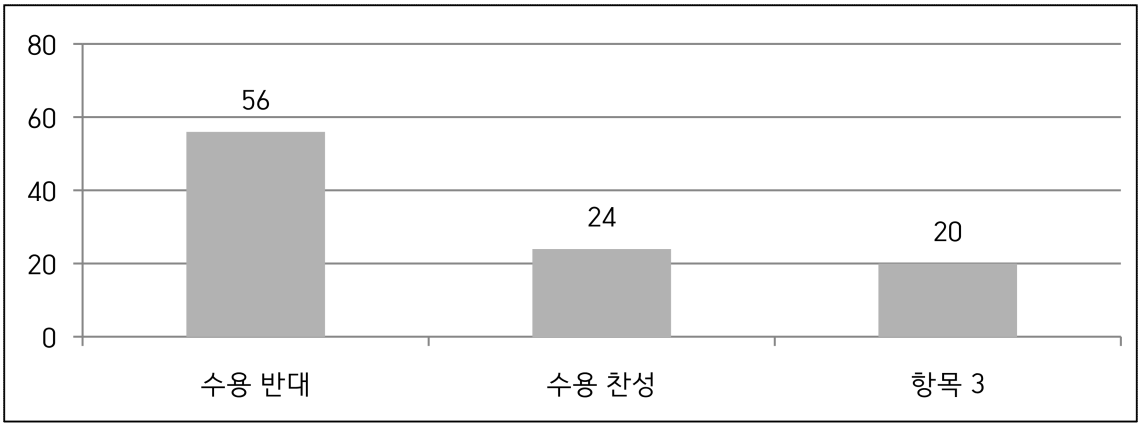
21) 미디어제주. 2018.『"원희룡 지사, 난민대책도민연대 면담 요구사항 청취"』.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62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22) 이슬람 문화연구소 소장이자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의 명예교수인 이희수는 한국에서 이슬람이 테러리즘과 등치되는 이유가 2001년 9.11테러와 2007년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선교단체의 집단 납치와 이에 따른 두 명의 한국인 살해 그리고 2010년대에 보도된 ISIS의 테러 활동 때문이라 밝힌 바 있다. BBC NEWS 코리아. 2021.『"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지는 까닭은?"』.(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7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23) 익명의 난민대책국민행동 인천위원회장이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다. 세계일보. 2018.『"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증가세 · 이슬람 · 두려움 · 혈세낭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220005883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특기할만한 점은 법무부가 해당 보도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이해를 돕고자 배포한 설명 자료에서, 이슬람교에 관한 명백한 혐오 발언에 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난민 신청자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의 정확한 금액과 난민 신청자에게 자동으로 변호사 조력과 같은 혜택이 제공되지 않음만을 설명했다. 법무부. 2018.『"(설명자료) 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보도 관련"』.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3/subview.do;jsessionid=bH9pp-3IwoDy_f7Ih9MOVXqnbpcWwlpjqY7NX7sG.wizard-19-59zs5?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UlMkY0Mzg2MDY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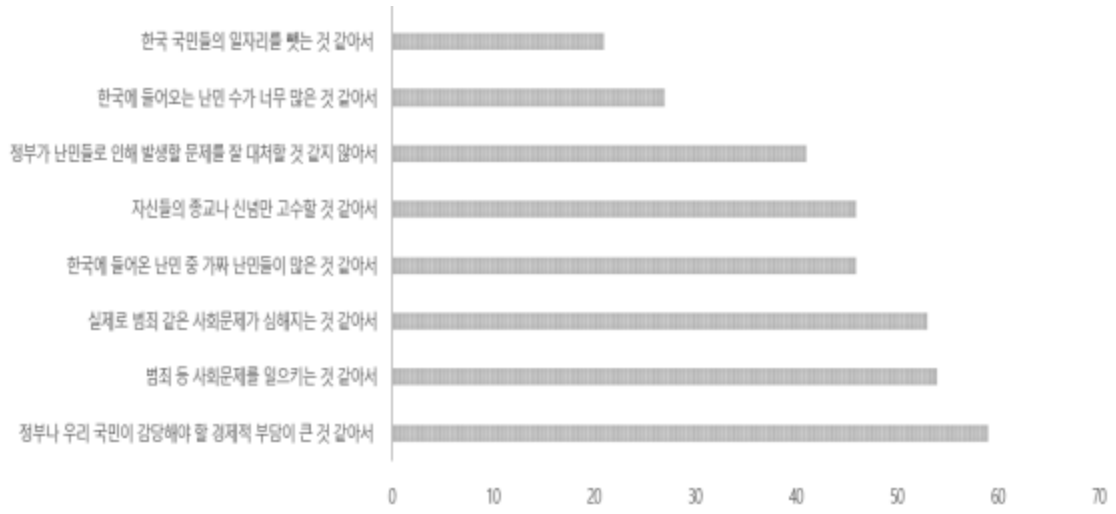
표어가 나오기까지 했다.[24)]

〈그림 1〉 2018년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태도(%)



*자료: UNHCR.한국리서치. 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p.5에서 인용

〈그림 2〉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 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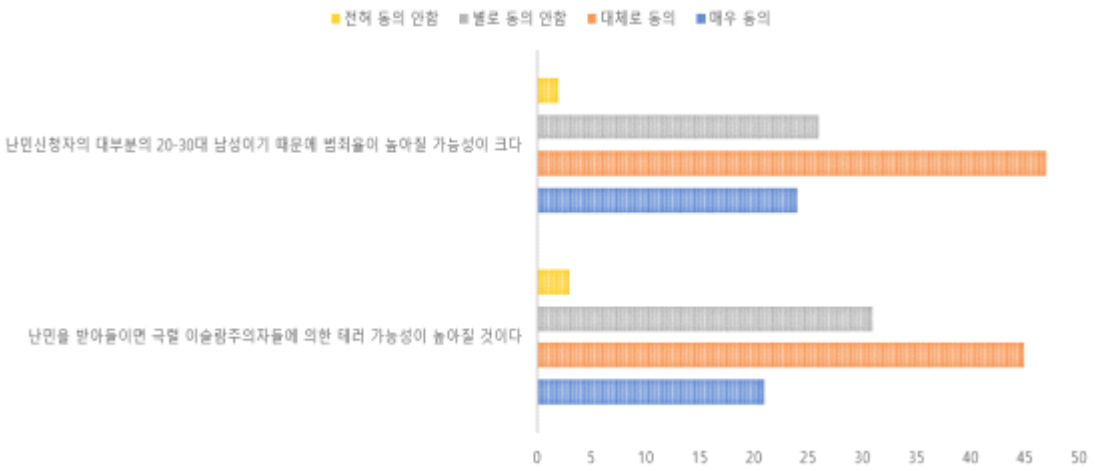


*자료: UNHCR.한국리서치. 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p.31을 참고하여 재정리

〈그림 1〉은 당시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주도적이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며, 〈그림 2〉는 수용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다. 이를 통해 난민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59%)에 관한 것이나, 범죄 등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54%)와 실제로 범죄 같은 사회 문제가 심해지는 것 같아서(53%) 역시 난민 반대의 주요 동기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24) 연합뉴스. 2018.『“[다문화와혐오] ① 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http:s//yna.co.kr/view/ AKR2018121215510037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그림 3〉 예멘 난민 유입이 테러가능성과 범죄율을 높인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



*자료: 한국리서치. 2018. “[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을 참고하여 재정리

〈그림 3〉은 예멘 난민을 수용할 경우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연함을 말해주는 자료다. 다수가 예멘 난민과 범죄의 상관성에 동의하나, 문제는 이러한 우려가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는 없다는 데 있다. 이는 난민 없는 난민 혐오가 드러나는 지점이다.

해당 자료에서 특기할만한 또 다른 지점은 여성이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74%)’과 ‘범죄율이 높아질 것(79%)’에 높게 응답한 반면 남성은 이보다 15% 낮게 응답했다는 것이다.[25] 이를 통해, 난민 수용 여부에 관한 태도 차이에서 여성(61%)이 남성(51%)보다 난민의 수용을 더 반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난민을 수용할 때 UNHCR의 기준 외 추가적인 선별 조건이 필요하다 응답하는 비율은 57%였는데, 이때 모국에서의 전과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93%에 달했다. 심지어 난민 신청자의 종교를 고려해야 한다는 데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55%에 달하기도 했다(UNHCR.한국리서치, 2021; 66). 이와 같은 수치는 예멘 난민의 종교가 무슬림이라는 사실과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관해 한국이 우려하고 있음을 함의한다. 동시에 난민 없는 난민 혐오와 무슬림 없는 무슬림 혐오가 한국 대중에게 퍼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Ⅳ. 2018년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 내용 분석

20대 국회의 난민 관련 발의안은 총 15개다. 그중 8개의 발의안이 2018년 6월 29일부터 7월 25일에 제출되었다. 19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9개와 6개의 난민 관련 발의안이 제출된 것을 고려한다면 특기할만한 현황이다.

25) 한국리서치. 2018.『“[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https://www.hrcopinion.co.kr/archives/11777#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표 5〉 2018년 예멘 난민 유입 이후 난민 관련 발의안

순번	제안 일자	제안자	제안자 정당	의안명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1	06.29	권칠승 외 10인	더불어민주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짜 난민 선별 · 난민제도 악용 방지
2	07.12	조경태 외 11인	자유한국당	난민법 폐지법률안	· 난민법 폐지
3	07.13	강석호 외 11인	자유한국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제도 악용 방지 · 난민심사기간 단축
4	07.17	유민봉 외 10인	자유한국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 신청자의 체류 지역 한정
5	07.18	이언주 외 10인	바른미래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 신청자의 이동 저지 · 난민 신청자의 지원 축소
6	07.19	김진태 외 16인	자유한국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제도 악용 방지 · 국민의 역차별 현상 우려
7	07.20	송석준 외 11인	자유한국당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적 이유를 난민 불인정 사유로 추가 · 난민심사기간 단축 *
8	07.25	함진규 외 10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26]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민제도 악용 방지 · 난민심사기간 단축

자료: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SearchResult.do)

26)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당시 초선이었던 김병기 의원이다.

〈표 5〉는 예멘 난민 유입 이후 제출된 발의안을 정리한 자료다. 8개의 법안 중 7개의 법안이 일부개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으며,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발의안만이 난민법의 폐지를 목적으로 제안되었다. 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7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12명,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11명이었다. 그러므로 예멘 난민과 난민 수용이라는 현안에 보수 정당은 물론 진보 정당과 중도 정당[27]도 주목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멘 난민으로 촉발된 난민법 일부개정은 3대 정당이 주요 현안 중 하나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145)은 예멘 난민이 유입된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과 진보 정당의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는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다양한 인권 정책을 더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통설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과 2016년 국민인권의식 조사 결과에서 통상 인권정책을 지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 여겨졌던 교육이나 공감, 소득수준, 세계 시민성과 같은 변수는 유의미함을 보이지 못한 것과 달리, 정치적 이념만이 변동 없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구정우 외, 2019: 46).

해당 발의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말하며,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사회질서를 해칠 목적,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을 근절'해야 함을 역설한다. 문제는 오늘날의 난민은 복합 이주(mixed migration)처럼 경제적 상황으로 자국을 떠나는 경제 난민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경제 난민은 21세기 난민 또는 현대적 난민으로 정의된다는 데 있다(정유진, 2024: 16). 이는 경제적 이유로 자국을 탈출한 경우에도 난민으로서 비호를 구할 권리(right to asylum)를 가짐을 의미하나, 오늘날 경제 난민은 가짜 난민 신청자(bogus asylum seekers)로 폄하되고 있다(정유진, 2024: 17). 이러한 맥락에서 권칠승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난민협약과 난민법 상의 요건을 갖춘 진정한 난민을 보호해야 할 국제법 또 국내법상 의무가 있다'를 말하면서도, 난민의 보호보다는 진짜 난민을 선별해야 함을 강조함으로써 경제적 목적으로 신청한 난민은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가짜 난민으로 낙인찍은 것이다.

바버라(Brian Barbour 2012)는 동아시아에서 난민 보호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난민을 수동적 또는 희생자로 보는 경향에 관해 말한 바 있는데, 가짜 난민으로 간주하는 것 역시 난민 보호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가짜 난민으로 낙인찍는 것은 난민 수용의 반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리서치(2018)의 여론조사 결과, 난민을 전쟁 난민으로 인식할 경우에는 51%가 수용에 찬성하는 반면 불법 취업 난민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단 4%만이 찬성한다 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8년 발의된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수가 경제적 동기를 거짓으로 치부한다는 데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의 강석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410)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503) 그리고 자유한국당 소속의 함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542) 역시,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이라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고 난민불인을 해야 함'을 말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483) 역시 주목할만하다. 해당

27)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스스로 중도 정당이라 말하며, 보수 야당으로 지칭하는 언론은 명예훼손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경고한 바 있다. 한겨레. 2018.『"바른미래당 "우릴 '보수야당'지칭 언론들, 형사처벌 감수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540.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1일).

발의안은 '장기간의 난민 심사 기간 동안의 자유로운 이동은 불법체류나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 말하며 그 대책이 필요하다 말하는 한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지원은 의료 지원 정도로 축소'해야 함을 제안의 이유로 말한다. 장기간의 난민 심사는 정부의 난민심사전담 및 통역자가 부족하다는 절차적 문제에 근간을 둠은 차치하더라도, 난민 신청자의 이동이 범죄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주장은 결국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 지원만 남기고 지원을 축소할 것을 역설하는 과정에서 삭제하라고 한 조항은 '제43조 (교육의 보장)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이다.[28] 그러나 제43조의 삭제는 1989년 UN(United Nations)이 채택하고 1991년 한국이 가입한 UN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29]에 위배된다.

이후, 이언주 의원은 10월 11일 난민대책 국민행동과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여'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예멘 가짜난민들을 단 1명도 대한민국에 발딛게 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에 요구한다. 가짜난민인 나머지 예멘인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난민불인정 후 송환조치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말하기도 했다.[30] 아울러, 10월 29일에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채널의 〈예멘 난민에 숨겨진 좌파의 음모〉에 출연하여, '가짜 난민들을 뭐 때문에 보호를 하고 하는가'라 발언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496)이 2018년 제출된 다른 발의안과 구별되는 점은, 역차별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해당 발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난민 신청을 하여 일정한 시간만 경과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생계비까지 지원하면서 국민보다 난민신청자를 더 우대하는 역차별 현상마저 우려되고 있으므로 무분별한 허위난민신청을 방지하고…'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국민과 난민신청자의 관계를 제로섬(zero-sum)으로 상정한다는 데서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 후 일정한 시간만 지나도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추후, 법무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서도 나오듯 생계비는 별도의 생계비 신청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자의 소득이나 자산 · 주거 · 자녀 동반 · 임신 여부 및 중대한 질병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31]

대표로 발의안을 제출하기 전인 7월 11일, 김진태 의원실의 주최로'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토론회에서 김진태 의원은 '전 세계의 좌파들이 똘똘 뭉쳐 기존의 질서를 흔들어 보려는 게 바로 난민 문제'라 발언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난민법 개정안

---

28) 의안정보시스템. 『"[201448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V1Z8K0O7H1I8I1D9D3X3E2E4C7U5T9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1일).

29) 아동권리협약의 1조는 아동의 범위로 18세가 안 된 모두가 협약에 적힌 권리를 갖고 있음을 명시한다. 아울러, 22조에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되었을 때 특별한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함을 말하며, 28조에서는 교육받을 권리에 관해 말하고 있다. 서울시공익활동지원센터. 2022. 『"세계 195개국 어린이를 지키는'유엔아동권리협약(교육자료 포함)"』. (https//seoulpa.kr/bbs/board.php?bo_table=npo_acar_id=74105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2일 가용).

30) 미래한국. 2018. 『"제주 예멘 가짜난민 전원 송환 조치해야"』.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25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2일 가용).

31) 법무부. 2018. 『"(설명자료) 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보도 관련"』. (https://immigration.cggo.kr/immigration/1503/subview.do;jessionid=vvU8PqkMBoVqzlQfoe5IG_Nssz0sqwfBsjnBPr7.wizard-19-nw9c5?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UlMkY0Mzg2MDY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 발언하기까지 했다.[32]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발의안(의안번호 14365) 역시 다른 발의안과 비교된다. 다른 발의안이 모두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 반해, 조경태 의원의 대표 발의만이 난민법 폐지법률안이기 때문이다. 조경태는 해당 발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난민법 시행으로 사회적 수용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한 난민신청자 유입이 이루어지는데다, 난민인정제도가 불법취업이나 체류연장 등 경제적 목적의 이주 대안으로 활용됨'을 거론했다. 또한 '난민법을 폐지함으로써 난민인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 제안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기까지 했다. 그러나 조경태 의원 외 해당 발의안에 동의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간과한 사실은 난민법 폐지로 난민의 유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 1951년 채택된 난민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므로 난민의 신청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발의안 제출 후, 조경태 의원은 9월 7일 국회의원관 대회의실에서 난민법 폐지를 위한 대국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까지 했다. 토론회를 개최하는 보도자료에서는 '아시아 유일의 독자적인 난민법 시행 국가라는 사실이 한국을 난민들의 안식처로 인식하게 만든 것이다'와 '감상적인 난민 포용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설명하기도 했다.[33]

예멘 난민이 제주도에 유입된 2018년 UN총회는 UNHCR의 주도로 난민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를 승인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대응을 포괄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의도 하에, 난민 상황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은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것이다.[34] 그러나 난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이 논의되고 있는 동안, 한국은 협력을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협력의 경로에서 이탈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유권자는 물론 국회의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국회의원의 발의안을 선택했다. 발의안 제출과 같은 국회의원의 정치 행위는 재선을 동기로 한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개인의 이념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언주 의원과 김진태 의원 그리고 조경태 의원의 경우 발의안을 제출한 이후에도 예멘 난민에 관한 부정적인 담론을 계속 생산하고 논의를 지속한 바, 이는 개인의 이념이 반영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Ⅴ. 결론

2018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561명의 예멘인이 제주도에 입국하기 전까지, 한국은 난민에 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나라였다. 난민이라는 존재에 익숙치 않았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은 낮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561명의 예멘인 중 549명이 난민을 신청하게 되면서, 예멘 난민의 수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물론 난민의 수용을 찬성해야 함을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었다.

---

32) 난민인권센터. 2018.『"2018년 7월 넷째 주 난민관련 국내외 언론보도(2018.07.10.~2018.07.23.)"』(https://nancen.org/1763에서 가용. 검색일: 2024년 12월 2일).

33) 국회도서관. 2018.『"난민법 폐지 대국민 정책토론회 개최"』. (https://www.nanet.go.kr/lowcontentent/assamblybodo/selectAssamblyBodoDetail.do?searchSeq=74189&searchNoSeq=2018090674189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34) UNHCR.『"The Global Compact on Refugees"』. (https://www.unhcr.org/about-unhcr/overview/global-compact-refugees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2일).

그러나 2018년 당시 한국 사회의 주도적인 여론은 난민 수용의 반대였다. 비싼 이어폰인 에어팟(AirPods)을 끼고, 깨끗한 신발을 신은 난민 신청자는 전쟁을 피해 온 것이 아니라거나[35] 무슬림인 예멘 난민은 여성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범죄율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및 믿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난민 없는 난민 혐오 때문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유권자에 국한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서도 나왔다는 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회의원 발의안의 두 가지 특징에 초점을 맞춰 그 내용을 분석했다. 하나는 정치 활동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재선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발의안은 유권자의 선호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마냥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다. 국회의원은 담론을 설정할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발의안에 자신의 이념을 담기 마련이다.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와 같은 자신의 가치관 내지는 이념이 반영된 발의안은 유권자의 반응을 끌어내는 의제 설정 기능을 하기도 한다. 바로 이 점이 발의안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 또 다른 이유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8년 제출된 8건의 발의안은 유권자의 선호와 국회의원의 이념에 따른 또는 둘의 선호가 부합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회의원의 정치적 선호가 담겨 있는 발의안의 분석을 통해, 2018년 당시 한국의 난민 혐오를 말하는 연구는 미비하다. 대개, 예멘 난민 유입으로 불거진 난민 혐오라는 상황을 설명적으로 기술하거나 유권자의 반감을 온라인 뉴스 댓글 또는 트위터의 게시글을 통해 분석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발의안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만 아니라 난민 없는 난민 혐오라는 현상을 말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다.

낯선 타자인 난민을 수용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유권자가 난민의 수용을 우려하거나 난색을 표할 수는 있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한국이 약속한 난민의 보호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발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된 것처럼, 국회의원은 예멘 난민을 가짜로 낙인찍었다. 심지어는 자국민의 안전과 난민의 보호라는 제로섬 구도에 편승하여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난민법을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기도 했다.

주지하듯, 난민의 인도주의적 위기 해결은 국제적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한국은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두 번이나 피력한 국가다. 1992년 난민 협약에 가입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는 동아시아 최초로 단일 난민법까지 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호가 필요한 난민의 존재를 가짜로 규정하고 진짜 난민의 선별이 필요하다 말하거나 난민법은 폐지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최선이 아닐 것이다.

35) 국민일보. 2018.『"에어팟 끼고 옷 깨끗하면 난민 아니다?…'난민다움'은 있는가"』.
(htttps://www.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11498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2일).

참고문헌

강진구 · 이기성. 2019. “텍스트마이닝(Text Minning)을 통해 본 제주 예멘 난민: 네이버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다문화콘텐츠연구》30호: 103-135.

고종안. 2024. “급증하는 의원입법안, 어떻게 할 것인가?”《입법학연구》제21집 제2호: 85-110.

구정우 · 정진원 · 김선웅. 2019. “인권현안에 대한 국민태도, 왜, 어떻게 다른가?: 2011년, 2016년 국민인권의식조사 분석.”《한국사회학》제53집 2호: 43-92.

김석우.전용주. 2012. “국회의원 이념성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19대 국회의원의 개인적 배경을 중심으로.”《한국정치연구》제21권 3호: 23-44.

김장수. 2006.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국제정치논총》제46집 제4호: 203-221.

김정연. 2017. “텍스트 분석방법을 활용한 한국 국회의 이념성향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진희 · 이로미. 2019. “세계시민성 관점에서 본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와 한국 다문화교육의 과제.”《다문화교육연구》제12권 3호: 37-64.

남윤민 · 마인섭. 2019.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와 국회의원의 반응성: 제20대 국회의 입법표결행위(W-NOMINATE)를 중심으로.”《의정논총》제14권 제2호: 185-210.

문미리. 2022.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방송과커뮤니케이션》제23권 제4호: 5-40.

박현희 · 고서현. 2023. “해석수준이론과 계층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제주 예멘 난민 사례에 대한 프레임 분석.”《한국국정관리학회》33권 4호: 1-34.

백일순 · 구기연. 2021. “국내 신문 기사로 살펴본 한국의 난민 이슈의 변동.”《대한지리학회지》제56권 제2호: 129-147.

서덕교. 2020. “법률안의 발의와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동기와 관심에 관한 연구 -의원 역할 이론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제29권 3호: 173-194.

석인석 · 황기식. 2019. “제주 예멘 난민사태와 인간안보: 사회통합방안을 중심으로.”《민족연구》74권: 92-115.

송영훈. 2019. “제주 예멘 난민신청과 갈등적 난민담론.”《국제이해교육연구》제14권 제2호: 9-38.

신예원 · 마동훈. 2019. “국내 미디어에 재현된 ‘예멘 난민’의 양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미디어경제와문화》제17권 제2호: 31-80.

윤은주. 2022. “정치화된 혐오 표현에 대한 비판: 제주 예멘 난민 사건을 중심으로.”《한국여성철학》제37권: 1-25.

이용승. 2018. “난민은 누구이고,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민족연구》72권: 166-183.

이현우. 2005. “국회의원의 표결 요인 분석: 정당, 이념 그리고 지역구.”《한국과국제정치》21권 3호: 187-218.

전홍기혜. 2018. “한국 언론의 난민 보도를 통해 본 ‘혐오와 배제의 정치학’”《젠더리뷰》제51권: 55-61.

정유진. 2024. “국제 난민 규범의 내재화 분석: 2018년 예멘 난민에 대한 법무부 인식을 중심으로.”《한국이민학》제11권 제1호: 7-28.

조영희.박서연. 2018. “제주 예멘 난민 논쟁을 통해 본 한국 난민제도의 개선 쟁점.”《IOM정책연구소 이슈브리프》2018-04호: 1-24.

제주출입국 · 외국인청. 2018. [2018 제주 예멘난민 백서 1].

주재원 · 임이삭. 2022. “매개된 배타적 담론과 혐오적 공론장의 재생산: 제주 예멘 난민 관련 포털 튜스와 댓글 분석을 중심으로.”《지역과세계》제46권 1호: 97-134.

최원근. 2021. “비호-개발 연계(Asylum-Development Nexus)의 기원과 포괄적 파트너십: UNRRA로부터 난민 글로벌 컴팩트까지.”《담론201》24권3호: 45-81.

최유. 2022. “제주예멘난민 이후 난민법 개정안의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한국이민정책학보》제5권 제1호: 19-40.

한건수. 2003. ““타자만들기”: 한국사회와 이주노동자의 재현.”《비교문화연구》제9집 2호: 157-193.

한국리서치센터.UNHCR. 2021. “난민에 대한 태도 및 인식변화 결과 보고서.”

황태연 · 유정모 · 김화연. 2022. “제주 예멘난민 사태 전후 국내 여론변화 분석: 심층 인공신경망을 활용한 감성분석을 중심으로.”《한국행정학보》56권 2호: 127-166.

Barbour. Brian. 2012. “Protection in practice: the situation of refugees in East Asia.” Nanmin Kenkyu Journal 2(81). Published in Japanese; English original available at

https://www.refugeestudeies.jp/journal/Protection%20in%20Practice%20-%20The%20Situation%20of%20Refugees%20in%20East%20Asia.pdf(accessed December 2, 2024).

Buchowski, Michal. 2016. “Making Anthropology Matter in the Heyday of Islamophobia and the ‘Refugee Crisis’: The Case of Poland/Význam antropologie v dově vzestupu islamophobia a,,uprchlické : případ Polska.”Český Lid 103(1): 51-84.

Dahl, Robert. 1989. Democracy and Its Critic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Edwards III, George C., and B. Dan Wood. 1999. “Who influences whom? The president, Congress, and the media.”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3(2): 327-344.

Fairclough, Norman. 2003. Analysing discourse: Textual analysis for social research. ondon: Routledge.

Jensen, Sune Qvotrup. 2011. “Othering, identity formation and agency.” Qualitative studies 2(2): 63-78.

May, John D. 1978. “Defining democracy: A bid for coherence and consensus.”Political Studies 26(1): 1-14.

Mayhew, David. 1974. Congress: The Electoral Connectio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Petrocik, John R.,William L. Benoit and Glenn J. Hanse. 2003. “Issue ownership and presidential campaigning, 1952-2000.”Political Science Quartely 118(4): 599-626.

Powell, Bingham. 2005. Elections as Instruments of Democracy: Majoritarian and Proportional visio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경향신문. 2018. “예멘 난민 돕겠다…제주 종교사회단체 ‘난민인권범도민위’ 결성”.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80627152200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국가인권위원회. 2018. “제주도 내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https://www.humanrights.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4&boardNo=7602829&searchCategory=&page=9&searchType=total&searchWord=%EB%82%9C%EB%AF%BC&menuLevel=3&menuNo=9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_____ 인권 웹진. 2018. “난민, 생소한 이름의 새 이웃”. (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3284&boardNo=7603277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미디어제주. 2018.『원희룡 지사, 난민대책도민연대 면담 요구사항 청취』. (https://www.media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307262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법무부. 2018. “[설명자료] 예멘, 제주무사증 입국불허 국가 지정”. (https://www.moj.go.kr/moj/222/subview.do?ence=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MTgzJTJGNDIxNTcxJTJGYXJOY2xWaWV3LmRvJTNG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_____. 2018.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 (https://www.mog.go.kr/moj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8월 8일 접속).

_____. 2018. “(설명자료) 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 보도 관련)”. (https://www.immigration.go.kr/immigration/1503/subview.do;jsessionid=bH9pp-3IwoDy_f7Ih9MOVXqnbpcWwlpjqY7NX7sG.wizard-19-59zs5?enc=Zm5jdDF8QEB8JTJGYmJzJTJGaW1taWdyYXRpb24lMkYyMTUlMkYOMzg2MDYlMkZhcnRjbFZpZXcuZG8lM0Y%3D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인디포커스. 2018. “국민이 먼저다…난민법 폐지”. (https://www.indifocus.kr/16315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23일 접속).

연합뉴스. 2018.『[다문화와혐오] ① 난민 늘어 제주서 여성변사사건 늘었다고?』 (https:www.yna.co.kr/view/ AKR2018121215510037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세계일보. 2018.『그들은 왜 난민을 반대하는가…‘증가세 · 이슬람 · 두려움 · 혈세낭비’』.

(https://www.segye.com/newsView/20180822005883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한겨레. 2018.『바른미래당 “우릴 ‘보수야당’지칭 언론들, 형사처벌 감수해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46540.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2월 1일).

_____. 2018. “개신교 목사들 “예멘 난민 배척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851719.html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한국리서치. 2018.『[기획] 예멘 난민에 대한 한국사회 인식 보고서 –예멘 난민에 대한 인식 격차 발생 요인 탐색』. (https://www.hrcopinion.co.kr/archives/11777#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BBC NEWS 코리아. 2018. “제주 예멘: 난민 둘러싼 찬·반 여론 갈등으로 확대 우려”. (https://www.bbc.com/korean/news-44672142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23일 접속).

_____. 2018. “제주 예멘: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현실”. (https://www.bbc.com/korean/news-44632261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_____. 2022. “아프가니스탄: 한국에서 ‘이슬라모포비아’가 커지는 까닭은?” (https://www.bbc.com/korean/news-58314017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30일 접속).

UNHCR. “WHO WE PROTECT Asylum-seekers”. (https://www.unhcr.org/about-unhcr/who-we-protect/asylum-seekers에서 가용. 인터넷; 2024년 11월 23일 접속).

The 2018 Influx of Yemen Refugees to Jeju Island and Xenophobia without Refugees :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posals of 2018

YuJin, Jung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jinny_0924@hufs.ac.kr

Abstract

The response of South Korean society to Yemeni asylum seekers who arrived on Jeju Island in 2018 can be described as "xenophobia without refugees" and "Islamophobia without Muslim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is phenomenon, focusing on the legislative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18. Legislative activities, such as the submission of proposals, are driven by reelection motives, reflecting voters' preferences while also embodying the lawmakers' ideologies regarding the direction South Korea should pursue. These proposals serve as agenda-setting tools, eliciting public reactions and shaping societal discourse.

Keywords: Yemen Refugees, Refugee Hate, Legislative Proposals, Voter Preference, Agenda Setting